

本 論文集은 第8回 全國 大學生 統一論文 懸賞에 應募한
論文中 入選한 論文을 모아 編纂한 것으로서 收錄된 論文의
內容은 當院의 見解와 반드시 一致하는 것은 아님.

大學生統一論文集

1989

國土統一院

目 次

最優秀作

- 한민족공동체의 形成을 위한 理念的인 土臺 3
張 世 根(韓國教員大 大學院 教育學科)

優 秀 作

- 南北韓 經濟交流 및 協力の 促進方案 35
文 周 翰(서울大 大學院 經營學科)
- 東西獨關係의 教訓을 통해서 본
積極的 韓半島 統一政策의 摸索 73
崔 昌 壽(韓國外國語大 大學院 行政學科)

佳 作

- 北方政策과 統一環境의 造成 105
安 承 烈(韓國教員大 大學院 教育社會學科)
- 韓半島 統一模型으로서의 段階的 國家統合方案 研究 139
鄭 永 善(全北大 政治外交學科 4年)
- 統一로 향한 南北交流의 推進 169
李 惠 鎮(慶尙大 會計學科 3年)
- 實現possible 統一方案의 摸索 203
趙 顯 俊(서울大 經濟學科 4年)
- 韓國의 北方政策과 南北韓關係 231
孫 順 愛(全南大 史學科 4年)

한민족공동체의 形成을 위한 理念的인 土臺

—「三均主義」를 中心으로—

張 世 根
(韓國敎員大 大學院 敎育學科)

目 次

- | |
|-------------------------|
| I. 序論 |
| II. 統一論議와 統一理念의 再定立 |
| III. 三均主義의 形成背景과 理論體系 |
| IV. 한民族共同體의 實現을 위한 三均主義 |
| V. 結論 |

I. 序 論

1. 研究의 必要性

분단 이후 남북한은 민족의 통일을 위해 다각도로 접근한 것이 사실이지만 그 토대는 사실상 빈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른바 表面的인 統一論議는 많이 외쳤지만 內面的인 착실한 준비는 사실상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현시점에서는 그동안 막연하게 제시 되어온 「한민족공동체」나 ‘自由民主體制로의 統一’ 등과 같은 觀念上的 문제를 실천지향적으로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서는 미래의 統一韓國이 지향하여야 할 국가의 基本的인 理念에 대하여 탐색할 것이다.

2. 研究의 問題

本稿에서는 통일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國家의 基本的인 理念으로 「三均主義」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우리가 지향하는 한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해 그것이 어떠한 이념적인 토대를 제공할 수 있느냐를 탐색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통일한국의 기본적인 이념은 어떠한 방향에서 再定立되어야 할 것인가?

둘째, 「三均主義」의 形成 背景과 그것의 理論的인 體系는 어떠한가?

셋째, 한민족공동체의 實現을 위해 「三均主義」는 어떠한 理念的인 토대를 제공하는가?

II. 統一論議와 統一理念의 再定立

우리가 궁극적으로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① 분단의 원인에 대한 內外的인 고찰, ② 통일의 당위성과 그것의 기본전제, ③ 통일에 대한 남북의 시각차, ④ 통일논의의 전개와 반성, ⑤ 통일이념의 정립과 그것의 실천방안에 대한 문제 등과 같은 몇가지의 전제 조건에 대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서는 ③ ~ ⑤에 초점을 맞추어 통일한국이 추구할 수 있는 국가이념의 설정을 위한 기본적인 노선을 정립하고자 한다.

1. 統一에 대한 南北의 視覺差와 統一論議의 反省

알려진 바와 같이 남북한이 통일을 보는 견해차는 그 토대부터 심각한 차이를 내포하고 있는데 이를 요약하면 <표 1>과 같다.

<표 1>에서 볼 때, 통일의 목표에서 남한은 하나의 민족사회 건설에 주안점을 두는 반면에 북한은 남반부 인민의 해방이라는 차원에 그것을 두고 있다. 또 통일의 과정에서 '民族 同質性的의 確保'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이라면 교류·협력의 전제 조건이 없거나 거의 희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대한민국 정부의 퇴진과 반공정책의 포기 및 주한 미군의 철수를 내세우고 있다.

아무튼 지금 남북이 내세우고 있는 통일방안은 그 토대부터 엄청난 괴리를 尙存시키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障礙要因을 극복하는 과정이 통일로 향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自由民主主義를 政治體制로 채택하여 체제상의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 남한은 좀더 의연한 자세로 북한

<표 1> 통일을 보는 남북의 시각차

항 목 \ 구 분	남	한	북	한
근본적인 시각	민족적인 염원		최대의 국가목표	
통일의 과제	민족사회의 통합		이루지 못한 민족해방의 완성	
통일문제 해결방법	민족내부의 문제		미·북한간의 국제문제	
통일목표	하나의 민족사회 건설		남반부 인민의 해방	
통일의 주체	한민족 성원 전체		공산주의(인민)와 동조세력	
통일의 기본원칙	민족자결 민주적 절차 평화의 방법		민주, 평화통일, 민족 대단결의 원칙을 표방하나 계급투쟁과 폭 력혁명추구	
교류·협력의 전제 조건	북한사회의 민주화*		대한민국 정부퇴진, 반공정책 포기, 미군철수	
대표적 통일방안	민족화합 민주통일방안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설방안	

* 1989년 8.15 이전까지 남한은 북한에 대하여 교류·협력의 전제 조건을 원칙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나, 1989년 광복절 치사에서 북한사회의 민주화를 강력하게 촉구하였다.

참조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1985 ; 이상우, "국민적 합의원칙 세워야 한다." 「동아일보」, 1988. 6.2.p. 3 ; 1989년 광복절 대통령 치사 참조.

※ 편집자주 : 새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이 발표되기 직전에 본 논문이 응모되었기 때문에 필자는 구통일방안을 분석단위로 삼고 있음을 참조.

과의 통일논의에서 엄존하고 있는 '統一을 보는 視覺差'를 좁히는데 노

력해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통일을 보는 남북의 시각차에 비추어 그 동안의 통일논의는 어떠한 형태로 전개되어 왔는가? 이 점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시기별로 본 통일정책의 내용을 분석하는 일이고, 두번째는 통일정책의 변화에 작용했던 국내외적인 요인을 종합하는 일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변화된 통일정책에 대하여 意義를 부여해 보는 일이다.

우선 남한의 통일정책 변화에 대해 살펴보자. 분단 이후부터 제1공화국(1948~1960)에 걸쳐 논의된 통일방안은 ‘민족적 당위성’과 ‘반공’으로 집약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인식의 저변에는, 예를들어 외세만 물러나면 자동적으로 통일로의 원상 회복이 가능하리라는 믿음이 전제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 그 후 1948년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로 수립된 한국 정부는 통일정책으로 U·N감시하에 북한에서의 선거 실시를 주장하고 있다.²⁾

한편 제2공화국(1960~1961)에서의 통일논의는 제1공화국과는 달리 통일문제에 관하여 논의될 수 있는 기본적인 명제들과 문제점 및 그 해결의 모형 등이 비교적 활발하게 논의 되었다. 이 시기의 공식적인 통일정책은 1960년 11월 2일에 채택된 民議院의 ‘통일방안에 대한 국회결의’로 나타났는데, 그 내용은 “대한민국 헌법절차에 의한 유엔감시하

註1) 강광식, “통일논의 : 연구현황과 통일문화 창조,” 「정치와 외교」(서울:대왕사, 1985), p. 246; 김학준, 「한국문화와 국제정치」(서울:박영사, 1975), p. 59.

2) 김달중, “한국의 통일정책 변천과 남북대화,” 「통일논총」, 제1호, 국토통일원, 1981, P. 181.

의 인구비례에 따른 남북한 총선거”였다.³⁾

제3공화국의 통일방안은 전반기(1961~1969)와 후반기(1970~1979)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전반기는 ‘공산주의와의 대결에 대한 我側の 실력배양’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1963년 제3공화국이 정식으로 출범한 이후에도 그대로 유지되어 국력의 우위만이 통일을 위한 유일한 길임을 강조하는 ‘先建設 後統一’의 논리가 지배적이었다.⁴⁾

그러나 1970년대로 접어들면서 통일논의는 여러 가지 제의와 성명서로 이어진다. 이 중 「평화통일 3대원칙」은 ‘先平和 後統一’을 명확하게 제시한 정부의 통일정책으로 통일의 ‘한국주도’를 암시하고 있다. 또 1·19 제의는 시기와 장소 및 수준과 의제에 구애받지 않는다는 제안으로, 이는 통일논의에 있어 ‘완전개방의 백지 제의’라는 점에서 內外로부터 환영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⁵⁾

제5공화국의 통일정책은 1982년 1월 22일에 발표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으로 대표된다. 이것은 우선 현존체제를 안정시키는 남북한 기본관계 협정을 체결하여 남북한간의 신뢰를 쌓고 난 후 통일정부를 수립하겠다는 논리로 ‘先實質關係改善 後統一’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북한의 통일정책은 어떻게 변화하여 왔는가? 기본적으로 북한이 상정하고 있는 통일은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통치권이 행

註3) 이상우, “민족통일의 과제”, 이흥구 외 3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서울:박영사, 1984), p.190.

4) 이상우, 위의 논문, pp.190~192.

5) 위의 논문, pp.195~196.

사된 조건'에서의 공산화 통일을 의미한다.⁶⁾ 그들의 民主基地論에 의하면 “조국통일을 위하여 ... 우리는 두 가지 방면에서 일을 잘 해야겠다. 한 방면으로는 남조선 인민들에게 꾸준히 우리 당의 영향을 주어 그들로 하여금 미제와 역도를 반대하여 쫓기하도록 해야 하며, 다른 방면으로는 북반부 민주기지를 철옹성같이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⁷⁾

이러한 통일논리에 기반을 둔 북한의 통일정책은 그 시기별로 ① 평화공세기(1945~1950), ② 무력에 의한 공산화 통일기(1950~1953), ③ 평화통일 노선기(1953년 휴전 후~1959), ④ 위장평화공세기(1960년대 전반기), ⑤ 폭력혁명기(1960년대 후반기), ⑥ 비현실적인 평화공세 강화기(1970년대), ⑦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설 방안(1980년대)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⁸⁾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이 그 동안 남북한의 통일논의는 한마디로 ‘政治權力的 편의’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서로간의 아집은 통일문제에 있어 적대와 불신의 악순환을 가져왔다. 이는 통일논의에 있어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공존’이나 ‘병존’의 모색조차 어렵게 만들고 있다. 우리가 통일논의에 있어서의 반성점이라고 할 때는 바로 이러한 점을 논의의 토대로 삼아야 하는 바 이를 필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고자 한다.

註6) 국토통일원, 「북한자료집」(서울:국토통일원, 1978), p.1327.

7) 이정수, “북한의 통일방안 분석과 그 문제점”, 「통일논총」, 제1권 제2호, 1981, p.18 재인용.

8) 전정환, “북한의 대남전략”, 「통일논총」, 제1권 제1호, 1981, p.202.

첫째, 그 동안의 통일논의가 상대방 체제의 속성과 그들이 처한 모순을 도외시한 일방통행이었다는 것이다. 때문에 남북한은 공히 그들의 아집을 벗지 못하고 통일논의에 있어서 서로간의 이질감만 조성하였던 것이다. 「北方外交」를 강조하는 남한은 좀 더 북한을 포용하지 못하는가. 또 북한은 왜 남한 정부와는 대화를 기피하는가.

둘째, 그 동안의 통일논의는 남북한 쌍방에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에 미흡하였다. 다시 말하면,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이 현실적으로 가장 심각한 통일논의의 장애요인은 북한의 1인 장기집권에 있다. 따라서 이미 체제상의 우위를 점하고 있는 남한은 이를 반드시 극복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남한이 북한을 포용한다는 의미에서 어떤 특정한 분야를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양보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예를들어 미국·북한, 일본·북한간의 직접적인 대화를 허용·조장한다면 그들의 개방화를 앞당길 수 있지 않겠는가.

셋째, 그 동안의 통일논의는 통일 그 자체에만 집중되어 구체적인 통일 한국의 비전을 제시하는데 소홀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통일 한국의 정치·경제·사회적인 지향점에 대한 논의가 소홀하니 자연히 통일은 아득한 남의 나라 이야기인 것처럼 보이는 인상을 심어 주었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통일 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구체적인 체제에 대하여 서두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2. 統一의 基本前題와 한민족공동체의 實現

기본적으로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남북한의 국민들이 ‘함께 잘 살자’는 민족의 연대의식에 바탕을 두는 것이지 결코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동원해서든 통일만 되면 된다’는 식의 統一至上主義는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언급한 통일논의의 반성점을 토대로 우리는 최소한 통일로 가는 과정에서 파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障礙要因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몇가지의 전제조건에 대하여 기본적인 합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첫째,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민족사회의 福祉指向的인 統合에 있다. 따라서 무력통일론은 통일의 방법에서 당연히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남한내의 민주가 우선이나 또는 통일이 우선이나는 이른바 ‘民先後統’ · ‘統先後民’ 등의 논의는 民主와 함께 하는 통일지향의 노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한반도 분단의 외적인 요인에서, 미·소의 영토 분할 점령은 그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주변 강대국들의 간섭을 배제할 수 있는 충분한 거부 능력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적절하게 한반도의 주변정세에 대해 實用的인 路線을 걸어야 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넷째,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외형적인 단일국가의 형태만 갖추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은 정치집단간의 이해관계에 얽힌 정권유지적인 차원에서 논의될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적절하게 수렴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우리가 ‘平和統一’이라고 했을 때 이는 통일과 함께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지 통일을 위해 평화가 수단 또는 단계라는 機能主義 또는 그 亞流의 발상(정권유지 수단으로서의 평화)은 어느 정도 전환될 시점에 이른 것이다.

마지막으로, 통일논의나 방법에 있어 우리는 理想的인 名分論과 現實

主義的인 實踐論을 적절하게 조화시켜야 할 것이다. 통일을 논의함에 있어 명분론에 치우친다면, 예를들어 분단의 內在的인 요소를 간과할 것이며, 분단 이후 남북한간에 쌓여진 異質的인 양체제의 구체적인 현실을 외면하게 될 우려가 있다. 또 지나치게 현실에만 집착한다면 남북한의 이질적인 모순구조가 존속하는 한 통일은 요원하다는 비관적인 무관심형에 빠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현실인식을 토대로 하되 민족의 통일은 결코 요원한 것이 아니라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상 언급한 통일논의의 기본적인 전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통일방안은 아무래도 ‘한민족공동체의 確立’이 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통일이 ‘一民族·一國家’의 목표를 갖는다면 그것은 현재 표방하거나 편협하게 실천하고 있는 남북한의 정치·경제·문화적인 상황을 민족적인 공동체의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민족공동체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사실 1976년 「한민족공동체안」이 처음으로 발표될 때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의 전제조건이 부여되어 있었다. 하나는 국가체제보다는 민족사회가 근본적으로 더 원초적인 조직이 된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완전한 통일에 이르는 중간과정을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었다. 9)

위와 같은 논리로 볼 때, 「한민족공동체」를 확립하는데에는 정치·경제·사회·정신적인 능력을 배양하는 제 문제가 동시에 함축되어 있다고

註 9) 이정수, “한국의 정치발전과 한민족공동체 문화의 창조”, 「한민족공동체 형성의 기반 탐색」, 서원대학 사회과학연구소, 1989. 5, p. 5.

볼 수 있다. 즉, 그것은 통일을 지향하고, 그것과 관련되는 가치의 총체적인 체계이며 제반 행동양식을 포괄하는 개념인 것이다. 그러기에 본고에서는 한민족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이념적인 토대와 그것의 실천 방향을 「三均主義」에서 찾고자 하는 것이다.

Ⅲ. 「三均主義」의 形成背景과 理論體系

우리가 민족의 정신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국가이념을 정립하는 방안에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는 현재 남북한이 표방하거나 불완전하게 실천하고 있는 대결적인 이데올로기의 산술적인 중간치를 택하는 방법이다. 둘째는 기존의 이데올로기를 적절하게 초월하여 제3의 이념을 새롭게 창안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마지막은 분단 이전에 우리의 것으로 정립된 이데올로기를 재조명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의 기본적인 이념을 정립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여기서는 ‘韓國問題의 韓國化’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① 한국적인 특수성(民族主義)과 세계적인 보편성(世界一家)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는, ② 保·革論理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있는 (臨政時 韓國獨立黨과 民族革命黨), ③ 自由와 平等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속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平等이라는 사상적인 토대를 안고 출발한 趙素昂의 「三均主義」를 미래지향적인 통일한국의 기본적인 국가이념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1. 「三均主義」의 形成背景

洪善憲에 의하면 素昂의 「三均主義」는 그의 생애와 관련지어 볼 때 다

음과 같이 제 3기로 설명된다.

제 1기는 素昂이 宗教와 哲學을 연구하고, 不平等 문제를 파악한 시기로 그의 나이 34세인 1921년 까지이다. 제 2기는 1922(35세) ~ 1934년(47세)까지로 역사·사회연구기, 즉 三均主義 定立期이다. 제 3기는 1935년(48세)부터로 정치활동기, 즉 삼균주의의 실천기로 구분되고 있다.¹⁰⁾

제 1기는 ‘三均主義의 胚胎期’라고 할 수 있다. 1887년 4월 8일(음력) 경기도 交河郡(지금의 파주)에서 태어난 素昂은 그의 나이 15세 되던 해(1902) 성균관에 입학하여 신채호 등과 항일성토문을 작성하여 역신 李夏榮 등의 매국적인 음모를 규탄하였다.

17세(1904.7)에 황실유학생으로 일본에 건너간 素昂은 伯兄 鏞夏가 보내준 ‘손문전’과 고르기(A.M.Gorkii)의 작품을 접하면서 儒敎的인 世界觀을 어느 정도 탈피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1914(27세)년에는 상해에서 洪命憲, 文一平 등과 합숙하였다. 이 때 ‘六聖一體, 萬法歸一, 禁食冥想’ 등으로 나타나는 民族宗教인 六聖敎를 구상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 1916년에는 상해로 재차 망명하여 동생 鏞周 등과 제휴하여 황각 등 중국인사들과 大同黨 결성을 추진하여 인도·중국·대만·버마·필리핀·조선·월남 등 7개국 지식들의 총단결을 책동하여 중국 혁명지사와의 연합을 시도하기도 하였다.

한편 1919년 4월 상해임정에서 국무원 비서장에 임명된 素昂은 그 해 8월부터 1921년 5월 북경으로 귀환할 때까지 3년동안 유럽 등을 순방하면서 識見을 넓힌 것으로 보여진다. 이 때 로테르담에서 있었

註10) 이하 素昂의 생애에 관한 논의는 홍선희, 「조소앙의 삼균주의 연구」(서울: 한길사, 1982), pp.22 ~ 32; 강만길(편), 「조소앙」(서울: 한길사, 1982), pp.300 ~ 310 등의 연보를 참조하였다.

던 제 2회 국제사회당 집행위원회(1919.8)에 참석하여 한국문제실행 요구안을 제출, 통과시켰으며, 1920년 5월에는 소련 혁명기념대회에 석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즉 영국 노동당 인사인 토마스 와 맥켄지 및 국제사회당과의 접촉에서 素昂은 삼균주의의 기초를 이루는 「均等」의 토대를 형성한 것으로 보인다.

제 2기는 ‘三均主義의 定立期’라고 할 수 있다. 제 1기 말 3년 동안 유럽과 소련을 순방하며서 社會主義에 상당한 자극을 받았으면서도 民族主義와 사회주의 간의 모순점을 뚜렷이 인식하고, 이것을 양자택일이 아닌 양자종합이라는 제 3의 길로써 해결하려고 노력한 素昂은 1922년 5월과 6월 독립신문에 “독립당과 공산당의 전도”(5.6일자)와 “독립당의 계급성”(6.14일자) 등을 발표하고 있다.

한편 1929(42세)년에는 안창호·이동녕·조완구·조성환·엄대위·김백년 등과 함께 한국독립당(I)을 창립, 자신이 당의·당강을 작성하였다. 그리고 1930년 4월에는 삼균주의 이론의 초고라고 할 수 있는 ‘한국 현상과 그 혁명추세’를 탈고하였다. 그 이듬해인 1931년에는 ‘대외선언’을 기초하여 臨政명으로 남경국민회의에 제출하여 삼균주의의 이론을 체계화시켰다. 이러한 이론의 체계화는 1934년 臨政국무회의에서 素昂이 기초한 ‘대한민국건국강령’을 통과시킴으로써 삼균제도를 국시로 채택하였다.

제 3기는 ‘三均主義의 實踐期’라고 볼 수 있다. 중일전쟁 이후 임시정부의 요인들은 抗日意志를 더욱 굳건히 하고 분산된 힘을 한 곳으로 집중시키기 위하여 의열단, 한국독립당, 조선혁명당, 신한독립당, 대한독립당 등의 五黨聯合을 추구하여 民族革命黨을 창당(1935)하였는데 그 ‘黨義’에서,

본당은 혁명적 수단을 가지고 仇敵 일본의 침략세력을 撲滅하고 5천년 독립 자주하여 온 국토와 주권을 회복하고 정치·경제·교육이 평등에 기초를 둔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건설하고 국민전체의 생활 평등을 확보하며 나아가 세계 인류의 평등과 행복을 촉진함. 11)

이라고 하여 삼균주의를 민족혁명당의 기본적인 綱領으로 채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934년 임시국무회의에서 素昂이 기초한 「대한민국 건국강령」은 1940년에 와서 정식으로 공포되기에 이르렀는데 이는 ‘총강’과 ‘復國’ 및 ‘建國’이라는 3章과 24개條로 구성되어 있다.

그 ‘총강’에서,

우리 나라의 건국 정신은 三均制度의 역사적 근거를 두었으니 先民이 明命한 바 首尾均平位하여 興邦保大平하리라 하였다. 이는 사회 각층 각급의 지력과 권력과 부력의 享有를 균등하게 하여 국가를 진흥하며, 태평을 保維하게 함이니 弘益人間과 理化世界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리임. 12)

을 표방하고 나섰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제하의 독립운동가이자 임시정부의 대표적인 사상가요 실천가였던 素昂은 東과 西, 舊와 新, 민족과 사해동포,

註11)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4): 임시정부사」, 1972, p.737.

12)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제7집): 임시정부자료집」, 1984, pp.61 ~ 62.

국가와 세계의 양극을 변증법적으로 종합하여 어디까지나 한국인을 위한, 한국인에 의한, 한국인의 이데올로기를 창조하려고 노력하였던 것이다. 13)

2. 三均主義의 理論體系

姜萬吉에 의하면 삼균주의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다.

三均主義는 한 마디로 말해서 對內的으로는 國民 個人의 政
권참여 기회의 均등화, 經濟적 條件의 均등화, 教育기회의 均
등화를 達成하고, 對外的으로는 民族자결을 철저히 함으로써 식민
지배를 청산하고 더 나아가서 국제간의 침략전쟁을 종식시킴으
로써 세계평화를 達成하려는 주의였다고 할 수 있다.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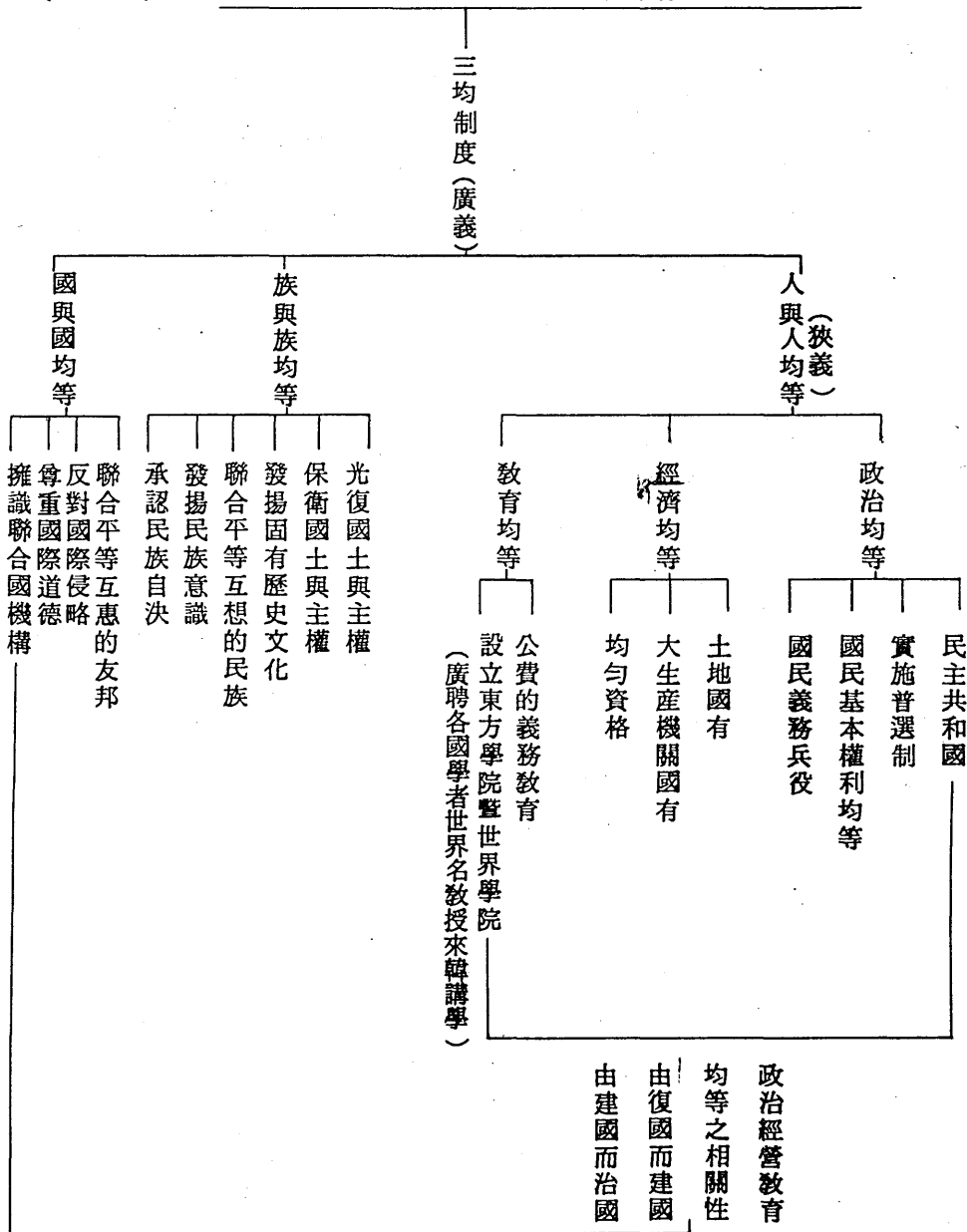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하여 「韓國獨立黨 三均制度均等體
系表」를 제시하며 <도표 1>과 같다.

註 13) 素昂의 사상적인 배경으로 洪善희는 ① 三民主義 ② 大同思想 ③ 無政府主義 ④ 社會主義 ⑤ 기성종교 ⑥ 理氣說 등을 제시하고 있다.

洪善희, 앞의 책, pp. 33 ~ 56 참조.

14) 강만길, 앞의 책, p. 312.

< 도표 1 > 韓國獨立黨三均制度人與人族與國均等體系表



想家世久愛相向相均國族人
 邁的界和求見人關等與與
 進理一平永以類性之國族人

출처 : 삼균학회(편), 「삼균주의 연구 논집 4」, 1987. 9.

<도표 1>에서 볼 때, 삼균주의의 이론체계는 均等主義(理念) → 광의 및 협의의 三均(원칙) → 제도 및 정책 → 전략 전술로 구성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三均主義 또는 均等主義라고 불리는 素昂의 이 이데올로기는 크게 광의의 삼균주의와 협의의 그것으로 나뉘어진다.

광의의 삼균주의는 人與人均等(개인과 개인간의 균등 : 對內的 均等論), 族與族均等(민족과 민족간의 균등 : 對外的 均等論), 國與國均等論(국가와 국가간의 균등 : 對外的 均等論)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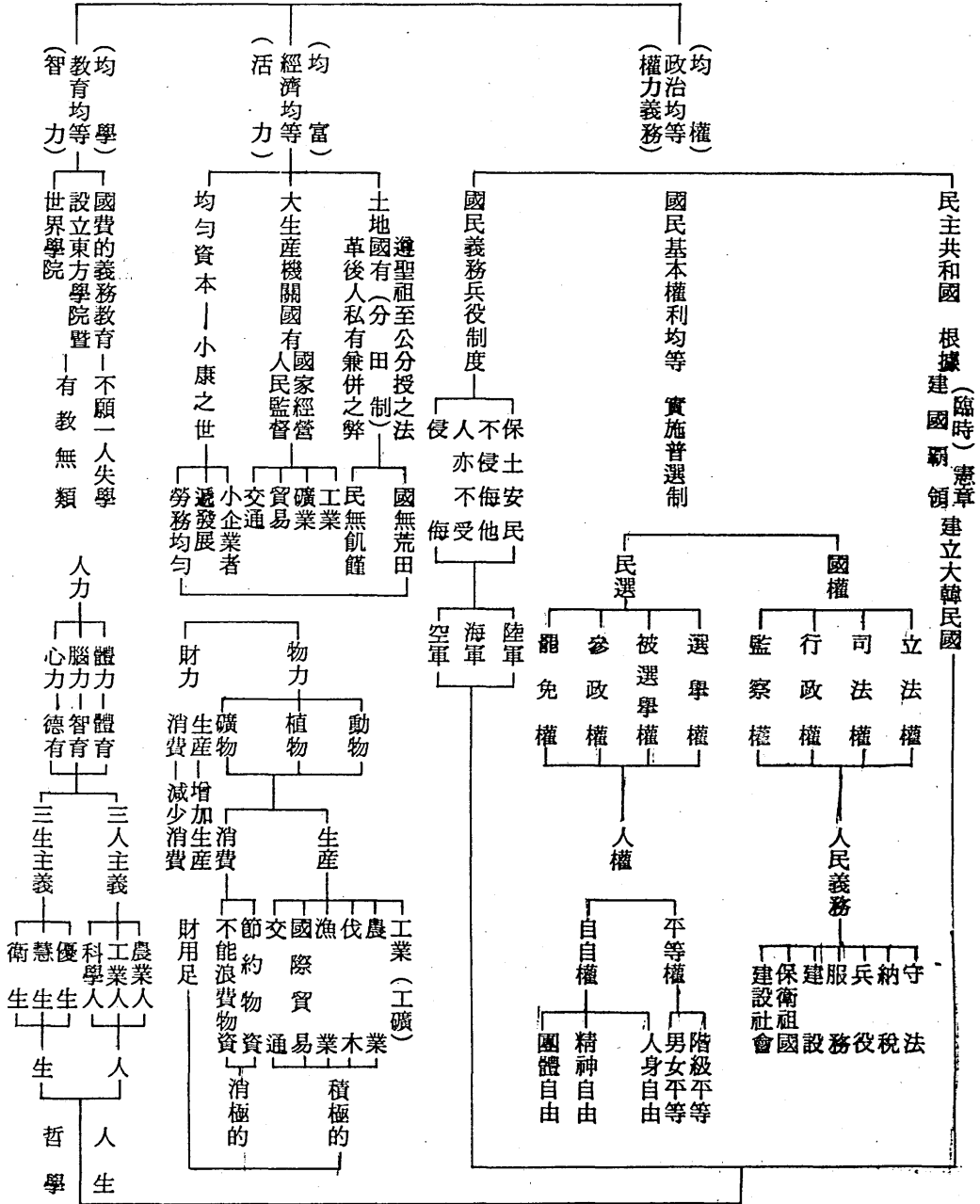
한편 협의의 그것은 對內的 均等論의 성격을 띤 人與人均等の 下位體系로 均權, 均富, 均學을 지향하는 政治的 均等, 經濟的 均等, 教育的 均等の 三分野에 대한 균등론이다. 이러한 협의의 삼균주의는 個別的인 국가단위에 적용되는 것으로서 삼균주의가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표인 理想社會建設의 가장 기본적인 일차적인 요건이 되는 것이다.¹⁵⁾

위에서 말한 삼균주의의 기본적인 이론체계를 바탕으로한 내용을 살펴보기 위하여 「韓國獨立黨三均制度政治經濟教育均等體系表」를 제시하면 <도표 2>와 같다.

註 15) 권영건, “조소앙의 삼균주의론”, 박사학위논문, 한양대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1985, p.23 참조.

<도표 2>

韓國獨立黨三均制度政治經濟教育均等體系表
安無煩 和無寡 均無貧



想之一世實進兼自治國由建國由理家界現而愛愛國而建國而復

출처: 삼균학회 (편), 「삼균주의 연구논집 4」, 1987.9.

가. 政治的 均等

<도표 2>에 의하면 정치적 균등은 均權을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의 전제조건으로 素昂은 <도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民主共和制의 確立, 普通選舉制의 實施, 國民基本權의 均等化 및 國民義務兵役制를 제시하고 있다.

素昂이 정치적인 균등을 내세운 역사적인 근거는 고려시대에 전개된 노예들의 해방운동(萬積의 난, 충주 노예군 반란, 李通의 난, 崇謙 등의 몽고 관리 모살 등)과 朝鮮王朝에서 나타난 班常의 정치적인 불균등과 깊은 관계가 있다.¹⁶⁾

결국 人與人均等을 지향하는 下位體系中 하나인 政治的 均等은 서구 민주주의가 지향하는 政治體制와 유사한 것으로 광복을 염두에 둔 新國家의 全民共和體制를 지향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나. 經濟的 均等

<도표 2>에 의하면 경제적 균등은 均富를 이룩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의 전제조건으로 素昂은 <도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土地國有(현재는 토지공개념으로 이해), 大生産機關國有, 均物資格 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 중 논의의 대상은 역시 土地國有論일 것이다.

사실 素昂이 경제적인 균등을 내세운 역사적인 근거는 신라시대 때 토지국유를 원칙으로 한 田柴科의 시행, 고려 때, 田柴科의 타락으로 인한 토지제도의 문란, 고려말 이성계·조준·정도전 등에 의한 給田法에 의한

註16) 삼균학회(편), 「소양선생문집(상)」(서울: 햇불사, 1979), pp.70 ~ 75 및 215 ~ 216.

토지국유제의 복귀, 日本帝國主義에 의한 식민지 경제정책 등과 깊은 관련이 있다. 17)

이로써 보면, 素昂이 주장한 토지국유론은 동양적인 봉건제의 적폐중 하나인 토지의 사유·점병으로 인한 부익부·빈익빈의 현실을 타개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것이 결코 資本主義에 대한 反定立(anti-thesis)으로서의 마르크시스트는 아니었다. 비록 그가 제 2 인터내셔널에 한국의 대표로 참가하여 활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토지국유론은 균등사회의 실현을 위한(개인의 소유욕을 어느 정도 인정한) 것이었음과 아울러 일본제국주의의 타도를 위한 것이었다. 그리고 素昂은 이를 통해서 광복 후 新國家의 복지사회를 그리고 있었던 것이다. 18)

다. 教育的 均等

<도표 2>에 의하면 교육균등은 均學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이것의 前題條件으로 素昂은 <도표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公費的 義務教育을 주장하고 있다.

「韓國獨立黨黨義研究方法」에서 나타난 素昂이 보는 교육적인 均等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교육은 그 성질에 따라 個人教育, 民族教育, 國家教育으로 구분된다.

둘째, 그것의 內容은 천재교육, 自文化 중심주의 교육 및 국가주의 교육 등으로 편성되어서는 안된다.

셋째, 교육의 方法에서 ① 지식수준의 提高 ② 일반 대중의 두뇌과학화 ③ 개인·민족·국가의 실제 평등으로 나타나는 世界一家의 達成에

註17) 위의 문집, pp.74~80.

18) 홍선희, 앞의 책, p.82 참조.

이바지 하여야 한다. 다시 말하면 교육의 중심은 智의 정도 提高(다양한 個人差의 인정), 그것의 橫的 보급(均學)이며, 新人·新民族·新世界の 創造에 있다는 것이다(사회혁신의 기반조성).¹⁹⁾

라. 人與人·族與族·國與國 均等

사실상 인여인·족여족·국여국 균등론은 각기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한 고리로 이어져 있다. 앞서 言及한 바 있지만, 對內的 균등론인 인여인 균등은 均權·均富·均學이라는 下位體系로 이루어져 삼균주의가 지향하는 理想社會 건설의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 되고 있다.

족여족·국여국 균등은 인여인 균등의 발전과정에서 당연히 도달하여야 할 歸着地이다. 族與族 均等に 대해 素昂은 民族自決의 原則을 제시하면서 그 내용으로 ①어떤 민족의 이탈, ②자유로운 건국, ③다시 他國에 부속되지 않을 권리 등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族與族 均等の 實現方法으로 ①국토와 주권의 광복, ②그것의 보위, ③고유한 역사와 문화의 발양, ④상호평등에 입각한 각 민족간의 연합, ⑤민족의식의 발양, 민족자결의 승인 등을 내세우고 있다.²⁰⁾

한편 素昂은 「韓國獨立黨黨義研究方法」에서 國家를 民族의 총체 혹은 그 집합체로 파악하여 그것의 究竟目的으로 국제조직의 일원화한 총체, 즉 世界一家에 있음을 밝히고 있다. 덧붙여 그는 國與國 均等の 實現方法으로 ①평등호조적 우방과의 연합, ②國際侵略 정책의 타도, ③국제도덕의 尊重 등을 내세우고 있다.²¹⁾

이상에서 볼 때, 素昂의 「三均主義」는 人與人·族與族·國與國의 均等한 生活를 보장하고자 하는 理論的인 體系로 볼 수 있다. 素昂은 개인간의 균등은 均權, 均富, 均學에 의해 달성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민족간의

註19) 앞의 문집, pp.201 ~ 202.

20) 홍선희, 앞의 책, pp.94 ~ 95.

21) 위의 책, p.95.

균등은 民族自決의 原理에 따라, 국가간의 균등은 國際侵略政策의 타도를 주된 실천방안으로 제시함과 아울러 自主와 均等の 입장에서 각기 다른 나라들이 제각각의 역할을 담당해야 함을 역설하고 있다.

Ⅳ. 한민족공동체의 實現을 위한 「三均主義」

여기서는 統一過程으로서의 또는 통일한국이 지향하여야 할 국가의 基本的인 理念을 「三均主義」로 잡고 그것이 어떠한 理念的인 시사를 주는지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1. 統一 沮害要因의 克服을 위한 「三均主義」

한반도에 있어 통일의 저해요인이라면 外的인 요인과 內的인 그것으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여기서는 남한내의 內的인 저해요인인 ①불성실한 南北接近, ②세대간의 갈등, ③획일적인 정치사회화 ④국민의 의식수준 등으로 나누어 살펴면서 여기에 三均主義가 어떠한 시사점을 주는지에 대해 개관할 것이다.

우선 불성실한 南北接近에 대해 살펴보자. 분단 이후 남북한의 통일정책은 적어도 ①당사국, ②상대방, ③외국인 등 3개의 청중을 대상으로 삼아왔다. 이와 같이 서로가 진정으로 통일을 원하는 차원이 아니라 전 시용 또는 정권유지의 수단으로 통일을 이용할 때 이는 민족의 동질성을 확장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시킨다고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사실 지금의 南北韓은 冷戰體制의 부산물인 미국과 소련의 영향권 아래 놓여있다. 만약 두 당사국의 정권이 삼균주의에서 강조하는 民族의 自決·自主原理를 수용한다면 적어도 외국의 청중을 대상으로 하는 통일정책의 소모전은 어느 정도 줄어들 수 있을 것이다.

두번째로 세대간의 갈등이다. 통일과 관련하여 기성세대와 젊은세대

간의 견해차는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를 간추리면 ①자본주의와 공산주의(경우에 따라서는 사회주의)를 보는 시각차, ②공산주의의 가변성에 대한 문제, ③통일정책 창구의 정부일원화 문제, ④주한 미군에 대한 시각차, ⑤통일의 接近方法에 대한 시각차 등이다.

여기서 필자는 ‘이상없는 현실이나 현실을 감안하지 않는 통일논의는 우리 사회의 발전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言及하고 싶다. 따라서 統一沮害要因으로서 세대간의 갈등은 ‘수용과 인정’이라는 차원에서 적절하게 보완되어 공통분모를 찾아야 할 것인데 여기에 素昂의 三均主義는 상당한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사실 1910 년대에 사회주의가 등장하면서 한국의 獨立陣營은 ①理念的的支持, ②現實의인 타협과 活用, ③전면적인 반대, ④左·右 분열을 걱정하고 연합전선을 希望하는 연합파로 물렸는데, 素昂은 대체로 처음부터 끝까지 ④의 입장을 취한 대표자였다.²²⁾ 그리고 그가 獨立新聞에 기고한 “獨立黨과 공산당의 전도” 역시 左·右의 분열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論調였다.

통일문제와 관련하여, 우리가 바라는 그것이 민족사회의 구성원들이 다 함께 잘살자는 복지공동체적인 의미를 지닌다면 우리는 좌·우의 분열을 극복함과 아울러 자본주의 대 사회주의라는 어느 일방을 전적으로 신봉할 것이 아니라 양자의 장·단점을 적절하게 선별하는 해안을 가져야 한다는 측면에서 삼균주의의 시사성은 크다고 할 수 있다.

세번째는 획일적인 정치사회화이다. 李洪九에 의하면 통일과 더불어 분단의 문제를 보는 두가지의 도식적인 고정관념이 있다. 하나는 무조건 강조되는 극단적인 반공사상이요, 다른 하나는 환상적인 교조주의이다.²³⁾

註22) 홍선희, 앞의 책, pp.45 ~ 46.

23) 이홍구의 4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서울: 박영사, 1984), pp.11 ~ 12.

이러한 고정관념은 우리에게 한쪽으로만 너무 치우치면 일의 해결은 커녕 그것의 실마리도 찾지 못한다는 교훈을 일깨워주고 있다.

우리는 素昂이 사회주의를 받아들이면서도 그것을 민족주의적인 토대 위에서 적절하게 선별하였음을 이미 알았다. 뿐만 아니라 그는 1900 년대에 이미 구미식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독립당 계열의 민권운동을 거쳤고, 동양사상과 民族史에 충분한 소양과 긍지를 갖고 있는 데다가 조국의 광복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킨 민족주의자였음을 알고 있다. 이렇게 素昂이 취한 자세는 통일과 관련하여 도식적인 고정관념을 탈피하는데 적지 않은 교훈이 되고 있음과 아울러 통일한국의 가치지향점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통일에 대한 국민의 의식수준이다. 李相禹가 조사한 1985 년도의 ‘통일에 대한 일반국민의 의식상태’에서 ‘빠른 시일내 통일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²⁴⁾ 이렇게 통일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무엇인가. 적어도 필자가 생각하기에 이는 ① 강대국의 이해관계, ② 심각한 민족이질화, ③ 북한의 적화통일 고수, ④ 역사적인 무력통일, ⑤ 남북한의 기득권층, ⑥ 편협한 정치사회화 등을 꼽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요인은 그동안 정부가 통일한국의 미래지향적인 비전을 뚜렷하게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素昂의 三均主義는 「한민족공동체」에 기반을 둔 통일한국의 이데올로기로서 상당한 설득력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註24) 이상우, “남한의 국내적인 요인과 통일전망”,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편), 「한반도의 통일전망」(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0), pp.51 ~ 52.

2. 民族意識의 確立을 위한 「三均主義」

주지하다시피 민족주의는 정치적으로는 애국, 애족의 충성과 독립을 내세우며, 경제적으로는 자립경제와 복지향상을 목표로 한다. 또 문화적으로는 민족문화에 대한 자부심과 긍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한반도의 경우, 해방 후 남북한은 서로 다른 정치체제의 도입과 이의 변형된 실천으로 지금에와서는 민족주의도 서로 적대적인 것으로 轉化되고 있다. 두 말할 필요없이 한반도의 민족주의는 이와 같은 양체제의 이질성을 극복하면서 민족의 숙원인 통일을 앞당기는데 기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 공히 다음과 같은 세가지의 하위과제를 충실하게 구현하여 민족의식을 확립하여야 할 것이다.

첫째, 沮害民族主義의 克服이다. 다시 말하면 차추성의 상실로 대표되는 한반도에 있어서 저해민족주의적인 요소는 자기비하와 타자존숭의 맹목적인 자기상실로 이행되고 있다. 이는 급기야 민족의 얼을 포기하거나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와 민족적인 비운을 심화시키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부정적인 요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민족의 자주성 회복이 강력하게 요청되고 있다.

우리는 素昂의 「三均主義」에서 主體性 및 民族共同體에 기반을 둔 求世主義를 찾을 수 있다. 다시 말하면 均權과 均富를 지향하는 그의 政治·經濟的 均等論이 그러하며, 族與族·國與國 均等を 주장하여 世界一家를 전제하면서도 한반도의 독립이라는 現實的인 必要性을 인식하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둘째, 中·小産層 民族主義 確保問題이다. 비서구형에 속하는 한반도 민족주의의 경우, 정치엘리트나 지식인 및 종교지도자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민족감정을 겉으로 표출하고 있었지만 일반대중의 광범위한 참여는 희박하였다. 이로 인한 지지기반의 취약과 지도층의 분열 및 일인 일당독재는 지금까지 전개되어온 한반도 민족주의의 한계인 바 이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중산층의 확산과 소산층의 육성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통일의 과정 또는 통일한국의 두번째 과제는 광범위한 통일주체의 지지기반 확보와 함께 그것의 유지에 주된 관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인데 여기에 시사성이 있는 것이 素昂의 「三均主義」이다. 다시 말하면 그가 均權을 내세워 西歐民主主義와 유사한 政治體制를 도입하여 광복을 염두에 둔 新國家의 全民共和體制를 지향한 점이나, 均富를 내세워 부익부·빈익빈의 현실을 타계하고자 노력한 점이나, 教育에 대해 個人天才主義나 國家主義로 함몰되지 말아야 할 것 등을 내세운 이유가 바로 중·소산층 민족주의를 확보하여 광범위한 통일주체의 지지 기반을 다짐과 아울러 통일한국의 민족이념을 정립하는 데 그 시사성이 있다고 보여진다.

세째, 統合民族主義의 確立이다. 한반도에 있어 민족주의는 제3기(혹은 제4기)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①종족중심주의, ② 복고주의, ③ 저항주의, ④지성주의 등의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물론 민족주의는 후천적인 학습의 산물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상술한 한반도 민족주의의 제특징을 창조적으로 고양하고 지양하는 슬기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우리가 統合民族主義를 達成하기 위해서는 對內的으로는 均權, 均富, 均學을 이루고, 對內的으로는 민족의 自主性에 입각하여 民族自決의 原則을 고수해야 할 것인 바, 이는 바로 素昂의 「三均主義」에서 나타나는 주된 이념이기도하다.

3. 미래지향적인 統一理念으로서의 三均主義

제2차대전 후 동북아를 둘러싼 국제환경은 양극구조(1945~50년대) → 3극구조(1960년대) → 4극구조(1970년대) 등으로 전개되다가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다극화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다.

첫째, 국제체제의 변화와 더불어 이데올로기적인 대결의 의미가 크게 얽어지고 국가 이익의 추구가 각국의 대외정책에 있어 一次的인 動因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첫번째와 같은 현상은 이른바 ‘제로-섬 게임’적인 판단을 후퇴시켜 적과 동지에 대한 새로운 관념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동북아와 관련하여 주변 4강의 대외정책은 이른바 현상타파보다는 현상유지의 定向을 주류로 삼고 있다는 것이다.²⁵⁾

이러한 세가지의 시사점은 미래지향적인 한반도의 통일이념과 관련하여 적어도 ‘民族的인 熱望’과 ‘이데올로기의 統合’이라는 두가지의 선행과제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다. 여기서 민족적인 열망이란 말하자면 민족의 통일과 독립의 확보, 국가의 번영과 국민복지의 증진, 그리고 민족문화의 창달과 국민복지의 증진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이데올로기의 통합이란, 적어도 필자가 생각하기에 빈익빈·부익부로 대표되는 資本主義에 대한 反定立으로 출현한 ‘科學的 社會主義’(scientific socialism)는 개인들의 소유욕을 억제하여 생산성의 고향을 억제한다는 치명적인 한계를 지니고 있다.

그렇다면 -비록 헤겔의 변증법을 적용한 것이지만- 우리가 바라는 개인의 소유욕을 억제하지 않으면서 자본주의의 맹점을 극복할 이데올로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여기에 시사점을 주는 것이 素昂에 의해 體系化된 「三均主義」의 具現인 것이다. 다시 말하면 均權을 이루기 위한 政治的인 均等은 民主共和制의 確立, 보통선거제의 실시, 國民基本權의 均等化 및 국민의 의무병역제를 포함하고 있다. 또 資本主義에 대한 反定立으로서의 마르크시스트가 아니라 동양적인 봉건제의 적폐 중 하나인 부익부·빈익빈의 현실을 극복하기 위한 복지지향적인 經濟的 均等 및 均學을 지향

註 25) 김학준, 「강대국 관계와 한반도」(서울: 을유문화사, 1983), pp. 215 ~ 216 참조.

하는 教育的인 均等은 統一韓國의 國家적인 理想으로 손색이 없을 것이다. 더구나 民族自決의 원칙에 따라 國家間的 均等を 주장하는 族與族 均等은 오늘날 한반도에 주는 시사점이 크다고 할 수 있다.

V. 결 론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기본적으로 남북한이 같이 잘살자는 민족공동체의 연대의식을 그 기반으로 한다. 이는 대내적으로는 민족사회의 福祉 指向的인 統合이며, 대외적으로는 民族自矜心의 高揚에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目的에 따라 필자는 기본적으로 ‘韓國問題의 韓國化’라는 시대적인 요청에 부응하여 ①한국적인 특수성과 세계적인 보편성을 적절하게 조화시키고 있는, ②保·革論理를 적절하게 수렴하고 있는, ③自由와 平等이라는 이율배반적인 모순속에서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均等이라는 사상적인 토대를 안고 출발한 素昂의 三均主義를 未來指向的인 統一韓國의 國家理念으로 提示하였다.

우리가 三均主義를 統一의 過程 또는 統一韓國의 國家理念으로 설정할 때 그것은 ‘民族的인 熱望’과 ‘이데올로기의 統合’이라는 당면한 두 가지의 先行課題의 해결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均權, 均富, 均學, 民族自決 등으로 크게 대표되는 三均主義를 현시점에 맞게 재조명하여 미래지향적인 국가이념으로 설정, 실천에 옮긴다면 우리는 民族 內部的 갈등을 훨씬 줄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될 때 우리 民族의 통일은 그만큼 앞당겨 질 수 있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 강만길 (편), 「조소앙」, 서울:한길사, 1982.
- 김학준, 「한국문화와 국제정치」, 서울:박영사, 1975.
- 삼균학회 (편), 「소앙선생문집(상)」, 서울:햇불사, 1979.
- _____ , 「삼균주의 연구논집」(4,5,9).
- 독립운동사 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제7집):임시정부자료집」,
1984.
- 이상우, 「통일한국의 모색」, 서울:박영사, 1987.
- 이홍구의 4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서울:박영사, 1984.
- 정용길, 「분단국통일론」, 서울:고려원, 1988.
- 홍선희, 「삼균주의 연구」, 서울:한길사, 1982.
- Carr, E.H., Nationalism and After, Macmillan, 1968.
- Kohn, H., Nationalism: Its Meaning and History, Princeton
: Van Nostrand, 1955.
- Singer, P., Hegel, Oxford University Press, 1983.

〈 논 문 〉

- 강광식, “통일논의:연구현황과 통일문화 창조”, 「정치와 외교」, 서울:
대왕사, 1985.
- 권영건, “조소앙의 삼균주의론”, 박사학위논문, 한양대 대학원 정치외
교학과, 1985.
- 김달중, “한국의 통일정책 변천과 남북대화”, 「통일논총」, 제1권 제1
호, 국토통일원, 1981.
- 이상우, “남한의 국내외적 요인과 통일전망”,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편),
「한반도의 통일전망」, 서울: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0.

이정수, “한국의 정치발전과 한민족공동체문화의 창조”, 서원대학사회과학
연구소 (편), 「한민족공동체형성의 기반모색」, 1989.5.

Kim Young Jeh, “ The Future Alternatives of South Korea's Uni-
fication Police ”, Korea and World Affairs , Vol.6,
No.1, 1982, Spring.

南北韓 經濟 交流 및 協力의 促進方案

文 周 翰
(서울大 大學院 經營學科)

目 次

- I. 問題의 認識
- II. 北韓經濟에 대한 理解
- III. 北韓의 經濟開放政策에 대한 變化와 開放與件
- IV. 南北經濟交流 및 協力의 實績
- V. 새롭고 實質的인 方案
- VI. 結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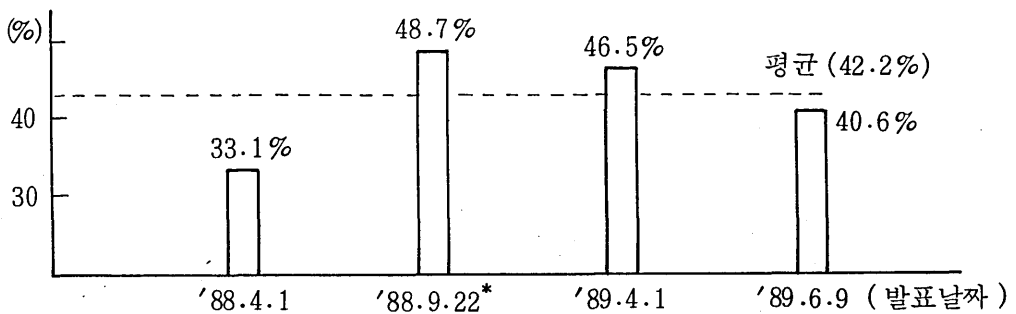
I . 問題의 認識

우리는 반만년의 유구한 歷史를 한 핏줄, 한 言語, 한 문화전통으로 살아왔으며, 우리 모두의 삶의 원형인 民族共同體를 유지·승계시켜 왔다. 그러나 남북한간의 오랜 斷絶은 이제 민족공동체 그 자체마저 毀損할 수도 있다는 심각한 우려를 안겨주고 있다.

따라서, 남북한간에 民族的 紐帶感을 증진시키고 민족의 재통합을 도모하는 正當하고도 實質的인 노력이 이제 새로운 차원에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統一努力 그 자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지하고 있으면서도 그 可能性에 대해서는 국민의 반이상이 회의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은, 현실인식을 고려하더라도 그동안 얼마나 통일이 공허한 觀念的 次元에만 머물러 있었나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실제로 최근에 몇몇 언론기관에서 실시한 輿論調査 分析結果를 보더라도 “통일이 가능하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림-1 참조>.

<그림-1> 통일의 가능성에 대한 국민인식 조사



*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1988.7.7) 이후 가능성 비율이 크게 높아진 점이 주목된다.

자료: 동아일보 (1988.4.1, 1989.4.1), 중앙일보 (1988.9.22), 한국일보 (1989.6.9)

그렇다면 우리들이 絶對的인 命題로 認識하고 있는 민족통일이 不可能하다고 여기는 주된 이유는 무엇일까? <表-1>에서는 그것이 “각기 다른 政治理念과 經濟制度에 토대를 둔 體制때문이다”라고 응답하고 있다.

<表-1> 남북통일의 장애요인

장 애 요 인	비 율	주요응답집단
남북간의 이념차이	37.2	40 대 이후
집권층의 이해관계	26.4	—
주변강대국의 이념차이	12.6	—
통일방법상의 차이	16.8	25 세 이하
기타요인(무응답 포함)	7.0	—

자료: 한국일보, 1989년 6월 9일자.

따라서 이 내용만 보면 民族共同體를 回復하기 위해서는 통일이 필요하고, 그 통일은 서로의 체제가 다르기 때문에 불가능하다는 것이므로, 지금 당장 統一을 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체제로 一致시키는 길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무작정 통일만 된다면 여타의 문제는 어떻게든지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運命論的·諦念的 統一觀이나, “어떻게든지—즉, 배후의 체제인 外勢만 몰아 낸다면 左右의 분열이나 내부의 葛藤은 저절로 해결되지 않겠느냐”라는 幻想的 統一觀이 민족전체의 앞날을 생각할 때 감상적이고 위험한 주장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옳다면, 이 방법은 일단 유보시켜야 할 것이다.¹⁾ 그러므로, 感傷的 統一論의 한계를 극복하고 자칫

註1) 남북한의 이질적인 체제를 전혀 경험하지 못한 분단이후 출생세대가 韓國은 전체인구중 83.1%(1988년), 北韓은 81.8%(1985년)이다.

계급론으로 기울 수 있는 幻想的 統一論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관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는 당위적 통일논의를 지양하고, 보다 구체화된 統一意志의 결집을 도모하는, 다시 말해서 南北韓 國民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실천적 통일방안 모색에 역점을 둘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本稿는 相互의 체제(이념)를 일단은 인정하는 바탕위에서 가장 現實的이고 實踐的인 통일에 대한 接近方法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에서부터 출발, 그것은 결국 分斷國이 갖는 독특한 형태의 經濟交流 및 協力方法일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이유는 첫째, 국민적 합의가 대체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는 自主·平和·民主의 세 統一 大原則에 부합된다. 둘째, 完全한 통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段階的 過程과 잠정적 협력과 연합을 거쳐야 하는데, 쌍방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이 그 기본바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셋째, 經濟는 그 속성상 높은 추진력과 순발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다른 직접적인 과정들에 비해서 부작용이 적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西獨의 예를 들 수 있다. <表-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의 과학기술과 문화교류협력 단계에까지도 兩獨關係가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이 內獨貿易의 成文化를 이룬 베를린협정(1951년)이후의 꾸준한 經濟交流라는 점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시사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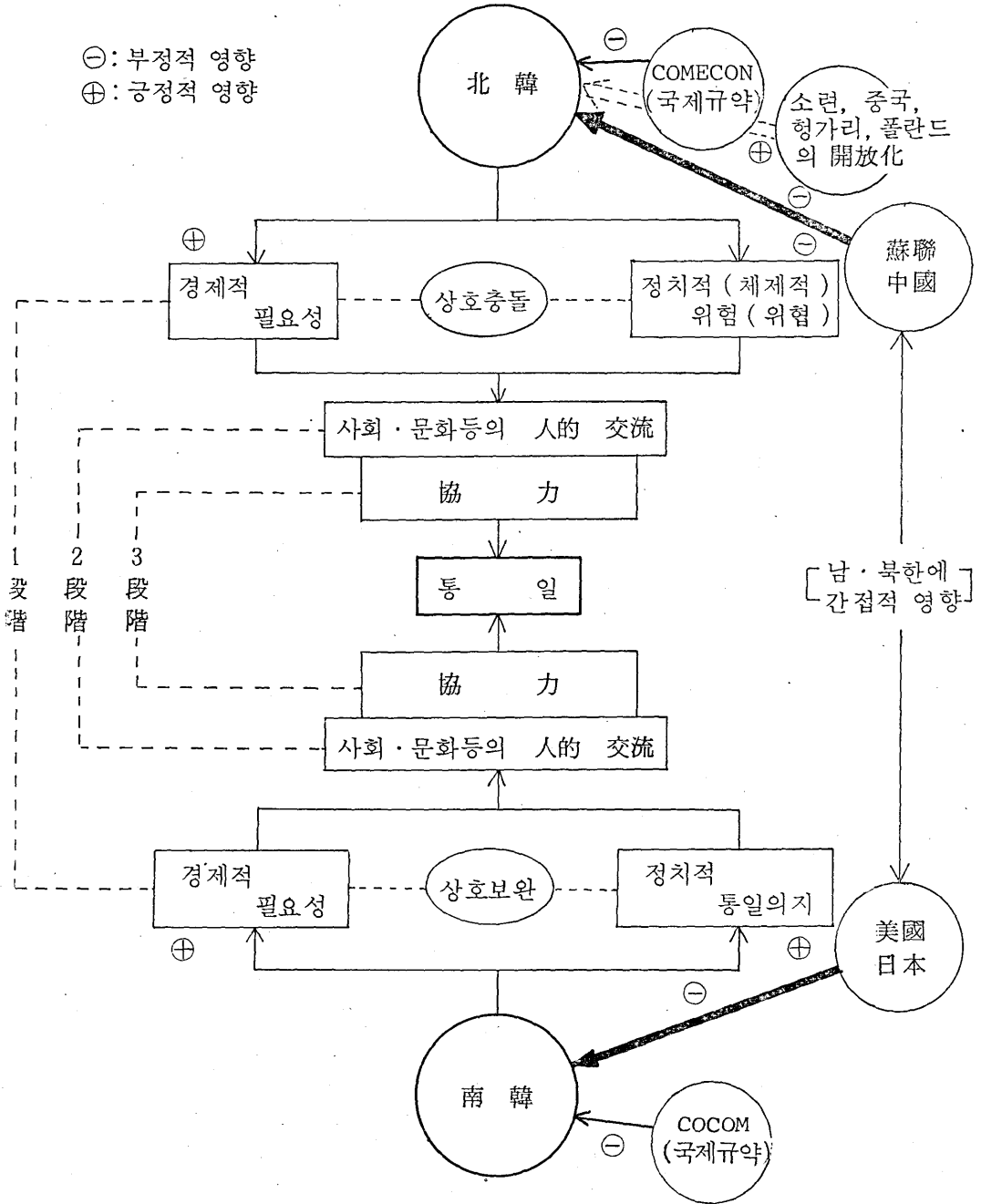
<表-2> 西·東獨間 交流 및 協力の 形態變化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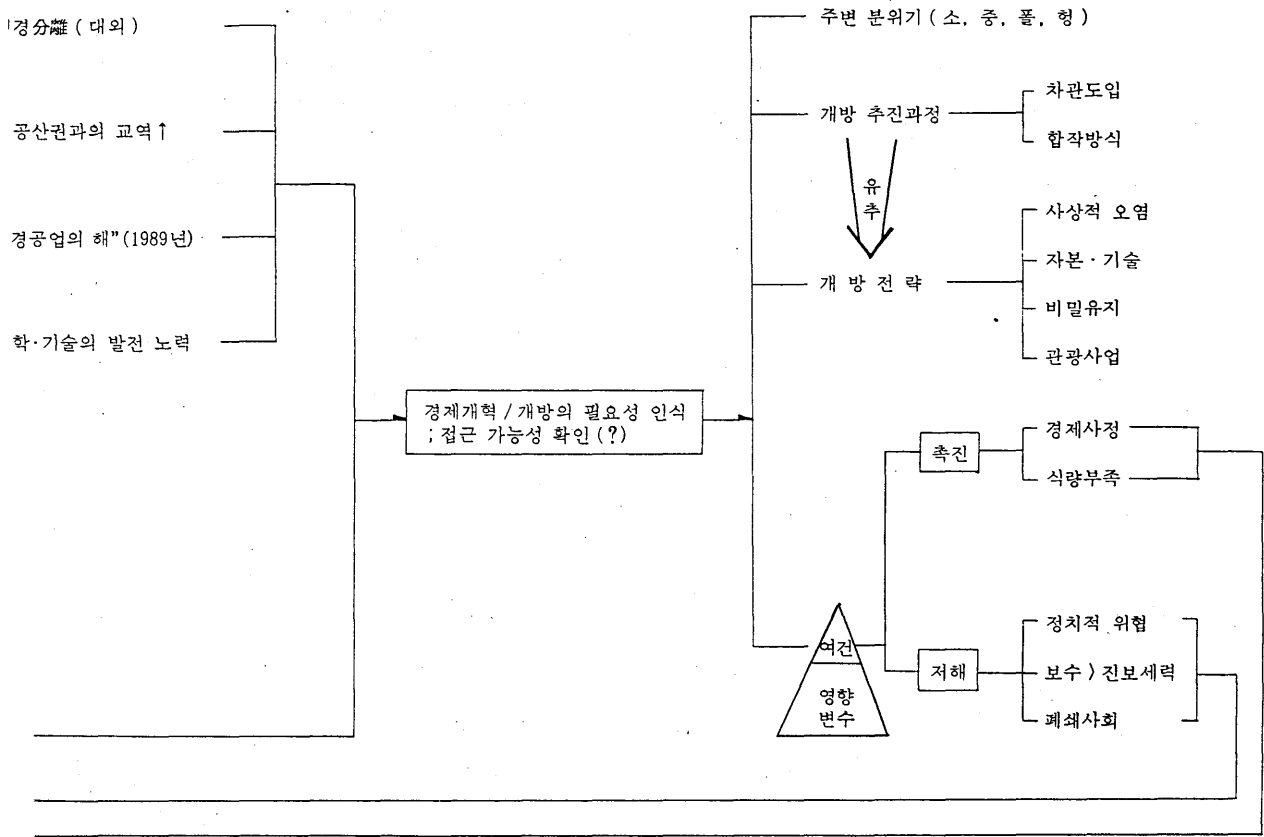
단계	年度別 교류·협력형태의 발전	
1	1951 : 內獨貿易 (베를린협정)	
2	1970 : 통신·교통교류 1972 : 인간적 교류 1975 : 환경문제 공동해결 1976 : 광물채굴	1979 : 문화교류 1982 : 민간단체교류 1983 : 차관공여
3	1987 : 과학기술협력, 환경보호협력, 문화교류협력	

자료 : 박성조, “東·西獨間의 交流 및 協力形態와 南北韓 交流에 주는 示唆點” (국토통일원, 1989),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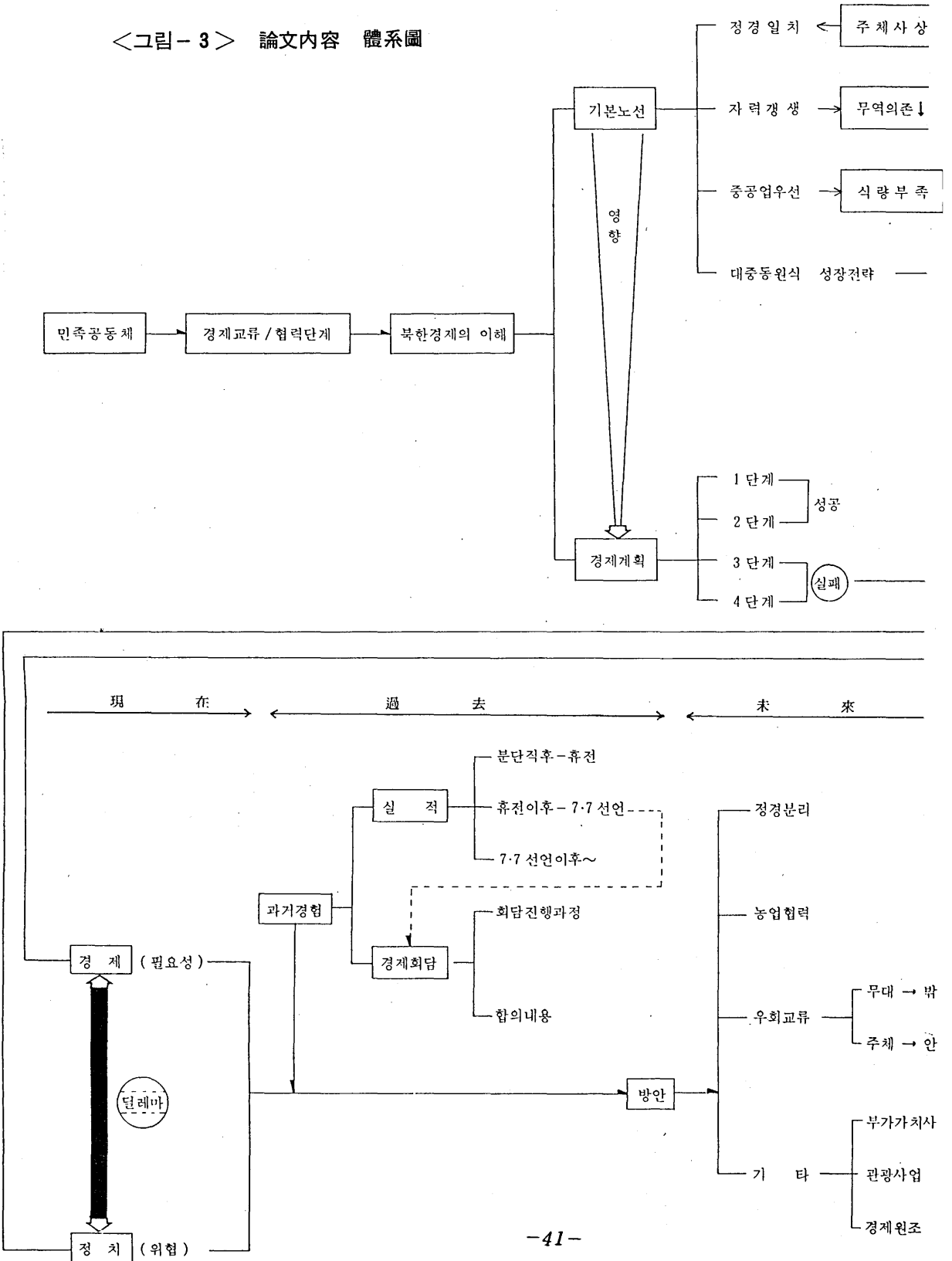
<그림 2>는 經濟的인 변수만을 고려해서 그려본 「통일에 미치는 영향관계圖」이다.

<그림 2> 統一에 미치는 영향관계





<그림-3> 論文內容 體系圖



본 論文은 크게 여섯 章으로 구성되어 있다. Ⅱ章에서는 論議의 가장 기초가 되는 「北韓經濟 바로 알기」이다. 基本經濟政策 路線은 무엇이며, 4 단계의 經濟計劃 期間中에는 어떤 成果를 거두었는가를 알아본다. Ⅱ章의 각종 資料들은 주로 國土統一院에서 公式的으로 發表한 것들을 이용했지만, 資料의 信賴性和 신속성이 충분하지 못해 전반적으로 기존의 研究結果들을 많이 인용할 수 밖에 없었다.

前章에서 經濟의 改革·開放 必要性을 제시한 뒤 3章에서는 두 단계에 걸친 開放政策의 變化를 설명한다. 北韓이 앞으로 개방의 門을 더 열 것인가를 判斷·豫測하기 위해서 開放에 영향을 미치는 促進要因과 沮害要因을 찾아 보았다.

그리고 Ⅳ章에서는 앞으로의 方案을 제시하기에 앞서서, 韓國과 北韓이 지금까지 經濟的으로 어느 정도까지 접근해 있는지를 보았다. 과거의 交流經驗과 1년간에 걸친 經濟會談의 假合意內容을 밝힐 것인바, 구체적인 方向設定에 큰 역할을 할 것이다.

本稿의 中心인 Ⅴ章에서는 몇가지의 새로운 방안이 제시될 것이다. 전체적인 흐름은 <그림-3>과 같다.

Ⅱ. 北韓經濟에 대한 理解

1. 北韓의 基本 經濟政策路線²⁾

경제문제를 해결하는 사회제도로서의 經濟體制는 국가와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변하여 왔다. 그중 北韓經濟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社會主義

註 2) 구체적인 방안제시에 앞서서 북한 경제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선결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접근가능한 자료가 불충분했기 때문에 限界性을 띤 이해일 수 밖에 없고, 솔직하게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을 많은 부분 그대로 인용했음을 밝혀둔다.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1930년대 蘇聯의 스탈린시대 경제체제가 그 원형으로서³⁾ 中央集權的 計劃經濟體制를 말한다. <表-3>은 이를 다른 경제체제와 비교한 것이다.

<表-3> 경제체제의 諸類型

유 형 요 소	자본주의	사 회 주 의		공산주의
	시장경제	시장경제	계획경제	폐쇄경제
사 례	미국, 한국	유고슬라비아	소 련	북한, 쿠바
재 산 소 유	사유 (私有)	공유 (共有)	국유, 공유	국유, 공유 ⁴⁾
조 정 기 구	시 장	시 장	계획, 명령	계획, 명령 ⁵⁾
의사결정구조	분 산	분 산	집 중	집 중
동 기 구 조	물질적 유인	물질적 유인 도덕적 유인	물질적 유인 도덕적 유인 강 제	규 범 강 제 물질적 유인

자료 : 김영봉, 「경제체제론」 (서울: 박영사, 1987, p.60.)

이 정통 소련식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2차대전이후 정치적으로 공산화된 동구제국, 중국, 월맹 등에 도입되었다.⁶⁾ 북한에서도 1945년 蘇聯의 점령과 함께 사회주의 건설을 시작하면서 이 형태를 도입했으며, 이것이 오늘날까지 큰 변화없이 계속되어 오고 있다. 다만 쿠바와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중에서도 특이한 변형으로서 閉鎖共產主義 (siege communism) 형태를 띠고 있다.

註3) Alec Nove, 「소련경제사」, 배왕규역, (서울: 명지출판사, 1989), p.27.

4) “…… 생산수단은 국가 및 협동단체의 소유이다” (북한사회주의 헌법 제 18조)

5) “…… 인민경제는 계획경제이다” (북한사회주의 헌법 제 31조)

6) 김광조·박진근 공저, 「동구경제론」 (서울: 법문사, 1988), pp.47 ~ 48.

이렇게 시작된 북한경제는 기본적으로 다음의 네 政策路線을 갖고 있으며, 북한경제를 이해함에 있어서 필수적이다.

가. 政經一致 (主體思想)

북한에서의 유일한 통치이념은 「主體思想」이다.⁷⁾ 이것은 사상에 있어서의 主體, 정치외교에 있어서의 自主, 국방에 있어서의 自衛, 마지막으로 경제에 있어서는 自立의 원칙을 내세우는 金日成의 지도이념으로서, 모든 부문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⁸⁾ 결국 經濟部門에 있어서도 공식이념으로서 중심을 차지하고 있다.⁹⁾ 따라서 경제는 정치와 나누어서 이해될 수 없으며, 경제정책은 政治的 目的을 달성하기 위한 하나의 手段에 불과하다.¹⁰⁾

그러나, 이와같이 대내적으로는 政經一致政策을 쓰고 있지만 대외적으로는 정치와 경제를 결부시키지 않으려는 정책을 쓰고 있다.¹¹⁾ 이 문제는 뒤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하고, 이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그림을 그려 보았다.

<그림 - 4 >

政治와 經濟의 관계

	한 국	북 한
대 내 적	분 리	일 치
대 외 적	일 치	분 리

註 7) 허동찬, 「김일성 주체사상의 올바른 이해」(서울: 원일정보, 1989), p.10.

8) 연하청, “경제분야”, 「남북비교 총서」(서울: 국토통일원, 1989), p. 47.

9) 김갑철, · 고성준 공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서울: 문우사, 1988), p. 120.

10) 윤보현, 「김일성 주체사상 연구」(서울: 형설출판사, 1986), pp.132 ~ 170.

11) 물론 이것도 정치적인 이유에서이다.

나. 自力更生の 原則

「經濟에서의 自立」, 즉 자립경제의 원래 뜻은 “국민경제가 대내적으로 투자재원을 자체조달하여……, 대외적으로는 國際收支의 均衡을 이루면서 국민의 실질소득증대에 따른 경제후생증대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이다.¹²⁾ 즉 필요로 하는 모든 수요를 국내에서 자급한다는 뜻이 아니다. 그러나 주체사상에서의 「自立」이란 自給自足經濟 (autarky) 를 구축한다는 自力更生の 原則으로 이해된다.

資本主義 諸國과의 무역거래는 자본주의 毒素의 침투를 초래하므로 사회주의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國際經濟市場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¹³⁾ 또한, 韓國을 赤化統一시킨다는 정치적 목적이 있으므로 韓國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西方諸國에 대한 정치적 반감에 의해서도 개방보다 폐쇄적 자립경제노선을 지키고 있다.

이와 같은 정책노선은 북한의 「貿易去來를 독특한 형태로 만들어 놓았다. 북한에서는 무역의 개념을 “사회주의 국가의 무역은 …… 자본주의 국가와 달리 相互性의 원칙에서 서로의 경제발전을 촉진시킬 목적으로 진행되며, 自立的 民族經濟를 성공적으로 건설하는데 이바지 한다. 즉 사회주의의 무역은 이윤추구가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교환이 위주로 되기 때문이다.”¹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 따라서 대외무역은 輸入을 우선으로 하여 그에 필요한 資本을 마련하기 위해 輸出을 할 뿐이다. 결국, 貿易의 본질은 生産을 위한 대내경제에 대해서 단지 從屬的 지위에 불과하다는 결론이다.¹⁶⁾ 이것은 국민경제의 貿易依存度를 보더라도 알 수 있

註 12) 박병호, 「국제경제개론」(서울, 경문사, 1989), p.62.

13) 정상훈, “북한의 경제발전과 그 가능성”, 「북한의 대외정책」, 박재규편(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p.130.

14)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편, 「경제사전-1」(동경: 학우서방, 1973), p.45.

15) 국제무역의 소위 비교우위이익을 포기한 셈이다.

16) 이태욱, “자력갱생원칙의 이점과 한계”, 「북한 40년」(서울: 을유문화사, 1988), p.129.

는데, 韓國의 1/3수준에 그치고 있다.¹⁷⁾

<그림 - 5> 남북한의 무역의존도¹⁸⁾



자료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 1988」, 서울, 1989

일본 무역진흥회편, 「북조선의 경제와 무역의 전망」, 동경, 1988
위 자료에서 직접 계산한 것임.

註17) 무역의존도의 높고 낮음에 따라, 어느 무역정책이 더 우수한지를 비교평가 하자는 의도가 아니라, 북한이 원칙적으로 「자력갱생」을 고수해 왔음을 설명하고 있을 뿐이다.

$$18) \text{ 무역의존도} = \frac{\text{수출액} + \text{수입액}}{\text{GNP}} \times 100$$

다. 重工業 優先政策

북한은 정경일치라는 큰 테두리 안에서 自力更生原則과 함께 重工業을 우선하는 정책을 갖고 있다. 이것은 마르크스의 擴大 再生産理論에 기초, 사회주의 경제의 물질적·기술적 토대가 되는 대규모 기계식 생산방식을 말한다.¹⁹⁾

물론, 이 정책이 韓半島 統一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한 군사력을 증강·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역할을 해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⁰⁾ 결국 중공업 우선정책은 뒤에서 언급될 「軍事·經濟併進政策」의 내용을 갖고 있다고 하겠다. <表-4>는 중공업과 경공업의 投資比率를 비교한 것이다.

<表-4> 期間別 重工業 投資 比率

기 간	1950代	1960代	1970代('71~'76)
비 율 (%)	81.9	85.0	83.0

자료 : 국토통일원, 「김일성체제 등장과 경제정책 전개양상」, 1983, pp. 30 ~ 31.

여기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중공업 우선정책을 추진해왔기 때문에 소규모의 농기구 생산공장이 적어, 그것은 1970년대 후반이후의 식량부족 문제로 직결되었다는 점이다. 생산수단의 우선적 성장없이 기술발전과 노동생산능률의 성장이 있을 수 없다고 보아 重工業部門에 대한 투자를 우선으로 하는 원칙때문에 農業과 消費財部門은 계속 투자우선순위대로의 자본배분에서 절대량 부족을 겪어 왔으며, 이는 실질적인 국민후생수준의 後退와 함께 경제발전에 있어 市場이 좁은 북한으로서 치명적인 再生産構

註 19) 김일평, 「북한 정치경제 입문」(서울: 한울, 1987) 참조.

국토통일원, 「북한 경제개관」(서울: 1988), p. 49.

20) 국토통일원, 「북한의 경제실태」(서울: 1986), p. 39 참조.

造 結締현상을 수반하였다.

1 정보당 쌀의 생산량을 보더라도, 韓國이 北韓보다 80 kg 더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토지의 비옥도 등을 무시하면 농업기술(강우량등의 氣象情報 包含)과 기계화 정도에 따른 차이로 생각된다.

<表-5> 농업부문 주요 지표(1987년 현재)

구 분	단 위	한 국	북 한
경 지 면 적*	萬 정 보	214.3	214.0
농 업 인 구	萬 명	340.0	310.0
농가인구 / 총인구**	%	18.5	38.0
정보당 쌀생산량	kg	436	316
경운기 보유대수	千 대	711	10

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1987」, 서울, 1989.

* 논과 밭의 합계면적

** 총인구란 남북한 각 지역의 총인구를 말함.

라. 大衆動員方式의 成長戰略

모든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제성장방식을 보면 1960년대까지 生産要素의 量的 動員을 통한 外延的(extensive)방식을 중시하였다.²¹⁾ 그러나 그 이후 생산요소의 생산성 향상을 통한 內包的 성장(intensive growth)의 중요성을 인정하고 經濟改革을 추구하고 있다.²²⁾

하지만 북한의 경우는 아직도 이 방식을 고집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

註21) 이태욱, “북한의 경제개방 정책과 그 전망”(국토통일원, 1989), p.11.

22) 최근 中國의 경제개혁이나 蘇聯의 페레스트로이카도 이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려져 있다. 즉 농업에서는 「靑山里 方法」²³⁾, 공업에서는 「大安의 事業體系」²⁴⁾라는 독특한 경제관리제도를 둠으로써 經濟的 合理性보다 政治的 合目的性을 더 강조하고 있다. 다시 강조하지만 經濟는 하나의 手段이며 目的은 政治에 있다.²⁵⁾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주체사상을 기초로 경제는 한낱 정치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따라서, 정치이념적으로 이질적인 외국과의 무역은 消極的이었고, 군사적 필요에 의해 중공업을 우선했으며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한 생산성 향상보다 대중동원방식의 성장전략을 채택해왔다 → 이와 같은 基本政策路線은 原則적으로 지켜졌으며, 다만 필요에 따라 어느 정도의 융통성을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다음 2절과 2장에서 밝혀 질 것이다 → 중요한 것은 必要하다면 기본노선을 약간이라도 修正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內部를 변화시킨다는 측면과 현재의 경제사정이 어렵다는 측면을 생각할때, 그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다음 節에서 經濟計劃 추진내용을 보면서, 어떻게 基本經濟路線을 修正해 왔는지를 살펴 보도록 하겠다. 그것이 곧 남북경제교류의 새 방안을 찾는 요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北韓의 經濟計劃 推進狀況과 成果

1945년 8월, 해방과 함께 소련군의 점령하에 들어간 북한에서는 勞働者와 農民을 기초로 하고 金日成등 항일 빨치산세력이 중심이 되는 정

註 23) 1960.2 평남 강서군 동진면 청산리 협동농장의 현지도 경험을 토대로 김일성이 제시한 방침

24) 1961.12 평남 대안시에 있는 대안 전기공장의 현지도에서 만든 사업체계-국민방첩연구소편, 최광석 감수, 「북한의 用語대백과」(갑자문화사, 1976) 참조

25) 김일성, “사회주의 경제의 몇가지 이론문제에 대하여(1969.3.1)”, 「북한 경제자료집」, p.188 참조.

권기구가 형성되었다. 그뒤 46년의 토지개혁과 주요산업에 대한 국유화 이후 47년부터 본격적인 經濟改革이 시작되었다. <表-6>은 그동안의 추진상황과 성과를 요약한 것이다.

<表-6> 北韓의 經濟計劃 推進狀況과 그 成果

단계	가 간	경 제 계 획	성과 (공업생산기준)	
			생산실적	성 장 율
0	1945~46년	조 정 기	-	-
1	1947	제 1차 1개년 계획	0.7 배 증가	49.9 %
	1948	제 2차 1개년 계획	2.6	
	1949~50	2개년 계획	-	
-	1951~53	한국전쟁	-	-
2	1954~56	전후 복구 3개년 계획	2.8	41.7 %
	1957~60	5개년 계획	3.5	36.6 %
3	1961~70	제 1차 7개년 계획(3년 연장)	3.3	12.8 %
	1971~76	6개년 계획	2.5	16.3 %
	1977	조 정 기	-	
4	1978~84	제 2차 7개년 계획	2.2	12.2 %
	1985~86	조 정 기	-	
	1987~현재	제 3차 7개년 계획 (추진중)	-	10%(목표)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 경제개관」, 서울, 1989, p.11.

E.I.U., 1985 No.2, p.31 - 국토통일원, 「북한 경제체제의 개방화 요인 분석과 전망」, p.14에서 재인용

가. 第 1 段階 (1947 ~ 1950)

日本은 「日·滿·支블록경제건설」을 계획하고 그에 필요한 전력, 철도

항만 등의 기간설비와 重化學工業 建設을 북한지역에 집중적으로 이루어 놓았다. 해방후 북한은 이 시설들을 국유화하고 소련의 경제적 指導 및 援助를 바탕으로 순조롭게 성장, 農業위주였던 韓國보다 우위에 서는데 성공했고, 이를 배경으로 1950년 南侵을 감행하게 되었다.

나. 第2段階 (1954 ~ 1960)

戰爭이후 3년간 복구를 마친뒤 57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행, 이 또한 1년을 앞당겨 목표를 달성할 만큼 성공적이었다. 김일성은 反對勢力에 대한 숙청과 극단적인 사회개조, 거센 대중운동 등의 세 요소를 적절히 결합, 戰後의 어려움을 극복한 셈이었다.²⁶⁾

다. 第3段階 (1961 ~ 1977)

1961년 9월의 朝鮮勞動黨 제4차 대회에서 결정된 제1차 7개년 계획은 사회주의 경제건설을 본격화하기 위한 最初의 計劃이라고 할 수 있다.²⁷⁾ 그러나 이 계획은 「청산리 방법」과 「대안의 사업체계」등의 새로운 大衆動員方法이 제시되었으면서도²⁸⁾ 난항을 거듭, 결국 3년 뒤인 1970년에 가서야 목표를 달성했다.

결국으로는, 그 당시의 國際的 緊張때문에²⁹⁾ 야기된 「軍事·經濟併進政策」의 採擇이 원인이었다고 하지만, 숨은 이유는 經濟體制의 矛盾이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데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자 黨의 主體思想을 유일사상으로서 공식화했다.³⁰⁾

註 26) 서남원, “경제계획의 전개과정”, 「북한경제론」(서울북한연구소, 1977), p. 7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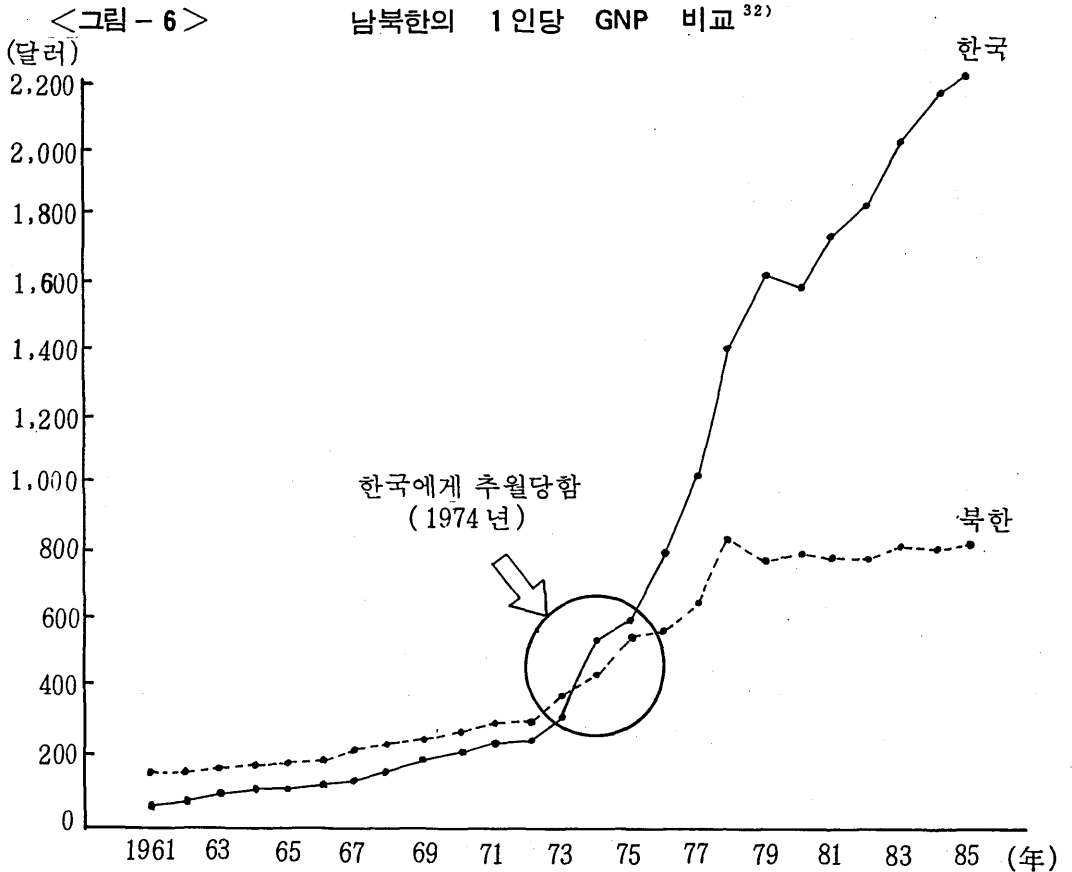
27) 국토통일원, 「북한 경제체제의 변혁가능성과 요인분석」(서울: 1974).

28) 주석 23번과 24번 참조.

29) 한국에서의 군사혁명, 쿠바사태, 중소분쟁의 격화, 미국의 월남전 개입 등

30) 그 시점이 제1차 7개년 계획이 실패로 끝난 1967년과 일치한다.

또한, 1972~73년의 南北對話를 통해서 한국경제의 발전사실을 알고 1974년 총동원령을 내릴 정도로 일종의 危機意識을 느끼기 시작했다.³¹⁾ <그림-6>은 이 기간중 남북한의 1인당 GNP우위가 뒤바뀌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자료 : 국토통일원,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1987」(1988), p.32.

국토통일원, 「북한 GNP 추계방법 해설」(1988.6) 참조.

이 책에 따르면, “북한개념의 국민소득 = GNP - 비생산부문 (서비스 부문) - 해외 순수취 요소소득 - 감가상각비”의 관계를 갖는다.

註31)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서울: 1988), p.102참조.

32) 1987년말, 한국의 1인당 GNP는 북한의 3배, GNP는 6배 수준이다.

라. 第4段階 (1978 — 현재 진행중)

이례적으로 最高人民會議에서 결정된 제2차 7개년계획은 「主體化, 科學化, 現代化」등을 중심과업으로 하고, 1980년 부터는 6차 당대회에서 제기된 「10大 展望 目標」중의 일부를 우선과제로 삼아 속도전型的 대 총동원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2년간의 調整期가 필요할 정도로 성과가 부진했다.

더욱이 제3차 7개년 계획기간중에는 「제13차 世界青年學生祝典」準備을 위해 首都大建設에 치중, 昏迷狀態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고 있다.

1988년의 「科學·技術 3개년 계획」과 1989년의 「輕工業發展計劃」이 黨에 의하여 새로이 제기되지만, 기존의 계획과 겹쳐서 더욱 경제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3년째인 현재까지 總工業生産額이나 穀物生産량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이미 경제계획에 重大한 蹉跌을 빚고 있다는 증거이다.³³⁾ 따라서, 어떤 근본적인 再建策을 강구하지 않는 한 경제면에서 오는 政治的 危機를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북한이 어떻게 경제계획을 추진해왔으며 그 성과는 어떠한지를 간략하게 살펴 보았다. 요약하면, 해방이후 1960년까지의 제1,2단계는 日本의 기존 중공업 시설과 소련의 원조에 힘입어 한국보다 경제적 우위에 섰지만, 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부터 서서히 社會主義 經濟가 갖는 취약점과 모순이 노출되기 시작, 1967년 主體思想을 유일이념으로 採擇하고 주민 총동원령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60년대 말에 GNP에서, 70년대 중반에 1인당 GNP에서 韓國보다 뒤지기 시작했다.

1989년, 이제는 경제적으로 비교될 수 없을 정도로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 사실은 北韓 内部의 경제정책적 변화를 가져올 조짐이지

註33) 한용원, 「북한연구」(서울, 박영사, 1989), pp. 163 ~ 200.
를 입증하고 있다.

만 政治的 限界가 주목된다.

다음 章에서는 北韓이 필요에 따라 추진해온 經濟開放政策과 戰略, 그리고 앞으로의 개방여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을 살펴봄으로써 北韓의 開放可能性에 대해 알아 보고자 한다.

Ⅲ. 北韓의 經濟開放政策에 대한 變化와 開放要件

經濟開放은 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경제가 세계경제에 얼마나 露出되어 있는가를 가리키는 指標가 된다.³⁴⁾ 물론 사회주의 국가들은 COMECON 을 중심으로 일종의 域內貿易을 하고는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의 經濟開放이란 資本主義 국가에 대한 무역과 자본협력의 증대를 뜻 할 것이다.

물론 앞에서 지적한 蘇聯型 中央集權的 計劃體制가 후진국 소련을 짧은 기간에 강대국으로 변모케 했다는 점에서 肯定的인 측면도 있지만, 産業化의 진전에 따라 경제의 非效率性을 노출시켰고, 결국 이것은 국가 정치체제의 파탄을 가져왔다.

따라서, 최근에는 소련·중국·헝가리·폴란드 등을 중심으로 改革(Perestroika)과 開放(Glasnost)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다. 이러한 바람은 북한에도 적잖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1. 北韓의 經濟開放 推進

가. 1970年代 前半期

북한도 원칙적으로는 自力更生の 原則을 基本經濟政策路線으로서 견지하고 있지만 ‘必要에 따라’ 어느 정도는 經濟開放을 추진해 왔다.³⁵⁾ 즉,

註 34) 박춘상, “북한의 해외경제협력”, 「북한의 대외관계」, 민병천 편(서울: 대왕사, 1987), p. 304.

35) 유석렬, 「북한 정책론」(서울: 법문사, 1987), p.385.

제 3 단계 경제계획 기간중인 1973년부터 對西方 貿易을 적극 유치,³⁶⁾ 전체 무역량에서 대서방 무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1970년의 18.6%에서 1974년에 48.5%로 급증했다.³⁷⁾

그러나 원유가 상승과 輸出品의 세계시장가격의 하락으로 1975년부터는 外債을 갚지 못해,³⁸⁾ 결국 開放政策은 막을 내리게 되었다. <그림-7>는 西方圈 貿易量의 比率이 계속 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7> 북한의 대서방권 무역량 비율



자료 : IMF, Direction of Trade Statistics YearBook, 1977·79·87
 국토통일원, 「북한 경제개관」(1988)에서 재인용
 단, 1971, 72, 73년도는 자료가 충분하지 못해, 직선으로 표시하였음. 또한, 이 수치는 일본 JETRO 발표내용과 다소 차이가 있음
 (예를 들어서 1986년 8%, 1987년 9%)

註 36) 물론 이때도 政經分離 정책을 썼다.

37) 李 浩, “북한의 경제개방 전망과 남북 경제교류의 평가”, 「남북한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중장기 발전계획」(서울: 한국무역협회, 1989).

38) 참고로 북한의 최근 외채는 1987년 - 47억달러, 1988년 - 51억달러이다.

나. 1980年代 後半期—合營法

두번째 經濟開放은 1984년 1월 26일 제 7차 最高人民會議에서 “對外 經濟協力은 大내경제발전과 人民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必然的이고 主導的인 부문”임을 밝히면서 시작되었다. 이를 가장 상징적으로 나타낸 것이 ‘合營法’의 제정(1984.9.8)과 뒤이어 1985년 3월과 5월에 제정된 合營法 施行細則, 合營會社 所得稅法 및 同細則, 外國人 所得稅法과 同細則 등이며, 1988년 11월에는 政務院안에 合營公營부까지 새로 설치하였다.

그러나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表-7>에서와 같이 총 26건에 불과하며 그나마 대부분 日本 朝總聯과의 合作이다. 주로 投資與件이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表-7> 對西方 國別 合作交涉件數

(건)

국 가 기 간	일 본	프 랑 스	서 독 국	스 웨 덴	홍 콩	호 주	태 국	인 도	計
합영법제정전	7	1	1	1	0	1	0	0	11
합영법제정후	18	3	1	1	1	0	1	1	26
國別 合 計	25	4	2	2	1	1	1	1	37

자료 : 북한연구소, 「북한 총람」(서울 : 1986), p.68.

즉, 借款導入에 의한 플랜트류 수입정책은 外債問題만 야기시켰고, 合營法제정을 계기로 한 直接投資의 誘致政策은 國際收支의 赤字問題를 야기시켜, 결국 두번의 開放政策은 실패했다고 할 수 있다.

2. 經濟開放 戰略

그동안의 개방방식을 보면 다음 몇가지를 기본전략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첫째, 住民의 思想的 汚染을 원치 않는다.

북한의 경제개방정책을 가장 막고 있는 요소이면서 중요한 戰略이다. 經濟的으로는 외국과 교류할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輸入品과 함께 資本主義 사상까지 수입되면 주민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지 모른다는 생각에서이다.

둘째, 資本과 技術의 도입을 원한다.

物品의 輸入보다는 外貨資金과 고도의 生産技術을 원하고 있다. 즉 몇몇 사회주의 국가들처럼 市場經濟原理를 일부라도 수용하여 경제구조를 개편하려는 것이 아니라, 門을 약간씩만 열어 눈앞의 두 實利-資本과 기술-만 획득하려는 것이다.

셋째, 秘密이 유지되기를 원한다.

經濟開放은 하되, 韓國과는 안하겠다라는 戰略이 있는 듯하다. 물론 이것은 대외적인 체면때문인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교류를 하더라도 철저한 秘密主義에 의하길 원하고 있다.

네째, 觀光事業을 특히 강조하고 있다.

북한의 현경제여건상 확실한 外貨收入方法이기 때문이다.

3. 經濟開放의 與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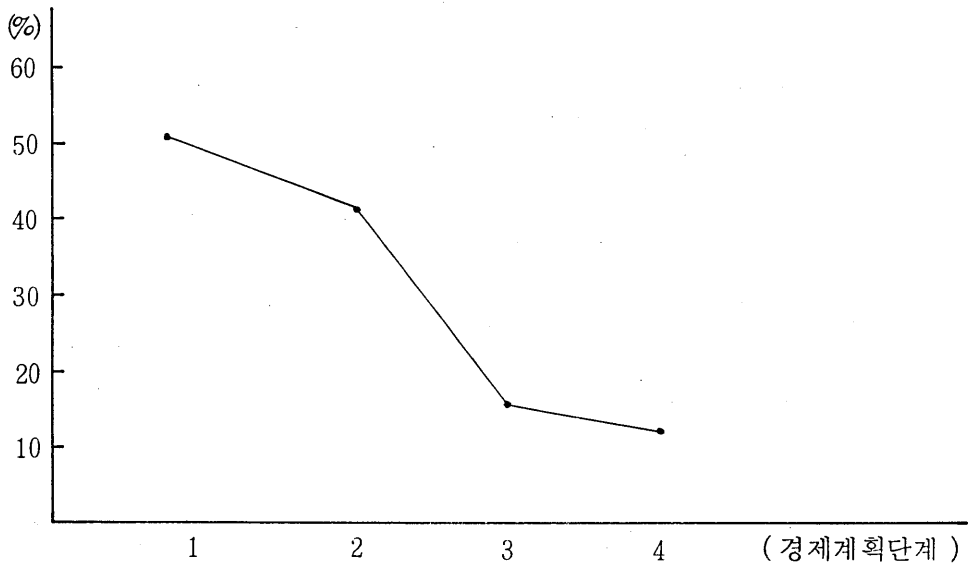
앞으로 北韓經濟의 開放可能性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그 促進要因과 阻

害要因을 구분시켜 고찰해야 할 것이다.

가. 促進要因

北韓이 經濟를 개방하는데 가장 강한 촉매제 역할을 할 것은 현재의 經濟사정이 좋지 않다는 점이다. 앞의 그림이나 표에서 본 것처럼 제3단계 이후 韓國에 대해서 열등감을 느낄 정도로 사정이 惡化되었다. <그림-8>의 公業성장율의 各 計劃段階別 平均을 보더라도 계속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 8> 各 계획단계별 公業성장률



자료 : 국토통일원, 「북한 경제개관」(1988)에서 직접계산
단, 제4단계의 경우 3차 7개년 계획(1993까지)의 목표치를 10%로 한 것임.

둘째는 극심한 食糧不足을 들 수 있다. 이것은 民心의 동요를 가져오고 金正日로의 세습마저 위협하게 될 것이므로 食糧의 증산을 위한 새로운 방법모색이 필요하다. 人間生活의 가장 기본이 되는 食糧문제가 經濟政策의 변화를 가져올 실마리로 작용할 수 있다.

나. 沮害要因

첫째는 政治的 危險이다. 對外開放으로 자칫 체제가 전복될 수도 있다는 불안은 차라리 「現狀維持」쪽을 택하도록 만들고 있다.

둘째는 위와 관련해서, 반발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內部를 保守勢力들이 계속 장악하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 金日成體制가 존속하는 한 획기적인 開放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마지막으로, 住民들의 外部斷絶을 들 수 있다. 수송수단과 통신시설의 부족은 주민들을 外部世界와 단절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으며, 現 政治勢力들은 그것을 계속 바라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촉진요인은 經濟的인 측면들이고, 沮害要因은 政治的인 측면들이라는 것이다. 문제는 經濟發展과 政治安定이라는 딜레마이다. 결론적으로 어느 토끼를 잡으려 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IV. 南北經濟交流 및 協力の 實績

다음 章에서 방안제시가 있을 것이다. 그에 앞서서 본 章에서는 그동안의 남북경제교류가 어떻게 진행되었으며, 1984~85년에 걸쳐 진행되었던 南北經濟會談에서는 어떤 對話가 오고 갔는지를 더듬어 보기로 한다. 과거의 施行錯誤가 미래의 方向提示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1. 南北經濟交流³⁹⁾

가. 分斷이후 休戰까지

南北分斷直後 얼마 동안은 비록 分斷은 되었으나 그것이 영구적인 장벽

註 39) 장화수, 「분단국의 경제교류」(서울: 혜화출판사, 1988), pp.27~92를 요약한 것임.

은 아니라는 생각에서 南과 北이 모두 一體感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으므로 38선 부근의 일정 지역에서 物物交換 形態로 密貿易이 행해졌다.

47년 5월 교역이 공식인정된 뒤 48년에는 沿岸 교역량을 빼고도 1백만 달러를 넘을 정도로 활기를 띠었다. 그러나 소위 「북어사건」으로 다음해 3월 南北交易은 중지되었고 6.25戰爭이후 休戰이 되면서 155마일 休戰線은 지구상 가장 두꺼운 障壁이 되어 버렸다.

나. 休戰이후 7·7 宣言이전까지

79년 2차 오일쇼크로 인해 필요한 石炭(無煙炭)을 제3국의 中間商을 통해 5년간 輸入했다.⁴⁰⁾ 그러나 84년 이후 石油價格이 暴騰되자 자연히 輸入은 減소되었다.

間接交易으로 韓國商品이 北韓에 수출된 것은 83년 흑백TV가 OEM 방식으로 나갔으며, 그외 의류나 의약품이 日本등을 통해서 소량 수출되고 있을 정도였다.

또, 84년 9월 交역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수재민돕기物資가 關門점을 통해서 넘어왔다. 이것을 계기로 같은 해 11월 15일 제1차 南北經濟會談이 열렸다. 회담내용은 뒤에서 다시 言及하겠다.

다. 7·7 宣言이후 현재까지

北韓産 物品을 民族内部 去來로 간주하는 등 획기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던 10·7 南北經濟交流 推進方案과 그에 앞선 7·7 宣言 이후 89년 1월 23일 最初의 物品輸入이 이루어 졌다.

그러나, 北韓은 우리가 輸入한다는 사실을 모르고 제3국에 輸出하거나, 알아도 모르는 체 하다가 報도가 되면 사실을 否定하는 실정이다. 韓國 또한 다소 급히 준비된 交流推進方案과 冷却된 内部 政治狀況때문에 7·7 宣言이후에도 淸목할 만한 교류증진은 없는 상태이다.

註40) 약 8천만 달러 상당

2. 南北經濟會談⁴¹⁾

가. 會談의 進行

韓國側의 제의로 제 1차 회담이 1984년 11월 15일 板門店에서 열렸다. 우리측은 經濟團體代表 4명, 政府代表 3명 모두 7명이 참석했다. 일부 交易品目을 사실상 합의했지만, 제 2차 회담에서 北韓側은 「南北經濟協調 共同委員會」의 구성을 제의, 우리측이 수락했지만 3차회담이후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 제 6차 회담 개최를 이틀 앞둔 1986년 1월 20일 팀·스피리트 군사훈련을 구실로 회담을 일방적으로 연기시킴으로써 결국 남북경제회담은 1년만에 중단되고 말았다.

나. 合意內容⁴²⁾

첫째, 交流對象 品目은 韓國이 철강재, 섬유, 소금, 감귤, 남해수산물 등을 판매하며 北韓이 무연탄, 철광석, 마그네샤크링카, 명태, 옥수수 등을 판매한다는 것이다. 참고로 <表-8>은 北韓의 부존비율이 80%인 資源을 나타낸 것이다.

둘째, 去來方式은 청산결제방식으로 하고 결제업무 취급은행은 남북한의 은행으로 한다.

셋째, 共同漁撈區域設定과 地下資源共同開發事業에 서로 經濟協力한다.

其他, 京義線연결과 南浦·元山·仁川·浦項港의 개방등의 수송문제도 합의를 보았다.

註 41) 국토통일원, 「남북대화백서」(1988.12), pp.264 ~ 293을 要約한 것임.

42) 마지막 회담이 결렬되었으므로 합의된 내용은 전혀 없다. 여기서의 합의내용이란 제1~5차 회담의 진행과정에서 서로 의견의 접근을 본 내용들이다.

<表-8> 남북한 자원부존비율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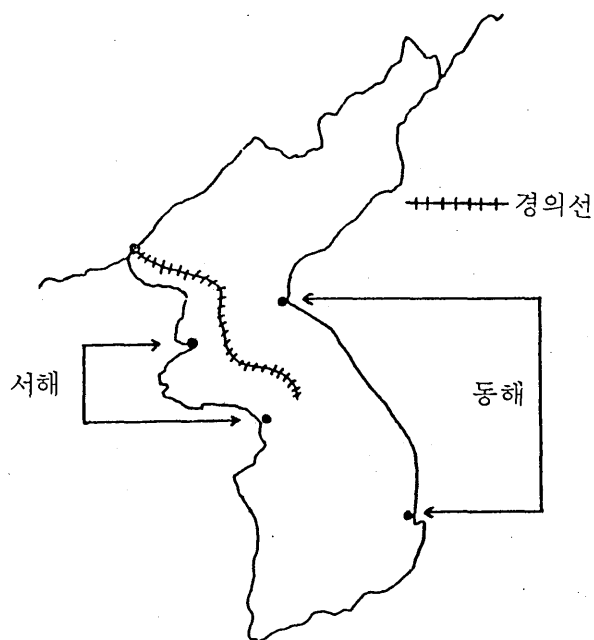
(단위 : 1,000 ton)

자원명	매장량	한 국	북 한	북한의 부존 비율 (%)
석 유		0	서해안에서 최근 발견*	100
무 연 탄		1,600,000	11,900,000	88
철 광 석		128,000	3,300,000	96
마그네슘	크링카	0	490,000	100
아 연		630	12,000	95

* 석유 유정을 발견, 이란에 공동개발 제의 상태 (중앙일보, 1989년 1월1일자)

자료 : 대한광업진흥공사, 「남북한 주요광물자원-1988」에서 선별.

<그림-9> 경의선과 4 항구



V. 새 롭고 實質的인 方案

지금까지 北韓經濟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 基本路線과 經濟計劃 推進過程을 살펴 보았고, 開放可能性을 예측하기 위해서 南北經濟交流와 協力を 가로막는 요인과 그렇지 않은 요인들을 하나씩 분석해 보았다. 그리고 구체적인 方案의 제시에 앞서서 필요한 과거의 경험들을 經濟會談內容과 함께 거슬러 올라가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논리적 흐름을 바탕으로 새로운 차원에서의 실질적인 남북경제교류 및 협력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 政經分離

II章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北韓은 대내적으로는 철저한 政經一致 政策을 갖고 있지만, 대외적인 資本主義 國家와의 경제교류에 있어서는 政治面을 일부러 부각시키려 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분리정책은 中國이 韓國과의 經濟協商時 지키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는 일치정책을 주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對北장구를 政府에 한정한다는 것은 현재의 국내외적 상황에 비추어 反對하지 않는다. 다만, 적어도 우리가 자신들과 같은 分離政策을 쓰고 있다는 것을 ‘겉’으로나마 보임으로써, 일단 협상테이블에 앉히자는 의도이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측代表가 3명이었던 經濟會談의 구성원 내용을 바꿔, 企業團體代表들만으로 재구성하는 방안도 차제에 고려해 볼 만하다. 北韓側에서 새로 구성된 代表들이 韓國政府의 意思를 대변하고 있다고 생각할지언정 그 변화자체는 큰 의미가 있는 것이다.

학자와 기업가들로 구성된 民間經濟協力 기구의 활동이 얼마동안 계속돼 相互 불신의 벽이 다소나마 낮아진 뒤에 정부가 幕後에서 前面으로 나와 도 늦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民間레벨이 보다 신축적이고 잡음이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2. 農業協力

앞에서 강조한 바와 같이 북한은 현재 資本, 에너지, 技術 등의 不足問題로 정치적 위협까지 받고 있다. 이럴때 우리가 農業協力を 하면 어떨까? 쌀을 직접 원조하자는 것이 아니다. 대량일 경우 우리의 能力問題 뿐만 아니라, 北韓住民들이 韓國에서 온 쌀임을 알기를 북한집권자들이 바라지 않기 때문이다.

<表-5>에서처럼 1정보당 生産量이 적은 것이 所有概念이 없는 기본체제의 탓도 있겠지만, 氣象情報등이 부정확한 이유도 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90%이상의 정확도를 갖고 있다는 韓國의 각종 농사 관련 기상정보를 보내주고, 영농技術 및 영농기계등을 전수해주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⁴³⁾

이 방안은 서론에서 지적한 감상적 통일론은 아니다. 의도하는 바는 어려울 때 北側의 자존심을 건드리지 않는 방법으로 도와주자는 것이다. 그것이 곧 民族共同體 아니겠는가.

3. 迂回交流

지난 經濟會談에서 남북의 네 港口를 개방, 서로 交易시 이용하자고 합의했으나 (<그림-9>참조), 이 방법은 軍事的인 대치상황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인 듯 싶다.

物資輸送의 다른 방법으로서 迂回交流를 제안한다. 일본이나 홍콩등 제3

註43) 1987년 현재 한국의 경지면적은 214.3만 정보, 북한은 214.0만 정보로써 비슷하다. 단, 한국은 도시화로 계속 감소추세에 있으나 북한은 경지면적 확장사업을 펴 (식량부족 때문) 증가추세에 있다.

국을 이용한다는 것이 아니라 北韓의 中國이나 蘇聯과의 국경지방을 이용하자는 것이다.

營法制定등에서 보는 바와 같이 北韓은 中國의 모델을 따를 것으로 보인다. 그런 관점에서 北韓도 中國처럼 經濟特區를 설치해서 西方과 交易을 하고자 할 것이다. 그런데 남쪽은 地理적으로 좋지 않으므로 결국 중·소 국경 - 특히, 덜 추운 中國과의 國境-지역이 될 것이다.

앞으로 中·蘇와의 交流가 증가할 것이다. 이것은 北韓과의 국경지역에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높여 줄 것이다.

心理的, 世界的 압박이 가해오는 DMZ에서의 經濟會談보다, 다른 제 3의 국가 또는 장소에서의 회담이 더욱 能率的일 것이라는 점도 아울러 언급한다.⁴⁴⁾

4. 其 他

북한은 현재 技術뿐만 아니라 資本의 窮乏에 처해 있다. 어쩌면 韓國과의 經濟會談에서 無煙炭을 수출하고 철강재를 수입하겠다는지 하는 논의는 北側에게 큰 필요성을 안 느낄 것이다. 지금 당장 몇 십억달러의 經濟援助를 해주길 바라고 있는지도 모른다. 충분히 그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1985년 5월 17일에 있었던 제 2차 경제회담에서 北韓은 副總理級(經濟企劃院長官)을 위원장으로 하는 경제협력기구를 만들자고 제안했다.⁴⁵⁾ 보다 高位의 政府側 인사와 만나고 싶다는 것이 결국은 실질적인 원조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 이 점 또한 깊이 고려해 봐야 할 것이다.

또한, 外國에 子會社를 설립, 교포자금형식으로 北韓의 觀光事業에 참여

註 44) “무대는 밖에서, 그러나 통일의 주체는 안에서” 라고 표현하겠다.

45) 국토통일원, 「남북대화 백서」(1988), p.270.

한다거나, 수산물을 통조림으로 만들고 옥수수를 가공하는등 高附加價値의 일을 더 보이는 것도 한 대안이 될 수 있다.

VI . 結 論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어야만 밥 한그릇을 충분히 흡수할 수 있을 것입니다.”⁴⁶⁾ 統一方案은 우선 국민적 합의가 뒷받침되어야 하는 바, 段階的 統一接近은 대부분의 지지를 받고 있다.

本稿에서는 그 첫 段階로서 經濟交流方案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기본 인식에서 부터 출발했다. 먼저 北韓의 經濟實體에 접근하려고 노력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실질적인 교류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당장은 받아 들여지기 힘들겠지만, 政治와 經濟를 分離해서 協商할 것과 우선 어려운 食糧問題에 協力を 쌓아 갈 것을 아울러 제시하였다.

또한, 迂回交流를 통해서 相互 不信을 줄이고, 실질적으로는 經濟援助를 바라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겠다.

우리 韓國은 경제교류를 統一을 위한 手段이자 民族共同體 형성을 위한 첫 걸음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北韓은 經濟위기에서의 탈피와 成長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서 같은 會談테이블에 앉아 있다고 하더라도 同床異夢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의 슬기가 요청된다.

北韓側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든가 지나치게 경직된 자세등은 슬기롭지 못한 것이다.

슬기로운은 나라안에도 있어야 한다. 정부는 다양한 統一論議를 수렴해 장기적인 통일방안을 제시해야할 것이며, 국민은 더 이상 體制부정등의 급격하고도 非現實的인 統一觀을 버려야 할 것이다.

註 46) 노태우 대통령, '89 연두기자회견 내용中

체념이 아닌 인내로서 서서히 이루어나야 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經濟的인 側面에서 우선 接近을 시도하고 그 단계가 성숙되면 그 뒤의 단계로 차츰 나아가야 한다. 窮極的으로 統一이 南北韓의 이질화 현상을 克服하고 민족적 동질성을 회복하여 민족공동체 형성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참 고 문 헌

(단 행 본)

- 강광식, 「북한의 실태」, 서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7.
- 김광조·박진근, 「동구경제론」, 서울: 법문사, 1988.
- 김갑철·고성준, 「주체사상과 북한사회주의」 서울: 문우사, 1988.
- 김일평, 「북한정치경제입문」, 서울: 한울사, 1987.
- 김한규, 「동구권 경제론」, 서울: 경음사, 1986.
- 경제기획원, 「주요경제지표」, 서울: 경제기획원, 1988.
- 국토통일원, 「북한경제개관」, 서울: 1988
- _____, 「북한경제의 거시계량적 분석 연구」, 서울: 1986.
- _____, 「북한경제체제의 개방화 요인 분석과 전망」 서울: 1985.
- _____, 「김일성체제 등장과 경제정책 전개양상」 서울: 1983.
- _____, 「북한의 농업생산에 관한 연구」 서울, 1989.
- _____, 「북한의 공업시설 분포의 산업입지론적 분석」 서울: 1977.
- _____, 「북한경제와 무역전망」, 서울: 1988.
- _____, 「북한 수출상품의 대외경쟁력 분석과 전망」, 서울: 1988.
- _____, 「북한의 경제실태」, 서울: 1986.
- _____, 「1987년도 북한 경제종합평가」, 서울: 1988.
- _____, 「북한 대외경제협력관계 연구」, 서울, 1977.
- _____, 「기로에 선 북한경제」, 서울: 1988.
- 국민방첩연구소 편, 「북한용어 대백과」, 최광석 감수 서울: 갑자문화사, 1986.
- 대한광업진흥공사, 「남북한 주요광물 비교」, 서울: 1988.

- 동국대안보연구소, 「오늘의 남북한」, 서울: 고려원, 1987.
- 박병호, 「국제경제개론」, 서울: 경문사, 1989.
- 서대숙,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주석 역, 서울: 청계연구소, 1989.
-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편, 「경제사전-1」, 동경: 학우서방, 1973.
- 유석렬, 「북한정책론」, 서울: 법문사, 1987.
- 윤보현, 「김일성 주체사상연구」, 서울: 형설출판사, 1986.
- 장화수, 「분단국의 경제교류」, 서울: 혜화출판사, 1988.
- 허동찬, 「김일성 주체사상의 올바른 이해」, 서울: 원일정보, 1989.
- 헌법(북한의 신헌법)
-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편, 「북한의 실상」, 서울: 고려원, 1986.
- Alec Nove, 「소련경제사」, 배왕규 역, 서울: 명지출판사, 1989.
- 한용원, 「북한연구」, 서울: 박영사, 1989.
- 북한연구소편, 「북한총람」, 서울: 박영사, 1986.
- 일본무역진흥회, 「北朝鮮の經濟と貿易の展望」, 동경: 1988.

〈 논 문 〉

- 권오승, “북한의 경제법”, 「북한의 법과 이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8.6.
- 남북대화사무국, 「민족화합 민주통일론(V)」, 국토통일원
- 구영록, “남북한 거래의 분석틀”, 「남북한 정치통합과 국제관계」,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 부광식, “공산권 세계와 북한경제”, 「개방시대의 남북문제」, 평화문제연구소편, 1988.
- 박성조, “동·서독간의 교류·협력형태와 남북한 교류에 주는 시사점”, 국토통일원, 1989.
- 박춘삼, “북한의 해외경제협력”, 「북한의 대외관계」, 서울: 대왕사,

1987)

서남원, “경제계획의 전개과정”, 「북한경제론」, 북한연구소, 1977

연하청, “경제분야”, 「남북비교총서」, 국토통일원, 1989

이태욱, “자력갱생원칙의 이점과 한계”, 「북한 40년」, 서울, 1988

——, “북한의 경제개방과 그 전망”, 국토통일원, 1989

이 호, “북한의 경제개방 전망과 남북경제교류의 평가”, 「남북한

경제교류 촉진을 위한 증장기 발전계획」, 한국무역협회, 1989

정상훈, “북한의 경제발전과 그 가능성”, 「북한의 대외정책」, 박

재규 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86.

임용순, “남북한 경제교류의 증진방안”, 「오늘의 남북한」,

동국대안보연구소, 1987

東西獨關係의 教訓을 통해서 본

積極的 韓半島 統一政策의 摸索

—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政治的 決斷 —

崔 昌 壽

(韓國外國語大 大學院 行政學科)

目 次

- I. 序論
- II. 韓半島의 統一方案과 葛藤의 爭點
- III. 東西獨關係의 發展과 教訓
- IV. 南北韓 平和共存 關係의 理解 可能性
- V.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政治的 決斷의 必要性
- VI. 結論

I. 序 論

1. 問題의 提起

우리의 민족사회가 분단된지도 어느덧 40여년이 흘렀다 그동안 휴전선을 경계로 하여 서로 다른 이념에 의해 성장해온 두 체제는 統一을 최고의 體制目標로서 설정하였고 이를 위해 상대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全面的 競爭¹⁾을 계속하면서 다양한 통일논의를 계속해 왔다. 그러나 그동안의 수 많은 논의에도 불구하고 南北韓은 아직도 敵對的 對峙關係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분단에서부터 통일에 이르는 과정은,

1 단계 : 적대적 대치관계

2 단계 : 평화적 공존관계

3 단계 : 통일의 성취

의 세 단계로 크게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러나 통일을 지향한 남북한 관계의 발전이란 측면에서 볼 때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통일논의는 그 정도에 비하여 성취는 거의 없었으며 아직 1단계인 적대적 대치관계에서조차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비해 같은 분단국인 동서독의 경우 1970대 초에 벌써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평화적 공존관계를 이룩한 이후 현재까지 여러 분야에서 많은 교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남북한의 경우와 동서독간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하면 적대적 대치관계를 넘어서서 통일로 향한 평화적 공존관계

*) 본 논문을 쓸 수 있는 동기와 격려를 해주신 安秉萬 교수님과 귀중한 자료와 코멘트를 해주신 金仁喆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註 1) 李洪九, "序 章", 李洪九 외 4인 공저, 「分斷과 統一 그리고 民族主義」 (서울: 박영사, 1984), p.17.

를 이룩할 수 있는가?

본고는 흔히 機能主義의 立場과 政治·軍事的 立場으로 대변되는 남북한의 통일에 대한 접근방법에서 나타나는 갈등의 爭點을 인식하고 그 문제점을 극복하여 평화적 공존관계로 이행하기 위한 方案을 摸索함으로써 이를 우리 남한이 政策的 代案으로 고려할 것을 제안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2. 研究의 方法과 範圍

먼저 본고는, 상호이질화된 남북한 두 체제가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서로의 교류를 통해 상대방에 대한 신뢰감을 구축함으로써 적대적 대치관계를 청산하고 평화적 공존관계로 나아가야 한다는 남한의 기능주의적 입장이 현실적인 통일의 과정이라는 점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따라서 이 글은 남북한이 敵對的 對峙關係를 청산하고 平和的 共存段階로 이행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는데 주목적이 있으므로 研究의 範圍도 위에서 제시한 통일의 과정을 놓고 볼 때 제1단계인 적대적 대치관계에서 제2단계인 평화공존의 단계로 진입하는 시기까지로 한정한다.

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우선 남북한관계의 진전에 있어서 갈등의 소지로 부각되어 있는 爭點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겠다. 그런 후 논의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분단국인 동서독간의 현재와 같은 평화공존관계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되어 동서독의 접근과정을 남북한관계에 비교하여 봄으로써 남북한간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자 한다.

II. 韓半島의 統一方案과 葛藤의 爭點

1. 機能主義的 接近 對 政治·軍事的 接近

南韓의 통일방안은 1981년 1월 22일 제의된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으로 집대성 되어있는데 이른바 機能主義的 統合理論에 기초하고 있다. 기능주의 통합이론은 기존의 주권체제를 그대로 인정하고 통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우선 비정치적인 차원의 교류와 협조를 통해 상호신뢰감과 상호의존도를 높이고 이를 점차로 정치적인 분야의 교류까지 확대하여 통합을 모색하는 것을 말한다.²⁾ (※ 편집자주: 본논문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발표직전에 응모된 것임을 참조)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의 내용은 i) 우선 남북한의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들로 민족통일협의회의를 구성하여 統一憲法의 초안을 마련하고, ii) 이를 국민투표로서 확정된 후, iii) 이 통일헌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통일국회와 통일정부를 수립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통일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민족화합방안으로 ‘南北韓 基本關係에 關한 暫定協定’의 체결과 ‘남북 고위급 대표간의’ 예비회담의 개최, 그리고 남북한의 20개 시범실천사업을 실시할 것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³⁾

註2) Michael Hass, "Functionalist Model for Korean Unification," 「國際政治論叢」 제27집 1호, 1987, pp. 141-143.

3) 20개의 시범실천사업은 1) 서울-평양간 도로의 연결, 2) 남북이산가족을 위한 우편교류 및 상봉의 실현, 3) 설악산이북과 금강산이남지역의 자유관광지역 건설 개방, 4)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 공동주관 및 판문점 통행 허가, 5) 인천항과 남포항의 개방, 6) 쌍방 정규방송의 자유취청, 7) 북한의 '86아시안게임, '88서울올림픽에의 판문점을 통한 참가, 8) 외국인들에게 판문점을 통한 쌍방지역의 자유왕래 허용, 9) 자유 공동어로구역의 설정, 10) 각계 인사의 상호 친선방문, 11) 쌍방 기자들의 자유취재 허용, 12) 민족사의 공동연구, 13) 친선체육교류와 국제경기예의 단일팀 구성 참가, 14) 자연자원의 공동개발 및 공동이용, 15) 일용생산품의 교역, 16) 기술자교류 및 생산품 전시회의 교환 개최, 17) 비무장지대안에 공동경기장 건설, 18) 비무장지대안의 생태계 공동조사, 19) 비무장지대 군사시설의 완전제거, 20) 군비통제를 위한 군사책임자간의 직통전화 설치 등이다. 國土統一院, 「南北韓 比較叢書」(서울: 1988), pp. 28-33.

이에 비하여 北韓의 통일방안은 「高麗聯邦制案」으로 잘 나타나 있다. 이 고려연방제안은 남한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이 기능주의적인 방법에 기초하고 있는데 반해 정치적 통합, 즉 정책통합이나 태도통합은 모두 기관통합이 앞서지 않으면 안된다는 政治·軍事的 接近方法 (聯邦主義的 接近方法)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⁴⁾

고려연방제의 기본골자는 i) 남북한이 1980년 10월 11일 현재 서로 상대방에 존재하고 있는 사상과 제도를 인정하고 용납하는 기초위에서 남과 북이 동등하게 참가하는 민주통일정부의 수립, ii) 남북한이 같은 권한과 의무를 지니고 각각 지역자치제를 실시하는 연방공화국을 건립 할 것, iii) 남북한이 같은 수의 대표들과 적당한 수의 해외동포들로 최고 민족연방회의를 구성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연방상설위원회를 조직하며 이것으로 하여금 연방국가의 전반적인 사업을 관장하도록 함. iv) 연방국의 국호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으로 할 것 등이다. 그리고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수립된 후에 시행되어야 할 정책으로 10대 시정방침을 제안하였다.⁵⁾

그러나 북한은 연방제를 실시하기 위해서는 i) 국가보안법의 철폐를 포함한 남한에서의 민주화, ii) 주한미군의 철수와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를 포함하는 긴장완화와 전쟁위험의 제거, iii) 미국의 한반도 내 정간섭의 배제 등 3가지의 前提條件이 해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⁶⁾

註 4) 姜聲允, “北韓의 統一論과 革命論,” 「安保研究」 제 18호 (서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9), pp. 135-143.

5) 10대 시정방침은 1) 국가활동의 모든 영역에서 자주정책 실시, 2) 민주주의 실시와 민족의 대단결 도모, 3) 경제적 합작과 교류를 통한 민족경제의 자주적 발전, 4) 민족문화, 민족전통, 민족교육의 발전, 5) 남북한간의 교통과 통신의 연결, 6) 전체노동자의 생활안전도모와 복지증진, 7) 군사적 대치상태해소와 민족연합군의 조직, 8) 해외동포의 민족적 권리와 이익의 보호, 9) 두 지역정부 대외활동의 조정, 10) 우호적, 평화애호적 대외정책 실시 등이다. 國土統一院, 앞의 책, pp. 33-36.

6) 민병천, “分斷國 共產政權의 聯合統一論 比較,” 「安保研究」 제 18호 (서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9).

2. 南北韓 統一方案의 爭點

결국 남한과 북한의 통일방안은 통일에 접근하는 기본적인 시각에서부터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양자의 차이점은 통일분위기의 조성과 관련되어 극명하게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정치적 문제에 앞서 비정치적인 분야의 교류와 협력을 통해 서로의 신뢰감을 구축함으로써 점진적으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북한은 일정한 정치적 문제에 있어서의 합의가 이루어진 후 상호교류를 시작할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남북한간의 통일논의에 있어서 쟁점들은 크게 軍事的, 政治的, 그리고 經濟的 問題로 나누어 볼 수 있으나 이 쟁점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분리할 수 없는 문제이며 다만 분석의 편의상 나누어 본 것이다. 먼저 군사적인 것으로는 주한미군철수문제, Team Spirit 한미합동군사훈련, 군축문제, 한반도의 비핵지대화 등이고, 정치적인 측면에서는 남북한 교차승인 및 UN 동시가입문제, 평화협정과 불가침공동선언 또는 협정의 문제가 쟁점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은 남북한간의 경제교류 및 협력에 관한 것이 문제로 되어 있다.⁷⁾

결국 남북한간의 이러한 쟁점은 평화공존으로 향한 남북한관계의 진전을 가로막는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 양당사자의 입장의 차이에서 오는 이러한 쟁점 내지 장애요소는 극복할 수 없는 것인가? 극복해야만 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을 수 있는가? 우리는 이에 대한 해답의 실마리를 東西獨關係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동서독은 우리와는 차이점과 유사점을 동시에 갖는 분단국⁸⁾으로서 현재는 서로간의 평화적 교류를 증대시켜 나가고 있는 바 그들이 어떻게 갈등을 극

註7) 俞光霧, “南北韓 統一方案의 爭點,” 「安保研究」 제18호 (서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9), pp. 145-164.

8) 이에 대해서는 鄭用吉, 「分斷國統一論」 (서울: 고려원, 1988), pp. 187-194 참조.

복하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Ⅲ. 東西獨關係의 發展과 敎訓

1. 敵對的 對峙關係時期의 爭點

독일은 분단되어 社會主義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의 둘로 성립되었고 여러가지 문제로 서로 대립을 하게 되었는데, 그 중요한 쟁점은 누가 독일의 單獨代表權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문제와 양독의 갖가지 統獨政策 및 交流問題에서 제기되는 것들이었다.⁹⁾

단독대표권의 문제는 서독이 독일에 대한 대표권이 있는 유일한 합법 정부임을 주장하였고, 동독은 국제무대에서 국가로서의 승인을 받기 위해 분단 이래 단독대표권을 주장해 온 것을 말한다. 동독은 서독 및 서방과의 관계에서 이의 관철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서베를린의 법적 지위문제도 동독은 서베를린이 서독의 영토가 아니고 서베를린 정부도 서독정부에 예속된 정부가 아니며 서베를린시와 동독간에 논의하고 있는 모든 문제에도 서독이 대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¹⁰⁾

이 두가지 외에도 동독정권의 서독에 대한 요구는 특별한 내독관계 독트린의 포기, 완전한 독일국적에 관한 과제, 평화적 통일에 관한 요구의 단념, 독일제국 멸망이론의 전가, 현행국경선(동독 동부와 폴란드 간의 오테르-나이세선)의 인정, 그리고 자결권의 보장 등이었다.¹¹⁾

반면에 서독은 K. Adenauer의 냉전외교, 즉 국제무대에서 서독의 독

註9) 鄭用吉, “東獨의 統一 및 西獨政策,” 「安保研究」 제18호 (서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9). p. 70.

10) 張錫殷, “東西獨의 統一問題,” 「民主統一論」 (서울: 국토통일원 통일연구수원, 1988), pp. 222-224.

11) 鄭用吉, “東獨의 統一 및 西獨政策,” p. 6.

일 단독대표권을 주장하면서 동독을 인정하는 제3국(소련 제외)과의 외교적 관계의 단절을 내용으로 하는 Hallstein Doktrin에 기초한 외교정책과, 국제감시하의 전독자유총선거 및 그 전제조건으로서의 소련 점령지역에서의 민권회복을 주장하여 동독과 서로 대립상태에 있었으며, 이로 인해 兩獨關係는 별 진전이 없었다. 이러한 K. Adenauer의 정책은 선언적 성격의 것이었으며 실제로 동독이 수락할 수 있는 정책이 되지는 못하였다.¹²⁾ 이러한 서독의 정책에 대하여 동독의 W. Ulbricht는 국가연합안을 제시하기도 하였으나 서독정부에 의해 거부당하였다.¹³⁾

1963년 동독이 베를린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동서독관계가 악화되었고 이 사건은 서독의 통일계획과 외교정책을 수정하도록 만들었다. 그러나 K. Adenauer시대의 외상으로서 기존의 외교정책을 수정하고 소위 “活動의 政治”를 전개하였던 G. Schroder의 외교정책도 그 핵심이 동독을 우회하여 가능한 많은 동구제국과 접촉을 시도한다는 데 있었기 때문에 커다란 진전은 없었다. 1963년 K. Adenauer의 뒤를 이었던 L. Erhard 역시 통일문제에 관하여 동독정권과 직접협상하는 것을 거부하였다.¹⁴⁾

동서독관계는 基民黨과 社會黨이 聯政을 시작하면서 발전의 가능성을 보이기 시작한다. 당시의 수상이었던 Kiesinger는 동독과의 직접적인 접촉으로 긴장을 완화하려는 정책을 펴나갔고 동독은 Kiesinger 수상이 제의한 모든 제안은 서독이 단독대표권을 포기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만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 주장하였다.

한편 당시 외무상으로 있던 W. Brandt는 1967년 서독의 평화정책과 긴장완화정책을 발표하고 Hallstein Doktrin의 폐기가능성과 동독인정 가능성을 발표하여 기존의 서독정책에 일대혁신을 가져왔다.

註 12) 張錫殷, 앞의 글, p. 225.

13) 위의 글.

14) 鄭用吉, “西獨의 東方政策,” p. 291.

2. 東方政策과 W. Brandt의 政治的 決斷

이처럼 서로 대립되는 주장때문에 진전이 없었던 동서독관계는 W. Brandt가 집권하면서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기 시작하였다. 1969년 선거에서 승리한 Brandt의 사민당은 자민당과 연립정부를 세우고 이른바 東方政策(Ostpolitik)을 발표하였다. 동방정책은 서독의 대동독정책은 물론 대동구제국에 대한 정책과 소련에 대한 정책을 말하며 Hallstein Doktrin의 폐기가능성과 동독인정가능성, 분단현실의 인정, 동구 국가들과의 친선관계 수립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는 기존의 서독의 입장을 고려해 볼 때 커다란 정책적 변화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¹⁵⁾

1. 독일내 2 국가의 존재를 인정한다. 이는 동독에 대한 국제법상의 승인은 아니며 국내법상의 승인이다.
2. 양독은 상호 외국이 아니라 특수관계이나 동독과 일반적인 국가간 관계에 입각하여 불가침조약을 맺을 용의가 있다.
3. 독일에 대한 4대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계속하여 존중한다.
4. 핵확산금지조약에 서명할 예정이다.
5. 양독간의 경제·문화부문에 상호협력 할 것을 제의한다.
6. Hallstein Doktrin을 공식적으로 폐기한다.
7. 폴란드와 오데르나이세선 국경협상에 응할 용의가 있다.

1969년 동독의 W. Ulbricht는 동서독간의 평화공존을 주장하면서 동서독간의 평등한 외교관계를 수립할 것과 수상급회담을 제의하였고 서독은 이를 받아들여 1970년 최초의 수상회담이 이루어졌다. 이 제1차 회담에서 서독의 Brandt는 i) 독일민족의 통일을 보전할 의무, ii) 국

註15) 張錫殷, 앞의 글, pp. 228-229.

제법상 일반원칙에 의한 문제처리, iii) 당사국 영토내의 사회구조를 폭력으로 변경시키지 않을 의무, iv) 4대 강국의 권리와 의무존중, v) 양독간의 선린관계 유지의무, vi) 베를린협정 체결을 위한 4대 강국의 노력에 대한 지지의무 등 6개항을 제의하였고, 동독의 Ulbricht는 i) 국제법에 입각한 동등관계의 수립, ii) 국제법상의 주체성과 영토보존과 기존국경의 불가침의무, iii) 타국과의 외교관계에 불간섭의무, iv) 양독의 UN 동시가입, v) 핵무기포기, 군비 50% 감축, vi) 전후처리문제의 논의 등 6개항을 제시하였다.¹⁶⁾

그러나 양측의 주장에서 볼 수 있듯이 상반되는 첨예한 정치적 주장 때문에 1차 회담은 합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채 성과없이 끝났고 2개월 후 이루어진 제2차 회담에서 동독의 W.Ulbricht는 제1차 회담에서와 같은 6개항을 반복한 반면, 서독의 W.Brandt는 동독의 주장을 수용하여 군축노력의 지지와 조약합의 후 국제기구에 동시가입을 포함하는 20개항을 제의하였으나 양측의 의견차이만을 확인한 채 성과없이 끝나고 말았다. 그러나 서독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하여 상호간의 의견조정을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한편, 독일민족의 자결권에 의한 통일의지 존중 등의 내용을 포함한 ‘獨·蘇不可侵條約’과 ‘獨·波友好條約’을 체결하는 등 국제적 분위기 조성에 노력하였다. 이에 더하여 4대 강국은 ‘베를린協定’을 체결하여 동서독간의 대화를 막아왔던 주요한 장애들이 제거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서독의 외교적 노력과 대동독접촉에의 노력은 제1차 수상회담이 개최된 이후 2년간 70여회 이상의 실무접촉을 통해 드디어 동독과 10개항의 ‘東西獨基本條約’을 체결하는데 성공하였다.¹⁷⁾ 그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註16) 앞의 글, pp. 229-230.

17) 國土統一院 南北對話事務局, 「東·西獨關係發展」 관한 報告 및 文書 (1981), pp. 196-198.

1. 호혜평등의 기초위에 상호간 정치적 선린관계의 발전
2. 주권평등, 독립, 영토보전, 자결권, 인권보호, 무차별원칙
3. 모든 분쟁의 평화적 해결
4. 일방이 타방에 대한 국제적 대표권 행사 불가능
5. 구주평화 및 군축, 핵무기 제한에 대한 노력
6. 주권의 국내적 한정원칙
7. 이 조약을 토대로 제반 협조관계의 발전을 위한 협정
8. 양국은 상주대표부의 교환설치
9. 이 조약은 기존조약, 협정에 불영향
10. 이 조약은 각기 비준 필요

이 조약의 체결 이후 양국은 1973년 UN에 가입하였고 난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37개의 협정을 체결하였다. 그리하여 동서독은 대결의 관계에서 교류·협력의 관계로 발전하였고 주민왕래, 경제, 체육, 서신, 문화 등 각종 교류를 해오고 있다. 특히 아래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서독은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동독을 동등한 입장의 경제적 파트너로서 대우하고 꾸준히 교역량을 늘려가고 있다.¹⁸⁾ 동서독간 경제교류의 규모를 보면 다음 표와 같다.

註 18) 金世源, “南北韓 經濟交流의 推進方向: 經濟統合의 推進을 위한 新機能主義的 接近,” 「統一論叢」 제2권 2호, (서울: 국토통일원, 1982), p. 8-30; 정용길, 앞의 책, pp. 22-84.

동서독간 무역규모

(단위: 백만 DM)

	서독수입 (동독수출)	서독수출 (동독수입)
1965	1,260	1,206
1970	1,996	2,415
1975	3,342	3,921
1980	5,850	5,870
1981	6,350	6,130
1982	6,990	7,080
1983	7,560	7,680
1984	8,240	7,250
1985	8,160	8,590

자료: 金世源, “南北韓 經濟交流의 推進方向,” p. 29 와

張錫殷, “東西獨 統一問題,” p. 240 에서 引用.

결국 위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동서독기본조약은 동서독의 政治的 決斷의 산물이었다. 동서독기본조약은 민족통일문제는 합의하지 않기로 한다는 정치적 합의를 함으로써 정치적 결단을 통한 양독교류의 비정치화를 이룩한 것이다. 즉 동서독기본조약은 서독의 입장에서 보면 동독을 사실상 국가로 인정하여 독일통일이라는 민족적 염원을 장래 재통일의 가능성을 남기면서도 우선 포기한 것이며, 동독의 입장에서 보면 서독을 공산화시키려는 이른바 인민전선전략을 사실상 포기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¹⁹⁾ 동독과 서독은 각각 기존의 입장에서 한

註19) 尹炳益, “南北韓 交流·協力を 위한 機能主義的 接近,” 「統一論叢」 제4권 2호(서울:국토통일원, 1984), p. 117.

발작씩 물러서서 서로의 실리를 취함으로써 평화공존관계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다.

실제로 두 개의 적대적인 분단국가로서 출범한 양 독일간의 관계에 있어 문제해결의 관건은 정치적인 문제였으므로 이러한 정치적인 기본문제들에 대한 일정한 상호합의가 그 이후의 非政治的인 兩獨關係의 發展을 방향지웠고 여타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폭넓은 교류를 가능케 한 기초가 된 것이다. 이점에서 볼때 독일의 모델이 정치적인 문제를 배제시킨 채 비정치적인 분야에서의 협력을 증대시켜 나가는 모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정치적 영역에서의 협력의 증대가 일정한 정치적 합의에 기초하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한 견해라고 볼 수 있다.²⁰⁾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서독관계의 발전과정에서 남북한관계와 관련하여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크게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첫째 동서독의 분단이 강대국에 의해서 이루어졌던 만큼 통일 또는 평화적 관계로의 진전에 있어서도 강대국의 합의 내지는 묵인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²¹⁾

둘째로는 양 독일이 서로의 관계를 진전시키기 위한 각각의 必要性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즉 서독은 국제환경의 변화와 함께 내부적으로는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포함한 새로운 외교정책으로의 전환이 요구되었고, 또한 경제적인 이익추구의 계산이 작용하였다.²²⁾ 동독은 분단이후 계속되었던 동독의 국가로서의 승인문제와 서베를린의 법적지위문제, 그리고 서독과의 교역에 관한 문제 등이 해결해야 할 긴요한 대상이었다는

註 20) 김세균, “東·西獨, 統一보다는 平和共存추구,” 「新東亞」 1988년 6월호, p. 495.

21) 金學俊, “分斷史의 再照明,” 李洪九 외 4인 공저, 앞의 책, p. 28.

22) 鄭用吉, “西獨의 東方政策,” 「現代政治의 政治經濟學的 分析」 東牛 金成嬭 博士 華甲紀念論文集(서울: 박영사, 1980), pp. 297-299.

점이다.

그리고 세번째의 교훈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데, 동서독 모두가 그러했지만 특히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를 발전시키기 위해 동독과 쟁점으로 부각되어 있었던 문제들을 상당부분 양보하는 政治的 決斷을 내렸다는 것이다. 즉 동서독간의 적대적 관계를 극복하고 평화적 공존을 위한 양독간의 비정치적 분야에서의 교류를 진전시키기 위해 동독을 국가로서의 인정, 오데르-나이세 국경선의 인정, 그리고 Hallstein Doktrin의 폐기등 과감한 정치적 결정이 오늘날의 동서독관계를 있게 한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서독의 막강한 경제력과 W. Brandt 정권의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강력한 지지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²³⁾

IV. 南北韓 平和共存關係로의 移行 可能性

이러한 교훈을 한반도의 경우에 비교해 볼 때 비교적 낙관적인 전망을 할 수 있다. 우선 國際政勢에 있어서 한반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변 4대강국의 정책은 한반도문제를 남북한 두 당사자의 의지가 상대적으로 중요한 요소가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다. 즉, 蘇聯은 경제적 침체에서 오는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소위 글라스노스트와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추구하면서 우리와의 경제적 협력을 바라고 있어 이전의 북한일변도 정책을 다소간 완화하고 있다.²⁴⁾ 中國도 생

註 23) 위의 논문, p.307.

24) Stephen M. Young, "Gorvachev's Asian Policy: Balancing the New and the Old," Asian Survey Vol. XXVIII, No. 3 (Mar. 1988), pp.317-339; 許漫, "韓國의 北方外交政策의 再照明과 展望," 「轉換期の 韓國社會」(한국정치학회, 재북미한국정치학회 제7회 합동학술논문집, 1987), pp. 306-308.

산력의 증가를 통한 사회주의건설을 추구하면서 대서방 경제협력을 표방하고 우리와의 경제적 교류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²⁵⁾

또한 美國과 日本도 한반도에 있어서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려하며 안정적인 분위기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는 것이다.²⁶⁾

이러한 四強의 政策과 더불어 남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北方外交政策²⁷⁾은 그동안 적대적 관계에 있던 공산권국가들과의 경제적 협력을 통해 친선관계를 구축함으로써 한반도문제에 있어서의 당사자들의 의사가 중요시되는 소위 “韓半島問題의 韓半島化 (Koreanization of Korean question)”²⁸⁾ 현상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두번째의 문제는 남북한이 각각 접근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는가 하는 것인데 이 문제도 긍정적인 평가를 내릴 수 있을 것 같다. 먼저 남한은 경제성장과 정치적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민족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열망이 분출되었고 정부도 7.7 선언을 발표함으로써 통일로 향한 의지를 천명하고 북한과의 접촉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비해 북한은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 대외개방 내지 대남정책의 변경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생각된다.²⁹⁾ 이의 근거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요인들을 들 수 있다.

註 25) 도날드 자고리아, “對蘇·對中關係,”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編, 「北韓의 오늘과 내일」 (서울: 법문사, 1985), pp. 367-368; 許 濤, 앞의 글, pp. 310-315.

26) 許 濤, 위의 글, pp. 308-310과 pp. 315-317; 로버트 A. 스칼라피노, “對日·對美關係,” 韓國共產圈研究協議會 編, 앞의 책, pp. 323-347.

27) 양성철, “남북한관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 「전망」 1989년 6월호, pp. 114-121.

28) 安秉俊, “國際權力政治와 韓半島의 統一,” 李洪九 외 4인 공저, 앞의 책, pp. 77-80.

29) Tae-Hwan Kwak, "ROK National Security: U.S. Troop Withdrawal and Peace-Mak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olitics in the Period of Transition, Proceedings of the Sevence Joint Conference July 27-29, 1987,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for Korean Political Studies in North America, pp.148-150.

첫번째 요인으로 들 수 있는 것은 經濟問題의 심각성이다. 즉 그들은 그동안의 중앙계획체제에 의한 동원경제의 한계성을 느끼고 있다. 북한은 1961년부터 1975년 사이에 평균 6-10% 정도의 경제성장을 이룩하여 제 3세계와 여타 공산국가들과 비교해 볼 때는 비교적 좋은 경제상태를 유

남북한 주요 경제지표

(1987년 현재)

구 분	단 위	남 한	북 한
인 구	천 명	42,082	20,690
인 구 증 가 율	%	1.21	1.70
경 제 활 동 인 구	천 명	16,873	8,972
경 제 활 동 참 가 율	%	58.3	65.0
면 적	천 km ²	99.2	122.1
G N P	억 불	1,186.0	193.7
1 인 당 G N P	불	2,826	936
경 제 성 장 율	%	12.0	3.3
군 사 비 / G N P	%	5.0	21.8

자료 : 국토통일원, <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 p. 37.

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⁰⁾ 그러나 잇따른 경제계획목표의 미달과 GNP의 21.8%나 되는 군사비 부담의 한계, 그리고 남한과의 경쟁에서 열세를 느끼게 되자 합영법을 제정하여 외국의 자본을 유치하려 노력하는 등 경제개방의 징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³¹⁾ 남북한간의 경

註30) Kang Suk Rhee, "North Korea's Pragmatism: A Turning Point?" Asian Survey, Vol. XXVII, No. 8, (Aug. 1987), pp. 888-894; John Merrill, "North Korea's Halting Efforts at Economic Reform," Aug. 7-11, 1989, Seoul, sponsored by the Institute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p. 4.

31) John Merrill, op.cit.; Dae-Sook Suh, "Domestic Environment for Korean Unification," 「國際政治論叢」 제 27 집 1호, 1987, pp. 197-199.

제력은 위의 표에서 나타나는 바와 같이 커다란 격차를 보여주고 있다. 남북한간의 주요경제지표를 비교하면 위의 표와 같다.

또한 북한주민들의 내부적 불만을 해소하기 위해 소비재의 생산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이다.³²⁾

북한의 개방가능성을 촉진하는 두번째 요인으로는 북한 내부의 人口體系의 變化를 들 수 있다. 즉 북한의 경우 해방이후에 출생한 세대가 1978년 현재 전체인구의 77% 이상³³⁾을 점유하여 맹목적으로 공산주의를 추종하던 기성세대와는 다른 합리주의적 사고를 하는 세대가 북한의 중추세력으로 등장했다는 것이다.

세번째로는 북한의 권력구조내에 技術官僚들(technocrats)의 등장을 들 수 있다. 이들은 북한의 중요한 권력구조안에서 괄목할 만한 진출을 했는데 주로 경제, 사회, 군사 분야의 전문가들로서 政策決定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한다.³⁴⁾ 1986년 현재 黨政治局은 정위원 15명중 7명이, 후보위원은 10명중 7명이 전문기술관료 출신이다. 그리고 政治委員會의 경우 1979년 현재 정위원 20명중 7명이, 후보위원은 11명중 7명이 전문기술관료 출신이다.³⁵⁾ 이들 전문기술관료들은 소련이나 동구권에 유학하였고 외부세계와의 접촉도 많아 혁명세대 보다는 합리적이고 실용주의적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실제문제에 대처하는 데 있어서 현실적이고 혁명세대 보다는 많은 융통성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³⁶⁾

이와 같은 북한의 대외개방가능성과 대남정책의 변화가능성에도 불구하고

註 32) Kang Suk Rhee, op.cit., pp.887-890; John Merrill, op.cit. pp. 11-12.

33) 서울대학교 인구조사연구소.

34) 민병천 편저, 「북한공산주의」 (서울:대왕사, 1983), p. 153.

35) 李愚貞, “最近 北韓權力엘리트의 變化와 政策展望,” 「統一問題研究」 제1권 2호, 1989 여름, pp. 46-53.

36) 신정현, 「北韓 金正日體制의 政策方向에 關한 研究」 (서울: 국토통일원, 1983), pp. 17-19.

고 북한은 주체사상이라는 경직된 이데올로기 때문에 專門家 (expertise)보다 理念家 (redness) 를 우위에 둘 것이며 따라서 경제적 개방을 추구하지 못할 것이라는 견해³⁷⁾가 있으나 경제개방이 주체사상 때문에 불가능하기 보다는 오히려 새로운 개방정책을 주체사상이 옹호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보다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³⁸⁾ 즉 주체사상은 모든 것을 합리화할 수 있는 도구이기 때문에 경제개방을 한다고 할지라도 북한은 이를 주체사상을 이용하여 합리화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요인이 반드시 북한의 경직된 정책을 변화시키고 개방으로 나아가게 한다고는 할 수 없다. 그러나 위의 여러가지 내부적 요인들은 외부의 상황, 즉 북한의 입장에서 볼 때 남한과의 관계와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치상황의 여하에 따라서는 북한을 개방으로 나아가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이와같이 동서독관계의 발전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우리의 경우에 유추하여 볼 때 남은 한가지의 문제는 남북한 두 당사자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통일을 지향한 政治的 決斷을 내릴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이 단계에서 필자가 제안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남한이 먼저 Initiative를 행사하자는 것이다. 즉, 우리 정부가 항상 강조해왔던 바와 같이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형님의 입장에서 북한과의 관계에서 쟁점으로 남아 갈등을 야기시켜왔던 문제들에 대해 안보에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양보할 수 있는 사항들을 정치적 결단을 통해 보다 적극적인 통일정책으로 제의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동서독 관계가 그러했듯이 항상 동등한 파트너로서 대우한다는 인상을 심어주는

註 37) Kang Suk Rhee, op.cit., pp.890-894.

38) John Merrill, op.cit., p.6.

것이 필요하며 속으로 많은 아량을 가질 것이 요구되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서의 제안은 북한도 변화할 때 이루어질 가능성이 보다 높은 것이다.

다음에서는 우리가 대국적인 입장에 서서 북한에게 대화의 테이블과 국제사회로 나오도록 하기 위해 정치적 결단의 대상으로 고려할 수 있는 문제들을 제안하고자 한다.

V.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위한 政治的 決斷의 必要性

이상에서 남북한관계의 발전을 위한 우리의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과 북한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또한 우리의 노력여하에 따라서 북한이 보다 개방적이고 유화적인 정책을 펴나갈 수 있는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다는 주장도 하였다.

그러므로 여기에서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고 남북한간의 교류를 통한 상호신뢰를 구축하기 위한 前段階措置로서 남한이 고려할 수 있는 적극적 노력을 제안하고자 한다. 먼저 현상유지적인 정책과 인식으로부터의 탈피가 시급하다. 이것은 이제까지 남북한지도자들 모두가 상대방에 대한 zero-sum적 사고방식에 입각한 적대적 의식을 가지고 정책을 펴왔으며 정권유지라는 차원에서 통일정책을 다루어 왔다는 비판에서 출발하고 있는 바 남북한 관계의 진전을 위해서는 냉전사고의 탈피가 시급하다는 것이다.³⁹⁾

둘째, 北韓의 實體를 인정하고 하나의 국가로서,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註 39) 朴漢植, “서울올림픽 이후의 韓半島 平和增進方案,” 「서울올림픽 이후 韓半島統一環境과 南北韓平和體制」(서울:국토통일원, 1988), p. 243 ; Tae-Hwan Kwak, *op. cit.*, pp. 152-153.

동서독 관계와 같이 國內法에 의한 國家로서의 認定이 필요하다.⁴⁰⁾ 그리고 통일을 지향하는 거시적인 시각에서 상대방에 대한 중상적, 위협적 표현을 제거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에 대한 호칭도 간혹 북괴라고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남한 내부에서의 통일교육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도 좋지 못하고 통일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도 도움이 되지 못하므로 중지해야 한다.

세째, 요즘 자주 거론되고 있는 駐韓美軍의 段階的 撤收에 대한 진지한 고려가 필요하다.⁴¹⁾ 미국에서는 가중되는 무역적자 해소책의 일환으로 우리에게 방위비의 분담을 요구하고 있고 주한미군의 철수에 대한 논의가 미의회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남한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와 함께 대북한 전술의 일환으로서 주한미군의 단계적 철수에 대한 정책을 전향적인 입장에서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주한 미군의 단계적 철수가 조만간 시행될 것이라면 우리 남한이 먼저 이를 대북한용 정책카드로서 제시하는 것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하여는 여러가지 논의가 있다. A. Cordesman은 주한미군이 상대적으로 열세에 있는 남한의 군사적 위약을 북한의 군사적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보완적 역할을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R. Stilwell은 주한미군은 한반도에 있어서 핵확산의 방지책으로 기능한다고 주장한다. 즉 그는 주한미군이 철수하면 남한은 핵무장을 서두르게 될 것이며 이점은 북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⁴²⁾

註40) “南北관계, 어떻게 定立할 것인가,” 「전망」 1989년 6월, p. 136.

41) James W. Morley, "The North's Dilemma is the South's Opportunity," Korea & World Affairs Vol.10, No.4, 1987, pp.722-724; Tae-Hwan Kwak, op.cit., pp.150-151.

42) A. Cordesman, "The Military Balance in Northeast Asia: Challenge to Japan and Korea," Part II Armed Forces Journal International, Nov. 1983, pp.108-109; R. Stilwell, "The Need for U.S. Ground Forces in Korea," in G. McGovern & R. Stilwell,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77), p.24.

이러한 주한미군에 대한 견해와는 달리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다. G. McGovern은 주한미군은 북한으로 하여금 군비증강을 하게 하는 요인이며 이는 결국 동아시아에 있어서의 군비경쟁만을 촉진하는 것이므로 주한미군과 핵무기는 철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⁴³⁾

그러나 주한미군의 철수는 대북한관계뿐만 아니라 남한내부에서 있어서도 민감한 문제이므로 그에 대한 安保的, 政治的 對備가 先行되어야 함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이와 더불어 제기되는 것이 作戰統制權의 回復이다. 사실 작전통제권이 미국에 있다는 사실은 북한이 그동안 주장해온 3자회담에 대한 반박주장에 있어 하나의 한계점으로 작용해온 것이 사실이다. 남한에서의 작전통제권은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된 이후 줄곧 미국에 속해 있었는데 최근 들어 남한의 지도자들이 한·미간의 대등한 관계를 강조하면서 진지한 논의의 대상이 되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한·미 양국이 번갈아가면서 하는 rotating system이 제안되기도 하였다.⁴⁴⁾ 그러나 우리가 자주국가인 만큼 작전통제권이 외국에 있다는 사실은 어떤 이유에서건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국민에게 있어서는 자존심의 문제이므로 되찾아야 한다고 생각된다.⁴⁵⁾

네째, 한미합동군사훈련인 Team Spirit 훈련을 중지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필요하다.⁴⁶⁾ 북한은 Team Spirit 훈련에 대해 평양까지

註 43) G. McGovern, "The U.S. Risk in Korea," G. McGovern & R. Stilwell, ibid., pp.6-12; S. Johnson & J. Yager, The Military Equation in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1979), pp.84-85;

44) Larry A. Nicksch, "Future Issues in U.S.-ROK Security Cooper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1, No.1(Sum. 1989), pp.75-77.

45) 하영선, "한반도 평화정착과 미군," [전망] 1988년 9월호, p. 34.

46) 朴漢植, 앞의 글, p. 243 ; Team Spirit 훈련의 일시적인 정지를 對北카드로서 제시한 글로서는 Tae-Whan Kwak, op.cit., pp.151-153.

의 공격을 가상한 공격형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하고 있는 반면, 남한 정부는 어디까지나 통상무기에 의한 침투를 가정한 방어용훈련이라 주장하고 북한측의 참관을 허용하겠다고 발표하였다.

Team Spirit 훈련은 유럽에서의 Reforger 훈련을 제외하고는 미군이 참가하는 가장 큰 규모의 훈련이고 약 20 만명이 넘는 한·미 양국군 병력이 참가하는 훈련이다. 그리고 그 내용도 화학전 및 핵전대비 훈련, 모의해안상륙공격, 공중 및 해상폭격, 대잠수함전, 특공대와 특수부대의 작전, 야전기동연습 등이다.⁴⁷⁾ 사실 어느 국가이던 간에 바로 국경선 앞에서 세계 최강국의 군대와 함께 군사훈련을 하는 상대방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지 않는 나라는 없을 것이다. 북한은 남한의 한미합동군사훈련에 대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막대한 비용을 사용하고 있으며 그에 대해 상당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⁴⁸⁾ 그러므로 이것은 북한내부의 정책결정에 있어서 강경주의자들의 입장을 강화하고 경직된 군비경쟁으로 나아가게 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만큼 북한의 대남정책 변화가능성을 배제시키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다.

다섯째, 國家保安法の 개정 내지 폐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얼마전 정치권에서 여야할 것 없이 국가보안법 개정의 필요성을 인정하였던 것처럼 북방정책이 추진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개정작업이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⁴⁹⁾

여섯째 북한이 제안한 3자회담을 제한적 의미에서나마 진지하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⁵⁰⁾ 북한이 제안한 3자회담의 내용은 미국이 휴전협정조인의 당사자이며 현재도 미군을 주둔시키고 있고 작전통제권을 가지고 있

註 47) Department of Defense News Release (Jan.17, 1986) and previous years' releases on Team Spirit, Armed Forces Journal International (May 1985), p27; Armed Forces Journal International (Nov. 1985), p.31.

48) John Merrill, *op.cit.*, p.5.

49) 朴漢植, 앞의 글, pp. 238-239.

50) Tae-Hwan Kwak, *op.cit.*, pp.151-152.

기 때문에 미국과의 직접접촉이 필요하다는 것이며 3자회담을 통해 북한과 미국간에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남북한간에는 불가침선언을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남한은 모든 문제는 남북한 당사자사이에 논의되어야 하며 북한이 3자회담을 주장하는 이유는 미군철수를 통한 남한의 공산화전략의 일환이라는 것이다. 즉 북한은 3자회담의 주장을 통해 국제적으로 자신들이 평화를 애호한다는 이미지를 고양하고, 미국과 정부차원에서의 직접대화창구를 개설하며, 남한과 미국과의 동맹관계를 약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정부는 북한이 남한과의 직접적인 교섭을 한다면 불가침협정을 체결할 용의가 있다고 주장하고 이러한 정치·군사적인 문제에 대한 논의가 진전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문화, 정치, 경제, 인륜적 차원의 교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⁵¹⁾

현재는 3자회담에 대한 문제가 거론되지 않고 있으나 우리가 북한과 미국간의 접촉에 대해 보다 융통성있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북한으로 하여금 국제환경을 보다 민감하게 느끼고 보다 합리적인 태도로 나아가도록 하게 할 가능성이 많으며 나아가 공산권과의 친선관계를 더해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우리가 주장해온 교차승인에 대한 북한의 시각을 변화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이상의 제안들은 우리의 「민족화합민주통일방안」과 20개 시범사업에서도 제시된 것도 있다. 중요한 것은 이상과 같은 정치군사적 문제들을 진지하게 政策的 代案으로 고려하고 대북한용 정책카드로서 사용함으로써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유도하고 평화적 공존체제로 진입하기 위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다.

註51) Young C. Kim, "The Politics of Arms Control,"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1, No.1 (Sum. 1989), pp.123-125.

VI. 結 論

같은 분단국이면서도 동서독의 평화공존관계와는 달리 우리 한반도의 남북한은 아직도 적대적 대치관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특히 통일방안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는 갈등은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지 못하는 가장 큰 장애요소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필자는 통일은 국토의 통합과 같이 일순간에 이루어지는 목표가 아니고 한민족이 하나가 되어 생활하는 공동체를 이룩해가는 과정이며, 따라서 한반도를 통일하기 위해서는 우리 남한이 주장하는 기능주의적 접근방법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점에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합리적인 논의라도 상대방이 받아들일 때만 가치가 있는 것이며 그렇지 못할 때 그 유효성은 사라지는 것이다. 사실 이제까지의 많은 논의들은 상대방이 수용하기 어렵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상대방의 긍정적인 반응을 유도하는 데는 실패했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⁵²⁾

이러한 인식하에 필자는 우리의 기능주의적 접근이 실제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는 적극적인 제안들을 살펴보았다. 정리하여 요점을 말하자면 기능주의적 접근이 유용하기 위해서는 동서독관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치적 결단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이며, 한반도에 있어서는 남북한관계의 위상과 국력, 그리고 한반도 주변의 국제정세를 고려해 볼 때 우리 남한이 이러한 제안을 제의하는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⁵³⁾

이러한 제안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우리가 통일을 지향한 남북한관계의 발전에 있어서 대안 또는 정책카드로서 제시할 수 있다면 다음과 같은

註 52) 李命英, “統一論議 40年の 盲點,” 「統一論叢」 제5권 2호, (서울: 국토통일원, 1985), pp. 81-105.

53) 김학준, “민족통일운동의 전환기,” 양호민, 이상우, 김학준 공편,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형성사, 1986), pp. 422-424.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선 북한이 주장하는 정치적인 문제들을 상당부분 수용하는 것이므로 북한이 대화를 고의적으로 거부하는 명분을 제거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주장의 비합리성을 드러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도 그 내부적 필요성에 의해 유화적인 방향으로 政策變化를 시도할 가능성이 많다.

둘째, 이것은 또한 남한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다양한 통일논의 가운데 재야, 학생운동권에서 주장하는 내용이 상당부분 포함되므로 이들의 정부의 통일정책에 대한 비판 내지는 압력을 약화시키는데 유효할 것이다. 이는 또한 나아가 우리 국민들 사이의 統一論議를 상당부분 統合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며 궁극적으로 남북한관계를 평화적 공존관계로 유도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본 연구에서 남북한관계의 발전을 위한 남한의 역할을 일방적으로 강조하였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어느 한 쪽이 아무리 노력한다 할지라도 상대방이 받아주지 않으면 통일은 이루어질 수 없다. 남한이 아무리 현실성있는 정책을 내놓는다 해도 북한이 이를 받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그리고 위에서 제시한 제안들을 우리가 제의한다해도 북한의 변화없이는 아마도 그 실현가능성이 거의 없을 것이다.

여하간 우리는 한민족의 하나됨을 위해 北韓의 變化可能性을 촉구하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하는 것이 통일로 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는다.

참 고 문 헌

- 국토통일원, 「서독의 동서독 협상대비전략 카드」, 1973.
- _____, 「동서독 수치지교」, 1976.
- _____, 「동서독 경제교류에 관한 연구」.
- _____, 「동서독 각종 교류와 관련된 제문제 및 해결실태」 1978.
- _____, 「통일문제연구」 제1권 2호, 1989 여름호.
- _____, 「남북한 경제현황 비교: 1987년말 기준」, 1988.
- _____, 「남북한비교총서」, 1988.
- _____, 「북한의 정치경제」, 1988.
- _____, 남북대화사무국 「동서독 관계발전에 관한 보고 및 문서」, 1981.
- 국토통일원 조사연구실, 「동서독 관계의 발전과정 I」, 1976.
- _____, 「서독의 동독정책의 변천과 서독의 국내외사정」 1976.
-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1988.
- 계희열, “분단의 고찰,” 「동서독과 남북한」, 동아일보사, 1973.
- 김성주, “핵의 방어적 억지이론에 관한 고찰,” 「전환기의 한국사회」 한국정치학회. 재북미정치학회 제7회 합동학술논문집, 1987.
- 김세원, “남북한 경제교류의 추진방향: 경제통합의 추진을 위한 신기능주의적 접근,” 「통일논총」 제2권 2호, 국토통일원, 1982.
- 김창순, “김정일 후계체제 확립과 대남정책 전개전망,” 「북한학보」 제5집, 서울:북한연구소, 1981.
- _____, “북한의 권력세습과 정책변화 전망,” 「통일논총」 6권 1호, 국토통일원, 1986.
- 김학준, “민족통일운동의 전환기,” 양호민. 이상우. 김학준 공편,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형성사, 1986.

- _____, “김정일체제 등장시기에 있어서의 동북아국제정치 전망,” 서울 : 국토통일원, 1983 .
- 남기환, 「동서독교역의 정치경제적 문제」, 외교안보연구원 1973.
- 남주홍, “한·미 안보관계 : 정치, 군사적 과제와 문제,” 「전환기의 한국 사회」, 한국정치학회. 재북미한국정치학회, 제 7 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1987.
- 도홍렬, “북한사회의 개방화 요인과 전망,” 「통일논총」, 제 4 권 1 호, 1984.
- 박한식, “서울올림픽 이후의 한반도 평화증진방안,” 「서울올림픽 이후 한반도 통일환경과 남북한 평화체제」, 서울 : 국토통일원, 1988
- 백경남, “독일통일문제와 유럽안보,” 「안보연구」, 제 18 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9,
- 서병철, 「통일을 위한 동서독관계의 조명」, 서울 : 지식산업사, 1988 .
- 신정현, 북한 김정일체제의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 : 국토통일원, 1983 .
- 양성철, “남북한관계를 보는 새로운 시각,” 「전망」, 1989년 6 월호,
- 윤병익, “80년대 후반기 한반도 통일환경과 남북관계 전망,” 「통일논총」, 6 권 1 호 국토통일원, 1986 ,
- 이만기, “남북한의 경제협력영향 비교,” 「통일논총」, 제 2 권 2 호, 국토통일원, 1982,
- 이명영, “통일논의 40년의 맹점,” 「통일논총」, 제 5 권 2 호, 국토통일원, 1985. pp. 81-106.
- 이상우, “남북통일의 기본문제,” 양호민. 이상우. 김학준 공편,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 형성사, 1986 .
- 이정식, “노동당의 발전과정과 김정일의 대두,” 한국공산권협의회 편, 「북한의 오늘과 내일」, 서울 : 법문사, 1985 .

- 정용길, "서독의 동방정책," 동우 김성희박사 회갑기념논문집, 「현대정치
의 정치경제학적분석」, 서울:법문사, 1980.
- _____, 「분단국 통일론」, 서울:고려원, 1988.
- _____, "동독의 통일 및 서독정책," 「안보연구」 제 18호 동국대학교
안보연구소, 1989.
- 최완진, 「동서무역의 연구」 국제경제연구원, 1979.
- 최진규, "최근의 동·서독 관계개선 추진동향," 「공산권 연구」 1986년
2월호.
- 한국일보, 1988년 6월 22일자.
- 허 만, "한국의 북방외교정책의 제조명과 전망:적극적 평화의 모색과
관련하여," 「전환기의 한국사회」 한국정치학회. 재북미한국정치
학회, 제 7회 합동학술대회 논문집, 1987.
- Ahn, Byung-Joon, "Arm Control Proposals of North and South Korea and
Their Implications for Korean Security," 國際政治論叢,
제 26집 2호, 1986.
- Cordesman, A., "The Military Balance in Northeast Asia: Challenge
to Japan and Korea," Part II Armed Forces Journal International,
Nov. 1983.
- Hass, Michael, "Functionalist Models for Korean Unification,"
「國際政治論叢」, 제 26집 2호, 1986.
- James W. Morley, "The North's Dilemma Is the South's Opportunity,"
Korea & World Affairs, Vol.10, No.4, 1987.
- Johnson, S. & Yager, J., The Military Equaton in Northeast Asia
(Washington D.C.: The Brookings Institute, 1979).
- Kwak, Tae-Hwan, "ROK National Security: U.S. Troop Withdrawal and
Peace-Mak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n Politics
in the Period of Transition, Proceedings of the Sevence Joint
Conference July 27-29, 1987,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for Korean Political Studies
in North America.

- Kim, Young C., "The Politics of Arms Control,"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1, No.1. Sum. 1989 .
- Lee, Dong-Bok, "North Korea After Sixth KWP Congress," Korea & World Affairs Vol.5, No.3. Fal. 1981 .
- McGovern, G., "The U.S. Risk in Korea," in G. McGovern & R. Stilwell,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77 .
- Merrill, John, "North Korea's Halting Efforts at Economic Reform," paper presented for the fourth Conference on North Korea, Aug. 7-11, 1989, Seoul, sponsored by the Institute of Asian Studies,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 .
- Nam, Joo-Hong, "U.S. Forces in Korea: Their Role and Strategy," Korea & World Affairs Vol.21, No.2. Sum. 1987 .
- Niksich, Larry A., "Future Issues in U.S.-ROK Security Cooperation," The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Vol.1, No.1. Sum. 1989 .
- Oh, John C.H., "Korean Reunification: Myth or Reality," Korean Politics in the Period of Transition, Proceedings of the Sevens Joint Conference July 27-29, 1987, The Kore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nd the Association for Korean Political Studies in North America.
- Rhee, Kang Suk, "North Korea's Pragmatism: A Turning Point?," Asian Survey, Vol.XXVII, No.8. Aug. 1987 .
- Scalapino, R.A., "Current Dynamics of the Korean Peninsula," Problems of Communism Vol.XXX, No.6. Nov.-Dec. 1981 .
- Stilwell, R., "The Need for U.S. Ground Forces in Korea," in G. McGovern & R. Stilwell, Withdrawal of U.S. Troops from Korea? Washington D.C.: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1977 .
- Young, S.M., "Gorbachev's Asian Policy: Balancing the New and the Old" Asian Survey, Vol.XXVIII, No.3, Mar. 1988 .
- Suh, Dae-Sook, "Domestic Environment for Korean Unification," 「國際政治論叢」, 제 26 집 1 호, 1987,

World Bank, World Development Report 1988, Oxford University Press.

Yu, Suk-Ryul, "Political Succession and Policy Change in North Korea,"

Korea & World Affairs Vol.10, No.1. Spr. 1986 .

北方政策과 統一環境의 造成

安 承 烈
(韓國教員大 大學院 教育社會學科)

目 次

- I. 國際情勢와 北方政策의 必要性
- II. 分斷의 克服과 北方政策
- III. 北方交流와 國際關係
- IV. 統一環境의 造成

I. 國際情勢와 北方政策의 必要性

'80 년대에 접어들어 미·소간에 제 2의 대땅뜨시대를 맞이하면서 동서양 진영간에도 이데올로기를 초월한 평화공존의 분위기가 무르익어 가고, 한반도에는 남북한간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되었다.

국내적으로는 지난해에 이룩한 '88 서울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평화적 정권교체에 뒤이은 사회 각 분야에서의 민주화의 착실한 진전을 밑바탕으로 하여 국민들의 통일열망이 그 어느 때 보다도 고조되어 있고, 일부 급진세력의 체제부정, 주한미군철수 주장 등 이념적 혼란이 있는 가운데 통일논의가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중·소등 공산제국의 개방·개혁정책의 가속화로 우리의 북방외교 추진 및 한반도 평화체제 유지에 유리한 국면이 조성되고 있다. 북한의 내부 사정도 세계 청년학생축전 강행으로 인한 지나친 재정낭비로 폐쇄경제의 한계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외부로부터의 자본과 선진기술 도입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다.¹⁾

이러한 국내외의 상황과 북한정세를 감안한 북방정책은 대내외의 정치적 역학구조의 변화와 맞물려 통일정책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즉 북방정책은 세계적으로는 동서간의 신데탕트 기류와 개방·교류·협력·화해 분위기의 조성과 미·일·중·소 등 한반도 주변 4강이 펼치는 대아시아 평화정착의 전략, 한반도에 불고있는 개방화의 물결에 따른 남북한 관계의 역동적 국면, 국내적으로는 민주화운동과 통일문제에 대한 보수세력과 진보세력이 벌이고 있는 갈등과 대립의 가속화 문제와 상호 작용하면서 진전되고 있다.

註1)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공산주의와 현대급진사조」(1989), 서문.

북방정책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고찰해 보면, 브란트 집권이후 동독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대소사절단」을 파견하여 소련의 의중을 확인한 후 1969년 10월 28일 ‘동방정책’ (Ostpolitik)²⁾을 발표, 독일이 당면한 현실문제를 직시하고 ‘긴장상태로부터 평화정책의 길’로 전환시킨 것에 비유하여³⁾ 한국의 대중·대소·대동구 및 대북한을 포함한 종래의 적대관계 내지 외교관계가 성립하지 않았던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하여 한반도내의 긴장완화와 화해, 공존, 민족공동체 (Korean national commonwealth)라는 기본시각을 정립,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노력을 “북방정책” (Nordpolitik)이라고 칭한 데서 유래한다.

우리나라 북방정책의 근간은 1973년 6·23선언에서 연유되나, 명확한 개념설정이 되지 않은 채 주변환경 변화에 능동적 적응의 필요성, 지정학적·역사적 관계 및 안보 등의 관점에서 대북한 안보문제와 북한체제의 배후지원 세력인 소련 및 중국과의 관계개선을 위한 평화통일 외교정책에서 찾을 수 있다.⁴⁾

1980년대 초반의 북방정책의 기저는, 북한을 포함한 삼각관계의 관점에서 중·소와의 실질적 관계 및 외교관계의 수립과 남북대화를 통한 「긴장완화」와 「평화통일」 기반 구축이라는 두 가지 목표개념이 상호 보완되도록 대중·대소 관계개선과 남북한 관계개선을 연계조정시키려는 합목적적 차원으로 시도되었다.

註 2) 8개항으로 제안된 ‘동방정책’은, 독일통일은 국제정치와 군사적 여건 변화, 구주에서의 세력균형의 변화, 독일민족의 통일의지 밖에 없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신뢰회복과 민족화합을 이룩함으로써 긴장완화와 사회개방을 촉진시키는 것이 독일민족의 공동번영의 길임을 확신하고 독일정책 (Deutschlandpolitik)을 구현하고자 제안되었다.

3)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1988), pp.228-229.

4)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통일문제해설」 (1989), p.138.

엄밀한 의미에서의 ‘북방정책’이란 개념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사용한 것은 외무부 장관이 국방대학원에서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외교과제’라는 연설을 통해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정상화를 위한 북방정책은 1980년대 한국외교의 주요 과제로 설정한데서 기인하며⁵⁾ 노태우 대통령의 취임사와 이 홍구 통일원 장관의 특강에서 북방은 중국·소련·동구제국·북한까지를 포함하는 개념적 확대를 가져왔다.⁶⁾

「7·7특별선언」인 ‘민족자존과 통일·번영에 관한 특별선언’은 세계 모든 나라가 호혜평등의 원칙위에서 정상적인 관계를 맺고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해 나가야 한다는 대명제 아래, 남북한의 교역과 인적교류에 대한 문호를 대폭적으로 개방하였다. 이는 첫째, 북한의 존재를 솔직히 인정하고 북한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이며, 둘째, 북한은 더 이상 대결과 경쟁의 대상이 아니라 한반도에서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하는 ‘선의의 동반자’로 받아들였다는 점, 셋째, 남북한이 적극적인 개발과 협력을 통해서 민족공동체를 형성, 민족통일을 이룩하자라는 것이다.

이러한 대공산권 관계개선과 대북정책을 연계시켜 상호보완적 관계로 파악하고, 단순한 안보 문제가 아니라 한반도의 평화적 통일, 민족회합 그리고 2000년대 한국의 국제적 위치와 ‘동북아 전략 환경’(strategic environment in northeast Aisa)이라는 관점에서 「북방정책」의 중요성과 역사적 당위성이 제기된다.

그러나 지난 40여년간 닫혀진 육구의 일시적 분출은 지나친 환상과

註5) 1983년 6월 29일 이범석 외무부 장관이 행한 특강에서 최초로 공식적으로 사용되었으나(북방: 중국과 소련을 칭함) 개념이 명확하지 않았음.

이범석,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외교과제,” 국방대학원, pp. 52-53.

6) 대통령의 공식적인 영문 취임사에서는 “북방외교”를 “Northern Diplomacy”로 표시하고 “북방”은 우리나라와 외교관계가 없는 소련·중공·동구제국 및 북한을 포함한 것으로 보여진다.

현실을 무시한 무분별한 통일논의와 백화제방의 정책제시로 국민적 합의 (national consensus)를 무시하고 독단과 오류에 빠져, 오히려 남북분단을 심화시키고 화석화시키는 역기능을 초래하였다.⁷⁾

이는 바람직한 통일정책의 논리적 준거 (framework)나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향성의 도출이 없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러한 통일정책의 부재나 민족통일의 실현에 왜 실패하였는가? 하는 철저한 자기반성 위에 새로운 정책적 대안과 과학적 방안을 창출하여야 할 역사적 사명을 부여받고 있다.

요컨대 45년 동안 한반도의 위상을 규정지은 국제체제 (international system) 요인이라는 '밖'의 요소와 이로 인한 국민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실천 평가의 기회를 제약하고 정치·경제·사회·문화의 결집조정을 어렵게 하는⁸⁾ 국내체제 (national system) 요인이라는 '안'의 요소외에도 이른바 분단체제 (divided nation system) 라는 '제3의 요소'가 개입되는⁹⁾ 국제모순·민족모순·분단모순의 3중 모순구조의 올바른 파악이 결여된 채 통일정책과 논쟁이 전개된 데 그 원인이 있다.

한반도가 갖는 삼중적 성격의 객관적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국제관계론적 차원에서 한반도 주변 4강의 역할에 편중하는 영화관계 (zero-sum game) 접근으로 일변하는 종래의 사회 공학적 접근 (approach)

註 7) 88년 8월 평화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인 서경원씨의 밀입국, 89년 3월 문익환·황철영·유원호씨의 밀입국과 89년 7월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 참가 명목인 「전국대학생대표자 협의회」 대표 임수경양의 밀입국은 모처럼 활성화되는 통일논의에 우려와 염려를 낳고, 북한의 「적화통일전선전술」에 이용되고 있지 않나하는 의문을 품게 하였다.

8) 김병오,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한울, 1985), pp.296-297.

9) 김달중, “북방정책과 동·서독 관계 개선의 의미,” 「민족지성」(1989.6), p.83.

보다는, 한민족 전체의 사활적 이해 관계가 걸린 민족사적 차원에서 민족의 원상회복인 동시에 유기체로서의 민족의 생명력을 되찾는 당위론의 논거에서 그 사상적 뿌리를 찾고, 통합(integration)이나 단순한 통일(unification)이 아니라 복고적 원상회복의 '재통일'(reunification) 의미에서 진일보한¹⁰⁾, 5천년의 유구한 민족사와 1300년의 통일사를 경영해 온 단일민족의 민족정기(nation ethos)가 농축된 '신통일'(new-unification)의 방향에서, 세계사의 진운과 궤를 같이 할 「민족공동체」(Korean national commonwealth) 형성과 '새로운 국민형성'(new one nation building)이란 확산적 사고로 능동적·주체적 북방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II. 分斷의 극복과 北方政策

냉전은 한반도에 침예한 이념적·군사적 대립이라는 분단체제를 태동시켰다.

분단체제(divided nation system)는 그 자체로서 미·소대결의 전초기지 침병으로서,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상의 갈등을 국내로 침투시키는 일종의 침투막 또는 경계의 역할을 담당, 북한에 사상 유래없는 하나의 '공식 이데올로기'(official ideology)만이 용인되는 폐쇄적 전체주의체제로 고착되었고¹¹⁾ 남한에서는 권위주의적 정

註 10) 이상우, "남북한 통일정책의 논리구조 비교," 「통일한국의 모색」 박영사, 1988), p.99.

11) 동아일보사 조사연구실(편), 「통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동아일보사, 1988), p.182.

치체제의 명멸로 고착화 되었다.¹²⁾

상이한 제도와 사상속에서 살아오며 적대·반목·불신의 늪에서 서로의 가슴에 총부리를 겨눈 채 대립과 갈등의 인위적 이질화 속에서 살아왔다.¹³⁾

따라서 분단으로 인한 국내외적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서 통일문제는 외세의 지배와 간섭으로부터 민족의 자주권을 완전히 회복·실현하고, 국내요인·국제체제요인·분단모순의 총체적 인식아래 남과 북 사이의 대립과 불신을 제거, 민족적 단결을 이루는 접근방법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1. 민족역량의 증대

분단 이후 동서냉전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한반도 문제의 '국제성'만이 부각되었고 '민족내부성'은 문제되지 않았다. 그 결과 한반도의 분단배경과 통일을 저해하는 국제환경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고, 통일정책도 국제기구 감시아래 총선거 방식 등과 같은 국제정치적 시각이 중시되었다.¹⁴⁾

또한 동북아의 국제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라 한국의 운명이 결정되어 왔고, 미·소 냉전에 의하여 강대국들의 대리전쟁을 치르게 되었으며, 전후 처리과정에서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달리 국제정치적 희생물로서 분단이 강요된 「국제형 분단국가」로서 주변 강대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우리 민족의 통일문제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註12) 국제체제(international system)와 국내체제(national system)간의 상호 작용에서 침수(penetration), 모방(emulation), 반응(reaction) 등의 개념은 다음책 참고. 허만, 「한반도와 외교정책론」(교육과학사, 1988), pp. 105-119.

13) 정태윤, "진보정치연합의 통일정책," 「민족 지성」(1989.4), p.163.

14) 정세현,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연구현황과 방향," 「국제정치논총」, 제28집 제1호(1988), p.113.

한반도 문제에 대한 주변 4강의 역할을 강조하는 이러한 주장의 논거는 대체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논리적 근거에서 출발한다.

첫째, 국토의 분단은 우리 민족의 의사와 관계없는 국제권력 정치의 횡포에서 비롯된 흔히 「국제형 분단」으로¹⁵⁾ 분단문제의 해결도 강대국들이 해결해야 할 윤리적·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¹⁶⁾

둘째, 동북아 국제관계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힘의 소유자는 동북아 4강이며, 한반도 분단상황을 변화시켜 통일을 이룰 수 있는 힘도 4강이 소유하고 있다는 정치력(political power) 소유의 논리이다.¹⁷⁾

셋째, 한반도의 분단상태 보다는 분단해소가 강대국의 국가이익에 일치한다는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의 논거이다.

그러나 이러한 논의는 분단체제(divided nation system)의 현상고착적 관점으로, 분단의 외재적 요인에 근거하여 민족문제 해결에 방관자적 자세를 보이게 하였다. 강대국의 한반도 문제 해결논리는 분단 45년까지 국토분단·정치분단·민족분단의 삼중적 모순구조를 더욱더 심화시켜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하지 못하였다.

이와 같이 분단현상의 극복을 4강체제나 강대국에 의존은 민족문제의 병리구조를 해결하는데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게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하였다. 즉 한반도의 경우 남북한에 대한 미·소 및 강대국의 영향은

註 15) 분단유형의 구분에 있어서는 통설은 중국과 월남을 ‘국내형’, 우리나라와 독일을 ‘국제형’으로 분류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8.15광복 좌·우 대결의 내정적 요인도 있었기 때문에 ‘복합형’으로 분류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으나 ‘국제형’분단이 지배적. 김영준, “평화통일의 논의”, 「대학사회와 이데올로기」(대학이념교육교수협의회, 1987), p.93.

16)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1988), p.15.

17) 한중기, “한국정부의 대북한 정책”, 「민족지성」(1989.3), p.105.

분단체제를 매개로 하여 국제체제의 일방적 침투와 의존성을 심화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우리의 대외적 자율성이 크게 제약되는 부작용을 낳게 하였다.¹⁸⁾

대외적 자율성의 제약은 전통적 국가주권에 대한 제약과 강대국 자신의 국익에 따른 압력 행사를 통한 간섭, 강요적인 사건 협의의 요구 등 묵시적 제약은 물론 구조적 제약까지도 강요당하였다.

민족의 문제가 일련의 상황변화에 탄력적·신축성있게 대응하기 보다는 주변의 상황에 의하여 좌우되는 사례가 많았다. 그러나 과거 '힘의 정치'(power politics)에 지배되어 강대국의 국가이익(national interest)에 의해 결정되던 냉전시대의 국제체제가 갖는 압도적인 영향력이 점차 쇠퇴하면서 국내적인 정치·경제·문화가 중요성을 띠어가고 있다.

이러한 때에 남북한 통일방안이 이념적 대립과 경직성을 그대로 반영한 zero-sum game적 개념으로 파악되어 통일은 어느 일방이 다른 일방을 완전히 지배하는 전략으로 인식되어,¹⁹⁾ 북한은 '남조선 해방통일'·'적화통일'을, 남한은 '승공통일'이나 상대방의 실체를 부정하는, 군비증강과 군사적 충돌에 기초한 「패권주의 통일」(hegemonic unification)을 주장한다면 민족적 동질성과 일체감은 파괴되고 민족분단은 국내적 요인으로 더욱 심화될 것이다.

註18) 하영선 교수는 ㉠ 대외자율성 제고, ㉡ 남북한 분단체제를 남북한 통일체제로 전환, ㉢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 기반 위에 선 외교정책의 추구 등을 한국통일의교정책의 '3대 당면과제'로 지적하였다.

하영선, "한국의교정책 분석들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 28집 2호 (1988), pp.4-9.

19) 민병천, "90년대를 전망한 우리의 통일방안 연구," 일해연구소 연구논문 시리즈. 88-01.p.1.

인류의 대제전인 올림픽 성공적 개최에 따른 민족의 자긍심, 지속적인 경제적 번영으로 21세기 동북아의 주역으로 부상하게 될 한반도는 양극외교의 변두리에서 다극의 중심으로, 단순관계의 대결에서 복잡관계의 건설적 조정으로, 의존적 종속에서 평등적 협력으로 전환시켜 강대국이 통일 길을 열어주기 원하는 소극적 통일 접근방법에서 탈피하여 한민족 스스로가 적극적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정책의 일대전환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북방정책 전개에 대한 국내적 당위성은 다음과 같이 도출될 수 있다.

첫째, 국제정세와 동북아 권력구조의 변화에 따른 산물이며, 한반도의 평화와 국가안보 더 나아가서 통일을 촉진시키기 위한 양면정책의 필요성이다.²⁰⁾

둘째, 한반도 문제의 한국화(Koreanization of the Korean question)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발상의 대전환을 통하여 민족자결주의 원칙에 입각해 남북당사자 사이의 대화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비롯된다.²¹⁾

셋째, 북한을 대결이나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 않고 민족공동체의 일원으로 북한을 포용하고 한반도에서 민족의 공존과 번영을 추구한다는 획기적인 정책으로, 넓은 의미에서 한국이 소련과 중국 그리고 동구권 국가들과 정치·경제·외교·문화적 교류를 확대해 나가면서 북한을 개방정책으로 유도하고, 이러한 남북한 관계개선을 통하여 평화통일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다.

넷째, 국내역량과 능력을 재조직하여 국내외적 통일의 길목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제거하고자 하는 노력이 바로 북방정책의 국내적 요인의 당위성이다.

註 20) 안병준, “북방외교의 과제와 전망,” 외교 (1988.7), pp.18-19.

21)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 국토통일원 20년」 (1989), p.132.

2. 국제환경의 변화

대공산권 문호개방을 위해 천명한 6·23 선언에서부터 채택된 ‘북방정책’은 지리적 개념이라기 보다는 정책적 개념인 ‘종합적 대외정책’ 일환으로²²⁾ 추진되었다.

이는 ‘80년대 후반 국제적으로 불어온 미·소간의 INF협정타결, ‘삼중영의 선택’(triple-zero-option)²³⁾, 소련군의 아프간 철수 등의 지역분쟁(local conflicts)의 종식, 중·소 관계개선에 따른 신데땅트 기류와 소련의 ‘Perestroica와 Glasnost’ 정책, 중국의 현대화 노선과 ‘국제 대순환론’에 의거한 외향적 발전론을 내세운 사회주의 개방화 추세에 따라, 강대국들은 그들의 신데땅트가 동북아시아에서 갖는 공동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남한의 분단상태가 현상유지(state-esquo) 되기를 원하고 있다.

이러한 호기에 한반도의 국제적 지위 향상과 ‘국력신장’(nation power)을 바탕으로 강대세력으로 둘러싸인 한반도의 ‘지정학적 취약성’(geo-strategic vulnerability)을 극복하고 민족자존 의식의 증대와 자주적 전방위외교를 제고시킬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이는 소극적 통일 접근방법에서 탈피하여 한국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통일의 문을 여는 통일정책의 일대 전환점을 마련할 수 있는 좋은 국제환경이다.

북방정책은 이러한 국제정세와 동북아의 권력구조 변화에 따라 능동적

註22) 정책 결정자는 특히 외국문제(foreign affairs)뿐만 아니라 국내문제(domestic affairs)도 고려해야 하므로 「종합적 대외정책」은 국내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김명기, “북방정책과 국제법,” 「외교」(1988년 12월), p.25.

23) 유재갑, “90년대의 한국안보의 방향,” 「한국안전보장논총」, 제 18집(국가안전보장협의회, 1988) p.61 이하 참고.

으로 구상되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국제정치적 변화를 한국의 발전과 번영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안보, 더 나아가서는 민족적 역량을 결집시킬 수 있도록 국력을 응축시켜야 한다.

한반도에 유리하게 작용하는 국제정세에 부응하고 민족분단을 극복하기 위한 북방정책의 종합적인 목표는

첫째, 한반도의 평화정착과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둘째, 스포츠 교류·학술세미나 공동개최·역사공동 연구·문화교류·경제교류·인적교류를 통한 광범위한 상호이해,

셋째, 대공산권 문호개방을 통한 북한의 개방유도와 민족공동체의 회복으로 남방 삼각체제와 북방 삼각체제 간의 화해와 협력의 가능성을 모색함으로써 북한의 강력한 배후 동맹세력인 소련과 중국, 동구권과 관계를 개선·증진하여, 북한의 일관된 '사회주의 혁명' 노선에 의한 대남전략을 억제하려는 것이다.²⁴⁾

중·소 관계개선은 한국과의 이해관계의 핵심인 경제적 이해관계가 정·경분리의 원칙아래에서도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이익'의 상실이라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정치적 관계개선을 서두를 이유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1990년대 국제정치 추세하에서 한반도의 관련 당사국은 상호 의존성(interdependence)이 증대되어 '탈냉전화', '탈이데올로기화' 및 '탈군사화'로 이해관계가 수렴되어 국가적 이익(national interest)이라는 잠재적 공동선(collective good)을 모색, 로우 폴리틱스(low politics)로 이행되어, 실질적 경제교류와 북방정책의 '연계적 시각'(linkage perspective)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²⁵⁾

註24) 이기택, "북방정책의 실상과 허상," 「월간경향」(1988.2), p.62.

25) 김진국, "한국의 태평양외교와 북방외교: 그 연계시각의 모색을 중심으로," 「외교」(1989.8), pp.8-9.

따라서 국제환경의 변화에 따라 북방정책도 중·장기 계획과 거시적 접근(macroapproach)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제1단계로 대상국들과 국교가 없는 가운데서 경제교류를 바탕으로 이루어지는 ‘사실상의 관계개선’, 제2단계로 ‘소극적 평화’(negative peace)에서 ‘제도화된 평화’(institutionalized peace) 단계로 진전한 ‘관계 정상화’, 그리고 제3단계에는 공산권과의 상호 선린관계의 회복·유지를 통하여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한의 관계정립’의 단계로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3. 분단갈등의 극복

인류사에서 한 국가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여 분단국가로 갈라진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처음 나타난 독특한 현상이다. 세계 대전에 의한 민족분단이란 인식에 입각할 때 결국 한반도의 분단상황은 미·소강대국간의 대립이라는 ‘국제적 갈등’과 남북한간의 대립인 ‘분단체제 갈등’ 및 남북한의 ‘내부적 갈등’이라는 세가지 차원의 복합구조를 갖는 것으로 규정될 수 있다.²⁶⁾

여기에서 특히 남북한간에 오는 분단갈등은 ① 이념적 대립, ② 정치체제 또는 정치권력간의 대립,²⁷⁾ ③ 경제·사회 문화적 경쟁관계와 이로

26) 김달중, “북방정책과 한·동구관계 개선의 의미,” 『민족지성』 (1989.8), p. 83.

27) 유성욱, “남북한 통일문제에 나타난 갈등연구: 이미지 분석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1986) 석사학위논문에서는 남북한의 갈등원인을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변수로 이미지(image) 변수를 설정하고, 이러한 이미지를 형성하는 일련의 인지(perception), 신념체계(belief system), 집단사고(group think), 미러 이미지(mirror image) 등을 주요분석개념으로 분석한 결과, 통일을 둘러싼 남북한의 갈등은 최고정책결정자의 상호왜곡된 적대적 이미지가 주요변수로 작용하였고 이러한 이미지로 인하여 서로를 호전적이며 부도덕한 집단으로 간주하였다.

인한 민족의 이질화 과정 ④ 이들 요소를 포괄하는 체제대립의 극단적 표현으로서의 군사적 대치라는 몇가지 대립요소가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단갈등으로 기인되는 고통과 불행을 현실적으로 겪으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은 역사의 현장에서 파생된 시대의 부조리위에 살고 있다.

민족구성원의 의지와 관계없이 강대국들의 정치권력 산물로서 규정지어지는 분단모순은 비록 타율에 의하여 만들어진 것이라 하여도, 민족통일의 문제를 또다시 외세에 의존할 수는 없는 것이다.²⁸⁾

따라서 민족의 자존·번영·자유를 위한 민족통일은 ‘되는 것’(We-rden)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것’(Machen)이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취해야 할²⁹⁾ 역사적 과업이라는 철저한 소명의식과 자기성찰의 아픔 위에서 분단체제(divided nation system)에 대한 재인식이 요청된다.

분단으로 인한 이산가족의 인도적 고통은 물론 남북한 모두가 경제발전, 사회복지, 정치복지, 민족자주성을 희생당하고 민족동질성이 파괴되어 상호간에 반목·불신·적대감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분단에서 오는 민족모순을 바르게 파악하고, 장애요인을 탐색함으로써 민족의 갈등을 푸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갈등으로 민족통일의 장애요인은 첫째, 남북한의 정치적 지배층이 분단극복 문제를 정치적 상황에 이용하여, 집권연장 및 통치의 한 방편으로 삼아 왔다는 점³⁰⁾

둘째,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긴장 완화 및 전쟁재발을 방지할 수

註28) 강성운, “통일논의의 제문제,” 「현대사조 강좌 제3집」(동국대학교 학생생활 연구소, 1985), p.166.

29)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1988), p.73.

30) 조선일보, 1989.8.24, ‘세계개혁교회 연맹(WARC)’ 관련기사 중.

있는 제도적 보장장치가 미흡하고, 통일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national consensus)가 부족하였다.

세째, 서신왕래·가족친지 방문등 인적교류, 스포츠·학술·문화·관광 등의 비정치적 교류, 물자교환·상거래 등의 경제적 교류의 단절로 민족의 이질성이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심화되어 가고 있다.³¹⁾

네째, 북한은 지금까지 일관되게 견지해 온 대남적화 통일의 헛된 망상에 사로잡혀³²⁾ 전체국민을 남김없이 편제화(regimentation)하고,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정치교화(political indoctrination)시키고 있다는 점이 민족통일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통일은 내일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이며, 다음 세대의 문제가 아니라 분단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의 책임이다.

남북한 관계에서 분단구조 해결에 가장 큰 장애물이 이념과 체제에 앞서 상호 불신·반목·질시하는 신뢰의 단절에서 비롯되었다는 현실을 직시할 때, 남북한이 ‘벽을 넘어 손에 손잡고’ 화해에 의한 민족공동체 형성(Korean national commonwealth)이야말로 갈라진 하나를 찾고 민족의 원형을 회복하는 척도가 될 것이다.

Ⅲ. 北方交流와 國際關係

한국이 놓여있는 국제적인 위치와 ‘지정학적 취약성’(geo-strategic vulnerability), 분단체제 특수성으로 유연하고 신축성있는 전방위의 교류를 채택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³³⁾

註31) 임채욱, “전통문화역량 축적부터,” 『북한』(1989.5), p.61.

32)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공산주의와 현대급진 사조』(1989), pp.89-101 참고.

33) 도바긴 이찌로, 이경남(역), 『앞으로의 한국』(정음사, 1984), p.64.

그러나, 신데땅트로 재편된 국제적 역학구조는 남·북간의 이념대결을 일단 접어둔 채 긴장완화를 지향한 대화와 협조의 분위기가 무르익게 하였다. 미·일·중·소 4강 모두 한반도 정세의 안정을 추구하고 있으며, 이러한 정책기조하에 한반도에 사실상 '두개의 국가'가 존재함을 상호 시인한다는 전제를 두고 중·소의 대한정책, 미국의 대북정책이 전개되고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한반도 주변 4강간에는 '89년 중·소 관계정상화, 일·소간의 영토반환문제 본격추진, 미·소간의 새로운 관계설정등 빈번한 교섭과 대화의 장이 마련되는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인다고 할 수 있다.

한반도에서 소련은 북한에 대한 조종자적 역할을 강화하고,³⁴⁾ 미국과 일본은 북한과의 능동적 접근을 시도하며, 중국은 개방정책의 실상 및 평화공존을 알릴 때, 북한도 대내외적 개방화의 압력에 동참하여 지구촌의 일원으로 협상의 테이블에 나오게 될 것이다.

1. 소련의 아시아전략 강화와 한반도

가. 아시아 전략강화

인류문명의 '제3의 파도'에 낙후되지 않기 위하여 Gorbachev는 소련이 당면하고 있는 「체제적 위기」(systemic crisis)를 타개하기 위하여 근본적·구조적 개혁을 시도하고 '힘의 균형'의 논리로부터 '이해관계의 균형'의 논리로 전환시키려는 새로운 외교노선 즉 신사고에 의한 대외정책 (new thinking in foreign policy)를 펴고 있다.

오늘날 소련은 초강대국으로서 뿐만 아니라, 내외적 요인으로 약화됐던 아시아에서의 국제적 지위를 회복하고 강력한 아시아 국가로서 대접받아

註34) 임동원, '소련의 새로운 사고,' 조선일보, 1989.7.7.

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³⁵⁾

1970년대 Breznev시대만 하더라도 동부시베리아와 극동 연해주를 개척하면서 아시아제국에 의한 '전아시아 회의'만을 주장했던 소련이 Gorbachev가 집권하고 블라디보스톡과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에서, 이제는 소련도 '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의 하나임을 선언하고 앞으로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중요한 정치·경제권을 행사할 뜻을 천명하였다.

이러한 소련의 아시아 정책구상은 중국 및 일본과의 관계개선을 중심으로, 미국이 소련의 승리를 거부하는 '상살전략' (countervailing strategy)에 의한 봉쇄를 저지하고 아시아에서 역할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중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 북한·일본·한국·중국과의 새로운 관계정립이다. 소련의 대아시아 전략목표는 세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경제적으로는 아시아·태평양국가들의 경제협력을 유지하여 극동, 시베리아를 개발하는 데 있다.

둘째, 정치·군사적으로는 군축·평화공세를 통해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미국 군사력을 약화시키려는 데 있다.

셋째, 궁극적으로 미국 주도하의 전후 아시아·태평양질서를 소련중심으로 재편하여 태평양국가로서의 소련의 전략적 입지를 강화하는 데 있다.

나. 교류확대와 문제점

소련은 서울올림픽에 대규모 선수단 및 각종문화·예술사절단을 파견하여 비정치성을 내세운 치밀하고 계획적인 '문화공작'을 한국민에게 선사했으며 그것이 그들의 예상을 뛰어넘어 친소무드(비록 올림픽 기간에 국한되었지만)를 조성하는 외교적 성과를 올렸다.³⁶⁾

註35) 안택원, 「소련정치의 체계적 이해」(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1986), pp.381-393.

36) 박동호, "주변 4강의 한반도정책 전망," 「공산권 연거 (1989.1), p.17.

Gorvachev는 크라스노야르크 방문연설에서 한국과의 경제교류를 실시하자고 제안,³⁷⁾ 1989년 4월 한국의 무역진흥공사와 소련 상공회의소 간에 무역사무소를 개설하였다. 이를 계기로 전시회 및 박람회의 상호참가·경제인사의 교류축진을 포함하는 통상협조 약정에 서명하였다. 기타 소련측 제의내용을 살펴보면, 경제사절단 초청 및 양국 경제협력위 설치제외, 나호카 Trade Center 건설 및 차관공여, 시베리아 원목가공공장건설 요청, 항공노선개설, 사할린 교포문제 직접교섭 등 다소 경쟁적으로 한국의 유치를 서두르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에도 영사기능을 갖는 외교관계 수립에는 반대 입장을 표명해 가까운 장래에 한국과 정식국교를 맺을 의향은 없고, 경제교류를 중심으로 한 비정치적분야에 국한하여 교류하고자 한다.

그러나, 성공적인 경제개혁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군사적·정치적 긴장관계가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개혁은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계속사업이므로, 우리의 진출방안 역시 단기·중장기 목표와 정책적 안목을 갖고 추진하여야 한다. 또한 경제적 이해관계 뿐만 아니라 정치적·외교적 정상화, 나아가 민족통일을 위한 전단계로서 국제적 여건조성 및 우회적 통일여로의 접근임도 주지하여 신중하게 대처하여야 한다.³⁸⁾

소련은 우리 나라와 적극적인 경제협력을 희망하고 있으나 정부차원의 공식관계 수립에는 북한을 의식,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대소교류 증대방안은 스포츠→경제→사회과학→문화예술→언론·출판→과학기

註 37) 이 제안에 앞서 88년 8월 27일부터 10여일간 박철언 대통령보좌관이 비밀리에 소련을 방문하였다. 그는 소련 당중앙위원 게오르기 아르바토프를 통하여 고르바초프에게 전달한 노대통령의 친서내용은 “한국은 세계의 모든 나라와 화평관계를 유지하기를 원하고 있으며 소련 또한 예외가 되지 않는다” 하여 이채를 띠었다.(1988.12.29. 동아일보)

38) 임양택, “북방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민족지성』 (1989.8), p.53.

술분야로 점차 확대 개선해 가야할 것이다. 이에 대한 향후 대처방안은 첫째, 소련이 주변열강을 고려함이 없이 한국과의 독자적인 관계개선을 시도하기 어려우므로, 미·소간의 전략무기협상 진전상황, 대아시아·태평양 정책 및 개혁정도, 국내정치 상황과 좌경세력 문제 등을 배려한 총체적·입체적 시각에서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소련에게는 한국과의 경제적 실리만큼 북한과의 우호관계도 중요하다. 39) 북한요인이 한국과의 관계개선에 큰 장애가 된다. 만약에 북한의 반대에도 소련이 한국과 관계정상화를 강행할 경우, 엄격히 정경분리를 고수하는 중국에 편향할 가능성이 소련을 조심스럽게 한다.

셋째, 무역관계는 개방하되 COCOM 규정이행에 역점을 부여하고, 정부간 합의가 필요한 것은 부처간 협의를 거치고, 상호주의에 입각하되 기존 우방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상호선린관계에 금이 가지않는 방향에서 일관성을 갖고 추진한다.

네째, '60년대말 일본의 선례를 감안하여, 기간산업보다는 서비스업, 주거환경분야, 소비제품 분야를 우선추진 위험부담을 덜고, 미·일등 서방기업과의 합작 진출로 경험과 기술을 축적하며, 대규모 사업의 경우에는 반드시 「투자보장 협정」이 체결되어야 한다.

2. 중국의 개방화 정책

가. 중국외교의 방향

중국은 중국식 경제이론인 '국제대순환론'에 근거하여 그동안 추구해

註39) 실제로 소련은 한국과의 관계가 88년에는 리이세프 체 1 부국방상을 단장으로 하는 군사대표단을 평양에 파견하였고, 12월 세바르나제 의상을 북한에 보내 한-소간의 경제교류계획을 설명하고 북한의 양해를 구하는 것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다.

왔던 내향적 자력갱생정책에서 벗어나 외향적 발전론을 추구하고 있다.

미·소 신데매파트와 중·소정상회담으로 중국의 정책이 실용주의 노선의 방향을 선회하여, 급성장한 한국의 경제발전 모델을 원용하고자 비정치적·비공식적 영역에서지만 실질적 관계가 개선되고 있다. 과거 계급투쟁론의 강조에 따라 가장 중요한 가치로 인식되었던 혁명과 이념적 가치가 퇴색하면서 경제적 가치가 무엇보다도 부각되는 중국사회의 가치관의 변화는 외부세계에 대한 중국의 인식변화에 중대한 영향을 미쳤다.

따라서 중국의 대한반도 정책은 과거 대북한정책의 단순한 연장선상에서 형성되어 온 ‘고도의 일원화’ 경향에서 탈피 ‘대남한 관계’가 또 다른 하나의 축을 형성해 가는 ‘이원화’의 과정을 통해 북한과의 정치·군사관계를 그대로 유지한 채 남한과는 경제적인 우위를 십분 활용하여 중국내에서 진행중인 경제개혁에 필요한 물자·자본 및 기술을 습득하는 남북한 양측에 대한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여 국제적인 위신을 높이려고 하는 것이다.⁴⁰⁾

중국은 ‘독립·자주 외교노선’을 추구하고, 경제발전과 안보를 동시에 만족시키려는 이중정책과 이중전략에 의해 새로운 평화공존의 노선을 취하고 있다.⁴¹⁾

이에 따라 중국은 북한에 대해 개혁개방정책을 촉구하는⁴²⁾ 한편 미·일 등 서방국가들과의 접촉을 주선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의 대중국 관계발전 전략의 궁극적인 목표는 관계 정상화에 있으나, 이러한 목표는 양국의 특수한 관계와 ‘북한인자’가 직접적으로 투

註 40) 허삼수, 「2천년대의 중공」(웅성출판, 1988), p.142.

41) 허만, 전계서, pp.247-248.

42)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편),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전망」(민중사, 1985), p.58.

영되어 비정치적 영역, 특히 경제 발전관계를 통하여 상호의존성을 개발해 가는 기초위에 달성해 가야 하는 제약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현재와 같은 간접교역에서 직접교역→무역대표부 설치→직접투자·합작·기술이전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협력이 전개되는 과정을 생각하면서 ‘관계정립’에 점진적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교류동향과 문제점

중국은 '70년대 말부터 4개 현대화 정책의 추진에 국가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두고⁴³⁾ 개혁·개방정책을 펴왔다. 이미 아시아 개발은행(ADB)에 가입, 최근 제24차 ADB 총회를 북경에 유치함은 물론 태평양협력회의(PECC)의 가입 등 아·태 경제권에 편입하여, 21세기 아·태시대의 공존적 경쟁체제(peaceful coexistence)로의 모색을 통하여 ‘평화와 번영’이라는 공동선(collective good)에 적극 참여하고 있다.⁴⁴⁾

적극적인 개방정책을 추진하는데 대륙과 해양을 연계하는 중추적·가교적 역할은 더욱 증대되며, 일본과의 무역역조 현상을 완화하고 수입선 다변화를 위하고, 서방측으로부터 경쟁적으로 자본을 도입하기 위해서 중국의 한국에의 접근은 심도있게 진행될 것이다.

한국의 경우, 날로 심해가는 보호무역의 장벽과 일부 지역과 국가에 편향된 교역구조를 다원화해야 할 필요성 위에 새로운 교역파트너로서, 서해안 개발실현의 대전제로서 중국과의 경제교역의 당위성이 있고, 중국 경제발전의 동진화 추세에 따라 대한 경제교류에 대한 중국의 절실성과 결합되어 한·중 경제의 상호 보완관계를 형성해 가야할 것이다.⁴⁵⁾

註 43) 허삼수, 전게서, p.30.

44) 김국진, “한국태평양 외교와 북방외교,” (1989), p.9.

45) 박두복, “한·중 관계의 발전-그 전망과 방향,” 『민족지성』(1989.8), pp. 74-75.

한·중교류 확대전망과 상호관계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장애요인으로

첫째, 급격한 정치·사회·문화변동으로 예상치 못할 보수반동세력에 의해 개방정책이 대폭 수정될 수도 있으며, 특히 지금의 40대들이 문화혁명의 주역으로 이데올로기적 성향이 강하다는 것도 매우 중요한 변수로 작용된다.⁴⁶⁾

둘째, 한·미간의 군사적 동맹관계가 냉전체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과의 정치·외교의 기본원칙을 수정하지 않고 현상유지를 꾀할 때는 대중국 접근에도 한계성이 노출되리라 보여진다.

셋째, 대중국거래에 기업체의 불안감이 높으며 정치적 상황변화에 따른 위험부담에 대한 정부차원의 보상을 기대하기 어렵고 미수교국으로 불리한 조치와 간접비용 증대도 교역상의 어려움이 된다.

끝으로 적대관계에서 상호공존 관계로 접어든 한·중관계에서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은 지나친 낙관보다는, 냉정하면서도 전시효과적이 아닌 조용한 실리외교를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3. 韓-東歐 교류와 북방외교

대내적으로 민족자존 의식의 증대와 자주외교의 열망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북방외교」라는 전방위의교를 전개하게 됨으로써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크게 제고시킬 수 있는 가시적 실적을 거두었다.

1989년 2월 1일 헝가리와의 국교정상화는 우리의 북방외교를 한차원 격

註 46) 중국의 對韓 협력창구원 「국제무역촉진위원회」(CCPIT)는 최근 중국을 방문한 한국의 「국제민간경제교류협의회」(IPECK) 실무단에게 민간협력위원회를 무기한 연기할 것을 요청하였다.(조선일보, 1989.8.30).

이는 ① 협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한 일시적 행동인지, ② 중장기적으로 두나라의 관계를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생된 본질적인 조치인지는 더 검토해 보아야 할 것이다.

상시키는 패거리로서, 종래 서방만을 상대로 한 소극적인 외교정책에서 과감히 탈피하여 다원화시대에 부응하는 신축성있는 유연한 자세를 갖게 되었다.

북방외교의 실천적인 면에서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이 동구권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이다. 즉 이는 한국의 보다 발전된 차원의 대공산권관계를 기정사실화 시켜줌으로써 중국과 소련에 대한 관계발전의 명분을 제공해 줄 수 있을 뿐 아니라,⁴⁷⁾ 어떤 의미에서는 대중·소 관계개선보다 더 효과적으로 북한의 태도변화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⁴⁸⁾ 또 하나는 대동구 관계개선의 활성화적 추진은 남북한관계와 대중·소 관계 개선의 두축사이에서 정채될 수도 있는 한국의 북방정책에 지속적인 추진 동인을 부여함으로써, 4강체제에 편입되어 현상고착(status-quo)이라는 분단의 역학구조에서 신축성과 자율성이 제약되었던 과거로부터 탈피하여, 국제질서의 재편과정에 한국의 역할을 끊임없이 부각시킬 수 있다는 장점을 갖는다.

1989년 현시점은 절대 안전보장 개념을 이론적 지주로 삼고있는 냉전의 사고에서 벗어나, 객관적으로 상황을 판단, 대중·소간의 쌍무간 또는 다자간이 참여하는 방향성을 가지고 단순히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질서로 향하는 국제환경에 잘 대응하는 전략·전술을 개발·수용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註47) 김달중, 전개논문, p.90.

48) 조선일보, 1989.9.29. 「한국과 폴란드간에 국교수립을 위한 교섭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의 대화가 순조롭게 연내에 양국간에 국교관계가 정식으로 맺어질 것」이라고 보도. 한편 지난번 한국-헝가리 국교수립에 항의, 현지의 대사를 소환했던 북한은 폴란드에서 똑같은 사태가 발생하여 사회주의권내에서 고립상황이 확대될 것을 우려, 현재 폴란드내에서 맹렬하게 한-폴란드 국교 저지 공작을 벌이고 있다고 보도.

이러한 때에 지리적으로 한반도와 떨어져 있으며, 전략적으로도 기존 우방국에게 큰 위협이 되지 못하는 동구권과의 관계발전은 북한의 방해와 미·일의 우려를 극소화시키면서 이른바 정치적 파급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 특히 북한의 방해책동으로 대중·소 관계개선이 명백히 한계점에 왔을 때 대동구권과의 관계개선의 중요성은 더욱 부각되는 것이다.

4. 북방정책과 대북관계

북한·중·소 관계, 이른바 북방 삼각관계는 북한이 실리를 추구하고자 중·소를 왕복하는 ‘등거리’ 외교였다.⁴⁹⁾

북한과 소련 사이에는 소련이 북한정권의 산파역이었다는 관계가 있고, 북한과 중국 사이에는 6·25 당시 중공참전으로 실증되듯이 피로 맺어진 唇亡齒寒의 관계에 있었다.⁵⁰⁾ 대륙세력의 사회주의블럭에 대해 남방 삼각협력 체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일간의 기본조약에 의해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국제적 역학구조아래 한국의 신축성있고 유연한 북방 외교는 북한에게 정치·사회·경제 제분야에 고립감과 좌절감을 깊게 안겨 주었다. 따라서 북한은 ‘교차교류’와 ‘교차승인’을 ‘2개의 조선’을 영구화하는 음모 혹은 분열책동으로 맹렬히 비난하면서, 한국의 북방 외교 자체에 대하여 보도하지 않고 논평을 회피하는 자세를 취해왔다.

한국의 북방정책은 북한의 계속적인 반대와 목살때문에, 상당한 기간동안 무역 및 경제협력 단계의 비정치적 영역을 넘어서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북한은 '80 년대의 신데땅트시대에 불어오는 훈풍과, 혈맹국을

註 49) 한국기독교 사회문제연구원(편), 전계서, p.53.

50) 那須賢一(외), 편집부(역), 「중국의 선택」(한겨레, 1985), pp.291-298.

자처하던 중국·소련에서 불어오는 개혁과 개방의 바람, 남한에서 일어나는 민주화 열기와 사회주의 국가로 번지는 국교정상화, 북한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의 요구’라는 사면초가에 빠져 있다. 이러한 딜레마에 대하여 북의 개방 가능성은 ① 과거 중·소관계가 악화되면서 중국과 소련은 북한에서의 영향력 경쟁을 제로섬게임(zero-sum game)의 측면에서 파악하여 왔으나, 중소의 관계정상화로 영향력 경쟁 완화추세이다.⁵¹⁾ ② 남한과 경제전쟁을 하고⁵²⁾ 있다는 인식과 ‘테크노크라트’와 온건파 인물의 등용, ③ 동구 및 중·소의 개방화물결과 대내적 과급효과 ④ 남한의 신축성있는 북방외교로 고립화를 피하기 위하여, 끝으로 김일성 주체사상의 경직성이 워낙 심대하여 정치·사회·문화의 한계와 김정일 후계체제 구축이 어려우므로, 변화의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⁵³⁾ 그러나, 변화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북방외교의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내부적 요인들로서, 북한의 주장과 입장은 ① 남한의 북방외교에 대한 북한의 적대적 거부 반응, ② 대외개방의 확대에 야기될 경제적 중속문제에 따른 자생력이 부족하고, 자력갱생의 붕괴 위험 ③ 성장한 한국경제력과 한국 경제개발에 대한 적대적 거부 반응, ④ 철저한 반미·반일노선과 친중·소노선,⁵⁴⁾ 등으로 들 수 있다. 국제적 제약요인으로는 ① 소련이 한국

註51) 김호길, 전계논문, pp.11-12.

52) 조선일보, 1989.8.29 북한은 중국과 소련에 인접한 북쪽 국경지대에 「경제특구」를 설립, 90년중 경제특구에 「조선무역센터」가 문을 열어 국제투자의 촉진을 담당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는 북한도 개방화의 물결에 청신호를 보낸 것으로 파악할 수 있겠다.

53) 조선일보, 1989.8.15., 「8.15대 특집:북한집중탐구」는 정치·사회·문화·경제·의식주에서 언어와 명절에 이르기까지 같은 민족이면서 남처럼 산 44년 동안 민족의 동질성이 회복될 수 없으리만큼 이질화된 상황을 잘 나타내고 있다.

54) 임양택,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민족지성」(1989.8), p.112.

과의 관계정상화를 강행할 경우 북한은 정경분리를 고수하고 있는 55) 중국에 편향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 ② 중국은 소련에 비해 북한이라는 부담이 정치·경제적인 면에서 상대적으로 크기때문에 기존의 '순치관계'를 깨뜨릴지도 모르는 모험을 강행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56) ③ 미국은 한반도의 북방정책 중 대공산권의 폐쇄사회를 개방체제로 전환, 유연한 국제환경조성에는 긍정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나, 한국의 대공산권교류가 전략적 잠재능력을 57) 강화시켜 줄 때는 부정적 태도를 취하고, 58) 소련역시 미국과의 화해를 추구하는 입장에서 한국과의 접근에서 미국을 불필요하게 자극하는 것을 삼가할 것이다.

북방정책이 '국내적 요인'과 '국제적 요인'으로 남북한 관계에 걸림돌이 된다하더라도, 대결관계에 있던 대륙국가와 동구권 국가들과의 관계개선을 통한 전방위외교를 추진, 남북한관계를 확대·발전시켜 통일에의 분위기를 증폭시켜 보자는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방법으로

첫째, 북방외교가 장기적으로는 남북한 관계개선에 도움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남북관계개선에까지 연결되지 않을 것이므로 대공산권교류와 아울러 북한과의 관계개선이나 통일논의를 다양한 채널로 강구하고, 59)

둘째, 궁극적으로는 평화적 '민족통일' 이므로 분단구조의 영구화를 획책하는 개량국면은 상호간에 타파하고, 경제교류를 통한 관계개선과 아울러

註 55) 최선철, "중국의 대아·태 정책," 「외교」(1989.6), p.40.

56) 고승운, "한국·북한·중국의 삼각관계," 「공산권연구」(1989.3), p.58:북한의 외교노선이 84년이후부터 친소편향 노선을 유지해 오고 있는데다 소·북간의 군사협력강화가 중국을 자극, 우리의 대중국 접근에 제약점으로 작용된다.

57) 소위 대공금수품목(COCOM List)을 수출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하고 있는데서 미국의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58) 박경서, "북방정책의 가능성과 미국의 태도," 「민족지성」(1989.8), p.102.

59) 이호재, "북방외교와 남북한 관계 개선," 「민족지성」(1989.4), pp.119-120.

러 남방·북방 삼각관계를 잇는 ‘공포의 균형’(balance of terror)인 군사적 대결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서 유연성·신축성을 발휘해야 한다.

세째, 북방정책의 끝은 민족의 「자주·평화통일」이므로 반목·질시·불신의 대결구조의 제로섬(zero-sum game) 관계가 아닌 일시 소원해진 형제관계로 보고, 궁극적 재결합(reunification)을 지향하는 민족 동질성의 회복과 민족공영을 위한 공통분모를 찾는 데 주력하여야 한다.

네째, 북방외교에서 무역·경제협력에 이은 성급한 외교승인까지 단숨에 하려는 성급함이 있는데, 경제와 정치가 같은 것은 아닐지라도 상호 밀접히 연관되어 있는 점을 감안하여, 경제라는 밑천을 잘 활용하여 정치라는 자산을 잘 늘려나갈 수 있는 ‘냉정’과 ‘여유’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참고 기다리는 자세이다. 진통을 잘 견디어 내면 옥동자를 분만할 수 있듯이 노력과 인내를 필요로 한다. 민족의 문제는 상거래에서의 손익계산만을 따지는 흥정(bargaining)이 아니므로, 민족사의 장래와 소명의식에 따라⁶⁰⁾ 역사앞에 겸허한 자세로 인내할 필요가 있다.

Ⅵ. 統一環境의 造成

통일을 이룩하는데는 두가지 요소가 갖추어져야 한다. 우선 통일을 추구하려는 통일의지가 있어야 하고, 이 의지가 실현될 수 있는 통일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 의지의 성격과 강도는 환경해석의 전제가 되며, 반대로 환경조건은 의지설정의 기초가 된다는 뜻에서 이 두가지는 원인 조건으로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⁶¹⁾

註 60)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1988), p.175.

61) 이상우, “한반도 통일과 국제환경,” 「통일문제, 제 28집(1986), p.71.

우리는 통일의지를 통일의 원동력이 되는 민족의식(nation ethos)에서 도출해 낼 수 있다. 민족의식과 통일의지가 강할수록 통일을 추진하는 힘이 강하고 미래지향적 창조적 통일이 가능할 것이다.

이데올로기는 언제인가 계속 바뀌어 갈 것이나 민족은 영원하다는 대명제아래, 44년의 분단사에서 동족간의 반목·불신과 이질화현상은 통일의 과정에서 신뢰와 화합을 바탕으로 하는 민족일체감으로 대체되어야 한다. 민족화합과 일체성 회복이야말로 민족의 내면적 통일을 의미할 뿐 아니라, 정치체제적 통일의 바탕이 되어 한민족공동체(the Korean National Commonwealth) 형성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당위적·현실적 명제아래 우리의 통일 환경의 성숙은 상호를 인정하는 바탕위에 공존공영하면서 개방과 교류·협력을 통해 민족동질성을 회복·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사회적·문화적·경제적·복지공동체를 제시하고 있다.⁶²⁾ 따라서 통일의 성격은 어떤 방법이든지 통일만 하면 된다는 「통일지상론」에서 탈피하여 정치통일에 앞서 민족통일을 먼저 성취하고 민족의 단일성을 회복하고, 제1단계로 비정치적 통합에 주력한 뒤, 제2단계로 통일협상을 통해 ‘단일정부’를 구성하자는 한민족공동체 구상으로 연결된다. 이러한 연결고리를 토대로 남북한 인적교류·자유왕래·경제협조 등의 확산을 통해 하나의 사회로 통합시켜 나가려는 노력이 중요하다. 따라서 ‘분단체제’에서 오는 모순을 극복하고 정치적 안정과 통일에 관한 「국민적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자주적 통일의지의 환경이 성숙될 것이다.

통일예의 환경이 무르익을 때 북한을 국제적 미아로 한반도의 끝에 방치해 둘 것이 아니라 개방과 개혁의 시대에 ‘선의의 동참자’로 자리할 수 있도록 넌제로섬(non-zero-sum game) 관계로 파악, 일

註62) 조선일보, 1989.8.16. 노대통령 「8.15 통일원칙」 의미

시 소원하였던 형제관계로 보고, 궁극적으로는 재결합을 지향하는 민족의 공통분모인 ‘和靜思想’과⁶³⁾ 退溪 李滉과 栗谷 李珣가 주장한 ‘理性’과 생활에너지의 역동성(dynamics)을 잘 조화시킨 ‘理氣論’에 입각하여 변화하는 국제환경에 적응하고, 남북한 상호 ‘조화와 통일’을 강조하는 ‘中和思想’으로⁶⁴⁾ 재결합하여야 할 것이다.

알타체제로 상징되는 동서 냉전구조의 국제질서는 그간 경직된 양극화 체제에서 자국의 평화와 안보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다원화국제체제(multipolar international system)로 이행되어 국가와 국가간의 활동이 그만큼 확대·분산되고 상호영향을 주어 대화·접근·교류에 의한 상호의존체제(interdependence)가 보편화되고 있다.⁶⁵⁾

이러한 국제환경을 좀더 유리하게 이용, 우리의 북방정책이 ‘90년대에 단순히 대륙의 공산주의 세력과 관계개선에만 그치는 소극적 정책이 아니라 관계개선을 바탕으로 북한사회의 닫힌 문을 열어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하고,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 적응력있는 ‘다방의 외교’이어야 한다. 경제적 실리추구는 한국이 비교적 중·단기적으로 획득할 수 있는 세부 목표이며 대공산권과의 관계개선을 통해 간접적으로, 우회적 방법으로 한반도의 긴장을 완화시켜 평화통일의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안보적 고려는 장기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평화통일 기반의 ‘우회적 조성’의 장기목표는 북한의 태도에 달려있으며 ‘국제체제’차원의 노력만으로 달성되기 어려우므로, 당사자간의 진지한 노력과 성의있는 자세위에 분단모순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한다.

註 63) 원효대사가 주창한 재화합과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조화로운 생활을 강조한 사상.

64) 中和思想: 두개의 다른문화와 민족사이에 조화와 통일을 강조하는 전통적인 한국사상.

65) 허만, 전계서, p.182.

이런 측면에서 북방정책이 갖는 “국제적 차원”과 한국문제의 한국화에 따른 “민족적 차원” 및 분단으로 인한 “분단 차원”이 결연성을 갖고 모색되어야 하며, 대 중·소 관계개선의 제한점과 다원화된 국제관계에 부응하는 대동구 관계개선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된다.

동서 신데땅트가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왼쪽 날개가 되고, 실효성있는 대북정책과 대동구 정책이 현 시점에 북방정책의 오른쪽 날개가 되고 국내 정치의 안정과 민주화가 심장이 되어 힘찬 박동을 치며 뜨거운 심폐기능을 다할 때, 민족·민주·자유·복지의 공동체가 용해되어 ‘새로운 국민형성’ (new one nation-building)이라는 ‘창조적 통일’의 파랑새가 한반도의 뛰는 민족혼 (volksgelst) 위에 깃을 접을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 김병오, 「민족분단과 통일문제」, 서울:한울, 1985.
- 국토통일원, 「민족통일로의 전진:국토통일원 20년」, 1989.
-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공산주의와 현대급진사조」, 1989.
-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민주통일론」, 1988.
-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통일문제해설」, 1989.
- 동아일보조사연구실(편), 「통일은, 어떻게 할 것인가?」, 서울:동아일보사, 1988.
- 안택원, 「소련정치와 체계적 이해」, 진주:경남대학교극동문제연구소, 1986.
- 이경남(역), 「앞으로의 한국」, 서울:정음사, 1984.
- 이상우, 「통일한국의 모색」, 서울:박영사, 1988.
-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편), 「한반도 주변정세와 남북관계의 전망」, 서울:민중사, 1985.
- 허삼수, 「2천년대의 중국」, 서울:음성출판사, 1988.
- 허 만, 「한반도와 외교정책론」, 서울:교육과학사, 1988.
- 편집부(역), 「중국의 선택」, 서울:한겨레, 1985.

〈 논 문 〉

- 강성윤, “통일논의의 제문제”, 「현대사조강좌」, 제3집, 동국대학교학생활연구소, 1985.
- 김달중, “북방정책과 한-동구관계개선의 의미”, 「민족지성」, 1988.8.
- 김명기, “북방정책과 국제법”, 「외교」, 외교안보연구소, 1988.12.
- 김국진, “한국의 태평양외교와 북방외교:그 연계시각의 모색을 중심

- 으로”, 「외교」, 외교안보연구소, 1989.8.
- 김영준, “평화통일의 논의”, 「대학사회와 이데올로기」, “대학이념교육교수협의회, 1987.
- 김호길, “한국-중국 관계변화가 북한에 미치는 영향”, 「국제문제논총」, 부산외국어대학교국제문제연구소, 1988.
- 고승운, “한국·북한·중국의 삼각관계”, 「공산권연구」, 1989.3.
- 민병천, “90년대를 전망한 우리의 통일방안 연구”, 일해연구논문시리즈 88-01.
- 박경서, “북방정책의 가능성과 미국의 태도”, 「민족지성」, 1989.8.
- 박두복, “한·중 관계의 발전: 그 전망과 방향”, 「민족지성」, 1989.8.
- 박동호, “주변 4강의 한반도 정책전망”, 「공산권연구」, 1989.1.
- 안병훈, “북방외교의 과제와 전망”, 「외교」, 외교안보연구소, 1988.7.
- 이기택, “북방정책의 실상과 허상”, 「월간경향」, 1988.2.
- 이범석, “선진조국의 창조를 위한 외교과제”, 국방대원 연설문, 1983.
- 이호재, “북방외교와 남북한 관계개선”, 「민족지성」, 1989.4.
- 유성옥, “남북한 통일문제에 나타난 갈등연구”, 고려대학교대학원석사학위논문, 1986.
- 유재갑, “90년대의 한국안보의 방향”, 「한국안전보장논총」, 제 18집, 안전보장협의회, 1988.
- 임동원, “소련의 새로운 사고”, 조선일보, 1989.7.7.
- 임양택, “북방정책의 현황과 발전방향”, 「민족지성」, 1989.8.
- , “남북한 경제교류의 현황과 전망”, 민족지성, 1989.8.
- 임채욱, “전통문화역량 축적부터”, 「북한」, 1989.5.
- 정세현, “남북한 관계와 통일문제: 연구현황과 방향”, 「국제정치논총」

제 28 집 제 1 호, 1988 .

정태윤, “진보정치연합의 통일정책”, 「민족지성」, 1989.4.

하영선, “한국외교정책 분석틀의 모색”, 「국제정치논총」, 제 28 집
제 2 호, 1988 .

한종기, “한국정부의 대북한 정책”, 「민족지성」, 1989.3.

최선철, “중국의 대아·태 정책”, 「외교」, 외교안보연구소, 1989.6.

韓半島 統一模型으로서의

段階的 國家統合方案 研究

— 複合的 統一모델의 韓半島

適用可能性을 中心으로 —

鄭 永 善

(全北大 政治外交學科 4年)

目 次

- I. 序論
- II. 韓半島 統一의 價値前提와 方向
- III. 國家統合理論으로서의 複合的 統合모델
- IV. 複合的 統合모델의 韓半島 適用과 評價
- V. 새로운 統一模型으로서의 段階的 國家統合 모델
- VI. 結論

I. 序 論

1. 문제의 제기 ; 연구의 목적

우리는 해방 후 통일된 민족국가를 이루지 못하고 남북으로 분단되어 「6·25」라는 골육상쟁의 민족적 비극을 경험하고 오늘날까지 분단된 체제의 반세기 동안을 통일의 염원을 불태우면서 살아왔다.

이 시대에 있어서 통일은 우리의 역사적 사명이지만, 뜨거운 통일의 열기와는 달리 아직 구체적으로 통일작업이 진행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가울 뿐이다. 더구나 우리는 통일의 추구보다는 상호비난과 불신의 폭을 넓혀 왔으며, 이념적 독선과 아집에 찬 일방적 통일방안을 주장하거나, 오늘날 한민족이 처해있는 현실을 무시한, 지나치게 이상주의적인 통일방안을 고집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이런 지난날의 경험에 비추어 이제는 분단에서 비롯되는 소모적인 체제경쟁을 회피하고 상호신뢰와 민족동질성의 회복을 위하여 민족사적 당위성에 입각한 통일에의 접근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작금에 논의된 통일론의 개방화는 민주화 시대에 발맞춘 현상이지만, 분단을 극복하려는 제통일논의는 자주적·평화적인 방법하에서 남북한 당국간의 합의는 물론이거니와 국민적 합의에 근거하여 진행되어야 한다.

게다가 최근의 국제환경은 남북한의 共存과 統一에 유리한 분위기를 제공하고 있다. 즉, 중단거리 핵무기에 관한 군축협상을 비롯 美·蘇間에 戰後 가장 활발한 신데탕트의 분위기가 고조되는가 하면 고르바초프 소련 공산당 서기장의 글라스노스트(개방·공개)와 페레스트로이카(개혁·재건)정책에 이은 동구권의 자주적 개혁물결, 그리고 中·蘇 頂上會談 실현을 통한 냉전의 해빙 등 세계적인 평화무드가 무르익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때를 같이 하여 우리나라에서도 헝가리와 정식 국교를 맺고 중

국, 소련 및 동구권 제국들과 경제협력을 강화하는 등 北方政策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때에 우리는 좀 더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고, 통일에 대한 전국민의 관심과 노력을 집중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좀 더 바람직하고 실현 가능한 통일모델을 설정하고 거기에 남북한 당국 및 국민의 합의를 결집시켜야 한다고 보는 것이다.

2. 연구범위 및 방법

한반도 통일문제를 다룸에 있어서 그 핵심을 이루는 내용은 먼저 어떠한 방법과 과정을 거쳐 통일을 성취할 것인가의 문제와 그 방법의 실현성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다.

요컨대 아무리 정교하고 합리적인 절차와 방법을 담고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북한측이 도저히 감당하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라든지,¹⁾ 남북분단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인정한 바탕위에서 전개되는 실용주의적인 통일방안이 아니라면 그 제안은 ‘대답없는 메아리’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제부터 민족의 궁극적 목표인 통일조국의 미래상을 반영하거나, 남북한의 평화적 공존의 기틀위에서 양 체제를 인정하며, 동시에 민족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民族共同體의 이념을 반영하고 있는 통일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²⁾

본 논문은 이러한 취지를 가지고 大別하여 세가지 측면에서 접근하고

註1) 예컨대 “총선거 실시” 방법에 있어서 토착인구 비례에 의한 방법은 인구 면에서 열세인 북한측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사항이라 생각된다.

2) 이흥구, “민족화합과 민주통일방안의 역사적 이념적 조명”, 이상우(編), 「통일한국의 모색」 (서울:박영사, 1987), pp.162-181.

있는 것으로서 첫째는, 민족·번영과 동질성의 회복을 위한 民族共同體를 설정함에 있어서, 國家統合의 중간적 내지는 과도적 단계로서 複合的 統合모델을 채택했다.

둘째는, 複合的 統合모델 중에서 대표적인 것으로 國家聯合과 聯邦國家를 채택해서 두 모델의 기본 논리 및 그에 따른 한반도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해 보았다.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통일모델을 설정하기 위하여 남북한의 통일론 및 재야를 비롯한 사회 각계각층의 통일논의를 수렴하고 단계적 통일방안을 위한 과감한 시도를 전개하였다.

또한 연구방법은 문헌과 기존 연구자료 및 최근 시사자료에 의한 記述的 접근방법에 의했으며 比較分析的 설명을 가하였다.

II. 韓半島 統一의 價値前提와 方向

1. 한반도 통일의 價値前提

통일은 단순히 남북한의 영토적·정치적 통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보다 평화롭고 정의로운 民族共同體를 이룩하기 위한 협동작업이다.

따라서 통일문제는 각각의 이념적 독선과 아집에 따른 채 체제유지를 위한 권력의 도구가 되어서는 아니되며, 현실을 무시한 채 감정적 차원에서 폭발하는 욕구분출의 수단도 아니된다.

따라서 통일논의는 민족사의 숭고한 사명감에서 출발해야 하며 다음의 몇가지 價値前提를 가진다고 본다.

먼저 통일은 平和成就의이어야 한다. 통일은 우리민족의 삶을 보다 정의롭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하며, 아울러 세계평화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統一至上主義的 접근은 위험하며 자칫 무책임하기 쉽다.

두번째로 분명히 하여야 할 것은 통일논의는 民族主義的인 名分의 차원과 政治 現實的 차원을 포용하며 두 차원 중 어느 한쪽에만 치우쳐

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즉 통일논의에 있어서 정치현실에 압도되어 민족주의적 의지가 위축되어서도 안되며 그렇다고 공허한 명분론에 빠져 현실적 문제타결의 기회를 저버려서도 아니된다.³⁾

세번째로 우리가 분명히 해야할 주요한 가치전제는, 통일논의는 마땅히 國民合意的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통일정책의 논의와 그 입안 및 실천과정에서 민족구성원 모두의 통합이 요구되며, 그것이 정부나 집권엘리트, 혹은 일부 기술계층 및 전투적인 반체제 집단에 의해 주도되어서는 안된다.

따라서 有關 情報의 공개와 다양한 계층 및 집단의 참여, 그리고 폭넓은 公論化 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참된 言論自由와 민간차원의 활발한 연구활동 및 문제제기, 그리고 정책결정의 민주화가 두루 보장되어야 한다.

네번째로, 통일문제에 관한 구체적인 남북협상과정에서 양측은 마땅히 승부지향적이 아닌 妥協指向的 행태를 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북한관계의 개선이나 통일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중 상대방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어야 하며, 이는 쌍방에 도움이 되는 조치이거나, 일단 상대방에게 더 유리하지만 상호간의 신뢰구축을 위하여 부득이 이쪽에서 양보해야 할 조치여야 한다.

대체로 체제에 자신이 있는 측일수록 단기적으로는 자신에게 불리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쌍방에게 도움이 되는 체안을 흔쾌하게 제시하며, 또 그럴수록 상대방 제안을 수용하는 폭도 크다.

그러나 자신의 체제가 취약하거나 그 주민을 신뢰하기 어려운 경우, 한껏 움츠리고 부정적 반응만을 일삼는게 고작이다.⁴⁾

註3) 안병영, “한반도 통일의 가치전제”, 『한반도 통일의 이념과 논리』, 통일문제 세미나집,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1988, pp. 2-8.

4) 안병영, 앞의 논문, pp.8-9.

마지막으로,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럴듯한 통일방안이나 효율적인 남북 협상 못지않게 남북한 양 체제의 자기 쇄신이 필수적이라는 점이다.⁵⁾ 예컨대 남한은 경제적으로 소외된 계층에 대해 평등의 제고를 또 북한은 정치적으로 억압받는 계층에 대한 자유의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북한의 체제변화를 가만히 앉아서 기다린다는 것은 슬기롭지 못하다. 가능한 한 蘇·中 등 공산국가나 기타 여러나라들을 통하여 북한의 변화를 자극·유도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에 못지않게 중요한 점은 우리체제가 보다 민주화·인간화될 때 그 여파로 인해 북한이 더 개방되고 유연해질 것이며, 통일논의는 보다 새로운 차원으로 승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이다.

2. 한반도 통일의 展開方向

이 땅에서 제기된 이제까지의 통일론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가지 방식으로 유형화 된다.

첫째는 武力에 의한 통일방식으로 1950년 6·25를 전후한 남조선 해방론이나 북진통일론이 이에 속한다. 이는 한반도에 실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두 개의 국가를 통합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쪽의 무력에 의해서 다른 한쪽의 정권을 타도하고 그 영토를 통합하는 길 밖에 없다는 ‘제로섬 게임 (zero-sum game)’의 논리이다.⁶⁾

둘째, 남북 總選舉에 의한 통일방안이 있다. 이것은 남북한의 국민들이 일제히 총선거를 실시해서 여기서 선출된 대표들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을 만들고 통일정부를 구성하게 하자는 방식이다.

註5) 이상우, “민족통일의 과제”, 이흥구(編),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서울: 박영사, 1984), pp.206-207.

6) 민병천, “90년대를 전망한 우리의 통일정책연구”, 일해연구소 연구논문시리즈 88-01, p.1.

세제는 民族共同體 형성을 위한 複合的 統合모델방안이 있다. 複合的 統合모델이란 남과 북에 현존하는 국가경제체제를 그대로 인정한 기초 위에서 두 국가를 적절히 결합해서 하나의 통일민족국가를 이룩하자는 것이다.⁷⁾

그런데 이상의 세가지 방식의 통일방안 중에서 첫째의 무력통일방안은 6·25 과정을 거치면서 엄청난 희생만을 치른 채 실패로 끝났으며, 두번째의 총선거 방식도 그 동안 선거방법에 대한 異見을 좁히지 못한 채⁸⁾ 평행선을 달려왔다.

결국 최근에는 이상의 두가지 방식은 그 주장이 쇠퇴하고 複合的 統合모델 方案이 보다 현실성 있는 통일방안으로 인정받고 있다.

즉, 이질화된 두 개의 국가가 평화적으로 통일을 하자면 싫든 좋든 남과 북에 두 개의 국가적 실체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단계적으로 그 결합방법을 강구하는 過渡的 民族共同體로서의 복합적 통합모델방안을 생각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러한 복합적 통합모델에는 두개 국가의 느슨한 결합형태라고 할 수 있는 國家聯合(confederation) 방식과 좀 더 강한 결합이라 할 수 있는 聯邦國家(federation) 방식이 있다.⁹⁾

국가연합방식으로는 1960년 북한당국이 주장했던 「연방제」안과 1973년의 「고려연방공화국」안이 이에 해당하며, 1987년에 발표된 평화민주당의 「공화국 연방안」과 1989년에 발표된 통일민주당의 「한민족연합체」방안 그리고 이홍구 통일원 장관이 언급한 바 있는 「체제연합민족공동체」안 등이 모두 국가연합의 범주에 속하는 통일방안이다.

註7) 김명기, “연방제의 일반이론과 「고려연방제」안 비판”, 「통일논총」제3권 1호 (국토통일원, 1983), pp.99-100.

8) 예컨대 남한은 UN감시하에서 토착인구비례에 의한 총선거를 주장하고, 반면에 북한은 중립국 감시하에서 지역비례에 의한 총선거 실시를 주장해 왔다.

9) 김명기, 앞의 논문, pp.100-102.

국가연합방식에 의한 통일방안의 특징은, 쌍방이 현재 실질적으로 가지고 있는 군사외교권을 그대로 인정한 기초위에서 느슨하게나마 통일국가의 틀을 만들어서 우선 문화·경제 분야에서라도 가능한 통합의 길을 열어보자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연방국가 방식의 통일론은 남북 쌍방에 현존하는 두개의 정치경제체제를 그대로 인정하되 영구히 두개의 한국으로 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서는 연방의회와 연방정부가 군사·외교에 관한 권한을 통일적으로 관할할 수 있게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1980년 북한당국이 제시한 「고려민주연방공화국」案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여기서는 연방정부가 민족연합군을 조직하고 남과 북이 종래에 체결했던 외교관계를 통일적으로 조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남북한의 정치 지도자들은 분단 40년의 세월을 거치면서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은 오직 복합적 통합모델방식이 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의견이 수렴되고 있다.

단지 이들은 우리 민족의 평화통일 방안을 놓고 국가연합 방식이나 연방국가 방식이냐라는 것 때문에 똑같은 복합적 통합모델을 주장하면서도 완전한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지난 4월 2일 문익환 목사와 북한당국 사이에 공동성명이 발표됨으로써 통일논의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왜냐하면 연방국가 방식을 주장하던 북한 당국이 문익환 목사가 주장하는 단계적 국가 통합방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게 되었기 때문이다.¹⁰⁾

註 10) 문익환·조국평화통일위원회 공동성명 제 6항을 보면 “문익환 목사는 교차승인, 교차접촉에 대한 북의 거부적 입장과 통일의지를 확인하고,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문목사가 주장하는 북남교류와 점진적인 연방제 통일안이 두 개조건을 지향하는 것이 아님을 확인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라고 했음.

문익환 목사는 1988년 4월 14일 연세대에서 개최된 국민대토론회에서 제 1 단계로 국가연합방식(당시 김대중씨의 공화국연합안)을 채택하고, 제 2 단계로 연방국가방식(북한측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안과 유사)을 실시하여 점진적·단계적으로 평화통일을 추진하자고 제의한 바 있었는데,¹¹⁾ 이번 평양 방문시 북한측으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이다.

이상과 같이 현재로선 우리 민족이 택할 수 있는 평화적 통일방안으로는 복합적 통합모델방안이 가장 타당성이 있다고 보며 이를 위하여 남북한이 어떠한 대화와 타협, 그리고 인내의 과정이 필요한가 하는 것이 현단계 과제이다. 국가연합 방식과 연방국가 방식의 적절한 결합 또는 단계적 연결 등으로 지체롭게 풀어 나가는 노력만이 바람직한 통일의 과정이라 생각되며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고 본다.

註 11) 이신행, “통일논의의 활성화와 이데올로기,” 「신동아」(1988년 8월호), p.237.

Ⅲ. 國家統合 이론으로서의 複合的 統合모델

1. 複合的 統合모델 設定의 의의

복합적 통합모델 논리로서의 연방주의 이론은 기능주의 이론과 더불어 통합이론의 하나로서 많은 논의가 되고 있으며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특히 현존하는 국가들 중에는 英聯邦을 비롯하여 50여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형태의 차이는 있으나 연방형태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며, 역사상 독립된 정치단위를 이루던 두개 이상의 공동사회가 더 큰 국가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국가형태가 연방제이기도 한 것이다.¹²⁾

뿐만 아니라 분단 (division) 또는 분열 (disunion) 국가를 하나로 통일하거나 통합하는데 있어서 나타나는 여러가지 방법과 형태를 단일적 통합모델과 복합적 통합모델로 단순화 한다면, 연방제가 이 복합적 통합모델에 해당된다고 하겠다.¹³⁾

이와같은 사실과 이론 때문에 분단상황에 있는 한국에서, 연방주의 통합이론이 물론 한반도의 통일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이론은 아니지만 한반도의 통일을 위한 이론의 하나로서 관심의 대상이 되기에 충분한 것이므로 이론적인 측면에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연방주의를 통한 복합적 통합모델에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여기선 한반도에 적용가능하다고 생각되는 국가연합론과 연방국가론에 대해서만 논의해 보기로 한다.

註 12) 강성윤, “연방주의 통합이론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 13 집, 동국대 행정대학원, 1983, pp. 185-192.

13) 국제법상 복합적 통합모델에는 연합 (union), 동군연합 (real union), 국가연합 (confederation), 특수연합 (special union), 연방 (federation), 특수연방 (special federation) 등이 있으며 단일적 통합모델에는 병합 (annexation) 과 합병 (amalgamation) 이 있다. 최완규, “남북연방제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통일논총」, 제 3 권 1호, 1983, pp. 408-409.

2. 國家聯合論과 聯邦國家論

가. 國家聯合 (Confederation)

국가연합은 다수의 주권국가가 포괄적인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제법상의 합의·조약에 의하여 결합하고 공동기관(연합체의 제기능을 수행하는 정부)에 의해 일부의 주권을 공동으로 행사하기도 하는 국가형태를 의미한다. 국가연합의 구성국은 각자의 국제적 인격을 유지하나 그 대외적인 기능의 일부를 연합에 이양하고 있으므로 연합이 존속하는 한 완전한 주권국이 아니라고 할 수 있고 연합자체도 계약된 한도내의 외교능력을 가질 뿐이므로 국제법상의 완전한 인격주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연합의 각 구성국은 그들의 합의에 따라 연합의 공동기관에 특정의 권한을 위임한 것 이외에는 대내외적인 면에서 완전 주권국가로서의 독립·평등권을 향유할 수 있다.

국가연합은 결국에 가서는 외교관계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보다 강력한 통합형태인 연방국가로 전환되거나 시초의 단일주권국으로 갈라서게 되는 경향이 있다. 국가연합은 현재 존재하지 않고 있으나 과거의 사례로는 1778년~1787년까지의 미국, 1815년~1866년까지의 독일, 그리고 1949년~1954년까지의 네덜란드와 인도네시아간의 국가연합 형태를 들 수 있는데 이들은 모두 연방 또는 단위주권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의 국가연합 형태였다.¹⁴⁾

나. 聯邦國家 (Federation)

聯合國家 또는 合衆國이라고도 불리우는 연방국가는 복수의 주권국이 支分國(separate state)으로서 하나의 연방정부에 편입되고 이 연방정부는 전연방국의 모든 영토내에서 최고의 지위를 점유하며 대외적으로는 단일의 주권을 행사하는 국가형태를 의미한다. 연방은 合成文書인 헌

註14) 자세한 것은 김명기, 앞의 논문, p.101.

법에 의해서 형성되고, 연방정부만이 국가로서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갖게 된다. 물론 연방국가에 따라서는 支分國에 제한된 범위내의 외교사절의 파견 및 접수권이나 조약체결권 등을 인정하는 예외가 있기는 하나 연방정부가 대외적으로 단일의 국가주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支分國은 국제법상으로 볼 때 국가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연방은 支分國에게 대내 문제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자치적인 통치권 행사를 인정하고 있는 하나의 단일국가로 보아야 할 것이다.¹⁵⁾

역사적인 실례로 미루어 볼 때 국가연합이나 연방은 실제에 있어서는 다같이 政治統合 (political integration)의 과정에서 중간형태로 생겨진 것이고 정치통합의 선결요건이 모두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택해 낸 제도라고 볼 수 있다. 즉 정치통합의 당위적 필요가 생겼으나 한 국가를 성립시키기에는 여러가지로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 잠정적으로 택하는 국가형태인 것이다.

다. 國家聯合과 聯邦國家의 差異

진술한 바와 같이 연방국가는 국가연합보다는 통합의 정도가 좀 더 강화된 형태라고 할 수 있는데 양자의 차이점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연합의 경우 연합자체는 국제법상의 국가가 아니고, 연합을 구성하는 국가들이 국가로서 법인격을 보유하는데 반해서, 연방의 경우는 연방국가 자체가 국가로서 국제법상의 법인격을 갖는다.

둘째, 국가연합의 경우 연합의 법적 근거가 각 구성국간에 체결된 조약인데 비해 연방의 경우에는 연방국가의 헌법이라는 점이 다르다.

셋째, 국가연합의 경우 그 구성국들이 자체적으로 병력을 보유할 수 있는데 비해서 연방의 경우에는 각 구성국이 자체적으로 병력을 갖지 못하고 연방국가만이 병력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연합의 구성국 상호간의 무

註15) 최완규, 앞의 논문, p.409.

력투쟁은 전쟁으로 간주되나 연방국가의 구성국 상호간의 무력투쟁은 내란의 성격을 갖게 된다.¹⁶⁾

네째, 국가연합의 경우 각 구성국 주민에게 권리와 의무를 부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입법권을 보유하지 못한데 비해서, 연방의 경우에는 이러한 입법권을 연방국가가 갖고 있다. 즉 연방 국가에는 연방 입법기관과 병행하여 연방 행정기관이 있는데 반해서 국가연합의 경우에는 연합 입법기관은 없고 다만 연합 행정기관만이 있는 것이다.

3. 聯邦形成의 成立條件

일반적으로 국가통합을 위한 연방국가를 형성하는데 있어서는 일정한 필요적 조건이 충족되어야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다.

물론 현존하고 있는 연방국가들을 볼 때 이들은 각각 상이한 시기에 서로 다른 역사적·지리적 상황하에서, 그리고 상이한 필요성의 인식에 의해 특수한 정치적·경제적·사회적 형성요인을 지니고 있지만, 반면에 연방국가 모두에게 연방성립을 가능케 한 공통적인 연방형성 동기 내지 요인이 또한 존재하고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방국가가 성립된 것을 보면 그 구성체가 單一國家(Unitary State)로 통합하는데는 부적합한 “分化의 要因”을 지니고 있으면서 또한 분화하는데 부적합한 “統合의 要因”이 존재할 때 형성되었다. 즉, 연방국가의 형성은 단일국가로 통합하는데 적당한 구심적 작용요인과 수 개의 국가로 분화하려는 원심적 작용요인이 조화, 균형을 이룰 때 가능한 것이다.¹⁷⁾

여기서 가장 일반적인 것으로 인정되고 있는 K.C Wheare 교수가

註16) 송영대, “[고려민주연방제]의 비판적 해석”, 「통일논총」, 제2권1호 (국토통일원, 1982), p.38.

17) 강성운, 앞의 논문, p. 183.

제시한 통합요인과 분화요인을 보면 다음과 같다.¹⁸⁾

Wheare는, 다양한 이유로 연방을 원하게 되었으나 근대적 연방제에 있어서 몇가지 요인들이 항상 나타났다는 것으로, 먼저 統合要因으로는 ①군사적 불안전보장감과 공동방위의 필요성, ②외국세력으로부터의 독립에 대한 열망과 오직 연방을 통해서만이 자국의 독립이 확보된다는 각성, ③연방을 통한 경제적 이익에 대한 희망, ④지리적 인접성, ⑤연방제 통합 이전에 선행된 정치적 교섭, ⑥정치제도의 유사성 등을 들고 있다.

分化要因으로는 ①구성국간의 역사의 차이, ②경제적 이익의 격차, ③지리적 거리, ④국민성의 차이, ⑤사회구조의 非유사성 등을 들고 있으며, 이들은 단일국가로 통합하는데 부적합한 연방형성의 分化要因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학자들은 연방주의 성립동기 요소로서, ①사회체제의 이질성, ②영토의 광활, ③지분국의 독자성 유지, ④공동이념의 존재, ⑤공동방위에 대한 인식, ⑥경제적 통합에 대한 소망, ⑦상호간 지식과 작용, ⑧통합경험 등을 지적하고 있으며 아울러 연방을 형성할 때 헌법 및 법적 수준에서의 성립요건과 성립된 연방국가의 성장에 관한 요건 등을 제시하기도 한다.¹⁹⁾

註 18) 김명기, 앞의 논문, pp.105-112 참조.

19) 연방성립조건을 연구한 학자로는 Riker, Valerie, Earle, Jacob 등이 있다. 자세한 것은 송영대, “남북연방제론비판”, 『통일정책』, 제 6권 2호 (평화통일 연구소, 1980), pp.187-191 참조

Ⅳ. 複合的 統合모델의 韓半島 適用 및 評價

조국통일을 위한 국가통합의 단계적, 과도적 의미를 갖는 複合的 統合 모델의 설정은 아직도 많은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통일에 대한 논의와 노력은 중단함 없이 계속 이어져야 함이 한민족 전체의 역사적 사명일진대, 시대착오적인 안일한 발상 자체에 머물러 있을 수 만은 없다.

한반도 통일방안으로서의 단계적 통일방안의 중요성은 모두가 인식하는 것으로서 앞서 설명한 「공화국연방안」, 「한민족연합체」, 「체제연합민족공동체안」 등의 통일론에서도 거론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의 실체는 국가연합 단계에 머무르고 있으며 다음 단계의 통합모델인 연방국가 본래의 의미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연방국가」 개념에서 오는 일종의 거부감이 아닌가 하고 의문을 제기해 보는데, 혹 북한이 주장하는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의 연방개념에 대한 국내의 부정적 시각으로 인해서 연방제 고유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지 않은 채, 연방제론 자체를 북한의 교조주의적, 혁명적인 전략전술 방안으로 치부해 버리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되는 것이다.

앞서 살펴본 국제적인 실례 및 이론상·국제법상의 연방국가와 그 성립조건들을 살펴보건데, 한반도에도 연방국가 형성이 가능하다고 보며, 여러 변수들에 대해 그 妥當性을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²⁰⁾

먼저, ‘외세로부터의 독립의지’ 측면에서 볼 때, 자주국가로서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는 외세로부터 독립되어야 함은 물론이며 남과 북 어느

註20) 이상우 교수는 연방주의 성립요인중 최소한 ‘지리적 인접성’ 및 ‘기능적 이해관계’만 인정되면 연방형성이 가능하다고 제시했음.

이상우, “통일모델과 평화공존모델”, 「국제정치논총」, 제13집(한국국제정치학회, 1974), p.50.

일방이 외세에 의존한다든가 끌어들이면 민주독립국가로서 존립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남·북한은 모두 조국분단이 외세에 의한 產物이란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있고 근본적으로 외세를 배격하는 자주노선을 취하기 때문에 이 조건은 타당성을 지니고 있다.²¹⁾

둘째, ‘經濟的 이익에 대한 소망’을 공유하고 있다. 적대적인 대립상태가 지속되고 있는 남북한은 共히 과다한 국방비를 부담하고 있으며,²²⁾ 자원을 상호 불균형하게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분단에서 오는 경제적 불이익을 해소하여야 된다는 신념을 남북한 모두 가지고 있는데, 쌍방이 그동안 경제적 교류를 제의했던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셋째, ‘과거에 있어서의 統合經驗’의 有無를 들 수 있는데, 우리 역사를 돌이켜 볼 때 두말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서 1,300여년이나 되는 통일된 역사, 전통, 경험을 공유하고 있다.

실제로 분단의 역사는 불과 40여년에 지나지 않으며 특히 남북한 주민은 과거의 통합경험에서 좋은 보상(reward)을 느끼고 있으므로 이 조건도 타당하게 적용될 수 있다.²³⁾

넷째, ‘지리적 인접성’문제에 있어서, 남북한은 현재 155마일 군사분계선에 의해 상접해 있으므로 이 조건에 의한 통합조건은 충분한 것이다. 물론 연방주의 이론에서 지리적 인접성을 연방형성 가능조건으로 내세우는 이유가 다른데 커뮤니케이션의 능력때문이란 점에서 본다면 남북간의 교통·통신이 두절되어 있으므로 실제적인 면에서의 지리적 인접성은 그 의미가 반감되어 있으나, 남북한의 경우에 있어서 인접성의 조

註21) 강성윤, 앞의 논문, p.197. 97.

22) 북한은 최근에 GNP의 20~25% 가량을 군사비로 충당, 남한은 6%. 자세한 내용은 이달곤, “군축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 대안연구,” 「통일문제연구」(국토통일원, 1989, 봄호), pp.113-118.

23) 강성윤, 앞의 논문, p.196.

건은 완벽하다고 볼 수 있다.²⁴⁾

다섯째, ‘공동방위’에 관한 필요성이란 측면에서 볼 때, 역사상으로 한민족은 외세의 침략에 의한 민족수난을 수없이 겪어왔고 분단원인 또한 외세에 의한 분단이기 때문에 민족공동체의 보전을 위한 공동방위의 필요성이 존재한다고 본다.

물론 南方 三角關係(韓·美·日)와 北方 三角關係(北韓·中·蘇)라는 동맹의 특이성으로 보면,²⁵⁾ 남북한의 共同의 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는데 국제역학상의 힘의 논리라는 것은 항상 이기적이기 때문에 한반도가 통합될 때 받게되는 압력 및 전쟁위험을 대비하는 민족연합군이 필요하게 되므로 이 조건 또한 타당성이 있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社會體制의 異質性’이라는 조건을 보면, 분단 이전의 남북한은 동질적인 사회체제를 이루고 있었으나 1945년 민족분단과 더불어 각기 상이한 이데올로기에 의한 독자적인 사회화 과정을 통하여 동질성은 상당 수준 파괴되었다고 봐야 할 것이다. 이러한 사회·문화의 이질화는 통일을 저해하는 중요 요소로서 제기되고 있으며 연방형성조건인 分化要因을 충족시키고 있다.

이상의 諸 조건들을 살펴보았는데 하나의 복합적 통일모델로서 연방주의 이론은 한반도에 충분한 적용가치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북한측이 계속 주장하고 있는 연방제가 연방제 본래의(국제법상의) 순수한 적용이 아니라, 한국민의 통일염원을 교묘히 이용하여 ‘남반부혁명의 징검다리’로 쓰려하기 때문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이다.²⁶⁾

註 24) 이상우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한 관계개선 방안연구”, 국토통일원, 1976, p.57.

25) 한국은 미국과 1953년에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체결하였으며, 1965년에 한일국교를 정상화하였고, 북한은 1961년에 중·소와 각각 우호협력과 상호원조조약을 체결하였다.

26) 이상우, “통일모델과 평화공존모델” pp.49-50.

V. 새로운 統一模型으로서의 단계적 國家統合모델

이상의 諸 理論들을 전제로 다음의 5 단계 통일론을 구상해 보았는데, 統一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국내체제가 민주화 되어서 상호 신뢰를 회복하고, 평화를 정착시켜 화합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 複合的 統合모델의 國家聯合 및 聯邦國家 단계를 거쳐 최종적으로 單一民族國家의 완성에 이른다는 구상이다.

각 단계에 있어서 民族共同體形成을 위한 기본 바탕에는 미트라니(David Mitrany)에 의해 주장되어 온 「機能主義的 統合理論」과 남북한의 상호 공동번영을 지원한다는 非제로섬게임(non-zero sum game) 이론이 함께 적용원칙으로서 활용된다고 할 수 있다.²⁷⁾

즉 기능주의적 통합이론은 경제·사회·문화적 교류를 상호간에 점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구성원의 태도와 인식을 통합과정에 쉽게 적용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또한 非제로섬 게임론은 쌍방이 상호 호혜적이며 평화적인 사고를 기반으로 양 당사자의 협상이 갈등관계가 아니라 요구의 교차(intersection of demands)로 전환되어 상호간에 모두 이익과 승리를 가져다 주는 해결양식이라는 점에서 민족공동체를 위한 기본적인 운용원칙으로서의 기능을 하리라 본다.

1. 국내체제의 民主化 및 신뢰회복

세계적인 군축회담 진전 및 중·소 정상회담으로 대표되는 최근의 평화분위기는 우리에게도 통일을 위한 긍정적 암시를 던져 주고 있다.

註27) 정대규, “남북교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국토통일원, 「통일정책」, 제6권 2호(1980), p.122.

기능주의의 자세한 내용은 박상식, 「국제정치학」(집문당, 1981), pp. 120~125.

그러나 통일은 하루 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를 위한 제반 여건이 성숙되어야 하므로 먼저 일련의 준비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특히 그러한 예비단계 중에서도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것은 남북한의 민주화를 통한 상호신뢰 회복단계라 할 수 있는데 이를 세분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한 국내체제 개혁의 필요성이 요구된다.²⁸⁾ 이는 남한에 있어서 정치의 민주화 및 경제의 민주화 없이는 계층 및 지역간의 갈등을 해소할 수 없으므로 전 국민의 화합 분위기를 위해 필요한 선결조건이다.²⁹⁾

그리고 북한은 종래의 교조주의적·혁명적 계급투쟁론 및 주체사상으로 경직된 체제를 탈피하고 다른 공산권 국가들처럼 과감한 개혁·개방정책을 펴 나감으로써 통일을 위한 예비작업에 동조해야 한다.

둘째, 남북 쌍방은 상호비방 선전 및 방송을 즉시 중지함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대결외교도 종식시켜야 된다. 같은 동포이면서도 서로 적개심을 가지고 상호비방은 물론 국제사회에서의 상대편 고립정책 등을 꾀하는 것은 통일에 역기능을 할 뿐이므로 철저히 지양되어야 한다.³⁰⁾

셋째, 국내에서의 북한신문 및 북한서적의 구독을 허용해야 한다. 북한의 참모습을 알리기 위해 정부는 과감하게 북한의 생활모습 실태 및 그들의 사상체계를 담은 출판물을 허용해야 된다. 북한에 대한 홍보나 교육은 허상과 실상을 정확히 소개하고 알려야지 그렇지 않고 반공이데올로기만 강조할 경우, 이는 오히려 북한을 잘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註 28) 하영선, “통일접근과정으로서의 민족공동체 형성모색”, 「통일문제연구」 (국토통일원, 1989, 봄), pp.76-77.

29) 1988년 11월 통일원 여론조사결과 통일을 위한 국내적 선결과제로는 민주주의 확립(44.2%), 경제발전(19.6%), 복지사회건설(17.7%), 국방력강화(8.5%), 자유민주주의 이념교육강화(7.3%) 순으로 나타났다. 중앙일보, 1988년 11월 29일자 참조.

30) 정운중, “1989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화해, 협력, 평화공존의 대전기마련” 「통일문제 시사자료」, 제 21호, pp.3-5.

그릇된 환상을 심어 줄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통일에 역기능을 하게 된다.³¹⁾ 따라서 우리 체제에 자신이 있을진대 북한정황을 오히려 자세히 소개하는 것이 그릇된 환상을 불식시키는 상책이라 할 것이다.

넷째, 통일에 상당한 저해요소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등의 악법에 대한 개정 및 폐지가 필요하다. 7·7 선언에서 주장했던 바처럼 성실한 남북한 교류나 대북방외교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경직된 관계법령을 수정 내지는 폐기해야 된다.

다섯째, 한미연합사의 작전지휘권 인수가 필요하다. 이는 다음단계에서 논의될 남북한 군사회담 및 군축회담에 있어서 우리나라가 회담 당사자 자격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³²⁾

2. 平和體制 정착

국내의 민주화 및 상호 신뢰의 분위기가 무르익은 다음으로 우리가 추진할 것은 북한과의 직접 협상 및 교류를 통한 평화체제 정착을 위한 작업이다.

먼저, 남북한의 전쟁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남북간에 불가침선언을 하고,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전환이 요구된다.³³⁾ 현실적으로 이러한 전환이 없다면 한국전쟁의 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 쪽에 대해서 군사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남북한 간에 기본적인 협정을 체결함으로써 전쟁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둘째, 남북한에서 지명하는 2~5개국 정도의 중립국 대표로 중립국 감시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로 하여금 평화협정 준수여부를 감시하도록 한다

셋째,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미군은 철수해야 하며, 이는 7·4 남북공동

註31) 이상두,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거목, 1986), pp. 273 ~ 275.

32) 조순승, “평화통일 3 단계론”, 「민족통일」(1989, 3·4월호), p. 51.

33)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박영사, 1988), pp. 736 ~ 741.

성명에서 천명했던 자주통일의 원칙에 입각해 볼 때, 한반도 내의 외국군은 평화협정이 체결된 이상 더 주둔해야 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넷째, 대내외적 신뢰회복과 전쟁방지, 그리고 경제적 번영을 위하여 남북한은 상호 군비축소에 성실히 임해야 한다.³⁴⁾ 이를 위해 쌍방간에 정례군사회담을 개최하여, 서로에게 납득할 만한 수준에 이를 수 있는 최소한의 병력만을 유지함을 원칙으로 한다.³⁵⁾ 특히 이의 실천을 위해 남북한 각각 군사고문단을 발족시켜 상호방문 및 군사시설을 공개함으로써 객관적인 실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한다.

다섯째, 인적·물적 교류의 창구를 정부 관할하에서 개방한다. 남북한간의 민족동질성 회복과 가치관의 조화를 위해서 문화·예술·체육·학술 교류에 힘쓰며, 지하자원의 공동개발과 북한내의 산업시설 개발 등 서로간의 경제부문의 협력을 강화한다. 아울러 이상의 교류 및 교역을 위해 비무장지대 내에 교역도시를 건설하고³⁶⁾ 남북한 공히 동·서해안의 몇몇 항구를 개방한다.

여섯째, 남북간에 단절되어 있는 교통 및 통신망을 연결시켜 남북한 물적·인적교류 및 소식전달에 용이하도록 한다.

일곱째, 이상의 남북교류와 평화유지 협력을 위한 상주대표부를 구성, 서울과 평양에 설치한다. 이 상주대표부는 남북한에서의 각종 인적·물적 창구역할을 하게되며 쌍방 정부의 대화창구로 역할하는 성격도 가진다.

註 34) 남주홍, “군축의 일반이론에 관한 고찰”, 「국제정치논총」, 제 25집 3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86), pp.5-8.

35) 북한은 「고려민주연방공화국」 10대 시정방침중 하나로 ‘10 만으로 병력을 감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는데 우리도 이에 상응하는 대안이 있어야 된다고 본다.

36) 노태우 대통령이 88년 10월 UN총회 연설에서 언급한 「평화시」의 구상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國家聯合 단계

이상의 과정을 거치는 동안 북한에는 혁명적 충동감이 사라질 것이고, 남한에는 진정한 민주적 안정이 이루어져 남북관계에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공존관계가 성숙한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 이 단계에서는 실질적인 국가통합을 향한 과도적 형태로서의 民族共同體를 형성해야 된다.

앞장에서 살펴 본 것처럼 이러한 민족공동체를 형성하는 방안에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단계적 과정상 복합적 통합모델의 느슨한 결합상태인 國家聯合(confederation)의 형태를 먼저 설정했으며³⁷⁾ 이는 통일을 위한 중간적 단계로서 그 세부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남북한 동수의 대표로 구성된 「凡民族統一委員會」를 구성하여 양 정부의 교량역할 및 통일에의 접근을 꾀한다. 이에는 부총리급으로 구성되는 남북공동위원장을 각각 1명씩 두며 그 산하에 일반 행정부서와 유사한 조직을 두어서 남북한의 교류업무 및 통합준비 업무를 수행하도록 한다.

둘째, 평화공존과 교류의 성공적이고도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 남북최고책임자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평화통일정책협의체를 발족시켜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평화통일 논의를 추진시켜야 한다.³⁸⁾

셋째, 남북한의 정당·사회단체 또는 민간인의 교류도 개방하고, 판문점이나 앞서 설명한 교역도시내에 남북한 공동학술연구소를 설치 운영하여 남북한간에 심각한 이질화를 빚고 있는 사회문화 전반에 걸친 문제점 및 구체적 해결방안을 마련토록 한다.

넷째, 인적·물적 교류의 확대를 위해 교역창구를 확대하고 관광 및 친지방문 등의 자유를 허용한다.

註 37) 정용길, 「분단국통일론」 (고려원, 1988), pp. 370 ~ 371 참조.

38) 박실, “김대중씨의 통일방안은 이렇다”, 「민족지성」 (1989.4), pp. 104-105.

4. 聯邦國家 단계

연방국가 단계는 우리의 경우 현존의 한국정부와 북한정부를 그대로 두어 지역정부로 하고 그 위에 전 한반도에 걸쳐 관할권을 갖는 또하나의 정부를 수립하는 것을 의미한다.³⁹⁾

이러한 연방국가는 앞의 諸 단계를 거치는 동안 한민족의 통합분위기가 무르익었다는 전제하에서 출발해야 한다.

첫단계로 우선 연방정부 헌법을 제정하기 위하여 남북 동수의 대표자 및 해외동포 대표들로 헌법초안대표회를 구성한다. 헌법초안대표회는 남북한에 공정하고 엄정한 헌법을 기초하는데, 헌법은 주권재민의 사상에 입각,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민주주의 체제를 준수해야 하며 연방정부의 국정을 선도하고 엄격한 3권 분립체제를 확립해야 한다.

둘째, 연방헌법에 의한 남북한 자유총선거를 실시하여 연방의회를 구성하는데, 선거방식은 지역비례에 의거하며,⁴⁰⁾ 해외동포 대표들도 의회에 참여하여 증재역할을 수행하게 한다.

셋째, 연방의회는 연방정부를 구성하고 행정수반을 선출한다. 행정수반은 대외적으로 연방국을 대표하며 한반도 전체를 통괄하는 국가원수의 의미를 가진다. 남북쌍방 정부는 지역정부로서 연방정부의 지도하에 자치를 실시한다.⁴¹⁾

넷째, 연방정부 산하에 민족연합군을 구성함으로써 남북한간의 군사적 통합을 이룬다. 민족연합군은 국민의 군대로서 국경수비의 임무 및 해양경비의 임무를 수행케 하며 군의 정치개입은 헌법으로 금지시킨다.

다섯째, 대외적으로 한반도를 대표하는 연방국가로서 국호, 국기 및 국

註 39) 이상우, “통일모델과 평화공존모델”, pp.48-50.

40) 이를 제안하는 이유는 남북한 체제가 “동질화 되지않은 상태”라는 가정하에서 북한을 협상의 테이블로 끌어들이기 위한 최선의 양보책이다.

41) 남북한은 미합중국등의 연방국가들과는 달리 체제가 다르므로 이 단계에서 완전한 중앙집권적 연방국가의 형성은 불가능하리라 본다.

가를 제정한다. 이제까지 양측이 고수해 온 국호, 국기, 국가를 단일 화합으로써 통일된 연방국가의 위상을 정립한다.

여섯째, 남북한 동시에 기존의 대외조약을 폐기하고 연방정부의 이름으로 재조약을 체결하며 UN에 정식 가입한다.

일곱째, 문화·예술·경제·사회적 교류를 전면 개방하고 남북한 자유로운 왕래를 허용함으로써 범민족적인 화합분위기를 높여간다.

여덟째, 대외적으로 永世中立化를 선포한다. 한반도는 지정학적으로 강대국의 세력경쟁속에 서있기 때문에 한국의 통일이 외세, 즉 주변강대국(美·蘇·中·日) 어느 한 나라의 국가이익 혹은 안보에 손해가 된다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것이 분명하다. 그러나 역으로 그러한 지정학적 중요성을 이용하여 中立化를 선언한다면 이들은 한국의 중립적 위치를 지지하게 될 것이다.⁴²⁾

5. 單一民族國家의 完成

우리민족은 단일민족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남과 북이 하나의 체제로 되는 1국가 1체제의 통일을 염원하고 있다.

따라서, 이제까지 논의된 연방국가 단계가 조국통일의 최후 최대 목표일 수 없으며 하나의 국가아래 하나의 체제로 결합하는 완전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고려하여 반드시 중립화 노선을 채택해야 만이 강대국의 입김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한반도 통일의 최종단계는 '中立化된 單一國家'라고 설정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마무리 작업이 필요하다.

먼저 연방정부의 기능 및 권한을 강화하여 남북한 지역정부의 기능을 흡수하고 도단위의 지방자치를 실시함으로써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꾀한

註 42) 황인관, 「중립화 통일론」(신구문화사, 1988), pp. 143 ~ 155 참조.

다. 이를 위하여 연방헌법의 통일헌법으로의 개정이 요구되며 새 헌법에 따라 국가조직을 재정비해야 한다.

둘째, 새 헌법에 따라 남북한 총선거에 의해 의회를 재구성해야 하는데, 먼저 남북한 지역비례에 의한 선거를 통해 각각의 9개도에서 3~4명으로 구성된 상원을 구성하고, 다음으로 토착인구 비례에 의해 선출된 하원으로 구성되는 양원제 의회 기강을 확립시킨다.⁴³⁾

셋째, 상·하 양원의 표결을 거쳐서 행정부의 수반을 선출하며, 이는 전 민족 구성원을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통일국가는 정치적으로 민족성원 전체의 참여와 기회균등이 보장되고 복수정당제가 허용되며, 개인의 기본권리와 시장경제의 원리에 충실한 복지국가의 이념을 지향해야 한다.

註 43) 최봉윤, “나의 조국통일방안”, 『민족지성』 (1989.4), pp.77-78에서 인용했음.

VI. 結 論

이상으로 한반도에 당면한, 통일을 향한 새로운 구상으로서의 諸 단계를 살펴보았다.

현실적으로, 44 여년에 이르는 장기간의 분단상황으로 말미암아 형성된 심각한 민족 이질감과 적대적 대립관계를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단계적인 통일에의 諸과정을 설정할 수 밖에 없다고 본다. 이러한 시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실현성 있는 통일방안이 바로 ‘複合的 統合모델’을 통한 점진적 과정을 거치는 것이다. 현재의 남북한 관계를 고려해 볼 때, 단일 주권과 단일 법체계를 소유한 강력한 정부가 곧바로 출범한다는 것은 여러가지 무리가 따르기 때문에, 적어도 중간단계에서는 국가연합의 느슨한 결합 형태를 거쳐서 보다 더 강한 결합인 연방국가로 전이하고, 마침내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체제속에서 서로 도우며 살아가는 단일국가를 이루어야 한다.

아울러 통일국가의 이념은 自主·平和·民主·福祉의 원칙하에서 모든 방면에서의 대화와 타협이 절실하며, 이를 위해서 때로는 양보하는 민족애의 슬기를 발휘해야 되는 것이다.

한반도의 분단은 비록 외세의 힘의 논리에서 비롯됐지만,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만의 힘으로 이루어야 한다. 바로 ‘韓半島 問題의 韓國化’라는 말에서 느껴지는 것처럼, 강대국들은 이미 한반도가 그들의 이해관계에 직접 저해하는 체제만 구축하지 않는다면 한반도 통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공공연히 밝히고 있는 것이다.

전세계가 과거의 양극화적 적대적 투쟁의 시대를 청산하고 평화적 공존을 위해 화해와 협조를 재촉하고 있다. 우리 민족이라고 대립 투쟁을 언제까지나 지속할 수는 없으며, 민족사의 무거운 사명을 깨닫고 깨어 일어나야만 한다. 그리고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 모두들 노력해야 된다. 다시는 이땅에 분열과 미움이 없는 화합과 사랑이 넘치는 새조국 건설을 위해 모두 손에 손잡고 동참해야 하는 것이다.

참 고 문 헌

< 단 행 본 >

-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박영사, 1988.
- 김학준, 「한국민족주의의 통일논리」, 집문당, 1983.
- 안병준, 「강대국 관계와 한반도 안보론」, 법문사, 1986.
- 박상식, 「국제정치학」, 집문당, 1981.
- 이용필, 「북한 정치」, 대왕사, 1982.
- 정용길, 「분단국 통일론」, 고려원, 1988.
- 황인관, 「중립화 통일론」, 신구문화사, 1988.
- 이상두, 「남북한의 이데올로기와 정치」, 거목, 1986.
- 이상우 外, 「통일한국의 모색」, 박영사, 1987.
- 이흥구 外,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박영사, 1984.

< 논 문 >

- 이흥구, “민족화합과 민주통일방안의 역사적 이념적 조명”
이상우(編) 「통일한국의 모색」, 서울: 박영사, 1987.
- 안병영, “한반도 통일의 가치전제,” 「한반도 통일의 이념과
논리」, 전북대 사회과학연구소 통일문제 세미나 자료,
1988.
- 민병천, “90 년대를 전망한 우리의 통일정책 연구” 일해연구소
연구논문, 1988.
- 김명기, “연방제의 일반이론과 「고려연방제」안 비판.” 「통일논총」,
제 3 권 1 호, 국토통일원, 1983.
- 강성윤, “연방주의 통합이론에 관한 연구,” 「행정논총」, 제 13 집,
동국대 행정대학원, 1983.

- 최완규, “남북연방제와 인민민주주의 혁명전략”
- 송영대, “「고려민주연방제」의 비판적 해석,” 「통일논총」,
제2권 1호, 국토통일원, 1982.
- 이상우, “통일모델과 평화공존모델”, 「국제정치논총」, 제13집,
한국국제정치학회, 1974.
- 이달곤, “군축이론에 입각한 남북한 군축협상 대안 연구.”
「통일문제연구」, 국토통일원, 1989. 봄호.
- 이상우,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한 관계개선 방안 연구,”
국토통일원, 1976.
- 송영대, “남북 연방제론 비판,” 「통일정책」, 제6권 2호.
평화통일연구소, 1980.
- 정대규, “남북교류에 관한 이론적 고찰” 「통일정책」, 제6권 2호
평화통일연구소, 1980.
- 하영선, “통일접근과정으로서의 민족공동체 형성 모색” 「통일문제
연구」, 국토통일원, 1989년 봄호.
- 정운중, “1989년 한반도 정세와 남북관계 전망,” 「통일문제 시사
자료」, 제21호. 1988. 12월.
- 박상석, “민족통합논리의 전환을 위한 시론,” 「통일문제연구」,
조선대 통일문제연구소, 1985.
- 한점수, “통일논의의 근거와 민중통일론”, 「통일문제」, 제26집,
국토통일원, 1986.
- 왕민국, “한반도 통일문제 접근방안에 관한 연구,” 인하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88.
- 강성윤, “분단국 공산세력의 연합론과 북한의 연방론” 「안보연구」,
제12집, 동국대 안보연구소, 1982.
- 이기택, “통일문제에 대한 논의와 방법론 고찰” 「북한」, 북한
연구소, 1988.7.

이종석, “남한의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사회와 사상」, 한길사,
1988. 9.

조명현, “통일 정책과 북방정책” 「외교」, 제 10 호, 한국외교협회,
1989. 6.

統一로 향한 南北交流의 推進

李 惠 鎮

(慶尚大 會計學科 3年)

目 次

- I. 問題의 提起
- II. 統一의 當爲性 및 促進要因과 沮害要因
- III. 南北交流의 方向 摸索
- IV. 統一로 향한 南北交流의 分野別 實現方案
- V. 結論

I . 문제의 제기

우리 민족은 한반도에서 오랫동안 단일민족국가를 형성하며 살아왔다.

그러나 2차대전의 종결과 함께 국토와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져 40여년이라는 민족분단사를 경험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분단이 기정사실화되고 이념적 대립이 심화되어 적대의식까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민족분단으로 인한 아픔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되며 한 민족은 두 체제간의 분단의 장벽을 허물고 적극적인 교류·협력을 통해서 상호신뢰와 민족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정치적 공동체인 「통일한국」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그러나 오늘의 현실은 남북이 다같이 통일조국을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갈등관계만 지속하고 있다.

민족통일을 가능케할 근본체제인 남북화해의 길은 아직도 그 궤도조차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는 오늘의 이 숨막히는 상황속에서 안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민족의 분단은 강대국에 의하여 자행되었다 하더라도 통일은 온 겨레의 지혜와 역량으로 풀어나가야 한다. 그것은 바로 우리 민족의 지상과제이다.

통일은 극단적인 불신상태에서 상호신뢰의 회복과 이질화된 남북의 사회, 문화, 경제의 동질성 회복에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지 않고서 남북통일이 이루어질 수는 없다. 비록 통일이 이루어진다고 가정하더라도 외형적인 통합후에 나타나는 민족구성원간의 대립과 갈등은 폭력과 투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것은 마침내 민족의 존망을 위태롭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행히 우리 국민의 대다수 여망은 교류와 협력을 통한 통일에의 접근을 지지하고 있다.

한국응용통계연구소가 1989년 조사한 「남북교류」에 대한 설문지 조

사결과를 보면 “ 남북교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¹⁾에 대해서 물어본 바 “바람직하다”는 긍정적인 견해가 76.6%로써 대부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남북교류중 어느 것에 관심이 있는지”²⁾에 대해서는 “남북무역등 경제교류”가 30.1%, “금강산 개발계획” 23.0% 등 경제분야가 가장 높았으며 “남북군사정치회담” 13.3%로 정치분야의 교류 또한 지지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한편 “남북교류들이 민족통일에 얼마나 기여하는지”³⁾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다. “기여한다”고 하는 긍정적 견해가 70.1%며, 기여가 없고 역효과라고 하는 부정적 견해 또한 29.8%로 아주 높게 나타나긴 하지만 국민의 지배적인 여론은 남북교류가 통일에 기여하여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註 1) 최근들어 이루어지고 있는 남북교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응용 통계연구소 조사, 1989.3.)

구분	대단히 바람직한 현상이다.	비교적 바람직한 현상이다.	별다른 생각 없다	비교적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대단히 바람직하지 못한 현상	계	
전체	33.3	43.3	10.9	7.9	4.6	100.0	
성별	남	39.2	41.2	9.2	5.6	4.8	100.0
	여	27.4	45.4	12.6	10.2	4.4	100.0
연령별	10대	21.3	45.3	17.3	5.3	10.7	100.0
	20대	33.3	48.4	9.6	6.0	2.8	100.0
	30대	31.4	44.8	10.8	6.2	6.7	100.0
	40대	36.1	29.2	13.2	18.8	2.8	100.0
	50대이후	43.5	31.8	9.4	7.1	8.2	100.0
직업별	학생	35.0	46.1	10.0	6.1	2.8	100.0
	회사원	34.6	45.8	11.2	4.7	3.7	100.0
	주부	24.2	49.0	11.4	10.1	5.4	100.0
	자영업	44.1	40.2	4.7	7.9	3.1	100.0
	공무원	19.4	31.9	20.8	16.7	11.1	100.0
	기타	34.6	28.2	14.1	12.8	10.3	100.0

남북교류에 대한 설문조사, 「북한」(1989.5), p.81.

註 2) 현재 거론되고 있는 남북교류중 어느 것에 가장 관심이 있으십니까?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조사, 1989.3.)

구 분		남북군사 정치회담	금 강 신 개발계획	남북무역 등 경제교류	청년학생 추천참가	남북공동 음악축전	남 북 적 십 자 회 담	남북국회 회 담	계
전 체		13.3	23.0	30.1	16.1	3.5	8.5	5.6	100.0
성 별	남	18.0	16.9	32.9	16.5	3.5	6.3	5.9	100.0
	여	8.6	28.9	27.3	15.7	3.6	10.6	5.2	100.0
연 령 별	10 대	16.0	25.3	21.3	16.0	5.3	8.0	8.0	100.0
	20 대	14.3	21.6	27.4	23.4	1.2	7.3	4.8	100.0
	30 대	9.3	29.9	30.9	9.8	3.6	10.8	5.7	100.0
	40 대	9.2	16.9	47.2	5.0	8.5	8.5	4.2	100.0
	50 대이후	21.0	23.5	22.2	4.9	7.4	11.1	9.9	100.0
직 업 별	학 생	16.9	19.1	21.3	29.2	2.2	5.6	5.6	100.0
	회 사 원	10.3	23.4	43.0	9.3	1.9	10.3	1.9	100.0
	주 부	6.1	28.6	38.1	6.1	4.1	11.1	5.4	100.0
	자 영 업	19.0	19.8	28.1	6.6	5.8	9.1	11.6	100.0
	공 무 원	12.5	20.8	29.2	11.1	8.3	11.1	6.9	100.0
	기 타	10.3	35.9	23.1	12.8	5.1	7.7	5.1	100.0

앞의 책, pp.81 ~ 82.

3) 남북교류들이 민족통일에 얼마나 기여하리라 생각하는가? (한국응용통계연구소 조사, 1989.3.)

구 분		상당히 기여	다 소 기 여	별다른기여없음	오히려역효과	계
전 체		15.5	54.6	25.0	4.8	100.0
성 별	남	18.3	55.3	22.4	4.1	100.0
	여	12.8	54.0	27.6	5.6	100.0
연 령 별	10 대	12.0	50.7	32.0	5.3	100.0
	20 대	16.1	56.5	23.4	4.0	100.0
	30 대	13.9	61.3	21.6	3.1	100.0
	40 대	12.7	50.7	26.8	9.9	100.0
	50 대이후	23.5	38.8	32.9	4.7	100.0
직 업 별	학 생	16.9	54.8	24.9	3.4	100.0
	회 사 원	17.8	56.1	21.5	4.7	100.0
	주 부	10.7	58.4	25.5	5.4	100.0
	자 영 업	16.8	54.4	23.2	5.6	100.0
	공 무 원	15.3	55.4	22.2	6.9	100.0
	기 타	10.3	42.3	39.7	7.7	100.0

앞의 책, p.85.

그러면 교류와 협력을 가능케하는 상황여건은 어떠한가? 교류와 협력은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 것인가? 교류를 통하여 달성코자 하는 목표는 무엇인가? 등을 밝히는 것이 본 논문의 목적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 II장에서 왜 통일이 되어야만 하는가 하는 통일의 당위성을 고찰해 본 다음, 통일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통일의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I장에서는 통일의 전단계로서 교류의 필요성을 검토해 본 다음 교류의 방향, 즉 민족공동체 형성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IV장에서는 통일을 지향한 사회·문화·경제·정치분야의 다양한 교류방안을 모색해 보면서 마지막으로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 통일의 미래상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Ⅱ. 통일의 당위성 및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1. 통일의 당위성

원래 하나였던 민족이 남북으로 갈라졌으니 다시 하나가 된다는 것은 당위적인 일이다. 따라서 통일의 당위성을 명백하게 밝힌다는 것은 남북 교류에 있어서 정신적이고 의식적인 토대가 되므로 이를 약속하면 다음과 같다.⁴⁾

첫째, 민족사적 측면에서 본 당위성이다. 우리는 통일을 이루어 민족의 영원한 생존과 자존을 지키고 민족사를 연면하게 이어나가야 한다. 오랜 단일민족사회를 형성해⁵⁾ 온 우리가 타율적으로 강요된 인위적인 분단사회에 살고 있는 바 이것은 당연히 극복되어야 하며, 시급한 민족동질성 확보와 분단으로 오는 긴장, 전쟁재발 방지를 위해서도 반드시 통일은 달성되어야 한다.

둘째, 민족국가 발전적 측면에서 오는 통일의 당위성을 들 수 있다.

註4) 김경태, “남북한 통일정책,” 국토통일원, 「민주통일론-통일문제-」(1989) pp.22-23.

민병천, 「민족통일론」 (서울: 고려위. 1985), pp.23-24.

양호민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형성사, 1986), pp.11-16참조.

5) 한반도에서 통일된 민족국가사회를 형성한 역사과정의 시발은 신라의 통일 때부터라고 볼 수 있다. 삼국의 경쟁을 극복한 신라의 통일로 비로소 하나의 통일민주국가사회가 이룩되었는데 그것은 이미 1300여년 전의 일이다. 우리의 단일민족국가 형성은 구주제국의 그것보다 적어도 7세기나 빠른 것이다. 그리고 단일민족국가사회를 이룩한 역사는 같은 분단국인 독일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 동서독이 같은 민족이지만 통일된 단일국가를 형성한 것은 얼마되지 않았다. 19세기에 들어서 비로소 단일민족국가사회를 형성한 것이다.

우리 민족은 지금 남북분단 상태에서 오는 불필요한 민족역량을 낭비 6) 하고 민족의 권위와 위신을 서로 훼손하는 민족자해 행위를 하고 있다. 통일을 이룩함으로써 이러한 민족적 역량 낭비를 방지하며 복지사회 건설에 전념할 수 있다. 복지의 길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서만 찾을 수 있다.

셋째, 민족사회적 측면에서 본 당위성이다. 혈육간 이산의 아픔, 전쟁재발위험성에서 오는 공포 7), 남북 대치상태에서 비롯된 기본권의 제약이나 유보, 복지정책과 재정의 제약 등 민족사회는 분단으로 인하여 여러 면에서 제약을 받고 있다.

국제적 측면에서도 남북의 분단과 대결구조 때문에 우리 민족은 주변 강대국들의 직·간접적인 간여와 영향을 받아야하고 국제무대에서의 과다경쟁으로 민족의 자존과 권위와 자유를 훼손당하는 일이 한 두 가지가 아니다. 우리 민족의 영원한 자유 신장의 길도 조국의 평화적 통일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의 것을 요약하면 한반도에 있어서 통일은 ① 민족의 동질성 회복을 위하여 ② 전쟁의 공포로부터 벗어나기 위하여 ③ 불필요한 민족역량의 소모를 방지하기 위하여 ④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註6) 북한의 병력은 약 87만명이며 이는 추계인구 2천 69만명의 4%(1988)를 넘고 있으며, 군사비는 39억 3천불로 GNP의 22.7%(1986)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남한의 병력은 65만명이며(1988) 군사비는 48억 6천불로 GNP의 5.1%(1986)로 나타나고 있다.

유인택, “북한의 군사,” 국토통일원, 「민주통일론-북한실태-」(1989), pp. 221~225.

7) 인명피해에 있어서는 국군 22만 9천명, 유엔군 3만 8천명, 북한군 52만명, 중국 인민군 90만명의 사상자를 냈으며 부상자가 국군 71만 7천명, 유엔군 11만 5천명, 북한군 40만 6천명에 이르렀다. 민간인 피해는 남한지역에서만 사망 24만 5천명, 부상 23만명, 실종 33만명, 공산군에 의한 피습 13만명, 입북 8만 5천명, 경찰 피살 1만 8천명 등의 피해가 있었다. 유원식·김태서, 「북한 30년사」(1975), pp.137-138.

⑤ 민족문화의 자주성을 확립하기 위하여 ⑥ 세계평화를 위하여 ⑦ 민주주의 실현을 위하여⁸⁾ 통일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 통일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

통일의 가능성은 통일성취의 중간단계 내지는 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모든 분야의 촉진요인(통합요소)과 저해요인(분열적 요소)을 추출하고 이의 개선방향에서 추구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가. 통일의 촉진요인

먼저, 북한체제의 변화 가능성⁹⁾을 들 수 있다. 80년 6차 당대회 이후 북한사회 상층부에서도 당성이나 「이데올로기」 못지않게 합리성과 효율성을 함께 중시하는 여건이나 분위기가 조성되어 가고 있다. 이는 이데올로기보다는 합리적 실용주의적 노선으로서의 전환을 예견할 수 있게 한다. 폐쇄적 「자급자족체제」¹⁰⁾의 한계성에서 오는 경제난은 주민의 욕구와 기대수준에 영향을 미칠 것이며 이러한 경제난은 군사비 부담에도 재정을 압박하게 된다. 따라서 남북의 발전격차가 벌어지는 일정시점에서는 북한체제가 긴장완화에 대한 수요를 공감하게 될 것이다.

둘째, 통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들 수 있다. 오늘날 국민들은 민주

註 8) 분단을 전제로 하는 정치상황의 존재양식을 설계하기 때문에 자기체제의 유지라는 명목으로 유한정치의 상황이 나타나고 두드러진 것이 유한지수인 것이다. 그러기에 민주화나 자유화는 기본적으로 유한성을 갖게 마련이다. 따라서 통일이 된다면 민주주의와 자유에 대한 제약여건이 제거되기 때문에 제약의 필요와 명분도 없게 될 것이다. 물론, 반드시 민주화나 자유화를 보장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은 훨씬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9) 신기현, “한반도 통일의 촉진요인과 제약요인,”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 제 15집 (1988), p. 24.

10) 북한의 자급자족 경제는 사실상 허구적인 선전에 불과하다. 소련의 과학아카데미 소속의 게·데·포로라야 박사는 “북한에 있는 공장 기업소 24개는 전적으로 소련의 원조에 의한 건설, 운영되고 있다”고 공개하였다.

화의 추세와 더불어 통일의 열기가 어느 때보다 높다. 정부차원에서 독점해 온 통일논의를 민간차원에서도 전개시킬 수 있는 토대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식은 제도권의 통일외지에 영향을 미쳐 적극적인 통일정책을 펴나가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또한 국민들의 통일 당위성에 대한 인식과 성숙한 민족공동체 의식에서 오는 의지 또한 통일을 이루는데 긍정적인 작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바람직한 방향으로 발전된 국제환경적 요인을 들 수 있다. 미·소 군사대국 사이의 「신데땅뜨」정책을 바탕으로 한 국제적 긴장완화 추세는 군사전략적 요충지인 한반도에서의 안정과 평화를 원하고 있으며 남북한간의 직접대화나 교류협력에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또한 중국과 소련의 대외개방 정책 또한 폐쇄된 북한의 대외개방에 자극과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네째, 보다 소중한 긍정적 요인은 우리의 통일 주도역량의 신장에서 찾을 수 있다. 민족의 저력에서 비롯된 국민의 성숙한 민족공동체 의식, 민주발전을 통한 정치적 정통성의 확보, 선진국 수준으로 발돋움한 비약적 경제발전, 서울올림픽을 동서화합과 민족문화의 선양의 대제전으로 성공시킨 민족적 자긍과 국제적 지위향상¹¹⁾ 등은 통일민족의 동반자로 북한과 함께 한민족이 주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통일의 저해요인

한반도에서는 통일의 촉진요인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부정적인 통일의 저해요인 또한 도사리고 있다.

첫째, 통일문제의 성격이 국제적 연관성과 민족적 자주성이라는 이중구조를 갖고 있다¹²⁾는 점이다. 한반도 문제는 동북아 지역체제와 직결되

註 11) 김경태, “남북한 통일정책,” 국토통일원, 「민주통일론-통일문제-」(1989), pp.91 ~ 92.

12) 노계현, “남북한 신뢰회복 방안,” 「민족지성」(1988.7), p.25.

어 제2차 세계대전후의 미·소강대국간의 범세계적인 이념적 양극체제 구조의 중요한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분단국의 통일문제에 연관된 나라들의 이해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들의 기여와 적용에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 한계는 분단된 국가가 통일됨으로써 유관국가에게 경쟁이나 불이익이 될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우리 민족 스스로 통일을 이룩하려는 의지만큼 한반도 주변정세와 관련된 국제적 요인들이 항상 긍정적으로 작용하기를 기대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둘째, 남북한이 설정하고 있는 이념과 체제의 문제이다.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설정하고 있으며 그것은 남북한 당사자들의 기득권의 불포기라는 현실과도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통일접근과 상호교류를 저해하는 구조적 요소가 되고 있다. 즉, 분단국가는 각각 다른 통일목표, 통일방법¹³⁾을 갖고 또한 구사하고 있다는 점이다.¹⁴⁾

註 13) 남북한 통일정책은 다음과 같다.

요소별		구 분	
		한	북 한
정	통 일 의 개 념	민족공동체 계승·발전	전한반도의 공산화
	통 일 의 목 표	국가적 통일 (1민족 1국가)	연방제 (지역자치제)
	통 일 의 주 체	민 족	
책	통 일 의 원 칙	자주, 평화, 민주, 복지	자주, 평화통일, 민족대단결 (남조선혁명) (연공합작) (통일후 교류협력)
	통 일 의 과 정	평화 정착, 민족 공영, 평화 통일	남조선 혁명 후 흡수 통일
접 근 자 세 면	전 제 조 건 문 제	동반자관계 (정치적 실체 로 인정)	체제부정 (혁명의 대상)
	대 화 협 력 기 구	실질적 협의기구	군중대회 (선전장)
	교 류 협 력 문 제	당장 실시	연방제실시 이후

김경태, 앞의 논문, p.91.

14) 노계현, 앞의 논문, p.27.

셋째, 상호간 불신이 깊은 점이다. 이데올로기의 대립 뿐 아니라 분단된 양당사자간에 심어진 불신이 어느 한 문제라도 타협하기에는 언제나 심각한 상태에 있다.¹⁵⁾ 이것은 서로의 진의마저 나쁜 영향에서 해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존재를 부정하는 경우에까지 이르는 경우도 있다. 대립하는 정치체제간의 경우 한편이 합리적이라 생각하는 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이기에는 자기의 존재를 부정하리라는 음모가 들어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기도 한다.

이상에서 알아본 통일의 촉진요인과 저해요인은 통일에 작용하는 주요 변수이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보면 북한과 국제환경이라는 두 여건은 결코 주어지는 것만이 아니라 우리가 변화를 촉진하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제어하고 조성할 수도 있는 객체이기도 하다.¹⁶⁾

예컨대 오늘날 국제정세의 변화추이는 다원화, 개방화, 자유화와 평화공존의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으며, 공산국가들의 변화추이도 이데올로기의 퇴화현상, 권력구조의 다원화 경향, 자유운동의 태동등에서 이데올로기 및 체제의 진통으로 인해 노선의 수정현상이 불가피하게 되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환경을 이용하여 평화통일의 부정적 요인을 통일에 유리한 방향으로 전환시켜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커다란 포용력을 발휘하여 남북한이 함께 평화통일에 동참하게 함으로써 평화가 정착되게 해야 할 것이다.

즉, 평화통일을 앞당길 수 있는 것은 통일의 부정적 요인을 우리의 슬기와 힘으로 가변시켜 국민의 신념과 의지를 바탕으로 평화통일 역량을 축적하고, 남북한이 상호 신뢰하고 포용력을 가지는데 있다.

註 15) 노계현, 앞의 논문, p.26.

16) 김경태, 앞의 논문, p.95.

Ⅲ. 남북교류의 방향모색

1. 남북교류의 필요성

해방이후 남북한 각지에 상이한 정치체제가 등장함으로써 민족 공동사회내의 자유로운 접촉이 내·외적 강제력에 의해 단절당하게 되었다. 이러한 남북한간의 접촉의 단절은 사회적·문화적인 이질화 현상의 심화와 민족 동질성의 파탄, 적대감의 증가를 초래하였고 남북한의 통합동화력을 약화시켰다. 이제 통일의 문제가 분단 초기의 한민족과 외세간의 갈등에서 민족 내부의 두개의 이질화된 집단간의 갈등으로 성격이 바뀐에 따라 투쟁과 대결의 주체대상도 민족 내부의 집단으로 변모하였다.¹⁷⁾ 이러한 상황에서는 현재의 분단 고통을 최소화하고 민족 공통점을 찾아 평화적 통합 촉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과정이 필요하다.

교류는 통일에의 하나의 과정이다. 그것을 통하여 남북관계는 크게 진전되기도 한다.¹⁸⁾

현실적인 면에서 통일은 일시적으로 이룰 수 없기 때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통일의 길을 걸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점진통일은 쌍방간의 적극적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질 것인 바 상호작용은 교류와 협력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교류가 통합의 한 방편이 된다고 볼 수 있다.〈표 1〉

교류가 진행되면 남과 북 사이에 쌓여진 분단의 장벽을 허는 작용 뿐만 아니라 자연히 다방면에 걸친 소통을 가져오기 때문에 남북한에 쌓여진 두꺼운 장벽을 허는 직접적 작용을 한다.¹⁹⁾

註 17) 이강욱, “88 올림픽을 전후한 남북한의 공동 협력 방안,” 부산대학교 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1982), p.290.

18) 민병천, 앞의 책, p.386.

19) 민병천, 앞의 책, pp.386-387.

<표 1>

평화통일의 과정

과 정	평화의 측면	통일의 측면	민족공동체
분립과 갈등	냉 전 분 쟁	분 단 분 열	민족공동체 의 분열
공존과 교류	생존지향적 복지지향적	부분적 교류 다방면적 교류	분야별 민족공동 체의 형성
화해와 통합	화 해 평 화	연 합 통 일	정치공동체 의 형성

민족의 소모적 경쟁을 지양하고 각종 교류를 대폭적으로 실시할 것을 촉구한 노태우대통령의 「7.7 선언」은 이러한 남북교류의 필요성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북교류의 필요성에 의해 우리가 남북교류를 통해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은 다음과 같다.

가. 신뢰회복과 관계개선

평화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 분위기가 조성되어야 한다. 남북한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과 신뢰 분위기가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는 서로 오해와 불신이 생기고, 오해와 불신이 깊어지면 평화스러운 방법보다는 폭력수단에 의지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분단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남과 북이 여러 방면에서 교류와 협력을 추진함으로써 서로 사회를 개방하며 이 길만이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남북한 간의 다각적인 교류와 협력을 실시하는 것은 곧 민족분단으로 인한 민족적 고통과 불신감을 해소시키는 터전을 마련할 것이다.

나. 민족공동체의 형성

원래 공동체였던 우리의 민족의식 기반이 분단으로 단절되자, 남북한은 잃어버린 반쪽을 외부세계에서 찾으려 했다. 그러한 외세의존 경향으로 인해 우리는 우리의 공동체 의식과 민족의 자주성이 일면 손상된 점도 없지 않았다.

남북교류는 외세의존 경향이나 국제관계에서 긴장을 초래할 가능성을 모두 배제하게 할 것이며 민족의 긍지와 자존을 바탕으로 민족전체의 의식과 생존권을 하나로 제도화함으로써 민족의 일체감을 확보시켜 줄 것이다.

다. 평화통일의 기반구축

남북교류의 긍정적인 목적은 평화통일을 성취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데 있다.

남북교류가 진행되면 분단의 장벽은 부분적이거나 허물어 지게 되고 새로운 협력시대를 열어 놓게 된다. 이러한 남북관계는 서로 이해를 증진하고 신뢰를 조성할 뿐만 아니라 동질성을 회복하고 개방을 촉진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통일에 참다운 기초가 되게 할 것이다.

2. 남북교류의 기본방향

앞에서는 평화통일의 과정으로서 교류의 필요성과 목적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남북교류는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는가? 우리는 통일이라는 민족적 과제를 평화통일에 의한 완전한 통일에서 찾고 있다. 사실 남한의 통일외교정책의 개념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통일보다는 분단상태의 단계적인 개선을 위한 관계정상화에 집중되어 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능주의적 통합접근은 단선적으로 제한된 것으로 통일문제 해결에 그다지 효율적이었다고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북한

은 이러한 우리의 방식에 제대로 대답해 주지 않았으며 그들이 요구하는 정치·군사회담이 결렬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분야의 경우까지 좌절되고 말았던 것이다.

따라서 정치·군사부분을 비롯한 사회, 문화, 경제, 예술, 체육, 학문 등 실로 모든 분야에서 교류와 협력의 가능성을 높이고 이질성을 완화시키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남북한간의 신뢰회복과 교류협상, 정치, 군사회담 등이 다변수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효율적이라 볼 수 있다.²⁰⁾

이와같은 문제를 효율적으로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남북한간의 공존의 기틀 위에서 민족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추구할 수 있는 중간형태로서의 민족공동체 이념을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현실적으로 40여년 간에 이르는 장기간의 분단상태에서 형성된 민족 이질성과 적대감을 해소시키기 위해서는 민족공동체 형성이 가장 시급하리라 본다.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민족의식 고양에서 출발해야 하고, 남북한의 민족이 공존공영할 수 있는 민족적인 이념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하여 민족 복지공동체로 지향해야 한다.

이러한 한반도의 민족공동체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생존공동체, 복지공동체, 이념공동체의 형태²¹⁾로 발전되어야 한다.

남북한의 관계개선은 남북한 모두에게 대외적 자율성의 제고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러나 보다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의 제고는 남북이 생존공동체라는 하나의 단위체로서 작동할 수 있을 때 가능할 수 있다.²²⁾

註 20) 김태창, “새통일방안의 이념정향을 위한 탐색시도,”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이념정향과 대학의 통일논의」 (1989), pp.30-31.

21) 하영선, “통일 접근 과정으로서의 민족공동체 형성 모색,” 국토통일원, 「남북화해와 민족공동체형성의 비전」 (1988), p.42.

22) 하영선, 앞의 논문, p.42.

복지공동체는 한반도내의 한민족 전체의 평화스러운 생존권보장 및 민족구성원 개인의 행복과 번영, 그리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가자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남북한이 상호협력하여 남북한의 경제가 당면하고 있는 취약점을 개선하여 남북한 전체의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하나의 민족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안보와 복지공동체인 동시에 이념공동체의 면모를 갖추어야 한다. 한반도와 같이 이념적 대립이 격심한 두개의 정치체제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존 양체제의 이념적 기반을 동시에 수렴해 갈 수 있는 제3의 방향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같이 한반도에서 생존, 복지, 이념공동체로서 민족공동체가 구축되어 나갈 때 한반도 통일체제의 완성에 보다 접근하게 될 것이다.²³⁾

註 23) 하영선, 앞의 논문, p.43.

Ⅳ. 통일로 향한 남북교류의 분야별 실현방안

통일의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사회, 문화, 경제, 정치에 걸친 각 부문의 교류를 통해 민족의 동질성을 확보하는 것이 최우선의 과제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현재까지 남북교류와 관련해서 가장 획기적인 제의는 노태우대통령이 대내외적으로 표방한 「7.7 선언」이라 할 수 있다. 「7.7 선언」은 남북한이 비록 체제는 달리고 있으나 하나의 민족이라는 민족공동체 의식에서 출발, 북한동포도 민족의 일원으로 포용하여 교류와 협력을 활발히 추진해 나간다면 남북한의 긴장완화와 평화통일을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에서 부터 통일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 있다.²⁴⁾ 그러나 군사문제 회담 제의나 정치적으로 합의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한 가지 아쉬움이다.

남북교류는 어느 일방에게만 이익이 되거나 위협이 되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 민족전체의 이익과 번영, 그리고 통일에 이바지할 수 있는 인식에서 실시되어야 한다.²⁵⁾

흔히 통합으로 가는 과정으로서 비정치적 분야를 중심으로 남북한 관계에 직접 적용하려 하지만, 우리의 남북한 관계는 일반적인 이국간 관계로 보기 어려운 특수한 성질을 가진 것이므로, 국가간의 협력, 거래, 통합 등을 다루기 위하여 발전시킨 기능주의의 일반 모델들이 우리의 남북한 관계에 직접 운용될 수는 없다.²⁶⁾ 즉, 남과 북을 합리적으로 개선시키려면 기능주의를 중심으로 하되 정치적인 대화나 타협도 병행하는

註 24) 김용재, “대통령 7.7 특별선언의 의의와 남북관계의 전망,” 국토통일원, 「민족제결합의 모색」, 제 37집 (1988), p.33.

25) 최문현, “남북교류에 대한 북한인식 변화,” 「북한」 (1985.3), p.90.

26) 이상우, “기능주의 통합이론과 남북관계,” 국토통일원, 「통일논총」 (1976), p.152.

신기능주의 이론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정부 또한 종래의 단계론을 탈피하여 모든 영역에서 동시에 교류를 실시해야 한다²⁷⁾고 밝힌 적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사회, 문화, 경제적 교류를 다양하게 하면서 동시에 정치적 문제들도 논의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보려 한다.

1. 사회교류

통일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우선 남북한간의 사회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물론 사회교류는 쉬운 일이 아니나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해서는 당위적인 길이며 서로를 알릴 수 있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도 하다.

첫째, 남북한간의 사회개방이 실현되려면 정보의 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한 정보교류를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는 남북 이산가족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한 그들 간의 우편교류의 길을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남북한간의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모락방송 장치와 방송 청취 통제장치를 제거하여 쌍방 정규방송을 자유로이 청취할 수 있도록 합의를 해야할 것이다.

둘째, 남북한 지역개방이다. 이를 위하여 1982년의 「20개 시범실천사업」에서는 설악산 이북과 금강산 이남지역을 관광휴양지로 설정하여 자유관광 공동지역으로 개방을 제의하고 있다.²⁸⁾ 지역개방을 위해서는 서울-평양간 도로를 개통한다든가, 해외동포들의 조국방문을 공동으로 주관하고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방문토록 한다. 또한 남과 북을 방문하는 모든 외국인들에게도 판문점을 통과하여 쌍방지역을 자유로이 왕

註 27) “이흥구 통일원장관 관훈클럽간담회,” 한국일보, 1988.6.10, p.3.

28) 윤병익, “남북한 교류·협력을 위한 기능주의적 접근,” 국토통일원, 「통일논총」, 4권 2호 (1984), p.121.

태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초기에는 부분적인 개방을 시도하며, 차차 그 범위를 넓혀 남북한 모든 지역을 개방하여 자유로운 왕래를 보장할 수 있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셋째, 이산가족 상호방문 추진이다. 85년 쌍방이 일차적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7.7 선언」 후속조치로 북한에 제시된 방안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다.

① 이산가족 생사 및 주소확인을 위한 교환

② 서신교환 및 전화와 전보의 교환

③ 해외거주 이산가족들에게 생사, 소재확인, 서신왕래, 가족상봉의 기회알선²⁹⁾

④ 이상의 이산가족 사업을 위한 공동협의기구의 설치와 운영³⁰⁾

정부는 가능한 모든 방법을 통해 인도적 견지에서 이산가족의 상봉실현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2. 문화교류

문화교류는 그 성립조건이 까다롭다면 까다로운 편이다. 문화교류가 접촉, 전과, 수용의 과정을 거친다고 할 때 상대방에게 쉽게 전과되고 수용되기 위해서는 ① 상대방 문화가치에 대한 이해, ② 상대방 문화의 흡수 필요성, ③ 상대방 문화의 이념적 무해·무영향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³¹⁾

첫째, 학술분야의 교류이다. 민족을 특징짓는 공통성 중 가장 두드러진 분야는 언어와 역사라 할 수 있으며 남북 모두 같은 입장을 취하고 있어 실현 가능성을 엿보이게 한다. 이를 위해서는 남과 북이 공동으로 모

註29) “고향방문단 연내교류 위한 실무회담,” 한국일보, 1988.7.14, p.1.

30) 민병천, 앞의 책, p.402.

31) 임채욱, “전통문화역량 축척부터,” 「북한」 (1989.5), p.61.

여 연구할 수 있는 연구기관³²⁾이 필요하다. 이 전제를 바탕으로 언어 부분에 있어서는 ① 규범(맞춤법, 발음, 띄워쓰기 등)의 통일, ② 용어(일반용어, 학술용어)의 통일, ③ 글자문제(모아쓰기, 풀어쓰기, 전산화 등), ④ 어휘정리를 통한 통일사전 편찬, ⑤ 통일학교 문법교과서 편찬, ⑥ 어휘빈도수, 기초한자 목록 작성, ⑦ 방언조사 및 지명조사 등³³⁾을 꼽을 수 있다.

고고학에서도 ① 고고학 유적 및 유물의 발견, ② 용어의 통일, ③ 유적 및 유물의 시기 측정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그리고 학자들의 상호방문 및 학술서적 교류,³⁴⁾ 학술회의 개최³⁵⁾ 등도 가능하다. 그 외 광개토태왕비문 해석, 비무장지대의 생태계 조사와 민족전체의 이익과 관련된 일본교과서 왜곡사건이나 간도지역 귀속문제 등도 시도해 볼 수 있는 방안이다.³⁶⁾

둘째, 예술분야의 교류이다. 예술에 있어서는 현실적인 것은 대체로 체제와 깊은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극히 제한된 범위내에서만 가능하다. 교류분야를 예시하면 고미술품, 민속예술품의 교환전시 및 공동전시회 개최,

註32) 남과 북의 정부에서 공동출자하여 비무장 중립지대에 설치한다면 가능하다. 이때 양쪽 정부에서 지원을 받되 행정적으로 독립되어 자율성을 보장받아야 하고 그 권위를 인정받을 것이 전제되어야 한다.

33) 박건식, “언어이질화 극복의 시급성,” 「북한」(1989.5), p.49.

34) 학자들의 상호방문은 ‘학자·학술교류위원회’와 같이 기구를 통해 일관되게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된다. 서적교류에 대해서도 ‘남북학술서적교류협회’와 같은 기구에 의해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박건식, 앞의 논문, p.49.

35) 학술회의 개최는 ① 한국 또는 북한 유치, ② 중립지대에서 공동개최 ③ 중국에서 개최되는 ‘조선족 학술대회’나 유럽에서 개최되는 ‘유럽한국학대회’와 같은 기존의 한국학 발표대회의 공동참여, ④ 제 3국에서 공동회의, ⑤ 세계학술발표에 공동참가 등을 들 수 있다.

박건식, 앞의 논문, p.49.

36) 노계현, “남북한 신뢰회복 방안,” 「민족지성」(1988.7), pp.28-29.

예술가의 교환방문 및 교환공연, 어린이들의 평화예술사절단 교환공연 등이 제시될 수 있다. 예술분야의 자유로운 교류가 이루어지면 공동사업의 순서로 영화의 공동제작 등도 가능하리라 본다.

셋째, 체육분야의 교류이다. 남과 북의 체육교류는 상호의 긴장과 불신이 해소되고 우리민족의 동질성을 회복하며, 행복 추구의 공동목표에 도움을 줄 것이다. 그리고 교환 또는 친선경기, 국제경기에서 단일팀구성 등 정치적 부담없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므로 노력에 따라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교환 또는 친선경기³⁷⁾는 ① 분단이전에 있었던 경기의 부활(주요도시 대항 축구경기등) ② 판문점에서의 친선경기 개최(우선 크게 시설이 필요하지 않는 탁구, 배구, 정구 등에서 점차 확대.) ③ 상대방지역으로의 교환경기의 개최 등을 생각할 수 있으며, 북경 아시안게임과 바로셀로나 올림픽의 단일팀 구성방안³⁸⁾등도 가능하리라 본다. 체육협력사업으로는 판문점의 상설경기장 건설과 체육기구의 설치를 생각할 수 있다.

넷째, 언론인, 방송분야의 교류이다. 남북한간의 방송교류는 국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고, 어느 정도 상호분위기가 조성된 후에야 실질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제약성은 있지만 민족 동질성 회복과 문화공동체 형성이란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하여야 할 분야이다.

먼저, 남과 북에 주재하는 외국 언론인의 남북한 왕래 취재를 허용하며, 자유로운 방송취취,³⁹⁾ 자유로운 취재활동 보장,⁴⁰⁾ 방송 통신기술 공

註 37) 민병천, 앞의 책, p.401.

38) 단일팀 구성의 형태로는,

- ① 국외에서 열리는 국제경기의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경우
- ② 남한 또는 북한에서 열리는 일반국제대회에서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경우
- ③ 아시안게임과 올림픽등에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경우가 있다.

민병천, 앞의 책, p.400.

39) 이를 위해서는 사전조치로서 휴전선 지역에서의 확성기방송등 방송수단을 통한 상호 비방, 모략방송을 중단하는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

동연구개발 41) 등 추진단계를 설정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42)

남북 언론인을 위해 서울과 평양에 주재원을 두며, 서로 보도할 수 있는 자료를 교환 43) 하기 위하여 판문점에 「공동보도자료본부」를 설치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겠다.

3. 경제교류

우리가 북한과의 경제 교류·협력을 바라는 것은 우리 경제의 발전적인 측면보다는 민족화합과 이해증진이라는 통일지향적이고 민족적 감정의 발로라는 측면이 보다 강하게 작용되고 있다. 이러한 경제실현을 위한 전제로서 ① 경제교류의 추진은 최소한 통일과 연결될 수 있어야 한다.

② 양자간의 경제교류는 동등한 입장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대외적인 명분을 반영할 수 있어야하므로 순수하게 정치적 여건만을 고려해서는 안된다.

③ 남북한간의 상이한 체제나 여건을 고려할 때, 초기에 합의한 부분에만 국한하고 점차 그 대상을 확대시키는 단계적 접근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44)

첫째 단계는 제3국을 통한 중계무역을 생각할 수 있다. 이미 남북한 사

註 40) 우선 취재범위를 특정지역으로 설정하여 초기단계에서는 각종 국제체육경기 등 체육행사, 국제음악제, 연극제, 민속경기대회 등 문화행사, 민속행사, 민족유적지에만 자유취재를 보장한 후 점차적으로 취재범위를 확대해 나간다.

41) 방송, 통신분야의 기술진이 공동으로 방송, 통신기술 연구 개발에 참여하여 기술협력단계로 발전시키고 언론의 대외 공동협력문제에 있어서도 남북한 공동 해외 기자단을 구성하여 해외통신 동시보도와 국제언론기구의 동시가입 및 공동보조, 남북언론인의 국제적 공동진출등을 도모할 수 있는 길도 마련해야 한다.

42) 배재원, “비방, 모략, 선동이 중단되어야,” 「북한」 (1989.5), p.53.

43) 자료의 교환단계에서는 정치적이고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이 배제된 체육·문화행사 등의 보도자료·잡지등을 교환하는데서부터 추진되어야 한다.

44) 김세원, “남북한 경제교류의 전망,” 국토통일원, 「전환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 (1987), pp.381-385.

이에는 영국과 일본을 통하여 남북한 무연탄의 교역이 1979년 이후 실시된 예가 있었으며, 88년 12월에도 현대가 제3국 일본상사 중재를 거쳐 북한산 모시조개 40kg을 부산항으로 반입, 그룹계열의 백화점에 전시를 한 예 등 ‘공식적’ 또는 ‘직접무역’이 아니었을뿐 물자교류가 있었다. 이는 제3국의 외국상사를 통한 중계무역을 말하는 바 가령, 한국이 지리적으로 볼 때 일본, 홍콩 등지를 경유하여 북한의 상품을 수입하거나 북한에 상품을 수출하는 형태이다. 이러한 간접적 교류는 남북한 간에 아무런 정책적 변경없이 취할 수 있는 교류이다. 마치 중공과 대만이 제3국 및 외국상사를 통해 간접무역을 하는 것과 비슷하다.

두번째 단계로는 남북한간의 직접무역 형태이다. 상호 제3국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는 상품을 양지역의 공급에 의하여 대처할 수 있는 여지가 크다면 직접거래를 시도할 수 있다는 논리가 성립된다. 수송비를 비롯한 모든 간접비용의 절감을 비롯하여 한민족간의 거래라는 점에서 크나큰 의의도 찾을 수 있음은 물론이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동서독과 같이 국가간 무역의 형태를 취할 것이 아니라 한반도내의 지역적 교역의 형태를 취해야 한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교류가 통일의 긍정적인 목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선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⁴⁵⁾

이러한 교역은 민간차원의 기업이 주동이 되어야 하며 관계 정부당국에서도 협조의 뒷받침을 해 주어야 실효를 거둘 것이다.

물자교류는 우선 토산품을 중심으로 하여 소량의 거래부터 시작하여야 할 것이다. 이는 경제적 실리보다는 상징적인 의미가 더욱 크며 끊어졌던 남북한 사이의 연계를 다시 잇는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다음, 경제적 실리에 주안점을 두게되는 경우 남북한 쌍방의 산업구조

註 45) 강광식, “남북교류의 길 어떻게 트일 것인가,” 「통일」 (1982.9), p.44.

와 무역구조를 감안하여 쌍방 모두에게 호혜적인 품목 46)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한의 노동집약적인 재화와 우리의 자본·기술적인 재화 사이의 교역이 장기적으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자의 초기 단계에 있어서는 비교우위에 입각한 교역이 쉽게 진전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어느 한쪽의 우월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수직적 교역은 정치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 단계로는 남북한 경제협력을 추진할 수 있다. 1988년 노태우 대통령의 「7.7 선언」과 10월 7일 발표한 「경제부문 후속조치」등 일련의 대북 경제조치와 중·소의 개혁·개방추세의 급진전 등 북한의 대서방 자본·기술유치의 국제환경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리고 북한 또한 1984년 「합영법」을 제정, 공포하여 서방과의 협력을 통해 지금까지 이루어진 합작유치 시설은 20여 건 47)에 달하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는 합영공작부를 신설(1988.11.26)하고, 국제회의에서도 더욱 자본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북한이 보다 적극적인 개방의지를 나타낼 경우 남북 합작투자는 가능해질 것이다.

남북 직접무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동서독사이의 스윙제도와 같은 무역 신용의 대역도 생각할 수 있으며, 플랜트 수출을 통한 차관의 상호제공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48) 또한 1988년 남북경제회담에서 의견접근을 본 교역물자 수송을 위한 경의선 철도의 재개통, 경제협력상설기구인 ‘남북경제협력위원회’ 구성, 그리고 자원개발 및 어업분야의 협력도 가능하리라 본다. 이 분야의 경제협력이 이루어지면 「전자공업」, 「자동차산업」, 그리고 「조선산업」 등으로 그 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가는 것

註 46) 교역품목은 남북경제회담에서 의견접근을 본 원자재와 완제품을 포함해서 남한에서 전자제품, 차량, 철강, 알미늄 등을 그리고 북한에서 철강석, 석탄 등 광물자원과 누에고치, 명태 등 수산물을 각각 반출하는게 좋겠다.

이 좋을 것 같다.

마지막 단계로는 경제통합 즉, 자유무역지역 설정, 공동시장 형성, 그리고 경제동맹의 결성 등의 순서로 발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정치교류

교류를 확대하려면서 남북문제의 열쇠가 될 수 있는 정치·군사회담을

註 47) 합영법 추진실태

(1988.10. 현재)

년 도	합영수교국	합 의 내 용
1985	일 본	락원백화점 (지방 31개 분점)
1985	프랑스	양각도 국제호텔
1985	일 본	창광 커피숍
1985	"	대동강 자동차 종합수리공장
1986	"	조일우호의료사업회사 (금만유병원)
1986	"	평양골프장
1986	"	조선국제합영총회사 (합영 증계회사)
1986	"	문산 금광개발주식회사
1986	"	은하수 식당
1986	"	모란봉 합영회사 (피복생산)
1987	"	남산합영회사 (전기, 전자제품판매점)
1987	"	조선락원금속합영회사
1987	"	원산 애국 편직물 유한 책임회사
1987	"	동해관 (식당)
1987	"	대동강피복공장 (모란봉 합자회사, 자회사)
1987	소 련	공장기계공업 (고리끼·회천공장기계공장)
1987	"	천해양식공동생산기업소
1987	"	어업공동기업소
1987	중 국	평양냉면관 (북경)
1988	"	도무강식당 (연길시)
1988	일 본	평양실크 합영회사
1988	일 본	청천강 합영회사 희천제사공장

「통일문제 해설」, 국토통일원 (1989), pp.204-206.

48) 강광식, 앞의 논문, p.45.

외면할 수는 없다. 이제는 사회, 문화, 경제교류를 계속하면서 정치적인 문제들도 과감하게 논의해야 한다. 다각적인 교류를 추진하면서 한편으로는 공격적인 군사력을 구축한다는 것은 민족역량의 낭비일 뿐 아니라 서로의 적대감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통일논의에서 교류론이 공격을 받는 것도 통일논의의 중요한 내용이 되는 정치·군사적인 문제가 빠지기 때문이다. 교류와 더불어 통일로 가려면 한반도의 정치적인 문제를 논의하는게 바람직 하다. 그럴때 우리의 교류가 통일로 향하는 노력으로 받아들여질 것이다.

첫째, 한반도에 하나의 민족공동체 형성을 위해서는 남과 북은 한반도의 휴전체제를 평화체제로 발전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⁴⁹⁾ 한반도의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협상으로서는 남북한 불가침협정체결,⁵⁰⁾ 휴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 전환, 군축문제 등을 생각할 수 있다.

한반도의 휴전체제가 평화체제로 전환되는 과도기에서는 먼저 남북상호 불가침체결이 필요하다. 현실적으로 이러한 체제가 작용하지 않는다면 한국전쟁의 예에서 보았던 것과 같이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에 대해 군사력 사용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것이다.

북한이 제안하고 있는 미국과의 평화협정문제는 한반도에서의 한·미 군사관계의 개선을 통하여 풀어나가야 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한국군 작전통제권 문제의 개선이 시급하며,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상대적인 대외 자율성의 제고가 필요하다. 이러한 속에서 평화를 위한 미국의 역할은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며 이에 따라 평화협정 자체의 의미도 약화되어 갈 것이다.⁵¹⁾

註 49) 하영선, 앞의 논문, p.32.

50) 신진,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전략,” 「통일한국」 (1988.11), pp. 107-108.

51) 하영선, 앞의 논문, pp.34-35.

군축문제 협상은 현실의 장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긴장완화의 수단이 된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받아 들여진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신뢰기반이 조성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는 군축협상이 바로 긴장완화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둘째, 군사적 교류 측면이다. 비무장지대에서의 군사시설의 완전 철거는 긴장완화를 위해 당장 실현될 수 있는 것들로 남북한간의 우발적인 군사충돌을 방지하고 긴장완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자는 데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민주통일방안에 포함된 ‘남북기본관계에 관한 잠정협정’ 제 4항인 「현존체제를 유지하면서 군비경쟁의 지양과 군사적 대치상태의 해소조치를 협의한다」는 내용이기도 하며 북한측도 동의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군사적 차원이 신뢰구축 방안으로서는 최소한 상호 군사정보의 교환, 군병력 및 장비의 이동과 군사훈련의 사전통보, 참관, 검열 등을 검토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며 규제적 차원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팀 스피리트 훈련의 장래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하여야 할 것이다.⁵²⁾

셋째, 남북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남북대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대화는 남북한의 6천만 민족의 의지가 오직 이 시대의 비극을 청산하고 하나의 민족으로 복귀하여야 한다는 것을 최우선인 과제로 삼아야 한다.

남북대화를 통해 인적·물적 교류를 실현하며, 적십자회담과 경제회담 등 기존의 대화가 재개되면서 교류와 협력이 활성화되면 남북한의 관계도 더 이상 적대적 관계로만 머물지 않을 것이다.

남북국회회담도 이루어져야 한다. 남북관계는 남북국회간의 쌍무적 회

註 52) 하영선, 앞의 논문, p.35.

답이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 또한 반드시 실천에 옮겨지고 그 효과도 보증받는 회담형태⁵³⁾가 되어야 한다. 또한 남북국회회담은 남북정치인간의 교류라는 측면에 역점을 두고 어떤 구체적인 하나의 문제에 치중하기 보다는 상호간의 관심사에 대해 이를 정부당국 차원의 회담을 통해 해결하도록 권고하는 차원에서 추진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註 53) 서극성, “「남북국회회담」 「불가침공동선언」, 「민족재결합의 모색」 제 39집, 국토통일원 (1988), p.22.

V. 결 론

이상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통해 통일을 달성하기 위한 남북교류 문제를 논의하였다. 사회, 문화, 경제, 정치분야의 교류 가능 분야도 제시하였다.

그러나, 교류와 협력이 통일을 향한 가장 합리적인 방안이라 하더라도 남북한간에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 실현은 어렵다.

사실상 북한은 「7.7선언」과 「8.15 구상선언」에 대하여 부정적 반응을 보이고 있다. ‘두개의 조선 조작 정책’, ‘장사나 하면서 세월을 보내자는 정책’ 등으로 매도하고 있다. 또한, 남북대화 창구단일화 방침을 격렬히 비난하면서 일련의 민간급 대화를 제의하고 있다.⁵⁴⁾

따라서, 북한을 대화나 협력의 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다각적인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다.

첫째, 민족적 차원에서 민족이념을 재발견해야 한다. 우리는 5천여년 간에 조성되어온 한민족 이념을 재조명하여 분단된 민족이념을 하나로 묶는 ‘민족공동체 이념’을 지향해야 한다.

둘째, 경제적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경제성장을 이룩해야 하고, 모든 국민이 보다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는 ‘복지사회’를 실현해야 한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우수성과 단결성을 더욱 발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셋째, 정치적 차원에서 발전을 급속히 이루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와 공산주의가 지니지 못한 민주주의의 제가치를 더욱 높혀 발전·강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즉, 질차적 민주주의를 앞당겨 실천적 민주주의로 이행해야 한다.

註 54) 내외통신(자료판), 제 648호, 1989.7.14.

네째, 민간차원의 각 분야별 교류·협력기구를 설치하고 이 기구를 통해서 북한과 지속적이고 다방면적인 교류제외와 협상을 시도하는 일이다. 민간차원의 교류가 개방되어야 한다는 것은 통일정책 수행에 창구가 단일화되어야 한다는 것과 상호 보완적 관계가 될 수 있다. 민간차원의 교류는 정부의 통일정책 실현의 기반을 조성하는 작업이 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북한에서의 민간차원이란 노동당의 하부조직에 불과함을 충분히 인식하고, 민간차원의 교류·협력기구는 정부와 협조해야 한다.

다섯째, 교류는 단계론적 제한을 철폐해야 한다. 어느 분야이건 교류가 가능한 분야부터 시작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도 빨리 민족내적 분열을 벗어나 정치적 갈등요소를 최소화하면서, 민주적 절차에 따른 의견수렴으로 민족의 내적단결을 선행시켜야 한다.

이러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통일환경을 개선해 나간다면 북한측도 민족적 여망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을 것이며 결단코 멀지 않은 장래에 '남북한간의 교류·협력시대'가 도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국토통일원 통일연수원, 「통일문제 해설」, 1989 .
- 김학준, 「한국문제와 국제정치」, 서울 : 박영사, 1988 .
- 내외통신 (자료판), 제 648 호, 1989.7.14 .
- 민병천, 「민족통일론」, 서울 : 고려원, 1985 .
- 북한연구소, 「북한총람」, 1986 .
- 양호민 외, 「민족통일론의 전개」, 서울 : 형성사, 1986 .
- 양호민 외, 「북한사회의 재인식」, 서울 : 한울, 1987 .
- 유석렬, 「남북한관계론」, 서울 : 정음사, 1985 .
- 유완식·김태서, 「북한 30 년사」, 1975 .
- 이상우, 「국제관계이론」, 서울 : 박영사, 1988 .
- 이흥구 외, 「분단과 통일 그리고 민족주의」, 서울 : 박영사, 1986 .
- 이흥구, 스칼라피노공저, 「북한과 오늘의 세계」, 서울 : 법문사, 1986 .

〈 논 문 〉

- 김광식, “남북교류의 길 어떻게 트일 것인가”, 「통일」, 1982 . 9 .
- 김성태, “남북한통일정책”, 국토통일원, 「민주통일론 - 통일문제 -」, 1989 .
- 김세원, “남북한 경제교류의 전망”, 국토통일원, 「전환기 한반도 평화와 통일」, 1987 .
- 김용재, “대통령 7·7 특별선언의 의의와 남북한관계 전망”, 국토통일원, 「민족재결합의 모색」 제 37 집, 1988 .
- 김태창, “새통일방안의 이념정립을 위한 탐색시도”, 대학통일문제연구소협의회, 「통일이념의 정향과 대학의 통일논의」, 1989 .

- 노계현, “남북한 신뢰회복 방안”, 「민족지성」, 1988.7.
- 박건식, “언어이질화 극복의 시급성”, 「북한」, 1989.5.
- 배재원, “비방, 모략, 선동이 중단되어야”, 「북한」, 1989.5.
- 서극성, “남북국회회담과 불가침공동선언”, 국토통일원, 「민족재결합의 모색」제 39 집, 1988.
- 신기현, “한반도 통일의 촉진요인과 제약요인”, 전북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사회과학연구」제 15 집, 1988.
- 신진, “한반도 화해와 통일을 위한 전략”, 「통일한국」, 1988.11.
- 유인택, “북한의 군사”, 국토통일원, 「민주통일론-북한실태-」, 1989.
- 윤병익, “남북한교류·협력을 위한 기능주의적 접근”, 국토통일원, 「통일논총」4 권 2 호, 1984.
- 이강욱, “88올림픽을 전후한 남북한의 공동협력방안”, 부산대학교통일문제연구소, 「통일논총」, 1982.
- 이상우, “기능주의통합이론과 남북관계”, 국토통일원, 「통일이론 연구논총」, 1976.
- 임채욱, “전통문화역량 축척부터”, 「북한」, 1989.5.
- 최문현, “남북교류에 대한 북한인식변화”, 「북한」, 1985.3.
- 하영선, “통일접근 과정으로서의 민족공동체 형성 모색”, 국토통일원, 「남북화해와 민족공동체 형성의 비전」, 1989.
- 한국응용통계연구소, “남북교류에 대한 설문조사”, 「북한」, 1989.5.
- 한국일보, “고향방문단 연내교류위한 실무회담”, 1988.7.14.
- 한국일보, “이흥구통일원장관 관훈클럽간담회”, 1988.6.10.

實現 가능한 統一方案의 摸索

—「발로 投票하는 體制聯合」을 提案하며—

趙 顯 俊

(서울大 經濟學科 4年)

—目 次—

- I. 序
- II. 既存의 兩側 主張들
- III. 雙方 統一方案이 相互 受容不可했던 理由
- IV. 實現 가능한 統一方案 摸索
- V. 假稱 「발로 投票하는 體制聯合」을 提案하며
- VI. 結

I. 序

統一에 관한 希望은 해방이후 南·北 兩側에서 持續적으로 表출되어 왔다. 그러나 南·北은 서로가, 相對가 提案한 方案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나, 받아들이는 듯 하다가도 同床異夢式 宣言으로 끝내버리곤 하였다.

本稿는 먼저 兩側의 간의 주장들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나서 兩側이 여태껏 相對側의 提案들을 受容할 수 없었던 이유에 대해 생각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實現 가능한 統一方案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겠다.

II. 既存의 兩側 主張들

1. 南韓當局¹⁾의 統一方案

南韓當局의 統一方案은 UN 管理下의 統一選舉方案으로 시작되었다. 4·19 이후의 百花齊放式統一論이 反共을 國是의 제일로 내세운 5·16에 의해 一變했고, 統一論議는 한동안 뜸하다가 70年 朴正熙 大統領의 「8·15 平和統一構想」등에 이르러서야 본격적으로 재개되었다. 이것은 「7·4 南·北共同聲明」으로 이어졌으며 그 合意된 내용은 自主統一, 平和統一, 思想·理念·制度의 差異를 超越한다는 民族의 大團結이었다. 즉, 一時的 統一을 拋棄하고 段階적으로 분위기를 성숙시켜 統一로 나아가자는 것이었으며, 그 수단을 民族의 大團結로 하고 그 大前提를 平和的 統一로 하는 것이었다.²⁾

이후 이러한 原則은 現在에 이르기까지 南韓當局의 統一原則의 根幹이 되어 왔다.

註1) 굳이 ‘當局’이라는 표현을 쓴 것은 少數의 견해나마 當局의 統一方案과 다른 統一方案들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이다.

2) 박창희, 「新北韓政治論」(서울: 일신사, 1988), pp. 269-289 참조.

80년대 중반까지의 南韓當局 統一方案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으로 대표되며, 여기에도 7·4 南·北共同聲明의 정신이 그 根幹으로 유지되고 있다. 즉, 이것 역시 民族的 大團結을 강조하며, 平和的 統一이라는 大前提下에서 段階的으로 統一을 향해 나아갈 것을 제안하고 있다. 民族的 大團結은 그것의 民族이라는 理念自體에 內包되어 있으며, 平和統一은 民族統一과 동일위상의 理念으로 內包되어 있고,³⁾ 段階的 統一論은 平和統一과 自由·民主·福祉를 가능케하는 方法論으로 內包되어 있다.⁴⁾

다만,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 南·北이 合意한 7·4 南·北共同聲明과 다른 점이 있다면, 民族統一의 歷史的 意義⁵⁾ 강조와 自由·民主·福祉 理念⁶⁾의 형식적 추가이다. 그러나 이러한 추가적인 내용들도 南韓의 史觀인 民族史觀에서 보는 7·4 南·北共同聲明의 敷衍일 것이다.

즉,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도 制度 自體로는 南·北이 合意한 7·4 南·北共同聲明에서 本質的으로 變化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2. 北韓當局⁷⁾의 統一方案

北韓은 階級鬭爭 理論에 기초한 階級的 統一을 統一로 보고 있으며, 人民의 概念이 南韓에서의 民族의 概念을 대신하고 있다.⁸⁾ 따라서 다른

註 3) 이에 관해서는 이흥구,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의 歷史的·理論的 照明”, 「統一韓國의 모색」(서울: 박영사, 1987), p. 169 참조.

4) 이에 관해서는 위의 글, p. 169; 김철수,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案”, 「統一韓國의 摸索」(서울: 박영사, 1987), pp. 258-288 참조.

5) 이에 관해서는 이흥구, 위의 글, pp. 163-164 참조.

6) 이에 관해서는 위의 글, pp. 171-173 참조.

7) 여기서 굳이 ‘當局’이라는 표현을 쓴 것도 1)에서와 같은 이유에서이다.

8) 北韓憲法 第7條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주권은 노동자·농민·병사·근로인테리아에게 있다」로, 第10條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를 실시하고, 계급노선과 대중노선을 관철한다」로 각각 되어 있다. 보다 상세한 것은 박창희, 위의 글, p. 264 참조.

階級을 敵對階級으로 規定, 鬭爭의 對象으로 삼는다. 그리고 階級의 統一을 위해서 ‘美帝의 殖民地’, 支配下에 놓인 南半部를 解放시켜야 한다고 믿는다. 南韓에서 民族解放이 이루어진 후에는 人民 이외의 다른 階級을 打倒함으로써 單一階級化를 이룬다는 것이다. 즉 全韓半島의 共產化가 統一된 祖國의 未來象인 것이다.

이러한 理想의 實現을 위해 「高麗聯邦共和國案」과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設方案」을 제의했던 것이다.

73年 6月23日 金日成은 「高麗聯邦共和國案」을 제의했다. 그것은 다음 5가지를 內包하고 있었다.

첫째, 통일에 이르기까지의 과도조치다.

둘째, 現存하는 南·北의 相異한 政治制度의 存續을 인정한다.

셋째, 南·北의 두 정부가 각각 獨自的인 內·外政策의 執行을 繼續한다.

넷째, 두 정부가 임명하는 같은 수의 대표들로 하나의 調整機關을 만든다.

다섯째, 調整機關으로 하여금 南·北關係의 改善에 이바지할 共同措置를 하나 하나 강구하여 民族의 團結을 도모함으로써 統一에 接近해 간다.

또, 80年 10月10日 金日成은 새로운 聯邦制案으로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設方案」을 제의했다. 그것은 다음 5가지를 內包하고 있었다.

첫째, 南·北은 現狀態를 인정하고 그 기초에서 雙方이 同等하게 참가하는 民族統一政府를 수립하고 그 밑에서 雙方이 같은 權限과 義務를 지니고 각각 地域自治制를 실시하는 聯邦共和國을 創設한다.

둘째, 南·北同數의 代表 및 적절한 수의 海外同胞代表들로 最高民族會議를 構成하고, 聯邦常設委員會를 조직하여 南·北의 地域政府를 指導한다.

셋째, 聯邦國家의 國號는 高麗民主聯邦共和國으로 한다.

넷째, 다음과 같은 施政方針을 세운다. 즉, ① 자주성 유지 ② 民主主義 및 民族大團結 도모 ③ 南·北 經濟交流 및 合作 ④ 科學·文化·教

育의 交流 및 統一된 發展 ⑤ 南·北間 交通·遞信手段의 利用保障 ⑥ 全體人民의 생활보장 및 福利增進 ⑦ 軍事的 對峙狀態 解消 및 쌍방군 대 감축·民族聯合軍隊 組織 ⑧ 海外同胞의 權益保障 ⑨ 두 지역정부의 對外活動 調節 및 共同步調 ⑩ 統一國家로서 平和愛好的 對外政策 실시 등이 그것들이다.

단, 駐韓美軍 철수, 反共體制 철폐, 現政權 퇴진을 前提條件으로 달랐다.⁹⁾

이상으로 볼 때, 「高麗聯邦共和國案」은 國家聯合 혹은 體制聯合의 方案에 가깝고,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設方案」은 聯邦制의 方案에 가까움을 알 수 있다.¹⁰⁾ 그리고 後者の 경우 南韓當局으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것들을 前提條件으로 달았는데, 이것 역시 前者와의 差異點의 하나이다. 또 後者の 경우 聯邦議會 구성방식과 형태 등이 좀더 구체화되었다. 그러나 이들 몇가지를 除하고는 兩者의 큰 차이가 없다.

이제, 이들 聯邦制와 7·4 南·北共同聲明을 비교해 보자. 이들 聯邦制 역시 民族大團結을 강조하고 있으며, 自主的 統一을 추구하고 있고, 그들 나름의 平和統一을 추구하고 있다. 段階的 統一論은 平和統一의 方法論으로 볼 수 있으며, 施政方針들도 段階的 統一의 具體的인 段階들로 볼 수 있다. 즉, 이들 연방제도 北韓의 史觀인 階級史觀에서 보는 7·4 南·北共同聲明의 具體的 實踐方案들인 것이며, 制度 自體로는 南·北이 合意한 7·4 南·北共同聲明에서 本質的으로 變化한 것이 없다고 하겠다.

註 9) 이에 관해서는 김학준, “政治的 統合방안으로서의 聯邦制: 北韓이 제의한 聯邦制 統一案의 분석,” 「統一韓國의 摸索」, pp. 233-257 참조.

10) 體制聯合(혹은 國家聯合)이나 聯邦制에 관한 보다 상세한 것은 김학준, 위의 글 pp. 234-238 참조.

3. 南·北當局의 統一方案 比較

이처럼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73년의 「高麗聯邦共和國案」, 80년의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設方案」 모두 7·4 南北共同聲明의 合意한 내용들과 本質的인 差異가 없다. 그 결과, 당연히 이들 統一方案은 制度 自體로서는 서로 受容 가능한 점이 많게 된다. 이러한 사실은 「高麗聯邦共和國案」이 「高麗民主聯邦共和國」創設로 移行하기 위한 過渡的 國家聯合(혹은 體制聯合)을 目標로 한 것이라고 받아들일 때 더욱 분명해진다. 우선 「高麗聯邦共和國案」을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비교해 보자.

첫째, 둘다 分斷現實을 인정하고 過度的 統一方案의 성격을 지닌다.

둘째, 따라서 둘다 南·北의 獨自的인 內·外政策 執行의 繼續을 인정한다.

셋째, 둘다 調整機關을 만들고 여기서 共同措置를 강구하여 民族의 團結을 도모하고 보다 統一된 國家形態로 나아가자고 한다.

그리고 두 方案이 뜻하는대로 民族이 團結되어 보다 統一된 國家形態로 나아갈 수 있게 되면 「高麗民主聯邦共和國」이 상정하는 정도의 보다 統一된 형태의 聯邦國家를 창설할 수도 있음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도 受容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調整機關을 統一中央政府로 확대개편할 수도 있고, 그 名稱을 聯邦常設委員會로 하는 것도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 受容할 수 있을 것이다. 代議員 選出方式은 추후 협의가 필요하겠지만, 上院역할을 수행할 협의기구를 구성할 수 있을 것이며 名稱을 最高民族會議로 하는 것 역시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 受容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아울러, 國號도 협의를 통해 정할 수 있을 것이고, 統一中央政府의 名稱이나 上院의 名稱도 협의를 통해 다른 것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設方案」의 施政方針들은 82年 南韓當局이 제의한 「20개 示範實踐事業」과 相通하는 것이 많지 않나 한다. 이들 施

政方針 중, 자주성 유지, 民主主義·民族主義 도모, 經濟交流, 科學·文化·教育의 交流 및 統一的 發展 등은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 그대로 受容할 수 있을 것이며, 全體人民 생활보장·복리증진, 海外同胞 權益保障도 用語의 意義¹¹⁾만 明確히 合意된다면 그러할 수 있을 것이다. 南·北間 交通·遞信手段의 利用도 제한적인 범위에서부터¹²⁾ 보장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상의 施政方針들은 당장이라도 協議해 실시할 수 있는 것들이라 본다.

그리고 美·蘇가 80년대 중반이후 보여주고 있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相互 軍備를 축소해 나가고, 이것을 相互 방문해 감시·확인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면, 軍비축소의 형태로 主한미군도 감축되어가고 결국 철수되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몇 십년, 혹은 몇 백년이 걸릴지라도, 그러한 과정이 계속 큰 무리없이 추진되어 간다면 언젠가는 보다 統一된 國家形態로서의 聯邦制 실시가 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며, 그 시기를 전후해 民族聯合軍隊 조직도 가능해질 수 있다고 본다. 統一國家로서의 平和愛好的 對外政策의 실시도 그 무렵에는 가능해질 것으로 보며, 이러한 것들 역시 福祉理念이나 平和理念으로 장기적으로는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 수용할 수 있다고 본다.

註 11) 人民, 福利, 權益 등의 用語에 대한 해석은 南·北間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본다.

12) 굳이 「제한적인 범위에서부터」라는 부가어를 둔 것은 간첩행위 등을 위한 경우에까지 당장 허용할 수는 없는 것이라 생각하며, 그러한 것 등으로 인한 혼란의 우려를 불식시키면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는 생각에서이다.

Ⅲ. 双方 統一方案이 相互 受容不可했던 理由

그러면, 이처럼 南·北當局의 統一方案들이 制度 自體로는 本質的인 差異가 없으면서도 現實에 있어서는 細部的 合意가 不可能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 앞에서 복선을 깔았듯이 南·北間 史觀 差異¹³⁾ 때문이었을 것으로 본다. 史觀이 다르기에 7·4 南·北共同聲明의 해석이 다르고 統一된 祖國의 未來象이 다르며 그 결과, 어떠한 細部的 措置이건 그것이 我側의 未來象 실현보다 他側의 未來象 실현에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註 13) 民族史觀은 民族을 資本主義形成 이전에도 또 社會主義形成 이후에도 半恒久的으로 存在하는 것으로 보고, 또 近代民族國家는 모든 社會階級이 主體로 參與하는 성숙된 國民國家가 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우리민족 성원 모두가 자기가 속한 階級의 利益이나 意識보다는 民族의 利益이나 意識을 앞세워 思考하고 協同하면, 分斷의 障壁은 무너지고 統一의 숙원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즉, 階級을 相對的이고 和解的인 것으로 보는 것이다. 이 입장에서는 世界史의 現段階에 있어서 勞動者階級은 經濟生活에 여유를 갖고 文化를 향유할 수 있게 되었으므로, 폭력혁명에 의한 체제전복에 매력을 느끼지 않게 되었다고 본다. 즉, 民族은 충실한 文化共同體와 명확한 民族意識을 향해 성숙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에 있어서 階級은 人間存在의 本質的 單位가 아니라 그 現象狀態이며, 오히려 民族이 人間存在의 보다 本質的 單位라고 보는 것이다.

階級史觀은 人類의 歷史를 階級鬭爭의 歷史로 보고 「最後의 階級」으로서의 프롤레타리아트가 政權을 장악하고 프롤레타리아 전체국가를 만들어으로써 스스로를 해방시킴과 동시에 階級과 階級對立을 소멸시킬 사명을 지니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階級의 개념은 絕對的이고 和解不可能한 것으로 보며, 民族의 利益이라는 것은 부르조아지의 階級的 利益의 僞裝된 表現에 불과하다고 본다. 그래서 프롤레타리아트가 共通인 階級的 利益을 위해 國際的으로 團結하여 革命的 鬭爭을 벌여야 한다고 본다. 즉, 歷史의 現段階에 있어서는 階級은 人間存在의 本質的 單位이지만 민족은 그 現象狀態에 불과하다고 본다.

북한연구소, 「北韓의 統治이데올로기 批判」 (서울; 북한연구소, 1981), pp. 11-63 참조.

한 거부할 수 밖에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限界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史觀의 差異를 극복해야 하는데, 相對的이고 타협가능한 기능적 制度와는 달리, 그것을 수단으로 삼는 統一觀의 基礎를 이루는 史觀은 絶對的이고 타협 불가능한 것이다. 즉, 어느 한쪽의 史觀으로 다른 쪽의 史觀을 신봉하는 측을 설득시킬 수가 없는 것이다.¹⁴⁾ 결국 史觀의 差異를 극복하는 길은 南·北 어느 한쪽의 史觀이 그 内部的 혹은 外部的 要因에 의해 다른 쪽의 史觀과 유사해지도록 하거나, 아니면 아예 ‘南·北의 史觀이 당분간은 相互 受容 不可하다’는 사실을 잠정적으로 인정하는 데서 찾을 수 밖에 없다.

Ⅳ. 實現 가능한¹⁵⁾ 統一方案의 摸索

1. 史觀이 서로 유사해지도록 하는 方案

史觀이 서로 유사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어느 한쪽에서 内部的 要因이 생기도록 하거나 아니면 外部的 要因을 만들어야 한다. 여기서 内部的 要因으로서는 暴力革命과 選舉革命을 생각할 수가 있고, 外部的 要因으로서는 戰爭을 생각할 수가 있을 것이다.

먼저 暴力革命에 의해 어느 한쪽의 體制가 顛覆될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北韓에서 暴力革命이 일어나고, 또 그것이 成功하여 史觀이 南韓의 그것과 유사해질 가능성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본다. 南韓에서

註 14) 이것은 마치 특정종교의 교리로 他종교 신자를 설득시킬 수 없는 것과 같다. 이처럼 史觀은 종교 못지않게 절대적인 것이다.

15) 실현가능 여부와 바람직한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다. 물론 실현가능하면서 바람직하다면 더욱 좋겠지만, 논점이 흩어지는 것을 피하기 위해 여기서는 실현가능 여부의 객관적 판단에 관해서만 논의할 전개하겠다.

그러한 경우가 생길 가능성은 우선 北韓側으로서는 일단 기대해 봄직할 지도 모르겠다. 그런데, 비교적 개방적인 南韓에서 非議會主義的 暴力革命이 일어난다는 것은 革命支持勢力이 少數인 경우이기 쉬울 것이며, 이 경우 革命이 成功하기 위해 最小限으로 필요한 多數의 默認을 얻어내고 또 反革命勢力을 暴力으로 制壓하는데까지 成功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본다.¹⁶⁾

다만, 이 方案에 正當性을 부여하고 南韓에서 그러한 革命이 일어나 成功하길 기대해 봄직할 北韓側이 그 실현가능성에 대해 어떻게 판단할지에 따라, 北韓側이 餘他 統一方案들에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것이고 餘他 統一方案들의 實現可能性의 정도가 달라질 것이다.

다음으로, 選舉革命에 의해 어느 한쪽의 史觀이 다른 쪽의 그것과 유사해질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자.

北韓에서 南韓의 史觀을 받아들이는 選舉革命이 일어나 成功할 가능성은 적어도 현재로서는 희박하다고 본다. 그러면 南韓의 경우에서는 어떠한가? 그 가능성이 北韓에서의 경우보다는 크다고 보지만, 그것 역시 최근 몇 차례의 選舉結果 등을 고려할 때, 적어도 당분간은 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끝으로, 武力統一의 경우를 생각해 보자.

北韓側이 오랫동안 검토해왔음직한 統一方案이며, 6·25를 통해 이루어질 뻔도 했었던 統一方案이다. 南韓側도 6·25 직후 한때 「北進統一」을 統一方案으로 삼았었다. 그러나, 6·25에 의해서도 統一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앞으로도 그 실현가능성이 적어 보인다. 그것은 南·北間 相互 信賴하는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까지는 南·北 어느 쪽도 相對側의 武力統一企圖에 대한 對備를 게을리하지 않을 것임과 現代戰의 破壞力 등을 고려할 때 武力의 差가 월등하기 전에는 어느 한쪽도 뜻한대로 무력에 의

註 16) 부정선거 시비나 왜곡의 시비가 있기는 하지만, 최근 몇 차례의 선거결과나 비교적 정평있다는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등을 감안하고, 軍의 偏向과 態度를 감안할 때 이러한 추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 통일을 이루기 어렵다는 것을 서로 잘 알 것이기 때문이다.

2. ‘南·北의 史觀이 當分간은 相互 受容不可하다’는 現實을 잠정적으로 인정할 경우의 方案

결국 一方的 史觀에서만 훌륭한 統一方案들을 서로 競爭적으로 제안하고는 相對側의 非受容을 自己側 史觀으로 비판하거나; 역으로 相對側案들을 自己側 史觀으로 비판·거부하는 수준에서 자족하지 않고 적어도 現世代에서 統一을 향해 몇 걸음이라도 더 나아가려면, ‘南·北의 史觀이 當分간은 相互 受容不可하다’는 現實을 잠정적으로라도 인정하는데서 출발할 수 밖에 없다. 즉, 相互 實體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史觀이 다르기에 統一된 祖國의 理想的인 未來像이 같아질 수 없다’는 現實까지도 잠정적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러한 現實들을 솔직히 서로 인정하지 않는 한 統一論議는 더 이상 진전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러한 現實들을 서로 인정할 수 있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것들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즉, 相對側 當局의 양해가 없는 한 相對側의 基本體制가 바뀌도록 企圖하지 않을 것을 合意하고, 그러한 態度에 관한 감시를 相互 보장한다. 그리고 相對側의 平和維持 意志를 서로 信賴할 수 있도록 武力 均衡을 유지하면서 점차적으로 군비를 축소시켜 가고 그것을 상호 감시할 수 있게 한다.

물론 이러한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는 잘 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이 먼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統一論議가 現在의 限界를 극복할 수 없음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즉 그것은 本稿에서 제안하려는 統一方案만의 어려움이 아니라, 모든 平和的 統一方案의 一般的인 어려움인 것이다.

만일 이러한 前提가 이루어진다면, 實現possible한 統一方案의 우선적인 단계로 「體制聯合(혹은 國家聯合)」이 摸索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體制聯合(혹은 國家聯合)」의 統一方案도 그 自體만으로는 아무리 그럴듯한 말로 꾸며졌어도 實現不可能한 ‘말의 잔치’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現實은 7·4 南·北共同聲明이나 그 具體化인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高麗聯邦共和國案」 모두 「體制聯合(혹은 國家聯合)」을 상정한, 나름대로의 훌륭한 統一方案들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지금까지 ‘말의 잔치’로 끝날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한 것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을 것이다.¹⁷⁾

이제 ‘實現不可能한 말의 잔치’를 극복하고 ‘實現 가능한 統一方案’을 摸索하기 위해 앞에서 제기한 前提들¹⁸⁾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경우를 상정해 보자.¹⁹⁾ 그리고 그 경우 가장 實現可能해 보이는 統一方案인 「體制聯合(혹은 國家聯合)」²⁰⁾에 의한 統一方案을 검토해 보자.

우선 7·4 南·北共同聲明을 具體化한 것들인, 制度 自體로서의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과 制度 自體로서의 「高麗聯邦共和國案」의 相互 受容 가능한 制度·事業들²¹⁾을 南·北協議下에 採擇, 이를 시행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名稱이야 制度和 事業들이 採擇될 수 있는 한 다 採擇된 후에 거기에 맞춰 정하면 될 것이다. 그것이 「新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어도 좋고,

註 17) 本稿Ⅱ - Ⅲ장 참조.

18) 本稿Ⅳ장 2절 참조.

19) 만일 이러한 전제들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實現 가능한 平和的 統一方案의 摸索은 불가능하다고 보며, 그렇다면 그저 말의 잔치나 계속해야 할 뿐 本考와 같은 제목, 즉 「實現 가능한 統一方案의 摸索」의 論文은 더이상 존재할 의의도 방도도 없다고 본다.

20) 가장 실현 가능한 統一方案으로 「體制聯合(혹은 國家聯合)」의 統一方案을 꼽은 것은, 本稿Ⅱ~Ⅲ장에서 살핀 바와 같은 現實下에서는 가장 과도적 성격을 띠면서 현재적 유지를 잠정적으로 보장하는 制度가 그것이라고 보기 때문이다.

21) 이에 관해서는 本稿Ⅱ장 3절 참조.

「新高麗聯邦共和國案」이라 해도 좋으며, 「民族共同體統一案」, 「體制聯合」 기타 무엇으로 습意되어도 상관없다고 본다.

또, 만일 ‘말의 잔치’로서의 ‘體制聯合’이 아닌 ‘實現可能한 統一方案’으로서의 ‘體制聯合’을 추진한다면, 아래에서 설명할 「발로 투표하기」를 위한 制度·事業들을 실시할 수 있게될 것이다.

V. 假稱²²⁾ 「발로 投票하는 體制 聯合」을 提案하며

1. Tibout 모델²³⁾과 그 應用

「발로 투표하기 (voting by foot)」의 개념은 地方自治制에 관한 Tibout의 論文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에서 제기된 바 있다. 발로 투표하기에 관한 Tibout 모델의 설명에 앞서, 먼저 公共財의 一般的인 性質에 대해 간단히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

Musgrave와 Samuelson²⁴⁾은 公共財에 관한 한 市場의 失敗가 발생

註 22) 여기서 굳이 「假稱」이란 수식어를 둔 것은 명칭자체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며, 명칭 때문에 합의에 어려움이 있다면 명칭을 양보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예컨대, 「발로 투표하는 民族和合民主統一方案」, 「발로 투표하는 高麗聯邦共和國案」, 「발로 투표하는 民族共同體統一案」, 「발로 투표하는 體制聯合」 기타 어느 것으로 합의되어도 무관하지 않을까 한다.

23) C.M. Tibout,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 416-426 참조.

24) R.A. Musgrave, "The Voluntary Exchange Theory of Public Econom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L.II (Feb. 1939), pp.213-227; P.A. Samuelson, "Th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XXXVI No.4 (Nov. 1954), pp.387-389 참조.

한다고 했다. 그들에 의하면 그것은, 公共財의 使用이 非排除的²⁵⁾ 이어서 누구나 되도록 자신의 진정한 需要를 過小表示함으로써 free rider²⁶⁾가 되려 하기 때문이며, 그 결과 각 公共財에 대한 진정한 總需要가 드러나지 않고, 따라서 그 供給도 任意的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公共財의 量과 質은 政策立案者의 主觀에 의해 任意的으로 定해지게 되고 사람들은 그 選擇에 適應하기만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Tibout 에 의하면,²⁷⁾ 이와같은 公共財의 市場失敗는 中央政府²⁸⁾의 公共서비스에만 적용될 뿐 地方政府의 그것에는 적용이 없다. 公共서비스는 각각 여러 수준인 여러가지 서비스의 basket²⁹⁾이다. 中央政府의 경우라면 basket이 하나밖에 없게 되나, 地方政府의 경우는 自治權의 範圍가 넓을수록 地方政府間 basket이 多樣해진다. 한 國家內에서는 일반적으로 居住移轉이 자유로우므로 사람들은 公共財에 관해 ‘말’로는 어떠한 需要를 表示하든, 진정한 그의 需要와 비슷한 basket의 地方으로 移住하게 될 것이고, 이것은 마치 가장 선호하는 政策이나 候補에 ‘손’

註 25) 어느 1人的 사용으로 인해 他人의 그 사용이 불가능해지지 않는다. 예컨대, 甲이 연간 3조원짜리 國방의 혜택을 받는다 해서 동일국민인 乙이 받는 國방의 혜택이 줄지 않는다.

26) 公共財의 非排除性 때문에 일단 누군가에 의해서든 세금의 형태로 그 댓가가 치러지게 되면, 납세액에 무관하게 누구나 무료로 그 효용을 누리게 된다. 따라서 누구나 자기가 받을 효용을 과소표시해서, 되도록 公共財 사용의 댓가인 세금을 적게 내려한다. 즉 ‘free rider(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그 결과 진정한 수요가 표시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견해였다.

27) C.M. Tibout, 위의 글 참조.

28) C.M. Tibout 위의 글에서는 ‘연방정부의(federal)’로 되어 있으나 여기서는 편의상 ‘중앙정부의’로 대체하였다.

29) 즉, $PG = \sum_{i=1}^n X_i Q_i$ (단, PG는 공공서비스, X_i 는 i 제 분야의 공공서비스, Q_i 는 X_i 의 크기)

으로 투표하는 것과 같이, 가장 선호하는 basket 에 ‘발’로 투표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 Tibout가 제기한 「발로 투표하기」의 개념이다. 「발로 투표하기」가 이루어지는 한 公共財도 진정한 總需要가 드러나기 마련이고 供給者도 그 진정한 總需要에 적절히 對應할 수 있게 된다.

그런데, 公共財에 관한 이러한 事情은 一般的으로 모든 公共選擇에 있어서도 마찬가지가 아닐까 한다. 예컨대, 體制의 選擇에 있어서도, 中央政府 수준에서는 市場失財와 같은 현상이 빚어지더라도³⁰⁾ 地方自治團體 수준에서는 「발로 투표하기」의 효과를 빌어 市場成功을 유도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³¹⁾

國家의 統一성이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각 地方自治團體에 最大限의 自治權을 許容한다면, 큰 혼란 없이도 多様な 程度差異의 體制를 選擇하는 地方自治團體들이 생기도록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각자는

註 30) 이것은 세 가지 측면에서 발견될 수 있다. 첫째, 體制는 어차피 하나만이 선택되고, 소수견 다수견 그 체제가 싫으면서도 별수없이 그 體制下에서 살 수 밖에 없게되는 국민들이 적지않게 존재하게 된다. 또, 그러한 反體制 그룹에 의해 사회불안이 조장된다. 둘째, 일단 體制가 선택되면, 그 선택이 옳았건 잘못이었건, 그 선택에 찬성한 구성원이건 반대한 구성원이건 관계없이 모든 성원이 체제선택의 효과를 동일하게 누리게 된다. 따라서 free rider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 누구나 되도록 개인적 cost가 적은 表示行爲를 하려 할 것이다. 예컨대, A를 선택해야 함을 알면서도 비난받기 싫어 B를 선택할 경우라든가, 자기가 거주하고 있지 않는 모국에 관해서는 자신의 cost를 줄이기 위해서 B를 선택한다고 표시하면서도 자신은 B와 반대되는 선택을 채택한 외국에서 거주해야하는 경우 등이 있을 것이다. 세째, 선택의 잘못을 알게 되더라도 수정의 기회가 금방 돌아오지 않는다. 예컨대, 선거나 국민투표를 多衆이 個別的으로 행하는 移住만큼이나 자주할 수는 없을 것이다.

31) 多様な 體制의 地方自治團體가 국내에 존재하게 된다면, 註30)에서 지적한 세 가지 형태의 市場失財가 크게 완화되리라 본다. 첫째, 사람들은 자신의 選好와 가장 類似한 體制의 地方自治團體로 이주할 것이므로 體制에 대한 불만을 갖는 사람의 수와 그 정도들이 크게 줄 것이다. 따라서, 각 自治團體도 훨씬 안정될 것이다. 둘째, 同一한 選擇을 한 사람끼리 모이게 되므로, 각자의 선택과 무관하게 體制選擇의 책임을 져야하는

자기가 가장 選好하는 體制의 自治團體로 移住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각 體制에 대한 總需要가 드러나게 될 것이다. 그러면 각 自治團體들은 드러난 各 體制에 대한 選好度 혹은 總需要에 적절히 對應할 수 있게 될 것이다.³²⁾

이 경우 「발로 투표하기」의 效果는 크게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³³⁾

억울한 경우가 없어지며, 개인적 cost를 줄이는 선호표시가 곧 진정한 선호를 표시하는 것, 즉 그러한 체제로의 이주가 되므로 free rider 문제도 해결된다. 아울러 뜻맞는 사람끼리 공감대를 이루는 理想 實現을 위해 최선을 다할 수 있다. 예컨대 ‘A에 찬성하는 자는 자폭하라!’는 구호나 ‘A에 반대하는 자는 이땅을 떠나라!’는 구호는 필요 없어질 것이다. 세제, 선택이 잘못이었음을 깨달으면 즉시 移住함으로써 그 선택을 수정할 수 있다.

註 32) 「발로 투표하기」의 效果의 한계에 관해서는 Tibout 자신도 그의 논문에서 지적한 바 있고 차병권 교수도 추가적으로 지적한 바 있다. 이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거주이전에 따르는 직장보장과 완전한 정보·지식 등의 전제조건이 비현실적이다. 둘째, 선택 가능한 자치단체의 수가 한정되어 있다. 세째, 자치단체의 선택간에 外部經濟·非經濟가 존재한다. 즉, 甲 자치단체가 무선TV방송을 하면 그 효익은 주변자치단체들에게 무상으로 주어지고, 반대로 甲 자치단체가 공해산업을 유치하면 주변자치단체들도 공연히 그 댓가를 치루게 된다. 네째, 자치단체별로 最適 規模가 있어 그 규모를 넘는 인구가 유입되려 하면 그 자치단체는 불가피하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려 그것을 막으려 할 경우가 있다. 다섯째, 부자는 부자끼리 빈민은 빈민끼리 모이게 된다.

그러나, 첫째에서 네째까지의 지적은 「발로 투표하기」의 效果가 制限的인 의 논거가 될 수 있을 뿐 그 無效함의 논거가 될 수는 없다. 또, 다섯째의 지적은 그 效果의 정당성에 관한 회의이나, 이것에 관해서는 경우를 나누어 생각해야 하지 않나 한다. 즉, 체제탐으로 각 체제안의 모두가 그러해진 경우라면 문제될게 없다고 보며, 다른 자치단체에서 치부한 사람들이 어느 한 자치단체로 모여든 결과라면 문제가 되리라 본다. 이 경우에도, 거주이전 자체는 허용하되 재산도피를 막는 제도보완만 이루어지면 별 문제 없지 않을까 한다.

보다 상세한 것은 C.M. Tibout, 위의 글; 차병권, 「財政學 概論」(서울: 박영사, 1984), pp. 627-629 참조.

33) 「손으로 하는 투표에 비해 우월한 점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註 30) 및 31)에서와 같다.

첫째, 普遍的으로 가장 살기 좋은 體制, 즉 가장 選好되는 體制가 드러난다.³⁴⁾ 둘째, 各 基準되는 분야들³⁵⁾ 마다 비슷한 수준의 效用을 원하고 비슷한 수준의 負擔을 각오하는, 비교적 同質的 選好體系의 사람들끼리 自治團體를 형성하게 될 것이고, 그 결과 뜻 맞는 이들끼리 나름의 理想實現을 위해 더 效果的으로 노력해 갈 수 있게 될 것이다.³⁶⁾ 셋째, 各者는 各者를 가장 滿足시키는 選擇下에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Tibout 모델의 應用은 地方自治團體의 獨立性이 보다 強化된 形態라고 볼 수 있을 聯邦制에도 擴大適用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聯邦制보다 獨立性이 더 強化된 形態인 體制聯合(혹은 國家聯合)에도 Tibout 모델이 擴大適用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 경우, 體制의 程度差가 多樣할 수 없어 그만큼 「바로 투표하기」의 效果들도 制限的³⁷⁾으로 나타날 것이다.

그런데, 聯邦制 統一은 體制聯合 統一보다 훨씬 먼곳에 있는 목표일 것이기에 體制聯合 達成 以後로 유예하고, 현세대에서는 일단 體制聯合 統一을 추진하는데 노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³⁸⁾ 體制聯合 達成

註 34) 「손으로 하는 투표」에 비해 우월한 점은 크게 세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으며, 그것은 주석 30) 및 31)에서와 같다.

35) $PG = \sum_{i=1}^n X_i Q_i$ 에서 X_i 를 의미한다. 즉, 社會經濟的 平等度, 社會분위기의 道德的인 程度, 대기·수질·토양의 오염도, 社會保障度, 擔稅率, 社會분위기의 自由로운 정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기회, 창의성 발휘기회, 교육기회 등이 여기서의 基準되는 분야들일 것이다.

36) 그들나름의 理想 실현을 위한 노력에 대한 반대세력이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37) 비록 선택의 폭이 극히 제한적(예컨대 2가지뿐)이라 하더라도, 오직 1가지만을 선택하기 위해 아귀다툼만 끝없이 계속하는 것보다는 훨씬 改良的이 아닐까 한다. 이점은 특히 서로 상대를 설득시킬 수 없는 史觀差에 근거한 논쟁의 경우에서 더욱 두드러지지 않을까 한다.

38) 물론 ‘말의 잔치’로서의 체제연합이 아닌, 일정한 前提下에서의 ‘실현

마저도 얼마나 어려운 일들을 前提로 하는 것인지는 앞에서 이미 밝힌 바와 같다. 결국, 最善의 當面課題는 아래에서 설명할 假稱 「발로 投票하는 體制聯合」을 추진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2. 假稱 「발로 投票하는 體制聯合」

가. 前 提

어떠한 平和統一方案이건 일단 그것이 實現可能하려면 앞에서 밝혔듯이 몇 가지 前提가 必要하다. 이들 前提들이 충족되지 않았었기에 以前의 어떠한 平和統一方案도 必然적으로 실현되지 못했다고 본다. 그리고 이러한 사정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³⁹⁾ 그래서, 現實 possible한 平和統一方案이 되고자 하는 假稱 「발로 投票하는 體制聯合」 推進案은 앞에서 밝힌 바 있는 몇 가지를 前提로 삼는다. 그것을 부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당분간 南·北의 史觀이 서로 受容不可하다는 現實을 南·北이 인정한다.

이것은, 南韓側은 南韓의 根本體制로 統一되기를 원하는 태도가 당분간은 바뀔 수 없고, 北韓側도 北韓의 根本體制로 統一되기를 원하는 태도가 당분간은 바뀔 수 없다는 現實을 南·北이 서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 경우, ‘野慾을 버려야만 統一協議의 進展이 可能하다’ 따위의 不必要한 前提는 버려야 할 것이다.

둘째, 相對當局의 諒解가 없는 한 相對側 根本體制를 顛覆하려 않을 것임을 잠정적으로 서로 合意하고, 합의된 바의 遵守 여부에 관한 相互監視를 서로 보장한다.

가능한 '체제연합' 실시의 효과가 빨리 나타난다면, 現世代에서도 聯邦制로 나아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일단은 그것을 유예하고 그 前段階의 실현을 위해 노력을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 한다.

註 39) 史觀의 不可妥協性을 고려할때 그러하다.

平和統一 推進은 南·北의 實質的 統治權을 각각 보유하고 있는 兩當局의 合意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兩當局 中 어느 한쪽도 자기 쪽 根本體制의 顛覆을 각오하면서까지 統一을 推進하지는 않을 것이다. 즉, 아무리 훌륭해 보이는 統一方案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자기측 根本體制 유지를 위태롭게 할 위험이 느껴지는 한, 그쪽 當局은 반드시 그 統一案을 拒否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 統一案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必然的으로 ‘實現不可能한 말의 잔치’로 끝날 것이다. 그러나, 兩側이 자기측 根本體制로의 統一을 잠정적으로 유예하고, 그것을 상호 보장한다면 兩側은 각측의 統治地域內에서의 자기측 根本體制 유지는 보장받는 것이 될 것이다. 이때는 實現可能的 統一方案이 摸索될 여지가 남을 것이며, 결국 實現可能的 統一方案은 이것을 前提로 삼을 수밖에 없지 않나 한다.

세째, 兩當局과 兩側 多數 모두가 서로 相對側의 武力統一 企圖 拋棄를 信賴할 수 있을 때까지는 武力均衡 유지에 合意하고 그 遵守여부에 관한 相互監視를 서로 보장한다.

이 前提가 둘째 前提에 포함된다고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느 한쪽의 武力優位는 다른 쪽의 시비거리가 될 것이며, 이때 武力優位에 있는 쪽이 자기쪽을 믿으라고만 주장한다면 모든 合意는 깨질 것이고 統一論議는 실현불가능한 ‘말의 잔치’ 수준으로 후퇴할 것이다. 이러한 前提를 서로 받아들인다면, 예컨대, ‘무조건 美軍撤收’는 ‘美軍撤收라야 武力均衡 유지되니 美軍撤收 못 믿겠으면 와서 봐.’가 되거나, ‘美軍駐屯해야 武力均衡 유지된다면, 믿을 수 있도록 보여 줘.’ 등이 돼야 하지 않나 한다.

이상의 세 前提 중 어느 하나라도 성취되지 않는다면, ‘말의 잔치’를 극복하고 ‘實現可能的 平和統一方案’을 摸索할 여지가 없게 된다.

나. 주요 制度·事業

앞에서 든 세 前提는 實現 가능한 平和統一方案 探索을 위한 一般的인 前提들이자 存在論的으로 讓步不可한 것들이 아닐까 한다. 반면에, 지금부터 列舉할 假稱 「발로 投票하는 體制聯合」 推進案의 制度·事業들은 필요하다면 讓步하고 修正할 수 있는 것들이라고 본다. 이들 制度·事業들 중 어느 하나가 합의되지 않는다면 그것만을 유예하고 合意 가능한 다른 것들을 우선 推進할 수 있다고 본다.

이들 制度·事業들을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7·4 南·北共同聲明」에 뿌리를 같이하는 「高麗聯邦共和國案」, 「高麗民主聯邦共和國 創設方案」,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等間에 制度 自體로는 相互 受容 가능한 制度·事業⁴⁰⁾들을 추진하되, 南·北 人的交流를 특히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제 그러한 制度·事業들 중 중요한 몇 가지를 列舉해 보겠다.

첫째, 가장 강조되는 制度는 「발로 投票하기」의 效果를 추구하는 制度이다. 물론, 필요하다면 이 制度마저도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制度에 관계되는 事業들 역시 극히 制限的인 範圍에서부터 시작하여 南·北이 공히 조심성 많은 그룹들을 덜 자극하고 南·北의 大多數를 安心시키는 範圍內에서 점진적으로 그 範圍를 확대 실시해 나가야만 實效性을 유지할 수 있으며 그 방법이 가장 빠리 이 制度가 目的하는 效果를 얻을 수 있는 길이기도 하지 않을까 한다.

「발로 行票하기」의 效果를 얻을 수 있는 사업들 중 가장 효과가 큰 것은 「南·北移住 許容」이겠으나 그것은 너무 먼 후일의 사업이다. 반면, 이미 예술단과 고향방문단이 상호 왕래한 바는 있으니, 일단 「藝術團」, 「故鄉訪問團」, 「學術調查·研究團」, 「運動選手團」 등의 상호 왕래규모와 횟수를 증대시키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기타 宗

註 40) 本稿 II장 3절 참조.

教·經濟 분야 等에서도 다방면에 걸쳐 交流를 시작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東歐와의 關係改善 經驗을 살려 이러한 事業들이 큰 무리 없이 擴大·發展되어 간다면, 점차 극히 制限的인 範圍⁴¹⁾에서부터 南·北交通·通信을 허용하고 이를 같은 방식으로 擴大·發展시켜 나가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한 事業들이 成熟되어 간다면, 이제는 극히 制限的인 範圍⁴²⁾에서부터 南·北移住를 許容해 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南·北移住事業이 促進되도록 하자면 南·北의 當局과 言論이 ‘發想의 轉換’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즉, 個人的인 越北이나 越南을, 한쪽에서는 恥辱으로 생각하여 숨기려 하고 상대방에서는 榮光으로 생각하여 ‘勇士’나 ‘烈士’나 하며 추켜세우는 것을 止揚해야 한다고 본다. 오히려 그러한 일을 가급적 어느 방향으로도 일어날 수 있는 相對的인 凡事로 축소 해석하며, 상대측을 자극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그러한 事業의 推進이 원만하게 계속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南韓에서는 地方自治制가 점차 擴大되어 갈 것으로 보인다. 自治權이 점차 擴大되어 가노라면, 南韓에서 北韓의 體制와 가장 유사한 自治團體와 北韓간의 體制差는 현재보다 훨씬 축소될 것이다. 그리고 南·北移住는 이들 두 接近된 體制 사이에서 많이 이루어질 것이다.⁴³⁾ 移住者들은 이미 接近된 體制를 경험하고서도 그 정도가 좀더 심한 쪽으로 선택해 간 사람들이므로 移住해간 體制에 남다른 믿음과 희망이 있

註 41) 예컨대, 兩當局의 事前承認을 얻은 사람들에게 한해서 허용하는 것부터 출발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까 한다.

42) 예컨대, 南·北에서 간첩죄 이외의 反體制 思想犯을 서로 交換해 상대측 體制下에서 살도록 하는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그리고 점차 「交換」을 「許容」으로 대체하고 對象者와 時期를 점진적으로 擴大해 갈 수 있지 않을까 한다.

43) 체제에 대한 태도가 급작히 변하기보다는 단계적으로 변해가기가 쉽다고 볼 때 그러하다. 그러나, 사람에 따라서는 극단과 극단을 좋아하여 체제 선택에도 그러한 태도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다.

을 것이고, 그러기에, 이들의 移住에 따르는 혼란의 우려도 현재보다는 적어질 것이다. 이점은 혼란을 싫어하는 兩側의 극히 조심성 많은 그룹들의 반발을 줄이는 것을 의미할 것이며, 그만큼 實現可能性을 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事業들이 큰 무리를 일으키지 않으며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간다면, 「바로 投票하기」의 세 가지 效果⁴⁴⁾를 조금씩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게다가 만일 北韓에서도 開放의 움직임이 일어나 地方의 自治權이 확대된다거나 한다면 이러한 효과들을 의외로 일찍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兩側이 제안한 여러 사업들 중 制度·事業 自體로는 서로 受容 가능한 것들을 하나씩 추진하는 것이다.

「7·7 宣言」에서 제안된 「平和市」 건설이나, 82년 南韓當局이 제안한 「20 個 示範實踐事業」, 그리고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설안의 施政方針들 중 서로 合意가 먼저 이루어지는 사업부터 하나하나 추진해 가자는 것이다.

세째, 이러한 制度·事業들을 管掌할 調整機關을 만들되, 그 機關의 役割이 美國 獨立期の 大陸會議의 役割과 유사할 것임을 고려하여, 代表者를 南·北同數로 하고, 議決方式도 滿場一致로 한다. 또, 兩側 代表者 選定은 全的으로 兩側 統治權者와 議會에 委任한다.

이는 本 調整機關의 決定事項들의 拘束力은 統治權者와 代議者들 集團인 議會만이 보장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3. 假稱 「바로 投票하는 聯邦制」

數世代 後에라도 假稱 「바로 投票하는 體制聯合」의 과정을 통해 南·

註 44) 本稿 V장 1 절 참조.

北의 多數가 서로의 平和意志를 信賴할 수 있을 정도로 民族이 團結될⁴⁵⁾ 수 있다면, 보다 統一된 國家形態, 예컨대 假稱 「발로 投票하는 聯邦制」를 추진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여기서 다시한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첫째 아래에서 설명할 假稱 「발로 投票하는 聯邦制」는 假稱^{*} 「발로 投票하는 體制聯合」이 점진적으로 추진되어 소기의 성과를 거둔 뒤에서나 實現可能해질 수 있다는 점이며, 따라서 이것은 當面課題가 아니라는 점이다. 둘째, 이것 역시 앞에서 든 몇 가지 前提를 제외하고는 相對的이고 妥協可能한 對象이라는 점이다.

假稱 「발로 投票하는 聯邦制」의 골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발로 投票하기」 制度의 擴大推進이다. 즉, 各 自治團體가 存續하기 위한 最少限의 住民數에 南·北이 合意를 하고, 住民數가 줄어들어 그 合意된 最少限의 住民數를 確保하지 못하게 되는 自治團體는 自治團體로 存續할 이유를 상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隣接自治團體나 殘餘住民이 원하는 他自治團體, 혹은 住民流入(率)이 가장 컸던 自治團體 等⁴⁶⁾에게 自治權을 넘겨주도록 하는 것이다. 이때 殘餘住民들을 위한 보완책으로 그들중 他自治團體로의 移住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는 보상금과 정착금을 지원해 주는 제도⁴⁷⁾를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둘째, 南·北이 이미 提案한 바 있는 制度·事業들 중 假稱 「발로 投票하는 體制聯合」에서 合意되지 못하거나 推進되지 못한 制度·事業들도

註 45) 이것은 南·北當局 모두 추구하는 바라고 밝힌 것이며 假稱 「발로 投票하는 體制聯合」 推進案은 이것을 위한 方法論의 성격을 갖는다.

46) 人口密度가 가장 높은 자치단체에 그 지역의 자치권을 넘겨주도록 하는 것도 순수 이론적으로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겠으나, 統一論議에 관한 북한측의 동의가능성을 고려한다면 이 방안은 바람직하지 않을듯 하다.

47) 주식회사의 합병등에 있어서도. 그에 反對하는 주주들에게는 그들의 주식을 싹가보다 조금 높게 회사가 매입해 주도록 하는 보완조치가 있다. 여기서 그 자치권을 인수할 자치단체에 귀속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보완조치를 마련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 연유한다.

재검토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예컨대, 民族聯合軍隊 창설 등이 이 시기를 전후해서 재검토될 수 있고 合意를 이끌어낼 수도 있지 않을까 한다.

세째, 調整機關을 擴大할 수 있을 것이다. 꼭 이 시기를 전후해서 一舉에 擴大해야 할 이유는 없다고 보며, 필요할 때마다 南·北의 多數, 혹은 그들의 代議者들의 同意下에 해나가면 되리라 본다. 그러나 이 시기를 전후해서는 「高麗民主聯邦共和國」 창설안이 상정한 것과 같은 것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

VI. 結

本稿는 南·北의 統一方案들을 比較하는 것으로 시작하였고, 各 統一方案들이 土臺로 삼은 兩側의 史觀을 比較하여 그것들이 결코 相互妥協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으며, 그 결과로 制度自體로는 서로 受容할 수도 있을 두 ‘聯邦制統一案’과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이 결코 相對側의 受容을 끌어내지 못했던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武力統一이나 暴力革命에 의한 統一의 可能性도 現實적으로 그리 크지 않음을 확인했다. 그 결과 ‘南·北의 史觀이 當分간은 相互 受容不可하다’는 現實을 잠정적으로라도 쌍방이 인정하지 않는한, 平和統一을 위한 論議는 아무리 잘해야 ‘實現不可能한 말의 잔치’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반면, 이러한 現實을 雙방이 잠정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면, 몇 가지 추가적인 前提下에 兩側 統一案들의 制度自體로는 서로 受容 가능한 制度·事業들을 먼저 合意되는 것부터 하나씩 추진해 갈 수 있고 또 그들을 關望할 調整機關을 設立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이 ‘말의 잔치로서의 體制聯合統一案’을 극복하는 ‘實現 가능한 體制聯合統一案’이며, 여기에 극히 制限된 범위에서부터 漸進적으로 南·北 人的交流를 확대해 가고 「南·北 住民移住」도 점차 허용해 가자는 것, 그래서 「발로 投票하기」의 세

가지 效果를 추구해 가자는 것이 假稱 「발로 投票하는 體制聯合」 推進案이다.

數世代 後에라도 이러한 과정을 통해 南·北이 서로 相對側의 平和意志를 확인할 수 있게 되고 民族이 團結된다면 보다 統一된 國家形態로 나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며, 이때 고려할 만한 것이 「발로 投票하는 聯邦制」다.

本稿에서 當面課題로 제안하는 假稱 「발로 投票하는 體制聯合」의 實現可能性에 대해서도, 그것이 內在하는 몇 가지 前提들에 대한 회의를 표시하며 어렵게 보는 견해가 많을 것으로 믿는다. 그러나 이들 前提들은 本案에 特有的 當爲論的 前提들이 아니라 모든 實現可能한 平和統一方案에 一般的인 存在論的 前提들이기에, 이들 前提들이 성취될 수 없다면 本案이 實現不可能하기 前에 다른 모든 平和統一方案이 實現不可能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들도 많을 것이라 보며, 따라서 本稿의 提案보다 더 實現可能하면서도 南·北의 史觀에 충실한 統一方案들이 存在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기에 그러한 統一方案들이 계속 제안되어 나오기를 기대해 본다. 아울러, 本案에 대해 예상되는 문제점과 그에 대한 나름의 보완책들도 적지 않으리라 보기에, 制限된 紙面上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註釋으로 처리한 것에 관한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그러한 것들에 관한 論議의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李洪九, “民族和合 民主統一方案의 歷史的·理論的 照明”, 「統一韓國의 摸索」, 서울: 박영사, 1987.
- 金學俊, “政治的 統合방안으로서의 聯邦制: 北韓이 제의한 聯邦制 統一案의 분석”, 「統一韓國의 摸索」, 서울: 박영사, 1987.
- 金哲洙, “南·北韓 基本關係 暫定協定案”, 「統一韓國의 摸索」, 서울: 박영사, 1987.
- 박창희, 「新北韓政治論」, 서울: 일신사, 1988.
- 北韓研究所, 「北韓의 統治이데올로기 批判」, 서울: 북한연구소, 1981.
- 車軒權, 「財政學概」, 서울: 박영사, 1984.
- 國土統一院, 「南·北韓 比較叢書」, 서울: 1988.
- C.M.Tibout, “A Pure Theory of Local Expenditur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64 (Oct.1956).
- R.A.Musgrave, “The Voluntary Exchange Theory of Public Economy”,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LII(Feb.1939).
- P.A.Samuelson, “The Pure Theory of Public Expenditure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XXXVI, No.4(Nov. 1954).

韓國의 北方政策과 南北韓 關係

孫 順 愛

(全南大 史學科 4年)

目 次

- | | |
|-------------------|--|
| I. 序論 | |
| II. 北方政策의 意義 | |
| III. 北方政策의 背景과 進展 | |
| IV. 北方政策의 南北韓關係 | |
| V. 結論 | |

I. 序 論

우리는 반세기 동안 冷戰體制의 桎梏과 分斷의 멍에를 짊어지고 살아왔다. 그런데, 최근 國際環境의 解氷분위기와 함께 꼭 막힌 北方의 물꼬가 트이면서 北方의 거센물결이 몰려오고 있다. 現在, 北方의 社會主義 國家들과의 交流는 經濟, 文化, 學術, 藝術, 스포츠 등 社會의 모든 分野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交流는 우리 國民들의 關心을 끌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이처럼 北方國家들과의 關係가 우리 國民들의 많은 관심과 기대를 끌고 있는 것은 中國과 蘇聯 등 社會主義 國家들의 內外政策이 변화되었고, 이에 따른 우리의 周邊情勢 變化에 대한 對應의 필요성 뿐만이 아니다. 그동안 分斷으로 인해 가로막혔던 우리 民族의 뿌리인 大陸으로의 삶의 空間 擴大인 것이며, 우리 民族의 最大 宿願인 統一로 가는 길임을 우리 國民들은 直感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의 北方政策이 성과를 거두기 위해선 우리의 目標과 周邊狀況을 正確히 分析·評價하여 신중한 行動도 요구되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蘇聯과 中國은 초강대국이며 우리와 체제 및 이념을 달리하는 나라일 뿐 아니라, 北韓과 軍事同盟을 맺고 있는 나라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우리와 이들 나라와의 關係改善은 그들과 북한과의 관계로 말미암아 그들이 원하는 것 만큼, 그들이 원하는 속도로, 그들이 원하는 방법으로 展開되리라 예상되고 있어 절대로 지나친 기대는 禁物이다. 우리는 의연하게 그리고 끈기를 가지고 社會主義圈과의 關係改善에 임해야 한다.

또한 北方外交 展開에서 유의할 점은 友邦과의 均衡感覺을 유지하는 일이다. 韓·美 同盟關係가 우리의 安定과 번영을 지켜준 기둥이었음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北方外交는 韓·美 同盟關係를 바탕으로 했을 때만 가능하다는 현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新데탕트는 당분간 理念과 體制

의 차이를 묻지 말고 共存하자는 合意이지, 이념과 체제를 무시하자는 것은 절대로 아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의 北方政策의 核心은 北韓과의 關係改善과 統一을 앞당길 분위기 조성이다. 共產圈과의 經濟交流에서 기대되는 이득 등은 부차적인 것이다. 따라서 中國·蘇聯과의 外交에서도 우리의 일차적인 目標인 統一環境 改善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본 論文에서는 北方國家들 - 특히 中·蘇를 中心으로 - 의 對內外 政策의 變化와 우리와의 關係設定 問題, 北方政策의 進展과 함께 南北韓의 關係樣相과 北方政策의 問題點과 展望을 中心으로 우리의 統一運動의 方向을 考察하려는 데 主目的을 두고 있다.

Ⅱ. 北方政策의 意義

1. 北方政策의 概念

北方政策 또는 北方外交란 용어는 1973년 한국이 “6.23 선언”¹⁾이 한국의 북쪽에 있는 중·소를 지칭한다고 생각하고 西獨의 東方政策 (Ost-

1) “6.23 선언” 내용

- 민족의 지상과업인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성취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임
- 상호 내정에 간섭하지 않으며 침략하지 않음
- 南北對話의 구체적 성과를 위해 성실과 인내로써 노력함
- 긴장완화에 국제협력에 필요하다면 북한이 국제기구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
- 통일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북한과 함께 국제연합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음
- 호혜평화의 원칙하에 모든 국가에게 문호를 개방하며 우리와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국가들도 우리에게 문호를 개방할 것을 촉구함
- 대외정책은 평화선련에 그 기본을 두며 우방들과의 기존 우호관계를 더욱 공고히 해나감

politik)을 연상해서 北方政策(Nordpolitik)이라고 명명한 것 같다.²⁾ 그러나 정부가 정식으로 이 용어를 사용한 것은 1983년 6월 29일 당시 이범석 외무부장관이 國方大學院에서 행한 “先進祖國의 創造를 위한 外交課題”라는 강연에서 비롯한다.

北方政策에 대한 정의는 비슷한 점이 많지만 그 적용범위와 의미가 필자들마다 약간씩 다르다. 시기적으로도 1973년 6월 23일 大韓民國政府가 “平和統一-外交政策宣言”을 했을 때 선언의 내용은 모든 공산주의국가들을 포함했으나, 1차적 관심대상이 중국과 소련이었으며, 북한도 제외되었었다. 1970년대 후반에 北方政策을 논할 때 명확한 概念定義를 하지 않으면서 거의가 韓國安保問題와 중·소를 중심으로 토의를 전개했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인 오늘에는 북한은 물론 全社會主義國家들, 安保, 統一, 民族, 심지어 國內政治의 民主化까지 포함시켜 논의하고 있다.³⁾

故 이범석 외무부장관에 의하면 “北方政策”이란 표현은 그간 우리가 써왔던 對共產圈 政策이란 말과 거의 같으나, “共產圈이란 용어가 국제사회의 변화에 따라 부적절한 측면도 있고 불필요한 자극적 요소가 있

2) “北方政策”이란 用語가 처음에 어디에서 사용하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1974년부터 각종 간행물에 한국의 中蘇關係 문제와 관련하여 학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였음. 예를 들면, 李 哲, “蘇聯의 對韓國接近政策展望과 對蘇外交의 問題點”, 「國土統一」(1974년 1월), pp.26 ~ 31 ; 이기택, “韓國의 對中蘇 外交의 可能性”, 「북한」, pp.58 ~ 70.

• 1988년 2월 25일 盧泰愚 대통령이 그의 취임사에서 “북방외교”라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사용한 바 있으나, 여기에서도 “북방정책”의 명백한 정의는 내린 바 없다. 1988년 4월 29일 李洪九 국토통일원장관이 전경련 월례 조찬회에서 행한 “한국의 통일정책과 북방외교”라는 제목의 월례특강에서 “북방외교”라는 용어를 사용한 바 있다. 물론 여기에서도 李장관의 “북방외교”의 내용과 그 개념 정의가 명백히 제시된 것은 아니었다.

3) 북방에 포함되는 나라는 일차적으로 북한·소련·중공이며 이차적으로는 동구 공산제국이다.

어 이를 피하기 위해 쓴 것이다”⁴⁾라고 말했다. 이렇게 광범위하고 모호하게 정의하는 반면에 “중·소와의 關係狀況을 개척하여, (分斷의) 限界狀況을 극복해 보자는 것이 北方外交”라는 주장도 있다.⁵⁾ 중간입장으로서 “원칙적으로 對 중공 및 소련 외교를 의미한다. 물론 이 개념은 東歐와 기타 지역에 있는 共產國家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따라서 적어도 간접적으로 이것은 북한에 대해서도 統一政策과 조화를 이루면서 원용될 수도 있다”고 北方政策을 의미하는 표현도 있다.⁶⁾ 外務部 研究報告書에 따르면 “北方外交는 한국 북쪽에 있는 蘇聯·中國·北韓과 ① 개별적으로, ② 2개국과 동시에, ③ 혹은 중·소·북한과 동시에 關係改善을 추구하는 外交政策과 外交行爲를 뜻함”이라고 정의한 바 있다.” 현재는 일반적으로 北方政策(또는 外交)이란 북한·중국·소련 및 기타 사회주의 국가들과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관계개선을 통하여 한국의 안보를 유지하고 나아가 평화통일을 달성한다는 의미로 사용하고 있다.

2. 北方政策의 目的

어느 國家나 外交政策은 그 나라의 國家目標에 의해 결정된다. 한국의 국가목표가 무엇이며 몇 가지인가를 정확히 기술할 수는 없으나, 최소한 國家安保, 經濟的 繁榮, 國內政治의 安定과 發展, 이 세 가지는 포함된다고 본다.⁸⁾ 따라서 한국의 外交政策 目標도 國家目標에 따라 최소

4) 서울신문, 1983년 6월 30일.

5) 예를 들어, 유종렬, “韓·美·日의 유대강화와 北方政策”, 「국회보」(1984년 2월), p.83.

6) 안병준, 「강대국관계와 한반도 안보론」(서울: 법문사, 1986), p.462.

7) 大韓民國 政府의 施政目標 1971~1988년 까지를 참조.

8) 大韓民國 外務部의 外交施策目標 1971~1988년 까지를 참조.

한 安保領域과 經濟領域을 포함하고 있다.⁹⁾

1973년 6·23 선언을 계기로 政府가 추구한 北方政策의 목표는 두 가지였다고 말할 수 있다. 韓國政府가 社會主義國家들, 특히 중국과 소련에게 문호를 개방하여 상호교류를 하겠다는 것이었으며, 둘째는 北韓의 友邦國家인 중국·소련 등의 社會主義國家들이 한국에 접근하지 않는 한, 韓國의 友邦國家들도 북한에 접근하지 말라는 것이었다. 1970년대에는 韓國外交의 구조와 방향에 관하여 일반적인 토의는 많았으나, 北方政策이라는 전체적인 시각보다는 개별적으로 중·소와 관계개선 가능성을 논의하면서 중·소의 교류는 반드시 한국의 安保에 기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즉 安保의 문제가 제1차적인 목적이었다.¹⁰⁾

1980년대에 들어서는 초반부터 北方政策의 목표가 선명하게 그려지기 시작했다. 1988년 7·7 선언이나 盧대통령의 유엔연설이 있기 전에 北方政策의 목표가 선언이 안되었을 뿐이지, 그 내용은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고 본다. 1983년도 外交安保研究院의 연구보고서는 그 목적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고 있다.¹¹⁾

① 중·소의 실질관계 내지 外交關係를 수립하는 것임. ② 南北對話를 이루어 南北韓간의 긴장을 완화 내지 해소함과 동시에 平和統一의 기반을 닦는 것임. ③ ①과 ②의 목적이 상치되지 않고 상호 보완되도록

9) 大韓民國 外務部の 外交施策目標 1971~1988년 까지를 참조.

PARK Sang-seek, "Determinants of Korean Foreign Policy", Korea and World Affairs, X, No.3 (Fall 1986), pp.457~483. 外交政策目標로 national security (국가안보), economic prosperity (경제번영), peaceful reunification (평화통일), national prestige (국가위신)을 들고 있다.

10) 예를 들어, 이기택, "韓國의 對中蘇外交의 可能性", 「北韓」(1974년 2월), pp.58~78; 조세형·이호재·이기택, "韓國外交의 새 구상과 전개", 「신동아」(1978년 7월), pp.60~81.

11) 外務部 外交安保 研究院, ibid, p.4.

對중·소 관계개선과 남북한 관계개선을 연계 조정시킴.

현재는 북방정책을 對北韓政策과 밀접히 연결시켜 상호·보완적 관계로 보고 있으며, 단순히 安保問題보다 民族和合, 韓半島의 平和的 統一, 2천 년대의 한국의 국제적 지위를 고려해서 北方政策의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많은 의견을 종합하여 볼 때, 北方政策의 目的은 ① 韓國安保體制의 공고화, ② 平和統一의 기반조성, ③ 經濟的 實利追求, ④ 國際的 地位向上이라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즉, 한국의 북방정책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방지하고, 平和를 정착시키고, 지속적인 經濟發展과 國家威信의 향상을 기하고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自由民主統一을 실현하려는 한국의 安保政策이라고 할 수 있다. 北方政策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지적되고 있는 것은 한국의 북방정책이 결코 우리의 友邦國家들, 특히 미·일과의 전통적인 우호관계를 벗어나서 전개될 수 없다는 점이다.¹²⁾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형성된 북방정책의 기본인식은 첫째로 對北韓政策과 연계된 對共產圈 門戶開放 政策, 둘째로 北韓 孤立化 政策이 아니고, 北韓 開放誘導 政策, 세째로 對중·소 관계개선과 남북한 관계개선의 상호 보완적인 관계, 네째로 기존의 韓國安保體制의 유지, 이상과 같은 네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12) 안병준, “北方外交政策의 새 座標”, 「北韓」(1988년 3월), p.51 ; 유종렬, “韓·美·日의 유대강화와 북방정책”, pp.83 ~ 89

Ⅲ. 北方政策의 背景과 發展

1. 北方政策의 背景

國內와 國外的 環境이 北方政策에 매우 고무적이다. 첫째로 국내적으로 韓國의 經濟力과 國際的 地位가 北韓을 능가한다.¹³⁾ 단지 軍事的 側面에서 南韓이 아직도 北韓에 열세이다. 그러나 韓國은 美軍이 주둔함으로써 軍事的 不均衡을 메워주고 있으며, 주변 4강은 北韓이 南韓을 자극하는 것을 바라지 않고 있다. 따라서 北韓은 南韓에 대한 軍事的 도발 가능성이 약화된 것이다. 經濟成長이 加速化됨에 따라 韓國國民의 열망은 北韓과 民族的 同質性이 회복되길 기대하고 있다. 이와 같이 韓半島의 周邊 環境과 韓國國民의 통일에 대한 열망은 北方政策을 가능케 하였다.

둘째로, 북한은 閉鎖體制와 中央計劃經濟를 維持할 것인가, 아니면 소련과 중공이 진행중인 改革과 開放을 할 것인가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북한은 閉鎖體制를 지속할 것이다. 왜냐하면 北韓社會가 開放된다면 일인독재체제가 崩壞되기 때문이다. 이와같은 사실이 북한정권으로 하여금 軍事政策을 적극 추진케 한다. 스탈린이 獨裁體制를 正當化하기 위해 “資本主義의 包圍政策”을 利用했듯이, 金日成 또한 南韓으로부터 威脅을 강조하면서 獨裁體制를 正當化하고 있다. 또한 統一이 북한의 共產政權을 합법화시키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北韓의 指導者들은 統一이란 民族解放鬭爭이며, 暴力革命이 정당화된다고 믿고 있다. 韓國은 北韓의 정치체제

13) 한때 북한의 경제력을 남한보다 앞선 것으로 나타나 있었다. 「해리슨 솔즈베리」는 지난 72년 북한을 방문하고 난뒤 「1인당 기준으로 볼때 북한은 아시아에서 일본 다음의 집약적 공업국」이라 했고, 「존 로빈슨」은 64년 북한을 방문한 뒤 「戰後세계의 모든 경제적 기적도 북한에 비한다면 놀랄것이 못된다」고 격찬한 바 있다. 한在美 한인학자는 60년까지 북한이 남한을 앞지르고 있었다는 박사논문을 쓰기도 했고, 美CIA 보고서에 따르면 1979년에 남한이 북한을 따라 잡았다고 한다.

상, 북한의 指導者들을 現實的이고 實用的으로 만드는 최상의 방법은 一人獨裁體制의 崩壞와 閉鎖體制의 개방이라고 믿고 있다. 南韓의 北方政策은 위와 같은 目的을 위해 북한을 國際社會로의 開放을 유도하고 있다.

셋째, 東北亞의 周邊環境은 북방정책에 고무적이다. 第2次世界大戰이후 최초로 미국, 소련, 중공은 相互和解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1980년 대 중반 소련과 중공은 和解를 이룩했으나, 美·蘇 관계는 적대적이었다. 이러한 國際的 環境下에서 미국은 中共과의 관계를 強化시켰다. 동시에 미국과 소련은 南·北韓과의 동맹관계를 강화시켰다. 그러나 미국, 중공, 소련의 同時的 緊張緩和는 韓半島의 平和定着을 강력히 희망했으며, 南·北韓에 대해서 미국과 소련의 軍事援助를 억제하게 하였다. 한편 소련과 중공은 南韓에 대한 北韓의 군사적 도발을 견제한다. 따라서 북한은 남한에 대한 군사도발정책에 대해서 소련과 중공의 支持를 획득하는데 난관에 부딪치게 됐다. 소련과 중공이 원한다면 北韓의 立場을 무시하고 南韓과의 관계를 확대하며, 南韓의 統一政策을 지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중·소는 韓半島에 대한 和解, 平和, 安定의 테두리 속에서 北韓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은 南韓政府가 北方政策을 적절히 고려해야 할 이유라 하겠다.

넷째, 중공·소련·동구권은 南韓과의 무역과 經濟協力을 확대하기를 期待한다. 왜냐하면 現在 社會主義國家들은 경제발전에 최우선권을 부여하고 있다. 改革政策을 추구하는 中共의 경우, 수많은 經濟特區와 개발계획을 公式化했다. 이것은 韓·中의 交流를 확대시켜 왔다. 또한 蘇도 개혁과 개방을 추구하면서, 시베리아 發展計劃을 加速化시키기 위한 아시아·태평양 국가들과의 經濟協力 關係를 확대시키기 위한 더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⁴⁾ 이러한 連關속에서 蘇聯은 公式的으로 南韓과의 經濟交流를 제의해

14) See " CPSU General Secretary Mikhail S. Gorbachev's Speech in Vladivostok ", on July 28, 1986, in American and Soviet Studies, Annual (Seoul : Gender for American and Soviet

오고 있다.¹⁵⁾ 東歐圈諸國도 南韓과 같은 新興工業國과의 經濟交流를 확대 시키는데 관심이 높다. 共產圈의 實用主義路線은 南韓의 接近을 용이하게 만들 것이다.

2. 北方¹⁶⁾의 變化와 北方政策의 進展

가. 蘇聯의 變化와 韓國과의 關係

1960년부터 沈滯現狀을 나타내기 시작한 소련경제는 1970년대, 1980년대에 이르는 동안 더욱 성장이 둔화되어 指導層을 괴롭혀 왔다. 제 10차 5개년 계획(1976~80)기간의 경제성장률은 연평균 4.3%였으며, 제 11차 5개년 계획(1981~85)기간에는 3.5%로 저하되었다.¹⁷⁾

이러한 자극이 실제로 소련의 政治構造와 政策面에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고르바초프의 등장 이후이며, 그가 취하고 있는 改革政策은 단순한 經

Studies, Dankuk University, 1986), pp.221 ~ 247. The text of Gorbachev's Speech can be also found in Korean Unification : Source Materials with an Introduction, Vol.Ⅲ(1979 ~ 1986) (Seoul : Research Center for Peace and Unification of Korea, 1986), pp.542 ~ 547.

15) See " Excerpts from CPSU General Secretary Mikhail S.Gorbachev's Speech to Workers : The Seven Points in the Asian Plan, in Krasnoyarsk, Siberia, September 16, 1988 ", in " Source Material ", section of Korea and World Affairs, ⅩⅢ, No.3(Fall 1988) ; pp.652 ~ 657.

16) 北方에는 소련·중공·동구권·북한이 포함되나 여기서는 소련과 중공의 변화와 우리나라와의 관계만을 살펴보기로 한다.

17) 소련의 GNP 성장률에 대해서는 많은 견해가 있다.

아래 문헌을 참조할것 :

(1) Ed A Hewett, Reforming the Soviet Economy(Washington D. C. : The Brookings Institution, 1988), pp.31 ~ 93, (2) Padma Desai, The Soviet Economy(Oxford, UK : Basil Black & Well Ltd, 1987), pp.7 ~ 60.

濟的 개혁만이 아니라, 政治·社會·文化·外交 등 全 社會의 改革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의 기본방향은 고르바초프가 제시한 開放(glasnost), 개혁(perestroika)을 근거로 하고 있다.¹⁸⁾

고르바초프는 經濟改革政策의 성패여부가 소련의 社會主義建設의 成敗를 左右하며 2000년대 까지가 “共產社會로의 비약을 위한 社會主義 完成에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강조하면서, 지나치게 中央執權化되어 있는 경영방식을 分權의 경영으로 전환하고, 産業勞動者들에게는 生産意慾을 고취시키고, 農業과 서비스업에서는 個人經營과 市場要素의 역할을 증대시키려고 하고 있다.¹⁹⁾ 이를 위해 그는 ① 産業技術의 開發促進, ② 企業經營管理方式의 개선, ③ 勞動規律의 강화와 生産意慾의 고취, ④ 對外貿易의 확대와 外債基金蓄積 등 經濟改革의 4대방침을 소련공산당 27차 전당대회에서 결정하였다.

經濟改革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그는 國內的으로 政治와 社會의 改革을, 對外的으로는 技術과 資本導入을 위하여 門戶開放과 외교관계가 없는 국가들과도 관계개선을 시도하고 있다. 그는 黨과 政府의 정책을 공개하고 國民의 토의와 비판을 허용하여, 정책에 반영하고, 言論과 文化에 대한 통제를 緩和하고, 司法權의 獨立, 複數候補 및 祕密選舉制度의 도입 등 政治的 民主化 改革을 추진하고 있다.

對外的으로 門戶를 확대 및 개방함과 동시에 經濟協力을 강화하기 위하여 소련은 특별히 아시아·태평양지역의 국가들과의 관계증진을 꾀하고 있다. 이러한 의도는 고르바초프에 의한 1987년 7월 “블라디보스톡 연

18) 참조, M. Gorbachev, Perestroika : New Thinking for our Country and the World (New York : Harper & Row, 1987).

19) 소련의 2000년대 까지의 경제성장 목표 : (1) 공업생산 2배, (2) 국민소득 2배, (3) 노동생산성 2.5배, (4) 사회소비물자 2배, (5) 에너지 소비량 5/7로 감소, (6) 금속소비량 1/2로 감소, (7) 농업생산은 안정적으로 성장

설”²⁰⁾에 그리고 1988년 9월 “크라스노야르스크 연설”²¹⁾에 잘 나타나 있다. 한국과의 經濟的 關係도 이러한 맥락에서 추진되고 있으며, 최근 소련의 對韓國 접촉에서도 이러한 의도를 충분히 읽을 수 있다. 소련의 國內環境 變化는 이처럼 근본적으로 경제적 원인으로 시작했지만, 경제뿐 아니라 政治와 社會의 改革을 초래했고 필수적으로 對外開放政策을 수반했다. 결과적으로 소련의 이러한 국내환경 변화는 한국이 北方政策을 추진하는데 좋은 환경적 요소를 제공하고 있다.

최근 한국과 소련의 경제관계는 交易量이 상당히 擴大되고 있으며, 交易品目的 종류도 多樣하다. 韓·蘇의 貿易은 1987년 이후 급증하고 있으

20) 현재 소련의 亞·太지역에 대한 정책은 크게 두가지 흐름으로 진행되고 있다. 한 흐름은 소련의 국내경제 활성화와 관련하여 시베리아·극동지역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亞·太 지역국가들과 경제협력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른 한 흐름은 소련에 대한 군사전략적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을 정점으로 하는 ‘反蘇 포위망’을 약화시키고 아시아 국경지역에서의 긴장완화와 영향력 증대를 도모한다는 것이다. 이같은 흐름을 극적으로 집약시킨 것이 바로 1986년 7월 고르바초프의 ‘블라디보스톡’ 선언이다.

21) 크라스노 야르크스 演說中 “亞·太지역 7개 평화안”의 內容

- ① 소련은 亞·太지역에서 어떠한 핵무기의 수도 증가하지 않는다.
- ② 소련은 中·日 남북한과 군축을 위한 다국간 협상을 개최할 용의가 있다.
- ③ 소련은 미국이 필리핀의 미군기지에서 철수한다면 베트남의 캄란만기지를 포기할 용의가 있다.
- ④ 소련은 亞·太지역의 해군력 억제를 위한 협상을 제의한다.
- ⑤ 소련은 이 지역의 해상 및 항공수송로들의 안전을 위해 공해와 그 상공에서의 사고방지 조치를 공동으로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⑥ 소련은 인도양 평화지대 구축을 위한 국제회의를 1900년까지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
- ⑦ 소련은 亞·太지역의 안전보장등 여러가지 문제를 토의하기 위해 유엔 안전보장이사국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쁘라브다」(1988.9.17) 참조.)

나, 交易方式은 대부분 間接的인 방식을 취하고 있다. 또한 88년 올림픽 이후 소련은 무역 이외에 文化, 스포츠, 學術交流에도 매우 큰 관심을 보여왔다. 그러나 한국과의 교류는 북한의 반대로 非政治的 분야에만 限定하고 있다.

한편, 소련은 북한이 美·日에 대한 관계를 擴大하길 추구하고 있다. 조만간 한국과 소련의 관계는 가속화될 것이며 間接貿易도 直接貿易으로 대체될 것이다. 이와같은 비정치적인 관계, 특히 경제교류의 확립은 相互不信을 배제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며, 우리의 北方政策과 소련의 “두개의 韓國政策”은 조화를 이룰 것이다.²²⁾

韓國과 蘇聯의 貿易量

(단위: 千달러)

區 分	1984	1985	1986	1987
蘇 聯 輸 出	26.194	59.675	49.895	67.231
蘇 聯 輸 入	31.052	62.328	63.884	97.002
合 計	57.246	122.003	113.779	164.233

22) 한국과 소련, 동구권과의 경제관계의 발전은 다음을 참조하시오: 경향신문, 1988.4.6 (한국과 유고의 무역위원회 교환); 동아일보, 1988.4.12 (소련과의 무역); 동아일보, 1988.5.6 (한국과 소련 및 동구권과의 무역사무소 개설을 위한 소련의 열망); 경향신문, 1988.5.20 (한국과의 무역사무소 교환을 위한 소련의 열망); 동아일보, 1988.5.25 (한국과 동구권과의 경제교류); 동아일보, 1988.9.17 (고르바초프의 아시아·태평양 평화를 위한 7개항의 제안); 동아일보, 1988.9.20 (한국과 소련의 직접교역 전망); 동아일보, 1988.10.5 (불가리아, 폴란드와 무역사무소의 교환); 동아일보, 1988.10.18 (한국과 동구권과의 무역사무소의 교환); 동아일보, 1988.11.1 (시베리아개발계획에 한국참여의 전망).

나. 中共의 變化와 韓國과의 關係

오늘날 중국은 毛澤東·周恩來 時代의 중국과는 전혀 다른 世界觀과 行動原理를 갖고 있다. 1978년 12월 中國共產黨은 중앙위원회 제 11기 3중전회의²³⁾에서 階級鬭爭을 社會主義發展의 유일한 原動力으로 보았던 과거와 결별하고, 黨의 基本任務를 階級鬭爭이 아닌 社會生産力 발전에 의한 現代化와 建設에 두었다. 이때부터 중국은 政策의 중심을 經濟와 技術革命에 두고 4個 現代化²⁴⁾를 採擇, 經濟改革을 시작하고 동시에 점진적

23) 특히 1978년 12월에 개최된 중국공산당 제 11기 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 (= 11기 3중전회) 이후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문화대혁명의 사상적 질곡에서 벗어나 ‘사상해방’ (思想解放)과 ‘실사구시’ (實事求是)의 기치하에 보다 자유로운 정신으로 사회주의 건설의 이념과 실천방안을 더욱 본격적으로 모색해나가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의 이론가들은 중국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자신들의 실천과 상호결합하여 60여년 이상을 경과해오는 동안 두차례의 역사적 비약이 있었다고 이야기 한다. 제1차 비약은 신민주주의 혁명시기에 발생했는데, 이 과정에서 중국공산당은 반복된 모색과 성공, 실패의 경험을 총괄한 기초위에서 중국적 특색을 지닌 혁명노선, 즉 신민주주의론을 창출해내고 중국혁명을 승리로 이끌었다고 한다. 제2차 비약은 11기 3중전회 이후에 발생했는데, 중국공산당은 건국후 30년간의 정·반(正反) 양면의 경험을 총괄한 기초위에서, 그리고 국제적 경험과 세계정세를 연구한 기초위에서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 건설노선, 즉 사회주의 초급단계론을 창출해냈다고 한다. 하나의 중심 (=경제건설)과 양개 기본점 (=개혁, 개방 및 4개 기본원칙-사회주의, 인민민주독재 마르크스·레닌주의·모택동사상, 공산당 영도-의 견지)이라는 노선은 이에 의거해 제정된 것이고, 이로써 장래 중국 사회주의 건설을 승리로 이끌 이론적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 제2차 비약시기 중국의 마르크스주의 이론계에서 이루어진 가장 중요한 성취는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 상품경제론’의 확립이라고 할 수 있다.

서석홍, “사회주의 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 상품경제론”, 「사회와 사상」, 1989년 8월호, pp.138 ~ 139.

24) 1977년 鄧小平이 집권한 이후 사회주의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정책과 전략의 하나로써 농업·과학기술·경제·군사를 현대화하려는 야심적인 ‘4대 현대화 목표’를 설정하였다. 毛澤東式 社會主義路線으로서 중국을 현대화하기는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과거 毛時代의 대약진운동과 인민공사운동 등이

으로 체제의 對外開放을 전개하였다.²⁵⁾

오늘날까지 中國은 市場原理에 근거한 經濟改革을 위해서 당기구와 企業의 분리, 경제와 관련된 政府構造의 간소화, 정부권한의 地方委任 확대 등, 정부구조를 개혁하였으며, 商品市場의 採擇, 企業의 주도권 확대, 각종 시장의 건립과 발전으로 기업간의 競爭을 유도하고 있다. 그 방식의 하나로 1980년부터 中國은 特別經濟區域을 지정하여 외국의 자본과 기술 도입의 窓口로 이용하고 있다.²⁶⁾ 이러한 國內環境構造와 政策의 변화는 한국의 北方政策과 상호이익이 교차되는 영역이 되고 있다.

韓國과 中共과의 關係는 1978년에 시작된 中共內의 교포들이 韓國을 방문하면서 始作된다. 또한 두나라의 間接貿易도 1978년부터 시작됐다. 그러나 年間貿易量은 4만불에 불과했다. 1983년 5월 中共側 항공기의 불시착과, 그해 12월 랑군폭파사건은 中共의 태도를 변화시켰다. 랑군폭파사건으로 中共은 北韓의 南韓에 대한 軍事도발의 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1983년 이후 中共은, 中共과 한국에서 개최된 다방면의 國際會議에 韓國과 中共人들의 참여를 허용했다. 또한 中共內의 우리 교포들의 韓國訪問을 더욱 허용했다. 韓·中의 貿易도 1984년 이후 더욱 증가

사회주의를 퇴보시켰으며 그결과 전인민을 절대적 빈곤으로 전락시켰다는 것이다. 즉, 毛澤東의 도식과 법칙·운동이 中國을 共食의 사회로 만드는데 공헌했을 뿐이다. 등소평은 그의 '4대 현대화목표'를 추진시키기 위하여 美·日을 비롯한 西方世界와 연합하였고 자유세계의 자본과 기술을 대대적으로 도입해 왔다.

許 漫, “共產圈의 變化와 思考方式”, 「북한」(1988.11), p.129.

25) 박두복, “中共 對韓半島 政策의 新趨勢와 韓·中關係”, 「외교」(1988.7), p.52.

26) (1) 1988년 5월 현재까지 中國 전체 2,800여개의 市·현 중 10%에 해당하는 280개의 시와 현이 특별 경제구역으로 지정되었다고 함.

(2) 1988년 10월의 中國공산당 제13기 전당대회에서 “「경제특별국」 → 「연안경제 개방구」 → 「내지」” 순서로 개방정책을 확정하였음.

했다.

貿易이 확대되자 두나라 사이의 비즈니스訪問은 날로 증가했다. 특히 서울 올림픽 기간중 두나라의 經濟와 文化交流는 가속화됐다. 서울올림픽은 韓國과 中共의 關係發展에 분수령을 이루었다. 중공은 非政治的 영역에서 남한과의 관계발전을 急速히 진행하게 된다.²⁷⁾

그러나 中共은 南北關係가 실질적으로 改善될 때까지 남한과의 관계를 非政治的인 분야에만 限定시킨다.²⁸⁾ 그렇지만 中共은 文化, 學術, 스포츠, 經濟, 여러측면에서 兩國의 交流를 허용한다. 韓·中의 관계도 間接方式에서 直接方式의 교류관계로 점차 進行하게 된다. 예를 들면 貿易은 최초에는 第3國을 경유하였으나, 현재는 直接協議와 直接船積을 포함하고 있다.

27) 88년만 하더라도 1천2백여명에 이르는 우리나라 기업인과 학자들이 중국을 방문하였다. 지난 5년간의 방문객 숫자와 일본의 미쓰비시종합연구소가 발행하는 「중국정보」(88년 3월호)는 중국의 개방정책의 초점을 「일본 등 선진국을 쫓아가는 한국을 중국이 다시 뒤따르려는 것」이라고 단정하고 있다. 중국은 세계 어느나라 보다도 이 현대화 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가장 적절히 도움받을수 있는 나라는 역시 한국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는 것이다.

曹圭河, “사회주의 국가는 한국의 유망한 시장인가”, 「신동아」(1988.11), p.231.

28) 중공이 현재 한국과의 관계에서 적용하고 있는 정경분리는 중공의 입장에서 볼때 충분히 고려되고 계산되어 최소한의 손실과 최대한의 이득을 얻고자 하는 실용주의적인 정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현 시점에서 경제적 교류를 우선으로 하고 정치적 측면은 당분간 보류하는 이 정책은 일본이 1950년대부터 데탕트시기까지 소련과 중공에 적용해 왔던 정경분리 정책과도 흡사하다. 일본은 당시 이 정책을 적용하여 공산주의의 이념과 국가경제이익을 분리시켜 공산국과도 경제교역을 통해 국가이익을 도모했던 것이다. 중공도 이와같이 실리를 중심으로 이념적이고 정치적인 측면을 벗어나 국가의 이익을 추구하고 있는 것이며 현 중공의 입장에서는 적절한 방책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高昇均, “統一의 새轉機, 韓半島 주변정세”, 「신동아」, (1988.8), p.255.

이처럼 中共은 남한과의 여러면의 交流와 함께, 정치적 접촉을 확립하기 위하여 소련의 韓半島 政策에 보조를 맞추면서도, 북한이 美國과 日本과의 관계를 改善토록 추진시키고 있다. 한국의 북방정책은 中共이 “사실상 두개의 韓國政策”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中共의 對韓政策과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中共은 장래에 韓國의 北方政策과 모순되지 않는 政策을 추구할 것이다.²⁹⁾

韓國과 中共의 貿易量

(단위 : 千달러)

區 分	1978	1979	1980	1981	1982
輸 出	-	3,960	114,980	204,952	48,006
輸 入	40	14,829	72,926	147,778	80,816
合 計	40	18,789	187,906	352,730	128,822
	1983	1984	1985	1986	1987
輸 出	51,264	229,027	682,765	667,702	813,172
輸 入	82,602	232,631	608,999	615,423	673,440
合 計	133,866	461,658	1,291,764	11,283,125	1,486,612

Source: Korean Customs Office for 1978 data; KOTRA for 1979 ~ 85 data; Korea Times, November 1, 1988, p.17 for 1986 ~ 1987 data.

29) 한국과 중국의 최근관계는 다음을 참조하시오: 동아일보, 1988.3.3 (한국의 황해개발계획에 대한 중국의 지지); 중앙일보, 1988.3.10 (한국과 중국의 직접교역 가능성); 동아일보, 1988.4.12 (중국과의 무역); 중앙일보, 1988.5.18 (중국은 한국 비즈니스맨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의 완화); 중앙일보, 1988.5.18 (한국과 중국사이의 직접교역); 동아일보, 1988.5.25 (중국에 대한 한국의 투자); The Korea Herald, 1988.7.2 (한국과 중국의 관계개선); The Korea Herald, 1988.8.30 (중국의 7.7선언 지지); 동아일보, 1988.9.7 (중국의 한국에 대한 3개도시의 개방); 조선일보, 1988.10.6 (한국과 중국사이의 공동투자); 동아일보, 1988.10.12 (중국에 대한 한국비료의 직접수출); 동아일보, 1988.11.5 (한국과 중국의 무역사무소의 교환 가능성)

Ⅳ. 北方政策과 南北韓關係

1. 北方政策과 北韓의 開放

北韓體제의 變化可能性을 적어도 두가지 측면에서 추론할 수 있다. 첫째, 현 金日成·金正日 後繼體제의 政策決定者들이 그들의 對內·外的 狀況을 고려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으로, 변화에 영향을 주는 것은 주로 對外的인 要因이다. 둘째, 이제까지 政治的 無關心을 보여왔던 북한주민들이 여러가지 원인에 의하여 예컨대 심화된 經濟的 困窮, 집권층에 도전하는 사회집단이 형성되었을 때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간략히 말하여, 우리는 이제까지의 어느 정도 정형화된 틀에서 벗어나, 보다 開放化된 눈으로 북한체제를 分析할 必要가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³⁰⁾

가. 共產圈 國家로 부터의 外歷

북한의 開放問題와 관련시킬 때 북한의 內部事情과 함께 우리가 고려해야 할 부분은 북한을 둘러싼 外部의 變化趨勢이다. 소련 공산당 서기장 고르바초프의 “新思考”에는 북한의 思想的 開放을 요구하는 듯한 세가지 요소가 있다. 첫째, 대화와 생산적 討論이 없이 眞理를 찾을 수 없다. 둘째, 권능하다는 오만함을 갖는 한 새로운 問題에 대처하지 못한다. 셋째, 자신과 다른 見解를 완강히 거부하는 태도는 生産的 討論을 不可能하게 한다 등이다. 말하자면 경직되고 획일적 思考方式은 개방의 障礙物이 된다는 뜻이다.

또한 소련의 경제개혁과 관련하여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소련의 對 韓國關係의 變化된 움직임이다. 1986년 7월 27일의 “블라디보스톡宣言”에서 고르바초프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모든 國家와 多樣性있는 關係

30) 물론 정형화된 틀의 상당한 정도는 이제까지의 국내 정치적 요인에 그 이유가 있다.

를 추진할 것이며, 여기에는 예외가 없다.”³¹⁾라고 하여 對韓半島의 변화를 시사하였다. 1988년 9월 16일의 “크라스노야르스크 新平和宣言”으로 고르바초프는 太平洋지역의 緊張緩和를 위한 7개항의 제안을 하면서, 한국과의 關係改善에 특별히 言及, “한국과의 經濟關係를 軌도에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고 있다”고 밝히며 시베리아와 극동개발, 合作企業, 特別地區등을 지적하고 있다.³²⁾ 소련의 이와같은 對韓接近이 주로 시베리아 경제개발을 염두에 둔 것이기는 하나 한국과의 이러한 관계가 가져다 줄 韓·蘇關係의 長期的 변화에 대해 북한이 보여줄 대응은 비록 制限的이기는 하지만 변화와 개방의 方向으로 흐를 것이다. 이는 經濟回生이라는 소련의 國家利益에 기초한 소련의 對韓接近을 막을 만큼 설득의 재료가 없는 북한으로서는 불가피한 일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등소평의 “黑猫白猫論”으로 표명되는 實用主義路線을 中共은 1977년 8월 中共黨 第11차 대회에서 自力更生原則을 포기하고 積極的인 開放政策을 採擇한 이후 여러 차례의 改革措置를 거쳐 1984년 10월의 中共黨 12기 3차회의에서 全面的인 개혁안을 발표하여 資本主義市場 經濟原理를 도입하였다.³³⁾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中共은 “經濟特別區域”의 설치와 對外經濟協力の 擴大로 집약되는 對西方經濟開放政策을 구체화시키고 있다. 특히 外國과의 經濟合作, 外國人投資의 許容, 차관도입, 貿易擴大등을 적극적으로 推進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中共은 近年에 이르러 한국과의 積極的인 경제관계를 擴大하고 있는 것이다.³⁴⁾

31) 한국일보, 1988.10.13.

32) *ibid.*

33) 中國共產黨中央委員會, “經濟體制的 改革과 中國式 社會主義”, 「中·蘇研究」, 8권 4호, 1984.

34) 1987년 제13기 中共당대회에서는 세계경제 대순환론을 채택하였다. 2천년대는 태평양의 세기가 될것이고 특히 한국-중국-일본을 주축으로 한 동아시아 시대가 개막될 것이라고 확인하였다. 이같은 세계경제 대순환론의 시각에서 중국은 노동 및 지식집약형 수출주도정책을 추진하여 자국경제의 규모

이와같은 중공의 實用主義路線에 따른 對西方門戶開放政策 특히 對韓國과의 經濟交流擴大는 비록 최근의 中共·北韓의 관계가 冷却狀態에 있다고 할지라도 북한에 대해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開放化의 內的變化

北韓은 실제에 있어 “開放을 위한 準備”³⁵⁾를 해왔다. 1980 년대에 북한의 큰 변화는 1984년 9월의 “合營法” 발표였다. 이는 1970 년대의 “新 6개년計劃” 기간부터 對西方貿易強化를 시작한 이래 海上資本의 필요성을 절감한 북한이 “最高人民會議 第7期 3次會議(1984년 1월)에서 資本主義 國家와도 貿易과 經濟協力을 증대시킨다는 政策表明의 구체적 실현인 것이다.”³⁶⁾

를 4 배이상 증가시킨다는 웅대한 장기발전계획도 확정하였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농업, 과학, 교육 및 국방의 4대 현대화 계획의 추진과 한국-중국간의 경제교류가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曹圭河, “社會主義國家는 한국의 유망한 市場인가”, 「신동아」(1988.11), p.231.

35) 柳錫烈, “北韓의 政治情勢와 開放化政策”, 「東亞研究」(서울:서강대학교 동아시아연구소, 1986), pp.4 ~ 12.

36) 84년 5,6월 김일성은 소련, 동구 등 7 개국을 순방한 적이 있는데, 이때 경제와 과학기술면에서 북한의 후진성을 절실하게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북한의 개방정책을 엿보게하는 몇가지 징후가 나타나게 되었다. 곧 △ 평양등 대도시에서 자유시장의 확대 △ 외국어 교실의 확산 △ 도시 여성의 화장과 옷차림의 변화 △ 경공업 重視 △ 남한과 경제전쟁을 하고 있다는 인식 △ 소비용 전기제품 수입의 급증 △ 기술자 전문가 육성사업개선 등이 그것이다.

曹英煥, “北韓은 과연 開放할 것인가”, 「신동아」(1988.9), p.281.

그러나 合營法의 實質的 效果는 制限된 것으로 알려졌다. 처음에는 프랑스와 平壤에 高層호텔을 合資로 건설하기로 合意하고 공사를 시작했으나, 運營權에 대한 의견충돌로 解約되었고 그후 주로 朝總聯系 會社들과 合資로 여러가지 工場과 事業을 建設하였다. 北韓은 또한 1978년 2次 7個年 計劃의 착수와 함께 工場, 企業所의 “獨立採算制”의 工場에 까지 徹저한 獨立採算制의 실시를 지시하였다. 이어 1984년 6월부터는 事務機關을 제외한 非生産的 部門의 機關이나 企業所까지 完全 獨立採算制 및 半獨立採算制를 管理運營하도록 조치하였다.³⁷⁾ 그러나 이와같은 獨立採算制의 擴散措置는 근본적으로 中央執權的인 計劃下의 틀속에서 실시되는 것으로 資本主義下의 營業採算制와는 그 성격이 다르며 經濟관리의 地方分權化와 自由化도 아닌 것이다.³⁸⁾

이와같은 制約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후반에도 계속적으로 開放化政策을 추진하고 있다. 즉 金日成은 88年 9月9日 北韓政權樹立 40周年 記念大會 報告에서 “對外經濟關係를 발전시키는 것은 …… 人民經濟의 技術裝備를 世界先進水準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중요하다”고 하면서 “對外經濟部門에서는 다른 나라들과의 貿易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가며, 合營 合作을 비롯한 여러 형태의 經濟技術的 協助와 交流를 널리 發展시켜야 한다”³⁹⁾고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內的 變化를 促進하는 요인들로는, 첫째 經濟規模의 成長을 통해 北韓住民들도 絶對的 貧困의 단계를 넘어서 새로운 意識과 欲求를 갖게 되었으며, 둘째 經濟規模의 增大, 技術의 진보 등에 따라 社會 各分野에 전문지식인 階層이 增大하고 技術관료 출신이 浮上하였고, 셋째 情報흐름의 統制에도 불구하고 對西方 交流의 증대는 外部世界의 새로운 情報流

37) 國土統一院, 「社會主義諸國 및 北韓經濟狀況 變化와 韓半島 統一與件」 (1986), pp.47 ~ 48.

38) 尹炳益, “北韓의 體制變化와 展望”, 「사회과학연구」, 제11집(서울: 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p.58.

39) 勞動新聞, 1988.9.9.

入量이 증대 되었으며, 넷째 金日成의 老衰에 따른 權力構造의 변동 가능성에 따른 새로운 指導路線의 등장이 가능하다는 것 등이다.⁴⁰⁾

간단히 말하여 북한은 制限的이지마는 70년대 이후 꾸준히 開放化된 대적인 변화를 겪고 있으며 韓·中·蘇의 강화에 따른 外部的 開放促進要因과 결부되어 어느 정도 開放政策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⁴¹⁾

다. 北韓開放化의 限界

이와같은 共產圈의 開放化와 北韓内部의 開放化要因에 대하여 북한이 계속 獨裁와 閉鎖政策을 지속할 때는 첫째로 南北問題에서 우리의 交流와 開放促求로 인해 궁지에 몰리게 되며, 北韓의 對南戰略과 宣傳에서 守勢에 몰리게 될 것은 뻔한 것이다. 둘째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中蘇의 開放壓力을 끝까지 버티 나가기 어려우며, 잘못하면 公産권으로 孤立될 수 밖에 없는 狀況에 처하게 될 것이 틀림없는 사실이다. 셋째 閉鎖政策을 계속할 때는 對外經濟協力, 특히 西方先進國들의 交流와 協力이 期待될 수 없고 이는 결국 북한경제의 破局과 住民生活의 궁핍을 加重시킬 것이 뻔한 일이다.⁴²⁾ 이러한 難局을 解決하는 길은 公産권의 변화에 발맞추어 政治를 改革하고, 경제사회를 開放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를 해결하기 위해 改革과 開放政策을 추구한다면 당장의 위험이 더 클 것이다. 그것은 첫째, 體制를 民主的으로 改革하고 社會를 自由롭게 개방한다면 지금까지 40여년간 金日成獨裁의 罪行과 과오가 再評價되어야 하는 것이다. 소련과 중공등 公産국가들이 個人의 偶像화와 族閥世襲을 청산하고 民主的 競爭方法에 의한 간부와 統治者까지 選出하고 있는 事實에서 金正日 세습후계체제가 용인되고 유지될 수 없음

40) 國土統一院, 前掲書, pp.44 ~ 45.

41) 중·소의 개혁이 순조로워야 북한은 긍정적 반응을 보일 것이다.

송두율, “ 페레스트로이카·개혁·주체”, 「사회와 사상」 (1989.7), p.174.

42) 吉成喆, “理念이나 現實이나”, 「북한」 (1988.12), p.33.

은 金日成자신이 더 잘 알고 있는 일이다. 改革과 開放은 金日成 唯一體制 世襲體制的 崩壞·破滅과 脈을 같이 한다는 데 북한에서 開放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둘째로 북한이 社會를 개방한다는 것은 自由世界에 대한 개방을 의미하는 것이며, 이것은 상대적으로 共產國家들의 한국에 대한 접근의 加速化와 交叉承認으로 이어질 것은 必然的인 사실이다. 이같은 狀況은 “南韓은 식민지피괴정권, 군사과소정권”이란 저들의 大韓民國政府에 대한 性格規定에 모순되며 명분이 없어질 뿐 아니라 저들의 主體性和 自主性的 理念과 論理에 배치되기 때문에 體制擁護와 유지에 결정적인 타격을 받는 것이다.

셋째, 북한체제의 改革과 開放은 저들의 窮極의 目標인 對南赤化와 全韓半島의 金日成主體思想化라는 金日成獨裁國家의 실현을 불가능하게 되는 것이다. 북한사회의 개방은 自由世界에 대한 개방만이 아니라 우리와의 交流와 往來까지를 감수하는 개방이 전제되는 것이다. 이것은 北韓住民들에게 大韓民國의 實相이 그대로 확인되고 또한 우리 國民들에게도 북한의 실상이 그대로 드러나 과연 어느 體制가 우리들에게 더 바람직한 體制인가를 判斷하게 할 것이다.

또 한반도를 둘러싼 周邊強大國들도 그들이 바라지 않는 한 北韓의 戰爭挑發에 견제적 역할을 할 것이 分明하다. 이같은 상황은 金日成이 체제유지를 위한 緊張造成과 그의 위대성, 더우기 世襲體制的 當爲論을 부정시키며 拒否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방의 어려움이 있고 이에 고민하는 것이다.⁴³⁾

2. 北方政策과 南北韓關係

한국이 볼때 북한은 한국의 안보를 危脅하는 첫번째의 敵對勢力이며,

43) ibid

중국과 소련은 북한이 거의 絶對적으로 依存하는 同盟國이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한국이 中·蘇와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努力에는 당연히 북한이 커다란 障礙物이 될 수밖에 없다.

북한은 지금까지 한국이 中·蘇와 공식적으로 接觸할 수 있는 길을 찬성한 적이 없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北韓은 南北韓의 유엔 同時加入, 中·蘇·美·日이 남북한을 同時交叉接觸 또는 承認을 처음부터 반대하고 있다.⁴⁴⁾ 그 이유는 이러한 조처들은 “하나의 朝鮮을 영원히 둘로 갈라 놓으려는” 策動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북한은 1988년 9월 헝가리의 서울 常駐代表部의 설치를 신랄하게 비판했고, 1989년 2월 1일 한국·헝가리의 正式外交關係 수립에 대한 報復措置로 상호 外交關係를 代理大使級으로 格下시켰다. 1988년 10월 7일 북한은 한국의 北方外交에 관하여 자신의 立場을 전반적으로 明確하게 闡明하면서 한국을 猛烈히 비난했다.⁴⁵⁾

“南朝鮮當局者들의 北方外交는 다름 아닌 美國의 侵略的인 對朝鮮, 對아시아戰略의 산물이다. 美國은 하나의 朝鮮을 영원히 둘로 갈라 놓고, 남조선을 언제까지나 우리 공화국과 다른 사회주의 나라들을 반대하는 核攻擊基地로 아시아太平洋戰略의 利用物로 틀어 쥐기 위해 두 개 朝鮮

44) 韓蘇·韓中 관계 개선의 궁극적인 목표는 국교를 정상화하고 나가서는 우호·친선을 도모하는데 있다. 그러나 中蘇는 북한의 완강한 저항을 받아 일시에 ‘두개의 한국 양성화’ 작업을 벌이지 못하고 있다. 中蘇는 ① 한국에 대한 사실상의 승인(국가승인·정부승인) ② 반공식적인 수교(통상대표부의 교환설치) ③ 완전수교(공식승인과 외교사절 교환)의 3단계를 거칠 작정으로 있는 것 같다. 그러나 북한에 대한 美·日의 접근과 관계 개선 노력은 한국의 방해로 받지 않을 것이므로, 上記 3단계를 거치지 않고 일거에 완전수교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이다.

申相楚, “中蘇의 개방 정책과 북한의 선택”, 「북한」 (1988.12), p.38.

45) 조선중앙방송, “남조선 괴뢰들의 이른바 北方外交를 評하며”, 1988년 10월 7일.

政策을 對朝鮮戰略의 기본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 侵略凶計를 실현하기 위해 考案된 分裂主義들 중의 하나가 바로 北方外交인 것이다. 유엔 同時加入案이 유엔의 이름으로 조선의 분열을 고착시키기 위한 것이고, 교차승인론이 동서방 나라들이 조선의 北과 南을 엮바꾸어 시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두 개 朝鮮을 既定事實化하려는 것이라면, 北方外交는 유엔同時加入과 交叉承認의 전제조건을 마련하기 위한 交叉接觸, 交叉交流策動의 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盧政權은 이 분열 각본을 맡아 집행할 도구인 돌격대로 출현하였다.”

이러한 三角關係가 계속된다면 한국의 北方政策은 북한의 태도 때문에 상당한 제한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긴 안목에서 보면 韓國의 北方外交가 南北關係의 改善에 도움이 될 것이지만, 短期的으로는 앞서의 引用에서 보듯이 북한의 완강한 拒否와 抵抗에 부딪쳐 南北間의 妥協摸索에 별 기여를 못할 것이다. 中·蘇 또한 북한의 強力한 항의를 무시하면서 한국과 政治的 關係改善을 하지 않을 것이다. 北方外交의 성공이 곧바로 南北關係改善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은 소련, 중공 등 공산권을 대상으로 한 北方外交와는 별도로 對北韓關係改善이나 統一論議의 方案을 강구해야 한다.⁴⁶⁾

V. 結論 - 北方政策의 問題點과 展望

이제 結論으로서 지금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北方政策의 特徵, 過去와 현재를 근거로 하여 본 北方政策의 展望, 한국의 北方政策이 成功하기 위한 條件들, 그리고 北方政策의 수행에 따라 정립해야 하고 준비해야 할 문제점을 提示하고 싶다.⁴⁷⁾

46) 지상심포지엄 “통일, 남북동질성 회복부터”, 이호재, “북방외교와 남북한 개선포럼”, 「통일」 (1989.3), p.77.

47) 李錫浩, “韓國의 北方政策 - 現況과 展望”, 「외교」 (1989.3), pp.15 ~ 16을 중심으로 요약함.

한국의 北方政策은 다음과 같은 여섯가지의 特徵을 가지고 있다. 첫째, 조그마한 국가가 커다란 국가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그것도 조그마한 국가가 더 能動的으로 接近하는 政策이다. 추구하여 獲得하려는 관계는 조그마한 국가가 커다란 국가에 依存하게 되는 從屬關係도 아니고, 安保의 위협을 해소하려는 同盟關係도 아니고, 窮極적으로 위협의 감소를 가져오지만 相互平等한 友好關係이다.

둘째로는, 敵의 친구와 관계를 증진시키려는 정책이다. 그러나 이 政策의 目的은 敵을 孤立化시키려거나 破滅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相互利益을 증진시키면서 平和적으로 統合을 이루려는 것이다.

셋째로, 한국의 이웃 國家들과 相互善隣關係의 傳統을 회복하려는 정책이다. 한국은 수천년 전부터 中國과, 그리고 朝鮮朝時代부터 러시아와 關係를 갖고 있었으나, 日本에 의한 強制的 占領과 제2차 世界大戰의 결과로 그 관계가 단절되었다. 이제 地理적으로 歷史적으로 단절된 그들과의 關係를 회복하려는 것이다.

네째로는, 아직도 세계에서 한반도에 가장 強力하게 남아 있는 東西冷戰의 유산을 극복하려는 정책이다. 따라서 우리는 民族의 單一性 회복과 共產主義에 관한 이데올로기觀을 정립해야만 한다.

다섯째로는, 단기적으로 南北韓간의 긴장을 緩和하고, 中期的으로 남북한간의 相互共存關係를 유지하고, 長期的으로는 理念, 民族, 國土의 統合을 指向하는 정책이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남북한간의 문제는 國際化보다는 남북한간의 문제로 地域化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는, 지금까지 韓美同盟關係를 기본으로 하여 세워진 安保概念에 도전하는 정책이다. 보다 많은 政治的·經濟的 能力을 구비하고 보다 넓고 포괄적인 의미를 갖는 새로운 安保概念의 정립을 요구한다.

北方政策의 전망은 앞에서 論議한 7개 要因을—다소 反復되지만—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은 條件的 展望을 제시한다. (1) 韓國經濟가 계속적으로 발전을 한다면, (2) 中·蘇의 國內體制가 경제발전을 위하여 對外協力

과 開放政策을 유지한다면, (3) 美國이 한국의 北方政策을 支持하고, 한국도 美國의 對蘇關係를 고려하는 北方政策을 추진한다면, (4) 中·蘇가 한국과의 交流와 接觸을 하여도 中·蘇와 북한의 관계가 계속 友好關係를 유지한다면, (5) 中·蘇의 外交政策路線이 국제적으로 안정된 戰略的 環境維持, 脫이데올로기, 國際經濟活動에 적극적 참여 등 이와 같은 路線을 유지한다면, (6) 한국이 社會主義國家들과의 관계가 확대되어도 남북한간의 관계가 계속 緊張緩和되고 對話와 交流가 추진된다면, (7) 한반도 周邊 4國이 東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서 상호 安定과 平和를 추구하고 軍事的 對立을 지양한다면, 한국의 北方政策은 전망이 매우 밝으며 성공적으로 수행될 可能性이 높다.

그러나 이러한 7가지 요인이 모두 다 樂觀的으로 전개될 것으로 기대하기는 힘들다. 美國과 友好關係를 유지하면서, 美國의 첫째 敵對勢力인 소련과의 接觸은 상당한 조심성과 高度의 外交技術을 요구하며,⁴⁸⁾ 中·소 또한 對北韓關係를 友好的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많은 어려움이 틀림없이 存在한다. 또한 남북한관계가 설사 긴장이 緩和되고 相互對話가 進行되고 하여도, 기본적으로 북한의 政治體制가 국내적으로 완벽한 統制經濟體制에서 벗어나고, 대외적으로 체제를 개방하는 움직임이 없는 한, 북한은 한국 地方政策의 근본적인 障礙物로 남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漸進的으로 改善 및 擴大되어 왔고 또 오늘날 다소 樂觀的인 國際環境 속에서 추진되고 있는 北方政策이 根本的으로 장기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國內政治體制의 能力에 달려 있다. 이데올로기의 갈등, 民族史觀의 갈등, 倫理的·道德的 갈등을 극복한 政治的 安定

48) 미·소간의 세계전략이나 지역전략의 문제를 북방정책의 명이나 제한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으나 이 문제를 남·북한의 교류진전뿐 아니라 모든 협의의 부문에서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여 북방정책의 力動性은 이러한 요소를 충분히 감안하고 특히 이 지역에서 적극적인 안정역할을 하고 있는 미국과의 정책적 협조를 긴밀히 하는데서 발휘될 수 있을 것이다.
金泳植, “北方政策과 韓·美關係”, 「외교」 (1989.3), p.32.

과 이를 바탕으로 하는 政治的 民主化가 確立되어야 한다.⁴⁹⁾ 이러한 政治的 발전만이 장차 持續的인 經濟發展을 보장할 수 있다.

두번째로는, 이미 한국이 推進하고 있듯이 남북한간의 문제와 북한을 보는 視角을 安保次元에서 벗어나 民族和合의 次元에서 보아야 한다. 北方政策의 窮極的인 성공은 어디까지나 南北韓간의 緊張緩和와 相互共存 위에서만 성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번째로는, 남북한의 문제가 國際化되는 것을 방지하고 國內問題化되어야 할 것이다. 남북한 問題의 국제화가 어느 정도 한국이 중·소에 接近하는 데는 도움이 있을 수 있지만, 窮極的으로 성공적인 接近方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他意的인 國際的 영향력이 初期段階에서 남북한의 接觸을 위한 突破口 形成에는 기여할 수 있어도 그 이상은 각 側의 基本政策에 달려 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한국의 北方政策에 근본적으로 挑戰하고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이 두 가지는 모두 다 과거와 현재와 연관되어 있으며, 단시일내에 극복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첫째로 이데올로기의 측면에서 價値觀의 정립이다. 현재 중국과 소련의 관계가 점점 개선되어 가고 있으며, 窮極的으로 중·소와 外交關係의 수립이 目的이라면 “소련과 중공을 어떻게 볼 것인가”를 정립해야 한다. 근본적으로 社會主義 理論과 社會主義 國家들에 관한 研究가 開放化·活性化되어야 한다. 이 문제는 단순히 가치관의 문제만이 아니라 두번째로 提起하려는 한국의 “安

49) 북방정책의 대상은 모두 공산국가이다. 우리와 체제상극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다. 이러한 나라들과의 교류협력은 우리 사회내에 그들의 체제와 이념을 선전하는 세력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오리라는 것은 자명하다. 그리고 이러한 세력의 활동증대로 우리 국민들의 이념적 혼란이 심화되리라는 것도 자명하다. 이러한 정치적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본격적인 대공산권 교류에 앞서 우리의 체제정비를 해 두어야 한다. 즉 모든 국민들이 우리의 체제와 이념의 우월성을 확신할 수 있도록 정치발전을 앞당겨 나가야 한다. 이상우, “한국의 북방정책”, 「통일」 (1989.5), p.59.

保政策”과 密接히 연결되어 있다. 北韓을 보는 시각을 安保次元에서 民族和合의 차원으로 보아야 한다고 했을 때, 한국의 對北韓 國防政策과 軍事戰略의 기본지침과 내용은 무엇이 되어야 하나? 한국은 中·蘇와의 관계가 비록 非政治的 領域이지만 점점 개선되어 가고 相互協力하고 있으며, 동시에 國內적으로는 政治的 民主化 기반이 구축되어 가고 있으며, 主權國家로서의 國民的 요구가 增大되고, 經濟的 能力이 확대되어 가는 상황에서 既存의 韓·美安保協力關係를 어떻게 變化시킬 것인가? 장기적으로 남북한간의 安保問題를 벗어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未來指向的이고 단기적으로는 民族의 통일과 民族和合을 목표로 하는 國家安保戰略을 창조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가 모두 北方政策과 密接히 연결되어 있으며, 北方政策의 추진과 함께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 고 문 헌

〈 단행본 〉

- 안병준, 「강대국관계와 한반도안보론」, 서울:법문사, 1986.
國土統一院, 「社會主義諸國 및 北韓經濟狀況變化와 韓半島統一與件」, 1986.
李啓熙, 「蘇聯政治의 理解」, 서울:경남대학출판국, 1977.
安秉永, 「北韓社會 變動展望에 관한 研究」, 서울:國土統一院, 1976.
柳錫烈, 「기रो에 선 북한경제」, 서울:국토통일원, 1988.
江藤高德, 「北韓經濟와 貿易展望」, 서울:국토통일원, 1988.
국토통일원, 「統一論議」, 서울:국토통일원, 1988.

〈 논 문 〉

- 李 哲, “蘇聯의 對韓國接近政策展望과 對蘇外交의 問題點”, 「國土統一」,
1974년 1월.
이기택, “韓國의 對中蘇外交의 可能性”, 「북한」, 1974년 2월.
유증렬, “韓·美·日의 유대강화와 北方政策”, 「국회보」, 1984년 2월.
조세형·이호재·이기택, “韓國外交의 새 구상과 전개”, 「신동아」,
1978년 7월.
안병준, “北方外交政策의 새 座標”, 「北韓」, 1988년 3월.
서석홍, “사회주의초급단계론과 사회주의상품경제론”, 「사회와 사상」,
1989년 8월.
許 漫, “共產圈의 변화와 思考方式”, 「북한」, 1988년 11월.
박두복, “中共 對韓半島政策의 新趨勢와 韓·中關係”, 「외교」, 1988년
7월.
曹圭河, “사회주의국가는 한국의 유망한 시장인가”, 「신동아」, 1988년
11월.
高昇均, “統一의 새 轉機, 韓半島 주변정세”, 「신동아」, 1988년 8월.

- 柳錫烈, “北韓의 政治情勢와 開放化政策”, 「東亞研究」, 서울: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1986.
- 曹瑛煥, “北韓은 과연 開放할 것인가”, 「신동아」, 1988년 9월.
- 尹炳益, “北韓의 體制變化와 展望”, 「사회과학연구」, 제 11집, 서울:경희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1985.
- 송두율, “페레스트로이카·개혁·주체”, 「사회와 사상」, 1989년 7월.
- 吉成喆, “理念이나 現實이나”, 「북한」, 1988년 12월.
- 申相楚, “中蘇의 개방정책과 북한의 선택”, 「북한」, 1988년 12월.
- 李錫浩, “韓國의 北方政策-現況과 展望”, 「외교」, 1989년 3월.
- 金泳植, “北方政策과 韓·美關係”, 「외교」, 1989년 3월.
- 이상우, “한국의 북방정책”, 「통일」, 1989년 5월.
- 이호재, 지상심포지엄 “통일, 남북동질성회복부터”, 가운데서 “북방외교와 남북한 개선전망”, 「통일」, 1989년 3월.

